

통일미래를 준비하는 통일정책



정책자료집 - 통일
2008. 2.~2013. 2.



발간사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북한은 이미 핵 실험을 실시(2006.10.9.)하여 핵무기 보유 의지를 분명히 하는 등 이전에 우리의 지원과 남북교류협력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끌려다닌다는 국민의 비판적 여론도 높았습니다.

세계정세 또한 급격한 변화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중국이 새롭게 부상하였고, 중동에서는 민주화 바람이 불었습니다.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의 정치적 리더십 교체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금융위기와 EU의 재정위기는 세계적 경기침체로 이어졌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한반도의 불확실성과 유동성이 커졌습니다.

북한은 시대변화와 상관없이 과거의 행태를 되풀이하였습니다.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외면한 채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았으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끊임없이 도발과 위협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3대 세습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의 국내외 환경과 급변하는 정세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능동적으로 통일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고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이루어 나가 궁극적으로 평화롭고 번영된 통일 한반도를 완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상호 존중과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원칙에 바탕을 두고 정상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였습니다.

우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였습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비핵·개방·3000」, 「그랜드 바겐」 등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6자회담 참가국 등 국제사회와 긴



밀히 협조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일관되게 추구하였습니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북한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과 관련해서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남북교류협력을 중단하는 내용의 「5·24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도발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북한의 잘못된 행태를 교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북한이 핵 개발과 무력도발을 지속하는 ‘나쁜 선택’이 아닌 민생을 돌보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의 창’을 열어 두었습니다. 원칙의 토대 위에서 유연성을 발휘해 북한이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투자자산 점검 등을 위한 개성·금강산지역 방북을 허용하였고, 순수한 종교, 사회·문화 교류를 승인하였습니다. 개성공단 또한 필수 설비 반출 및 대체건축 허용, 건축 재개 등의 유연화 조치를 통해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구려 고분군 솔잎 병충해 방제 지원, 이산가족 상봉, 수해지원 등을 위한 남북 간 대화도 계기시마다 제의해 왔습니다. 남북 고위당국자 간 안정적인 대화 채널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정상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호응해 오지 않고 대남 위협과 비방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비록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지속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미래지향적이고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면하기 위하여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철회하거나 북한의 불합리한 요구에 굴복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나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대해 정상적인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한편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소극적 분단관리를 넘어 장차 다가올 한반도 통일 미래를 대비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준비에 착수한 것입니다.

통일준비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지 결집, 통일재원 마련, 통일외교, 북한이탈주민 등 분단이재민 포용, 통일에 대비한 법과 제도의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통일미래에 대비하여 「통일항아리」라는 통일준비의 상징물을 국민에게 제시하였습니다. 「통일항아리」는 통일준비 중 핵심인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을 위한 통일재원을 적립하기 위한 상징인 동시에 우리 국민들과 해외동포들의 통일열망과 의지를 모아 나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통일항아리」에 뜻을 같이하는 자발적 민간운동도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멀리 전라남도 의고흥군민과 북한이탈주민까지 전국의 남녀노소가 「통일항아리」에 정성과 의지를 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통일재원 마련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통일계정을 설치하는 <남북협력 및 통일기금법안>을 정부입법으로 마련하여 제19대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화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한 「통일외교」 노력도 지속하였습니다. 미국, 중국, EU 등을 직접 방문하고, 주한 외교사절과 방한하는 외국의 주요인사에게도 우리의 통일의지를 전달하고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 지역 및 전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독일과 러시아에 통일안보관을 파견하여 통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산가족과 국군포로·납북자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분단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분단이주민들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이산가족과 국군포로·납북자 가족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기시마다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비록 이명박 정부 5년간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인해 남북관계에 가시적 성과가 적었지만,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와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정부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도 유연성을 발휘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는 실질적인 통일준비에 착수함으로써 축복된 한반도 통일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전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미래를 준비하는 통일정책》 자료집은 이명박 정부 5년간의 남북관계의 정상적인 발전과 실질적인 통일준비 노력과 성과들을 객관적으로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자료집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한반도 통일미래에 대한 비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실천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2월

통일부장관 



차 례

제1장 통일·대북정책	12
제1절 정책 기본방향	13
1. 추진 배경	13
2. 비전과 목표	15
3. 추진 과제	17
제2절 정책 추진 경과	19
1. 정상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	19
2.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	22
제2장 통일준비	34
제1절 실질적 통일준비 착수	35
1. 3대 공동체 통일구상 및 통합과정 연구	35
2. 통일준비 공론화	39
3. 통일항아리(통일준비) 캠페인 추진	42
4. 통일재원 법제화	46
5. 통일법제 구축	48
제2절 국내외적 협력체제 구축	52
1. 각계각층 대상 직접 대화 추진	52
2. 통일외교 강화	57
제3절 국민적 합의기반 강화	65
1. 정기적인 여론수렴	65
2. 국민과의 쌍방향적 소통 강화	66
제4절 북한정보 역량 강화	76
1. 북한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76
2. 북한 현장정보 수집·관리	77
3. 북한방송 수신체계 개선	77
4. 북한 종합데이터베이스(DB)	78
5. 북한정세지수 개발	79
6. 북한자료센터 운영	79
7. 북한 관련 정보·자료의 대국민 서비스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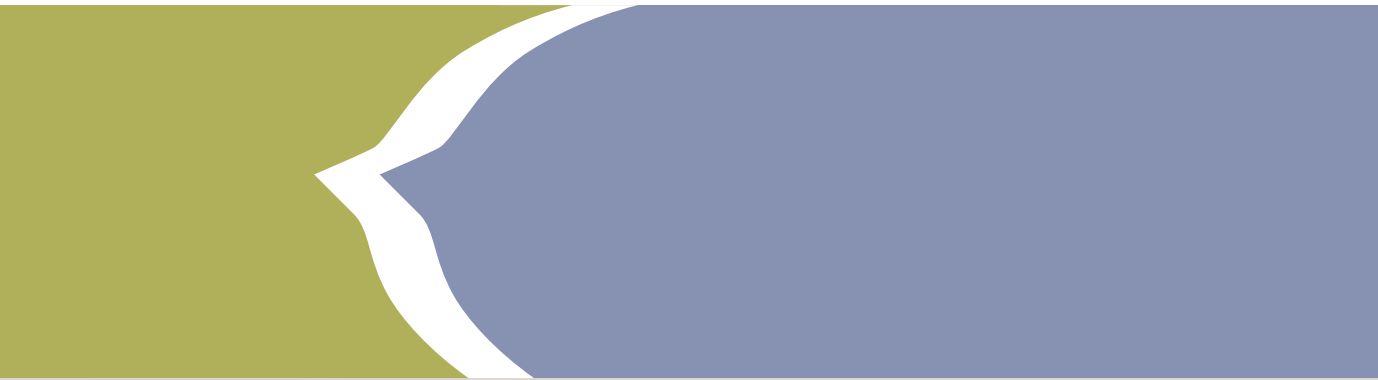
제3장 남북교류협력	86
제1절 남북경제협력	87
1. 남북교역	87
2. 남북 교역체계 개선 노력	94
3. 정상적 남북관계 구축을 위한 「5·24 조치」	99
4. 당국 간 경제협력	102
제2절 개성공단사업	105
1. 개성공단사업 의의	105
2. 입주기업과 생산 현황	105
3. 개성공단의 안정적 관리	108
4.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115
5. 법·제도 및 사업지원체계	117
6. 기업 투자 지원	119
제3절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126
1.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의의	126
2. 학술 교류	127
3. 종교 교류	130
4. 체육 교류	131
5. 문화·예술 교류	132
6. 남북공동행사 및 부문 간 교류	133
7.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134
제4절 남북관광협력	136
제5절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141
1.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개소 및 운영 경과	141
2. 민간 교류협력사업 추진지원	142
3. 남북경협 기업과의 소통 강화	144
4. 남북회담 개최 지원	145
제6절 남북 출입통행 및 운송	146
1. 남북출입사무소	146
2. 남북 출입통행 절차	147
3. 출입시설 현황	149
4. 출입통행 현황	151
제7절 남북협력기금 관리·운영	156
1. 남북협력기금 조성 및 운영	156
2.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 강화	164



제4장 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	170
제1절 남북 이산가족	171
1. 정부 차원의 노력	171
2. 민간 차원 교류지원	173
3. 국내에서의 노력	174
제2절 국군포로·납북자	177
1.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경과	177
2.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	179
3. 6·25 전쟁 중 납북자	182
제3절 대북 인도적 지원	185
1. 대북 인도적 지원의 경과	185
2. 당국 차원의 지원	186
3.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189
4.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196
제4절 북한인권	199
1. 북한인권의 경과	199
2. 국제사회와의 협력	200
3. 시민사회와의 협력	202
4. 북한인권법 동향	203
제5장 남북대화	208
제1절 정치·군사 분야	209
1. 북한 조문단 방문	209
2. 남북군사실무회담	211
제2절 경제 분야	218
1.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218
2.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실무회담	228
3. 금강산·개성 관광 관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230
제3절 사회·문화 및 인도 분야	232
1. 남북적십자회담 및 실무접촉	232
2. 백두산 화산 관련 남북 전문가회의	240
제4절 판문점 남북연락 업무	243
제6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248
제1절 사회적응교육	250
1.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 개편	250
2.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252



3. 하나둘학교 개교 및 운영	257
4. 입국 초기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262
5. 「제2하나원」 건립	267
제2절 정착지원 체계 및 현황	268
1. 초기 정착지원	268
제7장 통일교육	280
제1절 통일교육 추진체계	281
1. 내용체계 강화	281
2. 협력체계 구축	285
제2절 통일교육 과정 운영	287
1. 초청교육	287
2. 해외 순회교육	297
3. 사이버 교육	298
제3절 통일교육 지원	300
1. 학교 통일교육 지원	300
2. 사회 통일교육지원	310
제4절 통일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317
1. 교재 발간	317
2. IPTV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320
3. 다양한 교육자료 개발	322
4. 사이버 교육자료	326
부록	330
I. 남북관계 주요 일지	332
II. 남북관계 주요 통계	367
1. 남북 인적·물적 왕래 현황	367
2. 남북 교류협력 현황	368
3. 개성공단사업 추진 현황	370
4. 인도적 과제 추진 현황	371
5. 남북회담 현황	373
6. 통일교육 실시 현황	373
III. 남북협력기금 관련 통계	374
1. 총괄표(구성 및 사용실적)	374
2. 사업비 집행실적	377



M I N I S T R Y O F U N I F I C A T I O N

제 1 장

통일·대북정책

제1절 정책 기본방향

제2절 정책 추진 경과

제1장 통일·대북정책

이명박 정부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정립하여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남북관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남북대화 채널의 복원에 힘써 왔다.

그러나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우리 정부를 비난하면서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였으며, 핵실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지속하였다.

이에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한편,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유연화 조치도 병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이루어 나가고자 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주민도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차원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이산가족들의 분단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이산가족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납북자 피해보상 지원에도 힘썼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3만 명 시대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인도주의와 인권, 우리 사회의 선진화와 복지, 통일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사안으로 접근하였다. 인도적 지원은 남북 간 정치·군사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순수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조건 없이 추진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명박 정부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분단관리와 함께 주도적인 통일준비를 병행하여 통일미래를 대비하고자 하였다.

제1절 정책 기본방향

1. 추진 배경

정부는 1989년 9월 11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한 이래 이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이 방안은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의 토대를 마련하고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키겠다는 의지의 발로이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개선·심화시켜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점진적·단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남북 간 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나아갈 경우 한반도에 평화가 자연스럽게 도래하고 통일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러한 기초하에 남북 간에 1992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남북공동선언」(6·15 공동선언) 등의 주요 합의들이 이루어졌다. 개성공단사업, 금강산 관광,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쌀·비료지원 등의 남북협력사업도 추진하였다. 그러나 경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이 확대·발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등 안보적 현안에서의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은 미미하였다. 또한 인도적 대북지원이 대규모로 이루어졌지만, 이산가족,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에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남북관계가 상호호혜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일방적 관계에 머물렀던 것이다. 정부의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북한은 군사 우선의 호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우리의 협력에 상응하는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가 없다는 국민의 비판적 여론이 고조

되었다. 게다가 이러한 남북관계 현상에 대하여 우리 사회 내부에서 이념적 대립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특히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10.9.)을 실시하여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하였다.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적인 핵의 비확산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엄중한 도발행위였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새로운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를 안고 출범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이념의 시대’를 뛰어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아갈 것을 선포하였고, 남북관계도 생산적으로 발전해야 하며 실용의 잣대로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는 큰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남과 북이 상호존중하면서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7,000만 우리 민족 모두가 행복하게 살고, 나아가 평화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17대 대통령 취임사 중

“남북통일은 7,000만 국민의 염원입니다.

남북관계는 이제까지보다 더 생산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가겠습니다.

남북한 주민이 행복하게 살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제17대 대통령 취임 선서(2008.2.25.)

2. 비전과 목표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제시하고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하였다.

우선 한반도의 직접적 안보위협 요인이 되고 있는 북한 핵 문제와 무력도발 문제를 평화적·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이와 병행하여 남북관계도 양적 확대보다는 상호존중 및 호혜주의에 입각한 실질적 남북관계로 진전시켜 나가고자 하였다. 기존의 남북관계를 한 단계 뛰어넘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가져오고, 북한의 개혁·개방 등 긍정적 변화를 통하여 통일의 실질적 발판을 마련해 나간다는 구상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평화·경제·민족공동체를 형성하여 통일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갖고 출발하였다.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은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분명하게 제시되었다. 이는 기존에 추진되어 왔던 정부의 통일방안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변화의 흐름을 반영한 미래비전이다.

첫째, 「평화공동체」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의 군사도발을 차단하여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이를 통하여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하는 것이다. 북핵 문제는 한반도의 안보불안을 초래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는 물론,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발전 또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는 지난 20여 년간의 북핵 문제 관련 경과를 보면 뚜렷이 드러난다. 남북관계는 북핵 상황의 부침에 따라 탄력을 받기도 하고 소강상태에 빠져들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발전의 길로 나선다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구조가 창출되고 남북관계도 한 단계 도약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는 한반도에 실질적인 평화정착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정치적 신뢰증진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정부는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둘째, 남북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남북경제협력이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지원’ 중심에서 탈피하여 ‘쌍방향적이고 상호보완적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방향에서 남북한의 자본·기술·자원·노동력 등을 결합하게 되면 남과 북 모두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며, 북한의 경제발전은 물론, 우리 경제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북한과의 기존 경제협력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북한의 일방주의를 배격하고, 남북 사업자 간 상호호혜의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새로운 경제협력사업은 북핵 문제 진전 등 한반도 안보상황, 경제협력사업 자체의 경제적 타당성, 우리 정부의 재정부담, 국민합의 등의 4원칙에 입각하여 추진하였다.

셋째, 한반도에 「민족공동체」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남북분단은 남북주민 모두의 행복을 제약해 왔다. 분단체제하에서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은 북한 주민으로 하여금 심각한 생활고를 겪게 하였다. 또한 이산가족, 국군포로·납북자, 북한이탈주민은 분단고통의 직접적인 피해자들로서, 이들의 어려움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분단과 냉전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서 출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한민족 모두의 존엄과 기본권, 자유와 복지,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민족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

3. 추진 과제

(1) ‘비핵·개방·3000’ 구상

이명박 정부는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추진 전략으로 「비핵·개방·3000」을 제시하였다. 「비핵·개방·3000」은 북한이 핵 폐기 결정을 내린다면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10년 내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즉, 북한의 핵 폐기 진전 상황에 따라 경제·교육·재정·인프라·생활향상 등 북한의 경제제건 및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포괄적 패키지 형태의 대규모 지원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비핵·개방·3000」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얻게 될 분명한 혜택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선택을 유도하는 전략적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핵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단계적인 대규모 경제 프로젝트를 통해 사실상 남북한 사이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안정적 평화통일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통일비전도 포함하고 있다.

(2)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실현을 위한 포괄적 구상인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근원적으로 위협해 온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함과 동시에 재래식 무기를 감축하여 남북한 상호신뢰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북한이 핵 포기 결심을 보여준다면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실행,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남북 고위급회의의 설치, 관련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경제·교육·재정·인프라·생활향상 등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아울러 진정한 평화로 나아가기 위하여 남북 간 재래

식 군비의 감축도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009년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중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실행할 것입니다.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설치하고 관련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교육·재정·인프라·생활향상 분야에 걸친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함께 남북 간 재래식 무기의 감축도 논의해야 합니다. 무기와 병력을 서로 줄이고, 뒤로 물러서야 진정한 평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문제들을 두고 남과 북이 만나서 대화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 어떠한 수준에서든 남북 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제2절 정책 추진 경과

1. 정상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

(1) 안정적 대화채널 구축 추진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상호존중과 호혜적 협력관계에 입각하여 정상적 남북관계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다. 한반도의 안정과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 간 대화채널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 29일 북한은 일방적으로 모든 남북 간 대화를 중단한다고 선언하였지만, 정부는 의연하게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였다. 2008년 4월 17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북한에 「남북 상설 대화기구」 설치를 제의하였고, 2008년 6월 6일 제53회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서도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함께 추진해야 할 교류와 협력사업’을 위한 남북대화를 제의하였다. 7월 11일에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하여 ‘전면적인 대화재개’를 제의하기도 하였다.

2008년 12월 북한의 육로통행 제한 등 조치(「12·1 조치」)에 대해서도 정부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이행 입장을 밝힐 것만을 촉구하면서 우리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였다.

2009년에 들어 북한의 2차 핵실험(5.25.) 등 도발이 있었으나 정부는 현충일 추념사 등을 통하여 대화의 문은 열려 있으며 6자회담에 복귀하라는 뜻을 전달하였다. 2009년 8월에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國葬)을 계기

로 북한의 조문단이 서울을 방문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조문단과의 면담에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하여 문제 해결에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2010년에 북한은 천안함 폭침(3.26.)과 연평도 포격 도발(11.23.)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도발 속에서도 정부는 2011년 초 천안함·연평도 문제 해결을 위한 비공개 접촉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 사실을 6월 1일 공개하고 오히려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행위로 대응하였다. 이는 대화에 필요한 기본적인 신뢰마저 저버린 행위로 이후 남북대화는 더 이상 진전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2011년 하반기에는 한반도의 긴장국면 완화와 남북 간 대화복원 여건 조성을 위하여 대북 유연화 조치를 시행하였다. 「5·24 조치」의 범위 내에서 비정치·비군사 분야 교류가 재개되었고,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과 개성공단시설 지원사업도 다시 시작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도 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돌연 사망함으로써 남북관계는 다시 긴장국면에 돌입하게 되었다.

정부는 2012년에 들어서 「고구려 고분군 병충해 방제를 위한 실무회담」(2.7.)과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2.14., 8.8.)을 제안하였으나, 북한은 이에 대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수해와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성의껏 지원하고자 하는 뜻을 밝히고, 이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9.3.)하였으나 북한은 “그러한 지원은 필요치 않다.”라고 거부하면서 대남 비난과 위협을 지속하였다.

(2) 원칙 있는 남북대화 추진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면서 동시에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현안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원칙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정부는 「제37차 남북군사실무회담」(2008.10.2.)을 통하여 북한측에 우리 당국에 대한 비난 중단, 남북 당국 간 전면적 대화 촉구, 금강산 관광

객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대책 요구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북한측은 대남 전단 살포 중지 등을 요구하였다. 「제38차 남북군사 실무회담」(2010.9.30.)에서는 우리 측은 우리 당국에 대한 비난 중단,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긴장완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북한측은 민간단체 전단 살포 중지, 서해 해상 경계선 침범 중지, 천안함 조사결과 부인 및 검열단 파견 수용 등을 주장하였다.

한편 정부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2008.7.11.)과 관련해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진상규명’, ‘재발방지’, ‘신변안전보장’의 3대 조건의 우선적 해결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사건의 진상을 밝혔고, 재발방지 및 신변안전보장이 김정일 위원장의 특별조치에 따라 확고히 담보된 만큼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무조건적인 관광 재개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인도적 지원문제 협의를 위한 적십자 회담 및 실무접촉이 2009년부터 2010년에 걸쳐 6차례 개최되었다. 정부는 ‘인도주의 정신 존중’, ‘근본적 문제 해결’, ‘상호협력’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관한 3대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산가족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진척을 이루지 못했고,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11.23.)로 11월 25일로 예정되었던 「남북적십자회담」이 무산되었다.

2011년 들어 북한은 국제적 고립타파와 국면 전환을 위하여 당국·민간·의회 등 전방위에 걸쳐 공세를 해오면서 대화를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1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과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의제로 남북대화를 제의(1.10.)하였다. 북한은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할 데 대하여”란 의제로 2월 상순 회담을 개최하자고 역제의

(1.20.)해 왔다. 이에 따라 2011년 2월 「제39차 남북군사 실무회담」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2.8.)되었다. 그러나 북한측 대표가 “천안호 사건은 특대형 모략극”이라고 언급하는 등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여 회담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였다.

2.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

(1) 북핵 해결 노력과 북한의 위협에 단호히 대응

2차 북핵 위기를 계기로 2003년 시작된 남북한·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6자회담은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합의」(「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 2007년 「10·3 합의」(「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등의 성과를 도출하였다.

2007년 「10·3 합의」에서 북한은 현존하는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신고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6월 26일 플루토늄 생산량 등을 적시한 핵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하고, 6월 27일에는 영변 5MWe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였다. 이에 미국은 6월 26일 북한에 대한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하고, 10월 11일 테러 지원국 지정을 해제하였다.

또한 6자회담 참가국은 「2·13 합의」 및 「10·3 합의」에서 북한 핵시설 동결 및 불능화에 대한 상응조치로 중유 100만 톤 상당의 경제·에너지 지원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총 100만 톤 중 20만 톤 상당의 중유 및 설비 지원을 이행하기로 하였으며, 북핵 상황이 악화되기 전까지 중유 5만 톤과 중유 9만 5,000톤에 상당하는 에너지 관련 설비·자재를 제공하였다.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 이후, 신고서 내용에 대한 평가 및 검증 관련 논

의를 위해 2008년 7월과 12월에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가 개최되었다. 동 회회에서는 검증체제 수립 및 비핵화 2단계 마무리를 위한 불능화, 경제·에너지 제공 및 이행 문제, 동북아 평화·안보 지도원칙(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러나 끝내 핵심 쟁점이었던 검증의정서는 채택하지 못한 채 종료되었으며, 2009년 들어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4월 5일 함북 무수단리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행동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기존의 약속을 준수할 것과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2009년 4월 13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¹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및 국제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9·19 공동성명」 등 6자회담에서 추진되어 온 북핵 문제 해결과정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과거로 돌아간 것을 의미한다.

이후 북한은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정부는 핵실험 직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여 관련 상황 및 대책을 검토하였고, 북핵 불용 입장을 재천명하는 정부성명을 발표하였다.

¹ 북한은 2009년 4월 14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을 비난하면서 더 이상 6자회담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합의에도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자주적 우주 이용 권리 행사, 자체의 경수로 발전소 건설 적극 검토, 핵 억제력 강화 및 핵시설 원상복구·정상 가동, 폐연료 봉 재처리 등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2009년 4월 29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도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실험 등 추가적 자위조치를 취할 것이며, 경수로 발전소를 건설하고 그 핵연료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개발, 즉 우라늄 농축을 시작할 것임”을 밝혔다.

북한 핵실험 관련 대한민국 정부 성명(2009.5.25.)

북한은 2009년 5월 25일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2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를 포함한 세계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이는 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6자회담의 합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추가 핵실험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6자회담 참가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와 모든 관련 계획을 폐기하고 즉각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에 복귀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규범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하여 단합되고 일치된 대응으로 대처해나갔다.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들도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비난하였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9년 6월 13일 화물검색, 무기 관련 물품 수출통제, 사치품 반출제한 및 제재대상 북한단체와의 거래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제187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우리 정부와 미국·중국 등 6자회담 참가국은 북핵 폐기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남북접촉 → 미·북접촉 → 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6자회담 재개 3단계 프로세스를 수립하였다. 다만, 북한이 기존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6자회담이나 어떠한 협의도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비핵화 진정성을 말아 아닌 행동으로 보이라고 촉구하였다.

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과 외교적 노력에 힘입어 2011년 7월 2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남북 비핵화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회담은 9월 베이징에서의 제2차 접촉(9.21.)으로 이어졌으며, 1, 2차 미·북 대화(7.28.~29., 10.24.~25.)도 이루어졌다. 한·미는 실질적 진전이 있는 6자회담 개최를 위해 북한이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 중단 등을 포함하는 비핵화 사전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진정성을 보일 것을 북한에 요구하였다.

이후 미국과 북한은 뉴욕채널을 통한 실무접촉과 대북 영양지원 관련 베이징 접촉을 이어갔고, 이는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미국과 북한은 2012년 제3차 미·북 대화(2.23.~24.)를 통하여 비핵화 사전조치를 합의하고, 2012년 2월 29일 동시에 합의사항을 발표하였다. 우리 정부는 협상과정 전반에 걸쳐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통해 입장을 조율하였으며, 여타 6자회담 참가국과 함께 합의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2012년 3월 16일 미사일 발사 계획을 발표하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4월 13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합의 위반으로 우리 정부와 미국·중국 등이 장기간 노력하여 진행해 온 6자회담 재개 프로세스는 무산되고 말았다.

(2) 북한의 무력도발에 단호히 대응

①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도발과 정부의 대응

2010년 3월 26일 우리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이 북한군 잠수함의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하여 장병 46명이 사망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6·25 전쟁 이후 최대의 군사도발이었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와 정전협정, 유엔헌장에 대한 정면 위반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5월 2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분명히 물겠다고 선언하였다. 앞으로는 북한의 도발

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원칙을 견지할 것이며, 우리 영토를 무력으로 침범한다면 자위권을 발동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한 북한정권의 변화를 촉구하였다.

같은 날 정부는 통일·외교·국방 3부 장관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따른 분야별 대응조치를 발표하였다. 통일부장관은 북한이 상생·공영의 남북관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하고, 남북관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민과 함께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언급하였다. 정부는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남북관계를 보다 건전하고 정상적으로 유도하고자 5대 남북교류협력 중단 조치(「5·24 조치」)를 발표하였다.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불허하고, 개성공단 이외의 남북협력사업 및 남북교역을 중단하였으며,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하였다. 또한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를 불허하기로 하였으며, 취약계층을 제외한 대북지원사업을 보류하였다.

「5·24 조치」 내용

1.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한다. 제주해협을 포함해 우리 측 해역에 북한 선박의 운항과 입항을 금지한다.
2. 남북교역을 중단한다. 남북 간 일반 교역은 물론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한다.
3.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를 제외한 북한 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하고,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제한한다.
4.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를 불허한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확대도 금지한다. 개성공단의 생산 활동을 지속되도록 하되 체류인원은 축소 운영한다.
5. 대북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류한다. 다만,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은 유지한다.

외교통상부는 북한의 무력공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규탄 여론을 조성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조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방부는 2004년 이후 중단된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고, 서해에서 한·미 연합 대(對)잠수함 훈련을 실시하며, 역내의 해상차단훈련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5·24 조치」 발표 이후 언론사 주관 여론 조사 결과는 약 60%의 국민이 정부의 조치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 미·일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도 이러한 대응을 적극 지지하고 대북공조 의사를 표명하였다.

정부의 천안함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5.20.)을 통해 “제재에는 전면전쟁을 포함한 강경조치로 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를 전면 부인하고 대남 강경대응을 지속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대처하며 북한의 책임 있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동시에 정부의 대북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2010년 11월 23일, 적십자 회담을 이틀 앞두고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발생하였다. 북한군은 오후 2시 34분경에 우리의 연평도 군부대 및 민가를 향해 무차별적인 포격을 시작하였다. 공격은 1시간이 넘게 지속되었으며 연평도에서 복무하던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중경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그뿐만 아니라 주택, 공공기관 등의 건물들이 파괴되고 불에 타서 주민들 대부분은 연평도를 떠나 피난 생활을 해야 했다.

정부는 즉각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수석대표 명의의 대북 전통문을 보내

2 조선-한국갤럽(2010.5.27.), 찬성 60.4%, 반대 20.9% / 한겨레-리서치플러스(2010.5.31.), 적절 59.7%, 부적절 30.7%

북한군의 포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2010.11.23.)하였다. 또한 정부는 성명을 발표(11.23.)하여 북한의 연평도 포격행위는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무력 도발이며 민간인에게까지 무차별 포격을 가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추가 도발 시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10월 25일부터 시작되었던 대한적십자사의 북한에 대한 수해지원물품 전달도 중단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11월 29일 특별담화를 통해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이며 앞으로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우리 국민들도 민가에까지 포격을 감행한 북한의 잔혹함에 분노하면서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였으며, 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높아졌다. 사건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들의 87.3%가 연평도 도발은 북한의 책임이라고 규정하였고, 64.8%가 원칙 있는 대북정책에 찬성하였으며, 57%는 강력한 압박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³

국제사회도 북한의 도발을 한목소리로 규탄하였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및 미국·일본·호주·프랑스·독일 등 많은 국가들이 북한의 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어떠한 추가 도발도 억제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더 이상 북한의 무력 도발이 발생하지 않고, 남북관계가 정상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반드시 매듭짓고 넘어가야 한다는 판단하에 지속적으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였다.

② 북한의 위협과 일방적 조치에 의연하게 대응

북한은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같은 무력도발 외에도 우리 정부를 비난·

3 아산정책연구원(2010.11.29.), 동아일보(2012.2.16.)

위협하고 여러 가지 일방적인 조치를 취해 남북관계를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돌려놓으려는 시도를 지속하였다. 이에 정부는 상호존중의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 의연하게 대응하였다.

먼저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 29일 대남 전통문을 통해 대화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후 우리 대통령과 정부를 비방·중상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9년 초에는 국방부장관의 서해 북방한계선 감시·통제활동 강화 발언을 빌미삼아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1.17.)을 통하여 “전면 대결태세에 진입”하겠다고 위협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비난과 위협은 이후로도 지속되었다. 2010년 우리 정부의 「5·24 조치」에 대해서는 총참모부 중대 포고(6.12.)에서 “서울 불바다까지 내다본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을 언급하였다. 2012년 4월에는 ‘최고 존엄을 모독하였다’는 이유로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4.18.)을 통해 “모든 것을 날려 보내기 위한 특별행동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거듭 위협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위협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대북정책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 나간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이 도를 넘을 경우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2012.4.23.) 등을 통하여 북한의 위협과 비난이 상황 타개는 물론 북한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중단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북한은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위협하고 그동안 발전시켜 온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하였다.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이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조치 및 이에 대한 북한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진상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금강산 관광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7.12.)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오히려 금강산지구에 있는 우리 당국 관계자 인원을 추방하고 우리 인원들의 금강산지구 방문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2010년 초 북한은 금강산 관광을 무조건 재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0년 4월부터 금강산 관광지구 시설물을 동결·몰수하였다. 북한은 2011년 4월 8일 금강산 관광에 대한 현대아산의 독점 효력을 취소하고 5월 31일에는 기존 정령의 효력을 폐기하면서 금강산 관광지구를 국제관광 특구로 지정하는 <금강산 국제관광 특구법>을 채택하였다. 정부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이를 협의하기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 제안을 거부한 채 8월 22일 금강산 국제관광 특구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하여 우리 측 재산을 몰수하고 반출금지와 인원철수를 요구하였다.

한편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북한은 2008년 「12·1 중대조치」를 통해 육로 통행을 제한하고, 2009년 3월 30일부터 8월 13일까지 우리 측 근로자를 억류하는 등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정부는 이에 굴하지 않고 대북정책의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하였다.



M I N I S T R Y O F U N I F I C A T I O N

제 2 장

통일준비

제1절 실질적 통일준비 착수

제2절 국내외적 협력체제 구축

제3절 국민적 합의기반 강화

제4절 북한정보 역량 강화

제2장 통일준비

이명박 정부는 분단상황의 소극적인 관리를 넘어 적극적인 통일준비로 나아가는 통일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우리 사회의 통일논의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동안 관념적 차원에서 논의되었던 통일문제를 현실의 문제로 보았다. 그리고 통일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현실적 인식에 기반을 두어 중장기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통일준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통일과정은 복잡하고 장기적이며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이슈 및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 보고 정책적 차원에서 대비하고자 하였다.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을 통해 남북 간 공동체 형성 및 통일, 통합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통일법제 구축사업」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과정에서의 다양한 법·제도 수요에 대비한 분야별 법제 및 연구사업도 진행하였다.

통일준비를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확산이 필요한 만큼, 통일준비 공론화 사업을 통해 교육계·학계·시민사회계·경제계·종교계 등 우리 사회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통일논의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그와 더불어 국민들이 통일준비의 필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일준비 상징물로 '통일항아리'를 내세우고 국토대장정, 토크쇼, 온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통일준비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특히 '통일자원 마련'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이는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수요에 미리 대비하고, 통일에 따른 부담을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 분담하자는 취지이다. '통일자원 마련 사업'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닌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마음과 의지를 결집시키자는 취지에서 진행되었다. 동시에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통해 통일자원 적립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통일계정」)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국제협력과 통일외교를 통해 한반도 주요 현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주변국가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통일의 역량을 다져나갔다. 내부적으로는 북한정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수집, 관리,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는 북한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북한정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1절 실질적 통일준비 착수

1. 3대 공동체 통일구상 및 통합과정 연구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 등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을 제시하면서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의 하나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통일은 반드시 온다’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분단관리를 넘어 ‘적극적 통일준비’로 나아가야 한다는 새로운 통일정책 방향이 천명된 것이다.

2010년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중

남과 북은 더 이상 불신과 대결로 점철된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이제 현실을 직시하여 용기 있는 변화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결이 아닌 공존, 정체가 아닌 발전을 지향해야 합니다. 주어진 분단상황의 관리를 넘어서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우선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공동체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아가 남북 간의 포괄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남북한 경제의 통합을 준비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궁극적으로는 제도의 장벽을 허물고 한민족 모두의 존엄과 자유,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족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한민족의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정부는 2010년 광복절 경축사 후속조치로서 '적극적 통일준비'를 국정과제로 정하였고, 공동체 구상에 대한 정책연구와 통일문제에 대한 각계각층 공론화 사업을 두 축으로 하는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정책연구사업의 경우, △공동체 형성을 통한 통일실현 구상 △평화공동체 추진구상 △경제공동체 추진구상 △민족공동체 추진구상 △통일재원 마련 방안 등 5개 주제를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약 10개월간 집중 연구하였다. 5개 주제 공통으로 '공동체 형성을 통해 점진적·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이 된다'는 전제로 통일 이전 공동체 형성과정 및 통일 이후 국가 통합과정 전체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특히 향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통일이 된다는 3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한 후, 각각의 경우에 가장 바람직한 공동체 형성과정, 단계별 주요 과제, 비용 추계 및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제시하였다.

「공동체 형성을 통한 통일실현 구상」에서는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 3대 공동체가 평화공동체 과제로부터 시작되어 경제 및 민족공동체의 과제로 순차 병행적으로 연계되는 나선형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통일 10년 후 한반도는 세계 7~8위의 경제규모를 갖춘 선진민주국가, 평화·번영의 모델국가, 녹색성장국가, 창조적 문화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평화공동체 추진구상」은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요 지표로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 신뢰구축 및 운용적 군비통제, 구조적 군비통제, 역내 안보협력체제 운용, 군 인력 통합, 군 시설·장비 통합 등 7개를 선정하고,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주요 지표별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경제공동체 추진구상」은 국내·대북·국제 차원을 동시에 고려한 추진구도하에서 남북 간 경

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요 지표를 경제제도 통합, 시장요소 통합, 기반시설 통합, 산업구조 조정 및 재배치 등 4개 향으로 선정하고 시장경제에 기초한 열린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민족공동체 추진구상」은 정서·생활·복지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민족공동체로 보고, 이를 위한 주요 지표로 분단 상처 치유(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인권보장 및 차별 불균형 해소, 언어 동질성 회복, 문화 동질성 회복, 교육 및 학제 통합, 국가 정체성 구축, 공통 역사관 정립 등 7개 향으로 선정하고 실행계획을 제시하였다.

「통일재원 마련방안」은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 형성과정에서 주요 과제별 비용을 합하는 방식으로 통일비용을 추정해 보고, 기존의 통일편익을 정리하는 한편 무형의 통일편익을 화폐 지불의사를 묻는 설문조사(가상상황평가법, Contingent Valuation Method)를 통해 추정하였다. 통일재원 마련방안 연구¹에 따르면 ‘20년 후 통일을 가정할 경우 통일 직후 1년간의 초기통합비용으로 최소 55조 9,000억 원에서 최고 277조 9,0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최소한의 사회복지만 제공할 때 약 56조 원의 재원이 소요되고, 남한과 유사한 수준으로 제공할 때 약 278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연금·의료보장제도를 사전 정비 시 통일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았다.

2011년에 진행한 3대 공동체 형성 로드맵, 통일재원 마련방안을 기초로 하여 남북 간 공동체 형성 및 통일미래 준비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과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2차년도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을 2011년 하반기부터 추진하였다. 먼저 2011년 8월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주제공모를 실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취합하였다. 공모결과 국내 218건, 해외 41건 등 총 259건이 접수되었으며, 최종적으로 16건의 주제를 확정된 후 2012년 말까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1 한국재정학회,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 공동 수행

2012년 상반기에는 ‘적극적 통일준비’ 관점에서 교류협력 활성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촉진요인 및 도전요인, 제도개선 등을 대주제로 하여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3차년도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10개 주제를 확정하였다. 3차년도 사업은 2012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정책연구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통일 관련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 법학, 통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남북관계·통일 전문가와 각 분야별 전문가팀이 공동 연구하는 계기가 조성되었다. 남북 간 교류협력 및 공동체 형성과정에서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통일비용을 줄이고 공동체 간 선순환 관계를 구축하여 통일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 분야별 전문가로 사업감리단(Project Coordinator Group)을 구성하여 정책연구 과제를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1~3차년도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연구주제 목록

구분	연구 주제
1차년도 (2010~2011년)	△공동체 형성을 통한 통일실현 구상 △평화공동체 추진구상 △경제공동체 추진구상 △민족공동체 추진구상 △통일재원 마련방안
2차년도 (2011~2012년)	△북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방안 △북한의 재해방지 및 한반도 재난안전망 구축방안 △한반도 통일 대비 보건 의료 체계 미래전략 수립 △통일 대비 통계 부문 대응전략 △북한 도시 생명선 구축 △북한이탈주민 탈남현상과 정책변화 △북한 관료 활용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유럽사회 비교와 디아스포라 분석 △동유럽체제 전환과 사회통합 경험 △공진화 전략과 인식공동체 강화 △남북 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재외동포 활용방안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 간의 사회적 통합지수 연구 △통일 초기 신속한 사회통합을 위한 과도적 특별법제 모델 연구 △탈민족주의 시대 통일의 과제 △Demobilizing the N.K. Military as Part of Unification △Creating a Unification Database
3차년도 (2012~2013년)	△미래지향적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북한 지역별 종합개발 모델 연구 △남북협력지구 확장·발전전략 △민족공동 문화자산 교류협력 추진방향 △지방자치단체의 대북교류·협력 발전방향 모색 △북한 산림복구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방안 △남북 주민 간 내적 통합 확대를 위한 교육 및 공동프로그램 기획 △공동체 형성 촉진을 위한 교류·협력 관련 법 발전방안 △개성공단 운영경험에 기초한 법·제도 기준 개선방안 △공동체 형성 촉진을 위한 분야별 계획(총괄 및 외교안보)

* 2차년도 사업 2개 과제는 영문으로 계약되었음.

2. 통일준비 공론화

이명박 정부는 정책연구와 병행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통일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통일준비 공론화 사업」을 2011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에 걸쳐 약 3만 7,4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다.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켜 통일이슈가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통일비용뿐만 아니라 통일편익, 통일비전 등 다양한 통일 관련 이슈들이 균형적으로 논의되면서 통일논의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계·학계·경제계·시민사회계·종교계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심도 있는 사업이 실시되었다.

통일준비 공론화 사업 분야별 대상 및 프로그램

분야	대상	프로그램	횟수
교육계	초·중·고 학생, 교사	통일이야기, 교사포럼, 통일 용틀임 한마당	131
학계	대학(원)생, 전문가	대학(원)생 세미나, 전문가 세미나, 대학생 특강 등	49
경제계	경제인	경제인 세미나, 심층면접, 의식조사	17
시민사회계	일반시민 단체	통일포럼, 비정부기구(NGO) 통일세미나	22
종교계	종교인	통일세미나, 통일워크숍, 의식조사	29

우선 교육계에서는 통일미래시대의 주역으로 활동할 초·중·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생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통일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통일인식을 심어 주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통일 용틀임 한마당」을 통해 전국 주요 7개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통일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들에게는 「통일을 위한 교사 포럼」을 통하여 통

일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교사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통일인식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계는 총 131회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진행과정 중에 나타난 성과 및 문제점을 토대로 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 극복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학계에서는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세미나」를 통하여 통일논의 공론화를 위한 전문가들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또한 대학(원)생들에게도 「대학(원)생 세미나」에 참여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저명인사를 초청한 「대학생 특강」 및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대학생 통일캠프」를 마련하여 대학생들로 하여금 통일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통일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다.

경제계에서는 경제인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2011년 2월 대한상공회의소 소속 경제인 1,015명을 대상으로 「경제인 통일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통일문제에 대한 경제인들의 인식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제기된 주요 쟁점을 의제로 하여 지역별·단체별로 「경제인 세미나」를 진행함으로써 경제인들이 다양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총 35명의 경제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은 앞서 의식조사 등에 나타난 경제인의 인식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이를 계기로 경제계는 15회의 공론화 행사 및 의식조사, 심층면접 등 총 17회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시민사회계에서는 통일논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토론의 장인 「통일포럼 미래로」를 진행하였다. 또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 「NGO 통일세미나」를 통해 NGO(비정부기구)가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공론화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였다. 시민사회계는 대규모 개방형 문화행사 실시, 통일 관련 유명인사 초청 등으로 언론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대규모 통일대회를 포함, 총 22회에 걸쳐 공론

화 사업을 실시하였다.

종교계는 「통일 세미나」를 통하여 7대 종단을 아우르는 종교인들의 통일 논의 공론화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와 함께 각 종단은 「통일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각 종단에 속한 종교인들이 통일의 주요 의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2011년 5월에는 종교인 1,008명을 대상으로 「종교계 통일의식 조사」를 실시하는 등 총 29회의 행사를 실시하였다.

통일준비 공론화 사업은 5개 분야별 6,72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5개 분야 여론조사 결과

(단위 : %)

문항	보기	전체	교육계	학계	경제계	시민사회계	종교계
통일에 대한 관심도	매우 관심	24.1	22.6	17.2	42.8	41.6	16.3
	관심	55.0	61.7	58.8	46.1	46.2	49.3
	관심 없음	17.8	14.8	20.8	9.8	10.8	25.8
	전혀 관심 없음	3.1	0.9	3.2	1.3	1.3	8.6
통일준비 정도	매우 잘됨	0.9	0.9	0.7	0.7	1.9	0.3
	대체로 잘됨	8.7	9.4	5.4	8.7	14.4	9.8
	그다지 안 됨	72.9	78.7	73.1	72.7	68.1	68.5
	전혀 안 됨	17.5	11.0	20.8	17.8	15.5	21.3
통일편익 vs 통일비용	편익>비용	44.4	47.8	46.1	55.8	48.0	27.3
	편익=비용	18.9	19.4	19.9	13.5	17.7	19.6
	편익<비용	36.7	32.8	33.9	30.7	19.6	53.1
바람직한 통일재원 마련방안	일정부분 예산적립	61.4	68.7	60.6	63.2	56.4	56.2
	통일세 등 신설	12.8	13.4	9.9	15.8	19.0	11.4
	국민성금	11.5	8.2	10.9	9.4	14.0	16.0
	국제금융기구 등 도움	11.6	8.0	14.4	7.7	8.0	16.3
통일을 위한 중점과제	자주 국방력 강화	16.6	14.6	12.4	15.7	24.0	22.1
	내부 통일준비 강화	31.0	35.3	28.8	24.7	32.5	31.0
	대북경제지원 확대	4.1	3.9	3.9	2.7	3.0	6.6
	남북교류협력 증대	37.4	37.7	42.2	45.2	26.7	32.8
	통일외교 강화	8.8	7.7	11.0	9.7	12.0	2.5

* 조사 대상 : 교육계 1,645명, 학계 2,383명, 경제계 554명, 시민사회계 997명, 종교계 1,148명

** 일부 문항의 경우, 무응답이 있음.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우리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보면, 통일에 대한 관심은 79.1%로 높은 반면, 90.4%는 통일준비가 잘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람직한 통일재원 마련방안에 대해서는 61.4%가 예산의 일정부분 적립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을 위한 중점 과제로는 남북교류협력 증대(37.4%), 내부 통일준비 강화(31.0%)를 꼽았다.

통일준비 공론화 사업은 기존의 수도권 중심 통일논의에서 벗어나 전국적 차원에서 각계각층 대상 통일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향후 경제인·일반시민 등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공론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3. 통일항아리(통일준비) 캠페인 추진

정부는 통일준비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각계각층 인사와의 면담, 강연, 각종 행사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추진하였다. 또한 국민들이 통일준비 필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일준비의 구체적 상징물인 「통일항아리」 제작 작업을 진행하였다.

(1) 통일항아리 제작

예로부터 항아리는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께서 아끼던 소중한 살림살이 중 하나였다. 간장, 된장 같은 음식뿐 아니라 애지중지하는 물건을 넣어두는 보물창고로도 쓰였다. 밥을 지을 때마다 쌀 한 줌씩을 덜어 항아리에 보관하다가 집안에 큰일이 생겼을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역할을 했던 것도 항아리였다. 이런 선조의 지혜를 본받아 통일시대 준비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의지와 정성을 담은 상징으로 통일항아리를 제작하게 되었다.

통일항아리는 류우익 통일부장관과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105호 백산 김정옥 사기장이 함께 빚었다. 항아리 제작은 2012년 5월 12일 경북 문경시 문경읍에 있는 ‘영남요’에서 진행되었는데, 재료 반죽, 형태 만들기, 상하 붙이기, 글씨 쓰기, 유약 바르기, 굽기 등의 작업과정을 거쳤다. 항아리 제작을 위해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수차례 문경 영남요를 방문하여 작업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40여 일 만인 2012년 6월 23일, 마침내 통일항아리가 완성되었다.

완성된 통일항아리는 높이와 좌우 폭이 50cm 정도의 백자 달항아리로 ‘평화통일’이라는 푸른색 글씨가 적혀 있다. 조선 전래의 달항아리 제작기법으로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따로 만든 후 두 부분을 접합하여 구웠는데, 이는 분단된 남북이 다시 하나로 이어지는 의미를 상징한다. 제작된 통일항아리를 정부중앙청사, 국회 등에서 전시하는 등 통일준비를 위한 국민들의 의지와 행동을 모으는 상징으로 활용하고 있다.

통일항아리 제작 과정



빚기



글씨 쓰기



굽기(불때기)



꺼내기

(2) 통일준비 공감대 확산

통일항아리 제작과 더불어 통일준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의를 결집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전개하였다. 대학생 등 젊은 세대들과 통일준비에 대해 소통하고자 개최한 「통일항아리 토크쇼」(2012. 7.12.)에서는 콩트 형식으로 통일문제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한편, 통일송 문화공연 등 젊은 세대를 위한 눈높이 통일행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통일항아리 국토대장정」(2012.9.13.~9.20.)을 통해 대전·광주·부산·대구·삼척 등 전국 주요 12개 도시를 통일부 직원들이 자전거로 순례하면서 각 지역 현장에서 국민들을 직접 만나 통일정책과 통일준비 필요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통일항아리 국토대장정(2012.9.13.~9.20.)

또한 통일준비 관련 행사 시 홍보 소책자와 지지 서명카드 등을 통해 통일준비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지지와 협조를 구하였다.



'지금은 통일준비에 나설 때입니다'



'통일항아리 이야기'

2012년 6월에는 통일준비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일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통일준비 캠페인 홈페이지(www.unijar.kr)를 개설하였다. 이 홈페이지 내에 통일항아리 소개, 통일항아리 응원 서명, 유명인 응원 영상, 네티즌 응원 댓글 등의 내용을 게재하여 통일준비 실천의 중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통일항아리 응원하기’를 통해 국민의 통일의지를 결집하였다.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유명인사의 응원 영상 게재,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통일준비 캠페인 사이트

(3) 민간 차원에서의 통일준비 노력

통일재원 마련 등 통일준비 노력의 취지에 공감하고 뜻을 같이하는 민간층의 통일준비 운동도 본격화되었다.

2012년 5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민족통일중앙협의회, 통일교육위원협의회, 통일교육협의회,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등 8개 민간단체 공동주최로 「통일준비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는 학계, 통일 관련 단체, 학생 등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에서 350여 명이 참여하여 통일준비의 필요성, 통일재원 마련의 의의와 방법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통하여 통일준비에 대

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후 통일준비를 위한 민간단체 설립 준비위원 모임을 두 차례 개최한 후, 2012년 6월 19일 프레스센터에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여, 단체명을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통일생각')으로 결정하였다. 「통일생각」은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들의 통일의지를 고양하고, 통일준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며, 이를 바탕으로 민간 차원의 통일재원 마련 등 '실천적인 통일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설립취지를 밝혔다. 발기인 총회에는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윤장현 광주국제교류센터 이사장, 신일희 계명대학교 총장, 김삼환 명성교회 담임목사, 조계종 지홍 스님, 이기준 전 서울대학교 총장, 이기수 전 고려대학교 총장, 김한중 전 연세대학교 총장, 손병두 KBS 이사장, 김덕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등 사회·직능 단체, 종교계, 학계, 문화예술계 인사 32명이 참여하였다. 이후 「통일생각」 국내 지부 및 해외 지부 결성이 이루어졌다.



통일준비 대토론회(2012.5.3.)



통일생각 발기인 총회(2012.6.19.)

4. 통일재원 법제화

통일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를 법제화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하여 통일계정

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990년에 <남북협력기금법>이 제정된 이후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에 공헌해 왔으나, 남북협력기금의 목적이 남북교류협력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협력기금의 역할 및 기능 확대는 일정부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남북협력기금법> 제정 당시에도 남북협력기금에 남북교류협력 외에 통일기금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정부재정 부담 과다 등을 이유로 법률로서 구체화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하는 법률의 골격과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었고, 남북협력기금의 역할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통일기금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하였다.

남북협력기금의 역할을 통일기금으로까지 확대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한반도 평화통일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 통일준비를 시작하는 의미를 가진다. 둘째, 통일재원을 사전에 적립함으로써 미래 통일 시에 직면하게 될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을 지원하게 된다. 셋째, 통일비용을 통일 당시 세대에 모두 부담시키기보다는 지금부터 통일비용을 분담함으로써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넷째, 민간기부금 등을 통해 국민적 통일의를 결집하고,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가에 우리가 한반도 통일의 주역임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하여 3대 공동체(평화·경제·민족) 통일구상을 제안하였다. 이의 후속조치로 남북협력기금의 역할 및 기능 확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되었다.

국회 차원에서도 통일재원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어 2010년 하반기에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3건(송민순·정의화·김충환 의원 발의안), <통일기금법> 제정안(이명수 의원 발의안), <통일세법> 제정안(김충환 의원 발의안) 등이 발의되었고, 2010년 11월 29일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3건과 <통일기금법> 제정안이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이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은 남북의 통일을 대비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정(통일계정)에 재원을 적립해 나간다는 것이다.

정부는 제18대 국회에 계류 중이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에 정부 입장을 반영하여 통일재원 법제화 및 통일재원 적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11년 11월 1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통일재원 관련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마련하였다. 정부 입장을 주요 내용은 기존 남북협력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구분하고, ‘통일계정’에 ‘정부출연금’·‘민간출연금’·‘남북협력계정 미집행액 일부’ 등을 적립한다는 것이다. 통일계정에 적립된 재원은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

2012년 2월 6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일재원 법제화를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심사하였으나, 여야 간의 입장 차이 등으로 인해 법률 개정으로까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제19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정부는 평화적 통일준비는 국가적 책무이며, 통일준비를 위해서는 통일재원 법제화(통일계정, ‘통일항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판단하에 ‘정부입법’으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재추진하기로 하였다. 2012년 5월 16일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2012년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후 8월 29일에 개정안을 국회에 송부하였다. 국회 차원에서도 통일재원 법제화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정의화 의원 발의안)과 <통일기금법> 제정안(이명수 의원 발의안)이 지난 제18대 국회에 이어 제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다.

5. 통일법제 구축

정부는 남북 간의 공동체 형성을 통한 단계적이고 안정적인 평화통일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는 국내외 정치·경제적 상황, 주변국가와의 관계, 북한 내부 요인 등 상당한 불확실성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고, 남북한 통합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일법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남북 간 교류협력이나 개성공단 운영 등 분단상황에서의 교류협력을 규율하는 교류협력 법제 준비를 우선 추진하여 왔으나, 이제는 남북한 통합과정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규율해 나갈 법·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08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통일법제 구축사업」이 반영되어, 2009년부터 「통일법제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먼저 통일법제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부 내 유관 부처 및 민간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통일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09년에는 정부부처(통일부·법무부·법제처) 및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하였으며, 2010년에는 사법부(대법원), 2011년에는 입법부(국회 법제실)도 참여하였다. 2012년에는 민간위원을 확대하는 등 통일법제 관련 민관협의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여 왔다.

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되어, 통일법제 관련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부처 간 정책연구의 성과를 공유하여 업무중복을 방지함으로써 통일법제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정부는 각 정부기관이나 학계에 산재해 있던 통일법제 관련 연구결과를 체계적으로 종합,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database, 이하 'DB')로 구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에는 1960년 이후 현재까지의 통일법제 관련 연구결과를 수집하고, 분류하여 CD에 수록·배포하였다. 2010년에는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각 분야별 우수 자료의 원문 375편과 목록 995편을

DB에 수록하고, DVD로 제작하여 관계부처, 연구기관, 민간 연구자 등에 배포하였다. 2011년에는 이를 업데이트하여 원문 601건, 목록 1,535건을 DB에 수록하였다. 통일법제 DB는 북한법제 연구, 남북한 법제 비교연구, 교류협력 관련 법제, 법제통합 관련 연구, 소련 동구권 및 남북한 법제통합 관련 해외사례 연구에 이르기까지 관련 연구결과물을 망라하고 있어, 통일법제 관련 실무자들과 연구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으며, 향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활용도를 더욱 높여 나아갈 계획이다.

정부는 통일법제 관련 민간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 저변을 확대하며, 전문가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술회의를 후원하였다. 북한법연구회나 공법학회와 같은 기존 전문학회는 물론, 2011년부터는 사법연수원생 및 대학원생들이 개최하는 학술회의도 지원하여 통일문제와 통일법제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을 제고하고 신진 연구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통일법제 관련 학술회의 지원 내역

연월	주최	주제
2009년 4월	북한법연구회	북한법의 변천과 전망 및 과제
2009년 11월	북한연구학회	독일통일 20년과 남북법제통합의 과제
2010년 6월	통일연구원	통일법제 관계자 워크숍
2010년 10월	공법학회	독일통일의 회고와 한국통일의 전망
2010년 11월	북한법연구회 등	광복 65주년 통일대비 특별법제 - 통일법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제
2011년 4월	공법학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 평화통일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공법적 검토
2011년 7월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	통일법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쟁점과 과제
2011년 11월	법제처	제1회 아시아법제 포럼 - 아시아법제의 변화와 남북법제의 정비
2012년 6월	법제처	제2회 아시아법제 포럼 - 법제 선진화를 통한 아시아의 공존과 번영

통일법제 관련 정책연구용역도 추진하였다. 2009년에는 그동안의 통일법제 연구동향을 정리하고 성과와 과제를 분석한 연구를 비롯하여 8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 2010년에는 남북 법제통합의 기본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통일법제 연구 5개년 계획에 따라 정치·경제 등 분야별 법제통합 방안 및 법령(안) 등 7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2011년에도 5개년 계획에 따라 대외관계,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북한 주민 법제 적응 지원방안, 국제사회의 법·제도적 지원방안 등 6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

또한 유사한 사례 분석을 통해 적실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해외사례 조사를 실시하였다. 2009년에는 독일통일 및 EU통합의 법·제도적 측면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EU법령의 입법절차와 형식, 효력범위 및 구속력 확보방안 등을 파악하고, 독일 화폐통합 및 구 동독지역 재건을 위한 입법 조치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2010년도에는 베트남의 시장경제체제 도입 및 해외투자 유치 관련 법제,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베트남에 대한 법제정비 지원 사례를 파악하고, 중국-홍콩 간 법률 충돌사례와 그 해결과정,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도적 노력 등을 조사하였다. 2011년도에는 폴란드 체제전환 이후 과거청산 과정과 관련 법령, 사이프러스 통일협상의 경과 및 쟁점과 전망에 대해 파악하였다. 이러한 사례조사를 통해 통일준비 및 내적 통합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법·제도적 준비, 통합과정 및 통일 이후 준비해야 할 법령안, 대북 법제지원의 필요성과 방식 등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통일이 최종적으로는 법과 제도의 통합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통일법제 구축은 단일한 국가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면서 동시에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남북한 통합에 대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계속 보완해 나갈으로써 남북 간 통합과정에서의 불확실성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제2절 국내외적 협력체제 구축

1. 각계각층 대상 직접 대화 추진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합의 조성을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추진원칙 중의 하나로 설정하여 국민과 소통하고, 통일정책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정책고객과의 대화, 상생·공영 포럼, 통일강좌, 현장소통 활성화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분야별 자문회의, 통일고문회의,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민간통일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먼저 「정책고객과의 대화」는 정부와 정책고객과의 쌍방향 소통채널로서 매년 상반기에는 통일부차관이 통일부 등록 민간통일운동단체 대표 전체를 대상으로, 하반기에는 통일부 각 실·국장이 소관 민간단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남북관계 현안 및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단체 대표들로부터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이나 건의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통일부 장·차관의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남북교류 관련 민간단체 및 남북경제협력사업 관계자 등 분야별 정책고객과의 직접 대화도 실시하였다.

「정책고객과의 대화」 성과를 바탕으로 여론 주도층과의 소통을 정례화하기 위하여 발전시킨 것이 「상생·공영 포럼」이다. 2008년 11월 처음 개최된 「상생·공영 포럼」은 통일부 장·차관이 월 1회 문화계, 경제계 등 분야별 대표와 함께 통일정책 및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1회 상생·공영 포럼(2008.11., 서울)

「상생·공영 포럼」은 초기에는 남북관계 전문가, 여론 주도층을 중심으로 보수와 진보, 노인층·장년층·청년층이 함께 통일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등 통일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민간단체들 상호 간에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 후, 동 포럼은 남북관계 전문가, 문화·예술계,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학생, 여성계 등으로 외연을 확장하여 통일 및 대북정책 논의를 위한 폭넓은 소통의 장으로 발전하였다.

정부는 제한된 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상생·공영 포럼」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쌍방향 정책대화로서 지역순회 대북정책 설명회, 대학생 대상 통일강좌 등을 추진하였다. 각종 사회단체 관계자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통일부 장·차관이 참여하는 정책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민간단체와 연구기관의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여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을 설명하였다. 통일부 장·차관은 2010년에서 2011년까지 2년간 장관 51회, 차관 75회 등 총 126회에 걸쳐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2012년에는 장·차관이 86회에 걸쳐 여론 주도층과의 쌍방향 대화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대학생 대상 통일강좌(2012.3.23., 울산대)

이러한 국민과의 만남은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해 국민의 여론을 신속히 수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계기를 통해 각계각층 국민과의 보다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국민과의 정책대화를 지방으로 확대하였다.

각계각층과의 직접 대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민간통일운동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 정부는 유관기관 및 민간통일운동단체 등과의 대면접촉을 확대하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와 정책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기관간의 협력방안도 적극 모색하였다. 또한 통일부 장·차관이 민주평통 직능별 위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 「민족통일협의회」(이하 ‘민통’), 「통일교육위원회」 등 통일문제 관련 주요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들 단체가 주관하는 국제학술회의 등에 통일부 장·차관이 참석하여 통일정책을 설명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해 나갔다.



민주평통 운영·상임·협의회장 합동회의(2012.4.30., 서울)

정부는 국민과의 직접 대화를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회의체를 구성하여 통일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다. 사회 각계의 원로로 구성된 「통일고문회의」를 통해 전반적인 통일·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법·제도, 통일정책 등 9개 분과로 구성된 「통일부 정책자문회의」를 수차례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매 분기별로 부문별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연 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였다. 공식적인 자문기구를 통한 자문 이외에도 각 분야별 지도자, 여론 주도층 인사들과의 대면을 통하여 사회 각계의 자문을 구함으로써 올바른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정부는 통일·대북정책이 국민의 의사와 법령의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제도화하였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로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범정부적 협의기구이다. 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9명의 민간위원 및 13개 부처 차관급이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9명의 민간위원을 포함함으로써 공식

적인 국민 의견 수렴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남북 관계발전위원회」는 위원회 1회, 실무위원회 3회 등 총 4회를 개최하였다.

1990년대 이후 민간 차원에서 통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통일운동단체의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9월 말 기준 통일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은 총 285개에 이르고 있다. 이들 단체의 활동영역도 통일정책 및 남북관계 연구·조사, 이산가족·북한이탈주민 지원, 대북 교류협력 사업 추진, 통일교육 등으로 세분화·전문화되었다. 그리고 「민통 전국대회 및 통일포럼」, 「민화협 창립기념 후원의 날 및 대의원 대회」 등 각종 행사 개최 시 통일부 장·차관이 참석하였다. 특히 2009년 말에는 「통일부 등록법인 대표 전체 워크숍」을 개최하여 민간단체 상호 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 밖에 정부는 민간통일운동단체의 통일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 단체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들 단체에 대해 대표단 면담, 강연, 자료 제공, 후원 명칭 사용 지원, 보조금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11년에는 통일부 등록 비영리법인과 비영리 민간단체들을 대상으로 통일운동 사업을 공모하여 선정된 25개 단체의 우수 사업에 대해 총 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2012년에는 동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여 총 38개 단체에 8억 원을 지원하였다.

한편, 각계각층과의 직접 대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및 생업에 종사하는 저소득층 등 일부 계층이 통일문제에 무관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바, 이들 계층이 남북통일문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통일외교 강화

통일외교는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의 주도로 논의되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통일준비 차원에서 하는 활동이다. 이명박 정부는 통일준비 차원에서 한반도 주요 현안 및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가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통일부 관계자들이 주변 국가를 방문하여 각국 정부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한반도 문제 전문가 세미나 및 현지 동포들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주요 해외인사들에게도 통일·대북정책을 설명하고 통일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통일외교 강화 차원에서 주변국과 「고위급 정책협의」를 진행하였다. 통일부장관은 주변국을 방문하여 해당 정부 및 의회 관계자를 만나, 한반도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였으며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였다.

2008년 12월에는 당시 김하중 통일부장관이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한·중고위정책협의」를 진행하였다.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 양제츠(楊潔篪) 외교부장, 왕자루이(王家瑞) 대외연락부장,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 등을 면담하고 남북관계 상황과 한반도 정세 및 한·중간 협력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2010년 10월에는 당시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2박 3일 일정으로 독일을 방문하여 「독일통일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였다. 독일 정부 및 의회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대한민국 통일부장관을 초청하는 등 한반도 통일에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방문 기간 중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총리, 하원의장, 외교·국방·내무장관 등 독일 정부 및 의회의 주요 지도자를 만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였다. 이에 독일은 한국 정부가 독일통일을 높게 평가하는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고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전폭적인 협력

을 약속하였다. 또한 이를 계기로 통일부와 독일 연방내무부는 통일문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양국은 독일통일 과정에 관여하였던 전·현직 원로인사들이 참여하는 「한·독통일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독일통일 통합 경험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독일통일 과정의 문서 및 자료를 이관하고 통일·통합 과정의 전수를 위한 「한·독통일자문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것은 장기적 차원에서 한반도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를 통해 통일재원 마련 등 우리 정부의 통일준비 노력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독일통일·통합 과정과 관련된 주요 문서 및 자료를 공유하고, 한반도 통일대비 인력 양성에 협조하는 등 양국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였다.

2011년에는 류우익 통일부장관이 미국과 중국을 방문하였다. 11월 2일부터 6일까지 미국을 방문해서 윌리엄 번즈(William Burns) 국무부 부장관과 일리아나 로스-레티넨(Ileana Ros-Lehtinen) 하원 외교위원장, 짐 웹(Jim Webb) 상원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장 등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면담하였다. 미국 정부·의회 관계자 면담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인한 「5·24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세 안정화를 포함한 우리 정부의 유연한 대북정책을 설명하였다. 이어 11월 21일에서 23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여 「한·중고위정책협의」를 진행하였다. 이 기회를 빌려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다이빙귀(戴秉國) 국무위원, 탕자쉬엔(唐家璇) 전 국무위원, 왕자루이(王家瑞)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양제츠(楊潔篪) 외교부장 등 중국 당·정 고위인사들과 직접 면담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요청하였다.

2012년 2월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6박 7일 일정으로 독일과 브뤼셀을 방문하였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바이체커(Richard von Weizsäcker) 통일 당시 서독 대통령, 호이스겐(Christoph Heusgen) 외교안보보좌관, 폴렌츠(Ruprecht Polenz) 하원 외교위원장, 뮐러(Stefan Müller) 한·독 의원 친선협회 회장, 프리드리히(Hans-Peter Friedrich) 연방내무부장관 등을 면담하였다. 류우

의 통일부장관은 한반도 통일이야말로 동아시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에 중요한 역할로 기여한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독일의 관심을 제고하였다. 또한 독일외교협회(DGAP) 및 베를린 동포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재원 마련 등 통일준비 노력을 설명하였다. 브뤼셀에서는 EU 본부를 방문하여 「한반도관계자 대표단」(회장 헤어베르트 로일(Herbert Reul))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국제사회에서의 한반도 통일의 의의를 설명하고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EU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실무급 차원에서는 2008년 이후 매년 미국·중국·일본·러시아·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국제통일 전략대화」를 개최해 오고 있다. 「국제통일 전략대화」의 목적은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내외 지지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중장기 통일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유럽 등 주요국 정부 관계자와의 실무정책협의, 전문가 세미나 및 워크숍, 현지 동포 대상 정책설명회를 통하여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 및 지지도를 제고하였다.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실무급 차원은 미국 국무부, 상무부, 의회와 몬트레이 국제문제연구소, 평화연구소, 한·미경제연구소 등을 방문하여 정부·의회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면담하였다. 또한 시카고와 로스앤젤레스, 뉴욕, 워싱턴 DC 등 지역의 동포들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도 개최하였다. 중국에서는 외교부, 북경대 조선문화연구소, 길림성 사회과학원, 현대 국제관계연구원, 국제문제연구소 등을 방문하여 정부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들과 한반도 정세와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역적으로는 베이징, 선양, 상하이 등을 방문하여 동포사회와 접하고 우리의 대북정책을 설명하였다. 일본에서는 외무성 관계자들은 물론 시즈오카 현립대, 히로시마 평화연구소 등을 방문하였다. 홋카이도, 후쿠오카, 히로시마, 도쿄, 교토 지역의 다양한 관계전문가와 면담하였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모스크바에서 사회경제연구센터, 극동문제연구소 등을 방문하였고,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아일랜드·호주 등과도

「국제통일 전략대화」를 실시하였다. 특히 2010년에는 독일정부와 독일통일 20주년을 맞아 구 동독지역 재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연방 내무부와 정례적 정책협의를 진행하는 방안에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 4강국 외에도 대상 국가를 확대함으로써 국제협력의 네트워크 및 우리 정책에 대한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였다.

해외에서 방한한 북한전문가 및 외빈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협력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통일부를 찾아 「인터내셔널 포럼」의 강연자가 된 주요 인사로는 미국의 고든 플레이크(Gorden Flake) 맨스필드 재단 소장, 마커스 놀랜드(Marcus Noland) 피터슨 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 조엘 위트(Joel Wit) 전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 마크 매닌(Mark Manyin) 미 의회조사국 연구원, 일본의 기키야 타다시 도쿄대 대학원 교수,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교수, 미야모토 사토루 세이가쿠대 교수, 독일의 유르겐 아레츠(Jürgen Aretz) 튀링겐 재건은행 총재, 브래들리 밥슨(Bradley Bobson) 세계은행 총재 동아·태 자문관, 중국의 김철(金哲) 랴오닝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비서장, 주펑(朱鋒) 베이징대 교수 등이 있다. 이들은 방한 기간 동안 한반도 문제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편 주한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설명회도 꾸준히 개최하였다. 2008년에는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북한의 통행제한조치 등을 주제로 3회에 걸쳐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2010년에는 10월에 통일안보 현장방문과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2011년 10월에는 주한 공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천안함 폭침 보존 현장과 하나원을 방문하는 통일안보 현장견학 및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해외 주요 인사와 통일부 장·차관, 실·국장 간의 면담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미국에서는 제임스 스타인버그(James Steinberg) 전 국무부 부장관, 커트 캠벨(Kurt Campbell)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스티븐 보즈워즈

(Stephen Bosworth)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웬디 셔먼(Wendy Sherman) 전 대북정책조정관, 로버트 킹(Robert King) 북한인권특사, 리처드 아미티지(Richard Amitage) 전 국무부 부장관, 글린 데이비스(Glyn Davies)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이 통일부를 방문하였다. 중국에서는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 탕자쉬엔(唐家璇) 전 국무위원, 일본에서는 야치 쇼타로 정부대표, 마에하라 세야지 민주당 중의원, 하야시 요시마사 참의원, 마에하라 세이지 외무대신,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 등이 통일부를 방문하였다. 그 밖에 자크 랑(Jack Lang) 프랑스 대북정책 특사, 피터 로우(Peter Rowe) 전 주한 호주대사, 케빈 러드(Kevin Rudd) 호주 외무장관, 스페인의 히메네즈(Trinidad Jimenez) 외무장관 등이 통일부장관을 면담하였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우리 정부의 주도로 개최하는 국제회의를 통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논의를 이끌어 가려는 노력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이는 국제사회에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고, 우리 주도로 논의를 이끌어 가는 한편 우리의 대북정책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그 주요 목적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6·25 전쟁 60주년과 독일통일 20주년이 되는 2010년을 맞아 국제사회 지도자급 인사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반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제1회 한반도비전 포럼」을 개최하였다. 「한반도비전 포럼」은 한반도 관련 주요국의 여론 주도층들이 참여하는 통일문제 관련 국제회의체로서, 한반도 통일비전과 의지를 국제사회에 제시하여 통일지지 여론을 확산시키고 통일미래 세대인 청소년과 일반시민 등의 참여를 통해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책임감을 제고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미국의 콜린 파월(Colin Powell) 전 국무장관 특별연설, 한스-울리히 자이트(Hans-Ulrich Seidt) 주한 독일대사 특별연설,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과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대학생 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1일 평균 약 700여 명의 일반국민이 행사에 참여해서 현장 질문, 설문조사, 행사 관련 공모전 등이 이루어졌다.

2011년 11월에는 독일통일 당시 주요 역할을 했던 독일 측 인사들을 서울로 초청하여 독일통일의 경험에 비추어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제2회 한반도비전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2011년 한반도비전포럼」은 독일의 전문가들과 국내 원로들이 같이하는 비공개 형식의 「비전포럼」과 대학생 및 청년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비전 대강연」 등 크게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비전포럼에서는 ‘독일통일의 의미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비전’을 주제로 독일의 호르스트 텔칙(Horst Teltschik) 콜 전 수상 외교안보정책 특보와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전 동독 군축·국방장관을 비롯한 독일 측 인사들과 한승주·이인호 등 통일고문 등의 한국 측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되었다. 「비전 대강연」에는 이흥구 전 국무총리와 요르크 쉐봄(Jörg Schönbohm) 전 독일 국방차관, 로타 드메지에르(Lothar de Maizière) 전 동독총리 등이 대학원생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국통일에 대한 미래비전’ 및 ‘독일통일의 경험’이란 주제의 강연을 하였다.

「코리아글로벌포럼」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를 논의하는 1.5트랙(반관반민)의 국제적 다자협의체로서 미국·중국·일본·러시아·유럽·아시아 국가 등 총 10여 개국에서 정부인사와 민간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하는 국제회의체이다. 이 포럼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코리아글로벌포럼」 창설회의는 2010년 9월 서울에서 ‘국제적·지역적 관점에서 본 한반도’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창설회의는 윌리엄 코헨(William Cohen) 전 미 국방부장관이 기조연설자로 참여하였고, 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영국·프랑스·독일·호주·인도·싱가포르 등 11개국에서 미국의 성 킴(Sung Kim) 전 6자회담 특사, 빅터 차(Victor Cha) 조지타운대 교수, 일본의 스키야마 신스케 외무성 대사, 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 교수, 중국의 진찬롱(金燦榮) 인민대 교수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되었다. 제2회 「코리아글로벌포럼」은 ‘동북아 안보역학과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주제로 2011년 8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영국·프랑스·독일·호주·인도·싱가포르 등 11개국에서 전·현직 정부인사(국장급) 및 민간전문가 등 총 20여 명이 참여하였다.

한편 앞서 언급한 한·독통일업무 협력 양해각서에 따른 후속조치의 하나로 2011년 1월에는 독일 연방 내무부 측과 실무정책협의를 갖고, 「한·독통일자문위원회」 구성을 구체화하였다. 「한·독통일자문위원회」는 우리 측의 통일부차관, 독일 측의 연방 내무부차관을 포함하여 양측에서 각각 12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로서 독일통일 및 통합과정에 대한 정보와 지식의 효율적 교환을 위해 자문하는 기구이다. 이는 통일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미 통일과 통합을 경험한 독일 측 관계자들의 자문을 얻기 위한 것이다.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창립기념식은 2011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동 행사에는 통일부 장·차관, 통일고문, 주한 외교사절, 남북관계 전문가, 언론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창립기념식(2011.11.17., 서울)

같은 기간 개최된 자문위원회 첫 회의에는, 독일 측에서는 크리스토프 베르크너(Christoph Bergner) 연방내무부 정무차관, 로타 드메지에르(Lothar de Maizière) 전 동독 총리 등 독일통일 과정에 직접 관여했던 전직(前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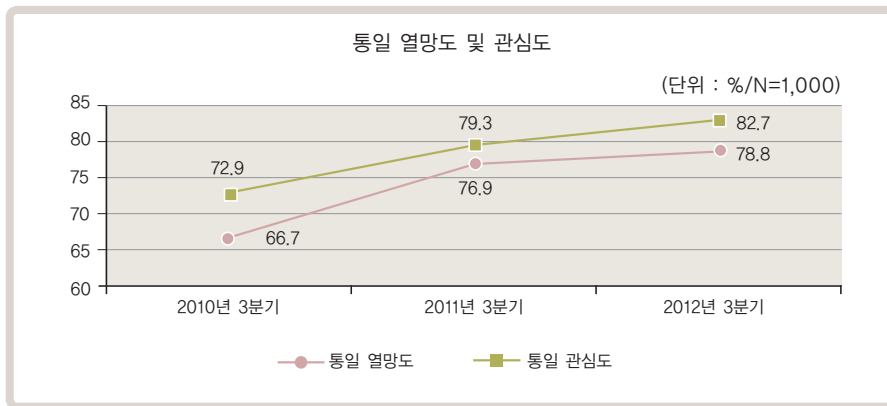
정부 관계자 및 중진학자 등 총 14명이 참석하였다. 한국 측에서는 김천식 통일부차관 및 한승주 전 외무장관 등 원로급 인사 11명이 참석하였다.

2012년 5월 독일 베를린에서 군사·경제·사회 통합을 주제로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는 연 1회 한국과 독일에서 번갈아 가면서 개최될 예정이다.

제3절 국민적 합의기반 강화

1. 정기적인 여론수렴

이명박 정부는 통일정책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였다. 2008년 2회(2008.4., 2008.5.), 2009년 4회(2009.3., 2009.4., 2009.5., 2009.8.)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2010년부터는 매 분기별로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도, 통일에 대한 열망도 및 관심도, 안보수준 등 공통항목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여론조사 결과, 통일에 대한 열망도 및 관심도는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통일 열망도 및 관심도(2010.9.~2012.9., 통일부 여론조사)

통일준비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2011년 12월 조사결과 ‘통일재원 마련’(34.3%)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국민적 합의 형성’(26.9%), ‘통일 교육’(17.6%),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12.6%), ‘통일에 우호적인 국제환경 조성’(8.3%) 순으로 꼽았다. 또한, 2012년 9월 조사에서 통일재원 적립 필요성

에 대해 ‘공감한다’가 62.7%이며 통일재원 마련 방안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 7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렇듯 통일준비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 통일재원 마련이며, 그 방식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부에서는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2. 국민과의 쌍방향적 소통 강화

정부는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국민과의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특히 2010년부터는 실질적 통일준비를 통일정책의 주요한 방향으로 제시하고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모아 사회적 합의로 결집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1) 오프라인 소통

통일정책을 알리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신문·TV·라디오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하였다. 또한 통일콘서트, 통일송 제작, 영화관 광고, 지하철 스크린 광고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하고 현장 홍보를 실시하는 등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하였다.

한국정책방송(KTV)에 생방송 프로그램(「통일라운지」)을 신설하여 2009년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1회씩 총 22회를 방영하였다. 또한 2011년 10월부터는 통일부 관계자가 매주 1회씩 KTV 프로그램(정책 & 이슈)에 출연하여 통일과 관련된 정책과 북한 소식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비전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였다.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홍보영상을 수도

권의 주요 극장 및 고속철도(KTX)에서 상영하고, 전국에 있는 옥외전광판을 통해서도 방영하는 등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0년에는 ‘한반도의 새로운 바람’이란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SBS·MBC 등 지상파 방송과 다음·네이버·야후 등 인터넷 포털을 통해서도 홍보함으로써 「북핵 문제의 해결」과 「원칙이 바로 선 남북관계」 정책을 알리는 데 노력하였다. 2011년에는 ‘희망 사진가편’을 제작하고 Mnet, YTN, CGV, Story on 등에 방영하여 통일준비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하였다. 특히 2012년에는 ‘통일항아리’라는 통일준비의 상징물을 활용한 홍보를 본격화하였다. 메트로, 데일리 포커스, M25 등의 무가지와 부산일보, 광주일보 등 지역 신문의지면매체는 물론 MBC, SBS, CBS 라디오 광고, 지하철 스크린 도어 광고 등을 통해 국민들의 통일준비 의지 제고 및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남북문제 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통일》, 《통일시대》, 《Korea Policy》 등 유관 잡지에 통일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기고하였다. 《국방저널》에 ‘북한에서는 지금’이란 고정칼럼을 신설하여 북한의 올바른 실상과 변화를 소개하였다.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www.korea.kr), 《위클리공감》 등 정부 매체도 활용하여 정부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반도의 새로운 바람’ 편(2010)



‘준비된 통일은 축복입니다’ 편(2012)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책자·리플릿 등 다양한 인쇄물로도 발간하였다. 2008년도에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설명자료 《이명박 정부 대북정

책은 이렇습니다》를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중국어·일본어로 발간하였다. 또한 일반 국민 대상으로는 홍보리플릿 2종을 제작·배포(2008.7.31.)하였고, 젊은 층의 관심제고를 위해 《통일퀴즈책자(2008.12.26.)》와 《상생·공영정책 만화(2008.11.26.)》를 제작·배포하였다.

2009년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2009.4.5.), 2차 북한 핵실험(2009.5.25.) 등 남북관계에서 주요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참고자료(2009.4.5.)》, 《북한 핵실험 등 관련 참고자료(2009.5.27.)》, 《최근 남북관계의 이해 : 북한의 강경 위협 조치, 당장 중단되어야(2009.6.1.)》 등을 통해 남북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정부 입장에 대해 공감을 얻고자 노력하였다.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한반도 새로운 평화구상’에 대한 홍보리플릿(2009.10.15.)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2010년에는 이명박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이하여 대북정책 성과자료집인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2010.2.25.)》, 통일부 직원 기고문집인 《원칙과 유연성의 조화(2010.2.26.)》 등을 제작·배포하였다. 이와 함께 8·15 등 주요 계기시나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의사의 결집이 필요할 때에는 리플릿과 설명 책자 등을 제작·배포하였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위해(2010.8.)》와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2010.10.)》, 《이명박 대통령 취임 3주년 대북정책 설명자료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2011.2.)》 등을 배포하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2012년 2월 25일 이명박 정부 출범 5년차를 맞아서는 대북정책 설명자료 《이명박 대통령 취임 4주년 대북정책 설명자료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를 발간하여 유관단체·연구기관·국회·언론·일반 국민 등에 배포하였다. 또한 대북정책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오해에 대응해 남북관계 사실에 근거한 《대북정책 이렇습니다》를 한·영문으로 발간하여 국내외에 배포하였다.

한편, 통일정책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2008 통일백서》,

《2009 통일백서》, 《2010 통일백서》, 《2012 통일백서》를 발간하여 정부 부처, 유관기관, 학술기관 등에 배포하여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

2012 통일백서

퀴즈 프로그램이 지상과 방송에서 국민들에게 인기가 높고 전 세대에 걸쳐 친숙하다는 점에 착안, 퀴즈 형식을 활용하여 통일·대북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려 나가기로 하였다. 통일과 남북문제를 TV 퀴즈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2008년 《통일 골든벨을 울려라!》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방송국은 물론, 각급 학교, 민간단체 등에 배포하였다.

《통일 골든벨을 울려라!》 책자에는 통일·대북정책, 남북관계, 북한 실상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학생들과 일반국민들이 관심 있거나 알아야 하는 것 중심의 퀴즈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남북관계, 상생공영정책, 통일방안, 북한 현황 등 이론적인 내용과 함께 남북교류협력 절차, 남북협력기금, 개성공단 투자 및 관광 관련 내용 등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지식도 포함하였다. 한편, 《통일 골든벨을 울려라!》는 스마트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2010년 12월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배포 중에 있다.

또한 청소년과 젊은 층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미래상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다. 2011년 8월부터 2개월간 「제1회 통일동화 창작 공모전」을 실시하여 출품된 총 500여 편의 동화 중 11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수상작은 《통일세상 동화로 만나요》라는

제목의 동화책으로 발간하여 전국의 초등학교 6,000여 곳과 어린이 도서관 70여 곳에 배포하였다. 또한 스마트폰 앱(App)으로도 개발하여 어디에서나 자유로이 동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젊은 층의 통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여러 가지 버전의 통일송을 제작·보급하고 「슈퍼스타 K2 Top11 콘서트」(2010.11.26., 2010.12.10., 2010.12.12.), 「라디오 통일콘서트」(2011.10.28., 2011.11.19.), 「통일송 클래식 콘서트(2011.12.5.)」, 「KBS 라디오 공개방송 통일축제한마당(2012.9.20.)」 등을 개최하였다. 통일은 즐겁고, 희망찬 일이라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콘서트라는 형식을 통해 통일미래 세대인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기적의 오디션(SBS, 2011.6.~10.)」 프로그램을 활용해 통일 뮤직비디오 제작, 통일 에피소드 연기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켰다.

(2) 온라인 소통

정부는 인터넷과 SNS(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국민들의 통일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등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에 주력하였다.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의 연계를 추진하고 검색기능을 강화하여 정보접근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이미지부터 사용 환경까지 소셜 허브기능을 가진 홈페이지로 개편(2010.10.)하였다. 모바일 웹(m.unikorea.go.kr) 서비스를 실시하여 젊은 세대를 포함한 다수 국민들이 편리하게 직접 참여·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였다.

2011년 8월에 영문 홈페이지(eng.unikorea.go.kr)의 메뉴구조 및 디자인 개편 등 통일정책 정보에 대한 해외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주요 정책고객들에게 「생생뉴스」, 「통일소식」, 「북한소식」 등 정책소식을 정기적으로 메일링 서비스를 하고 있다.



통일부 홈페이지



통일부 영문 홈페이지

페이스북·트위터 등 새로운 미디어(SNS) 활용의 증가로 인한 홍보환경 변화에 발맞춰 네티즌과 보다 신속·정확하게 소통하고자 트위터(www.twitter.com/uni_kr)·페이스북(www.facebook.com/unikorea)·미투데이(me2day.net/mouni) 등 소셜 미디어 채널을 개설하고 기존 온라인 채널과 연계하여 소통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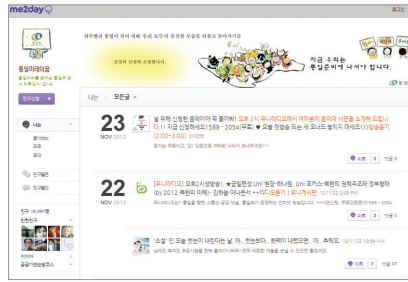
2012년 1월에 통일부장관은 트위터를 개설하여 통일정책 및 남북관계에 대해 국민들과 직접 쌍방향 소통을 하고 있으며, 통일업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제고와 실시간 정보 제공을 위해 통일정책실, 정세분석국, 통일교육원 등 통일부 각 실·국의 트위터·페이스북 계정도 개설하여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하였다.

국민 대다수가 정책에 대한 궁금증 해결을 위해 민간포털(네이버·다음·네이트)의 「지식서비스」를 활용하는 만큼, 「지식서비스」에 올라온 통일정책 및 남북관계와 관련된 질문에 정부가 직접 답변하여 통일에 관한 젊은 층의 관심 제고 및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였다.

또한 정책정보 제공 및 홍보를 위해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기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통일 골든벨(앱스토어)」, 「통일! 행복한 상상(앱스토어)」, 「통일송(안드로이드, 앱스토어, 티스토어, 올레마켓)」 등 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통일부 페이스북



통일부 미투데이

통일부 홈페이지 및 공식 SNS 채널(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을 통해 「UCC 공모전(2008.6.15.~7.22.)」, 「상생·공영 4행시 공모전(2008.9.19.~12.31.)」, 「통일의 꿈, 사진공모전(2009.2.2.~20.)」,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 상생·공영 댓글달기(2009.2.19.~3.6.)」, 「‘북한이탈주민 지역센터’ 명칭 공모(2009.3.10.~3.17.)」, 「2009 통일부 광고·영상(UCC) 공모전(2009.6.1.~7.31.)」, 「통일부 슬로건 국민공모전(2009.8.12.~10.15.)」, 「북한이탈주민 사랑나눔 UCC 공모전(2009.8.24.~9.16.)」, 「통일애니메이션 감상평 쓰기(2009.11.9.~22.)」, 「한반도 통일미래 비전 국민공모전(2009.11.17.~28.)」, 페이스북 오픈 기념 이벤트(2010.7.29.~8.22.), 페이스북 팬 4만 명 돌파 기념 팬미팅(2011.1.17.), 코리아 글로벌 포럼(Korea Global Forum, KGF) 생중계 이벤트(2011.9.1.), 연두업무보고 온라인 여론조사 이벤트(2011.12.16.~12.22.), 통일 소원 & 소문내기 이벤트(2012.6.4.~6.15.), 유명인사 활용 통일준비 공감 투표 이벤트(1차 : 2012.6.18.~7.6./2차 : 2012.7.11.~7.31./3차 : 2012.8.8.~8.24.), 「통일향아리 국토대장정」을 계기로 한 응원 인증샷 이벤트(2012.9.3.~9.30.) 등 온라인상의 다양한 통일 관련 이벤트를 진행하여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온라인상에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견 교환 등 토론문화 활성화와 정책 참여를 위해 홈페이지 「소통마당」→「정책토론」, 블로그·페이스북에 「토론방」을 개설하였다. 제1주제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대북 유

연화조치 확대 유보’(2012.4.27.~5.18.), 제2주제는 ‘통일항아리에 여러분은 무엇을 담겠습니까?’(2012.5.21.~6.22.), 제3주제는 ‘통일재원 마련을 위해 <남북협력기금법>이 <남북협력 및 통일 기금법>으로 새롭게 태어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2012.9.10.~10.31.)으로 선정하여 통일정책 추진 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정책 반영에 노력하였다.

한편 통일부 블로그를 활성화하고 젊은 층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학생으로 구성된 「상생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상생기자단」은 2008년 10월 1기 14명으로 출범하여 2기 14명, 3기 20명, 4기 45명, 5기 47명이며, 특히 5기의 경우 서울·경기 지역 위주로 구성된 지난 기수와 달리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등 전 지역의 학생들로 구성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통일문제를 포함하여 동북아시아와 관련한 제반 문제에 대한 관심 유도 차원에서 미국 등 해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해외 상생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 상생기자단은 2010년 8월 1기 10명으로 출범하여 2기 15명, 3기 20명이며, 특히 3기의 경우 미국 중심으로 구성된 지난 기수와 달리 미국, 영국, 스웨덴, 중국, 호주, 일본 등 6개국의 현지 대학생 및 유학생으로 구성하였다.

상생기자단은 남북관계 현장 및 통일부 사업이나 행사 등에 직접 참여하여 관련 소식을 기사로 작성하여 블로그 등을 통해 국내외에 전파하고 있다. 통일부 상생기자단이 작성한 기사는 국내 상생기자단 1,731건, 해외 상생기자단 163건, 총 1,894건이며 특히, 상생기자단이 작성한 기사 중 총 74건의 기사는 다음(DAUM) 베스트 뉴스로 선정될 정도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상생기자단이 운영하는 블로그 「통일미래의 꿈(blog.unikorea.go.kr)」 역시, 전체 다음 블로그 33만 7,000개 중 1,473위로 상위 랭킹 0.4%에 해당하며 1일 평균 방문자 수 약 1,684명으로 통일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젊은 세대의 통일 공감대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통일부는 웹툰(만화)·동영상 등 여러 형태의 콘텐츠와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이벤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에 노력한

결과 2011년과 2012년 (사)한국인터넷소통협회 주최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대상」에서 인터넷 소통 중앙행정기관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홍보 전문지 《The PR》 주최 「2011 스마트 정부기관 SNS 소통평가」에서 2010년 ‘우수상’ 수상에 이어 2011년에도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사)한국인터넷소통협회 주최 「제4회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대상」 중앙행정기관 부문 ‘대상’ 수상(2011)

(3) 인터넷 통일방송

이명박 정부는 세대 간의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차를 완화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인터넷을 통한 ‘국민공감형 방송’을 추진하였다. 2011년 3월부터 9월까지 영상물 88편을 자체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라디오 시험방송을 82회 실시하는 등 통일방송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1년 10월 1일 인터넷 통일방송 홈페이지(www.unity.unikorea.go.kr)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공식적으로 통일방송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인터넷 통일방송 페이스북



인터넷 통일방송 홈페이지

인터넷 통일방송은 크게 「Uni TV」와 「Uni 라디오」로 구성되어 있으며, 「Uni TV」는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전하는 주간 Uni 뉴스와 통일 관련 다양한 주제를 다룬 교육 영상자료, 그리고 통일 및 남북관계에 관한 각종 영상물 등 총 606편을 제작·방영하였다. 특히, 통일항아리 등 통일준비와 관련한 기획 영상물을 시리즈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였다. 「Uni 라디오」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14:00~15:00) 인터넷으로 생방송하는 것과 동시에 「보이는 라디오」로도 방송하는 등 총 247회분(2011.10.1.~2012.9.30.)을 방송하였다. 2012년에는 특히 남북 지역언어로 통일소식을 전하는 「지역언어(사투리)로 들어보는 통일세상」 코너를 신설하였다.

또한 통일에 대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통일시트콤 「옥닥옥닥」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총 20편 제작하여, 인터넷 통일방송 홈페이지와 한국정책방송(KTV), 미국 교민방송(TAN-TV)을 통해서 방영하였다. 또한 전문가포럼, 통일 관련 행사 등의 기획영상물을 제작·방영하였다.



통일항아리 제작 기획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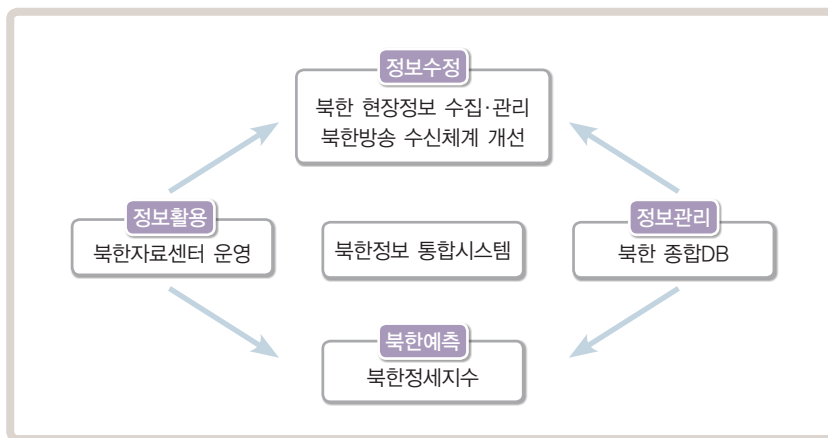
통일시트콤 「옥닥옥닥」

제4절 북한정보 역량 강화

1. 북한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이명박 정부는 북한과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북한정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9년 5월 통일부 조직개편을 단행, 정세분석 기능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북한정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수집·관리하고 분석·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북한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북한정보 통합시스템은 북한 현장정보 수집·관리, 북한방송 수신체계 개선, 북한정세지수 개발, 북한 종합데이터베이스(이하, '북한 종합DB') 구축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정보 통합시스템



2. 북한 현장정보 수집·관리

1990년대 이후 국내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민간 차원의 대북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북한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수도 증가하였다. 이렇게 북한 관련 정보원천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이들로부터 북한의 산업·인문지리 등 현장정보를 수집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2010년부터 북한의 산업·인문지리 등 현장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관리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 첫해인 2010년에는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과 방북자 총 2,05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피면접자가 인지하고 있는 북한의 지역별 산업·인문지리 등 현장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집·정리하였다. 2011년에는 2010년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표준설문지와 면접기법을 개선·보완하여, 총 1,521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북한 현장정보를 수집·정리하여 「북한 종합DB」에 반영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북한의 산업·인문지리 등 현장정보는 「북한 종합DB」의 기초자료로 축적되어 북한정세 분석과 통일정책 수립 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통일 이후 통합과정에서도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3. 북한방송 수신체계 개선

그동안 북한방송 매체들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수신하였기 때문에 화질이 선명하지 못하고 수집된 방송자료를 활용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북한방송 정보 수집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북한방송 수신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에

는 북한조선중앙TV, 단파라디오 방송을 디지털 방식으로 수신할 수 있는 수신시스템을 도입하였고, 고화질·고음질의 북한방송자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11년에는 디지털화된 수신시스템을 개선·증설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북한방송 수신체계 디지털화 사업은 △북한방송을 직접 수신하여 자동으로 녹화하고 저장하는 자동녹화시스템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고 저장하는 시스템 △내·외부 해킹 및 부정자료 유출을 방지하는 시스템 △수집·저장된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검색·편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 관리시스템 등이다.

4. 북한 종합데이터베이스(DB)

정부는 2011년부터 북한 종합DB(북한자료, 북한인물, 북한산업·인문지리 정보 등 3개 분야)를 단계별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1차년도인 2011년에는 북한자료(북한원문, 국내외 자료, 분석보고서 등)와 북한인물 관련 통일부 내외 정보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차년도인 2012년에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북한산업·인문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2년 2월부터 4월까지 조달청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11월 하순까지는 시스템 개발 및 DB 구축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유관기관 및 일반 국민용 DB로 구분해 정보서비스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북한 종합DB 구축이 완료되면 우리 정부의 북한동향 및 정세변화에 대한 분석능력이 한층 더 뛰어나게 되어 체계적인 통일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정보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고객별로 정보수요에 맞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5. 북한정세지수 개발

이명박 정부는 2010년부터 북한정세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예측 틀을 확보하기 위해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판단이 통합 적용된 지수시스템을 구축하는 「북한정세지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에는 각 분야별 북한 전문가와 지수개발 방법론 전문가들로 연구개발단을 구성하여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북한의 안정성과 변화 동향 수준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검토하였다.

2011년에는 북한정세지수를 △안정성지수 △체제전환지수 △위기지수 등 3개 분야로 체계화하였으며, 지표체계 및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지원시스템 구축도 병행하였다. 북한정세지수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단 이외에 별도의 북한 및 지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였다. 나아가 해외의 저명한 지수 전문가들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적실성 있는 북한정세지수 개발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12년에는 이미 개발된 지표체계를 과거 10년간의 데이터를 통한 검증 작업을 거쳐 보다 신뢰성 있는 지표체계로 개선·보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개발·보완 과정을 거쳐 3개년에 걸친 북한정세지수 개발이 완료되면, 북한정세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가 가능해짐으로써 통일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6. 북한자료센터 운영

정부는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북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1989년 5월 광화문 우체국 건물 6층에 「북한자료센터」를 설립하였다. 이후 2009

년 7월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전하여 보다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대국민 자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북한자료센터」는 북한 관련 도서자료 7만여 권, 정기간행물 1만여 권, 파일 자료 3,000여 건, 시청각자료 8,000여 건, 통일부 발간물 6,700여 건 등 총 10만 1,600여 건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 원전자료 보유 현황

(단위 : 건)

종류	단행본	정기간행물	시청각자료	비도서자료	계
자료 건수	18,641	4,440	5,560	1,185	29,826

*2012년 9월 30일 기준

「북한자료센터」는 대국민 자료서비스와 함께 통일·북한문제 전문가, 대학생, 관련 단체 회원들과 북한이탈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북한실상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실상 및 문제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2년 9월 기준 총 201회의 「북한실상 설명회」가 개최되어 총 3만 1,176명의 인원이 참가하였다.

「북한자료센터」는 2,200여 편의 북한영화를 소장하고 있고, 북한영화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언제든지 관람할 수 있도록 수시로 상영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2년 9월까지 북한영화를 총 5,021회 상영하였으며, 관람인원은 52만 3,023명에 이른다.

북한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북한자료 우편대출 서비스」를 통하여 그동안 서울·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북한정보·자료의 접근 기회를 2008년 5월 전국적으로 확대하였고, 이를 계기로 각급 학교 및 지역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도 북한자료 우편대출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전국 어디에서든 북한자료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북한자료의 효율적·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장 자료에 대한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 시스템 구축, 원문 DB 구축, 최신 검색엔진 도입, 모바일 웹서비스 및 간편문자 서비스(Short Message Service, 이하 ‘SMS’) 안내, 웹 접근성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 디지털 아카이브 도입, 전자도서관 및 개인도서관(My Library) 서비스 개편 등 온라인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였다. 2008년부터 2012년 9월까지 모두 1,631건의 북한 관련 자료를 이북(e-Book)으로 제작하여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자료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unibook.unikorea.go.kr)」를 통해 북한조선중앙TV 프로그램 편성표 안내, 북한영화 소개, 북한만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이용 고객도 계속 증가하여 2011년부터 연 52만 명을 넘어섰다.

대외적으로는 국내 유관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정보·자료 교류협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2년 9월 기준 국회도서관 등 18개 기관과 정보·자료 공유 등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7. 북한 관련 정보·자료의 대국민 서비스

정부는 북한에 대한 객관적이고 폭넓은 이해를 돕기 위해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를 통해 다양한 북한 관련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책자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통일부 홈페이지 「북한방송 주요 내용」 코너를 통해 북한방송매체의 주요 보도내용을 일일단위로 게재함으로써 북한의 주요 동향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간북한동향’ 코너를 통해서는 한 주 동안의 북한의 보도내용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보도를 선별하여 보다 자세하게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당·군·정 주요 기관 및 단체들의 인물현황을 종합하여 정리

한 자료집인 《북한기관단체별 인명집》과 주요 인물들의 활동사항을 정리한 《북한의 주요 인물》을 발간하여 관계기관과 유관단체 등에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도 북한 주요 기관·단체들의 조직체계와 1년 동안의 주요 정치 일정 및 기념일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도표화한 「북한권력기구도」와 「북한 주요 행사 예정표」를 해마다 리플릿 자료 형식으로 발간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 및 북한문제 관련 연구소, 단체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e-mail)을 통해 북한과 관련된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M I N I S T R Y O F U N I F I C A T I O N

제 3 장

남북교류협력

제1절 남북경제협력

제2절 개성공단사업

제3절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제4절 남북관광협력

제5절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제6절 남북 출입통행 및 운송

제7절 남북협력기금 관리·운영

제3장 남북교류협력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정상적인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원칙과 기조 아래, 상호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생산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강경조치와 대남도발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에 근본적 장애를 초래하였다. 특히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등은 남북교류협력은 물론 남북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군사적 도발행위였다.

정부는 2010년 5월 24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고 보다 건전하고 정상적인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 「5대 남북교류협력 중단조치」(이하 '5·24 조치')를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북한선박의 우리 해역 운행 불허 △남북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취약계층을 제외한 대북지원사업 보류 등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5·24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북한에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정부는 「5·24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면서도 북한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였으며, 2011년 하반기부터는 비정치적 순수 사회·문화 교류에 대해 방북 및 접촉을 허용하는 등 유연화 조치를 취하였다. 동시에 남북 간 교류 중단으로 인한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 기업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해 왔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대비하여 법·제도 정비 등 교류협력 기반을 확충하는 데도 주력하였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법제를 정비하여 교류협력 절차 간소화 및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대북투자 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경험보험제도 개선, 교역보험제도 신설, 남북협력기금 대출대상 확대 등을 통해 남북경협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1절 남북경제협력

1. 남북교역

2008년 이후 2012년 9월까지 남북교역의 총 누적규모는 85억 7,597만 달러로 남북 간 긴장국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전 시기(2003년~2007년 9월, 50억 5,395만 달러) 대비 69.7%가 증가하였다. 이는 「5·24 조치」에 따른 일반 교역과 위탁가공 교역이 사실상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 지속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특히 2011년 개성공단 관련 교역액은 북한 근로자 수의 증가, 생산숙련도 향상 및 주문물량 증가 등에 따라 역대 최고인 16억 9,8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1) 일반·위탁가공 교역 감소와 개성공단의 발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은 환율 상승, 내수경기 침체 등에 따라 일반 교역이 감소하였다. 특히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등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정부 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비상업적 거래가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개성공단 및 위탁가공 교역 등 상업적 거래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2007년 대비 1.2% 증가한 18억 2,037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9년 남북교역은 북한의 「육로통행 제한 조치」(2008.12.1.)에 따른 남북관계 조정국면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2008년 대비 7.8% 감소한 16억 7,908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연도별 남북교역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구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반입	19	12	106	163	178	176	223	182	193	92	122	152	176
반출	-	1	6	11	8	18	64	70	115	130	212	273	227
계	19	13	112	174	186	194	287	252	308	222	334	425	403
연도 구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계	
반입	272	289	258	340	520	765	932	934	1,044	914	788	8,850	
반출	370	435	439	715	830	1,033	888	745	868	800	662	8,920	
계	642	724	697	1,055	1,350	1,798	1,820	1,679	1,912	1,714	1,450	17,770	

*2012년은 9월 30일 기준

2010년 남북교역은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른 「5·24 조치」의 영향으로 일반 교역 및 위탁가공 교역이 크게 감소하였다. 일반 교역은 1억 1,786만 달러로 2009년의 2억 5,614만 달러 대비 54%가 감소하였고, 위탁가공 교역은 3억 1,756만 달러로 2009년의 4억 971만 달러 대비 22.5%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개성공단 관련 교역은 14억 4,286만 달러로 2009년의 9억 4,055만 달러 대비 53.4% 증가하였다. 결국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이었으나, 개성공단 교역 증가 등에 힘입어 2010년 남북교역 규모는 2009년의 16억 7,908만 달러 대비 13.9%가 증가한 총 19억 1,225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1년 남북교역은 전년도 19억 1,225만 달러 대비 10.4% 감소한 17억 1,385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특히, 일반 교역과 위탁가공 교역은 「5·24 조치」의 영향으로 2010년 4억 3,542만 달러에서 393만 달러로 대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5·24 조치」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던 개성공단의 경우 섬유 및 전기·전자제품 산업 등의 호황에 따라 2010년 14억 4,286만 달러 대비 17.7% 증가한 16억 9,763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2년 9월 기준 남북교역은 전년 동기 12억 7,349만 달러 대비 13.9% 증

가한 14억 5,041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일반 교역과 위탁가공 교역은 「5·24 조치」의 지속으로 55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개성공단은 생산성 향상, 유연화 조치(3.6., 입주기업의 신규 설비 반출과 창고 개축 등 허용) 등에 따라 전년 동기 12억 6,038만 달러 대비 14.6% 증가한 14억 4,437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위협, 그에 대한 우리 정부의 「5·24 조치」로 인하여 일반 교역과 위탁가공 교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개성공단 유지·발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에 힘입어 전체 남북교역 규모는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2) 유형별 교역 현황

남북교역을 상업적 거래와 비상업적 거래로 나눠 보면,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남북교역은 대부분 상업적 거래, 그 가운데서도 개성공단 위주로 이루어졌다. 이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조치」로 인해 상업적 거래 중 위탁가공과 일반 교역이 중단되고,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장기화됨으로써 대북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도 남북 간 상업적 거래는 전체 교역 중 94%를 차지하는 17억 1,187만 달러로 2007년 대비 19.6% 증가하였다. 이는 개성공단 입주업체 증가에 따른 원부자재 반출 및 생산품 반입의 증가, 위탁가공 교역의 활성화 등에 따른 것이다. 반면 대북지원을 의미하는 비상업적 거래는 1억 850만 달러로 전체 교역액의 6%에 불과하였다.

2009년도 상업적 거래는 16억 4,211만 달러로 2008년 대비 4.1% 감소했으나 비상업적 거래의 대폭 감소로 인하여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97.8%로 증가하였다. 상업적 거래의 감소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에 따른 관광 중단 및 북한의 개성공단 출입제한 조치(2009.3.9., 3.13.~15., 3.20.) 등 계속되는 강경조치 때문이었다.

2008~2012년도 유형별 남북교역 현황

(단위 : 천 달러/%)

구 분		상업적 거래					비상업적 거래			합계
		개성 공단	위탁 가공	일반 교역	금강산 관광	기타 경제협력	대북 지원	6자회담 에너지지원	사회·문화 협력	
2008년	교역액 (천 달러)	808,445	408,309	399,427	63,713	31,971	67,061	40,194	1,246	1,820,366
	구성비 (%)	44.4	22.4	21.9	3.5	1.8	3.7	2.2	0.1	100.0
2009년	교역액 (천 달러)	940,552	409,714	256,141	8,711	26,997	36,379	-	588	1,679,082
	구성비 (%)	56.0	24.4	15.3	0.5	1.6	2.2	-	-	100.0
2010년	교역액 (천 달러)	1,442,856	317,558	117,862	2,745	8,244	22,283	-	700	1,912,248
	구성비 (%)	75.5	16.6	6.2	0.1	0.4	1.2	-	-	100.0
2011년	교역액 (천 달러)	1,697,633	3,704	226	761	4	11,396	-	130	1,713,854
	구성비 (%)	99.1	0.2	-	-	-	0.7	-	-	100.0
2012년	교역액 (천 달러)	1,444,376	-	550	-	4	5,484	-	-	1,450,414
	구성비 (%)	99.6	-	-	-	-	0.4	-	-	100.0

* 구성비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계산 * 2012년은 9월 30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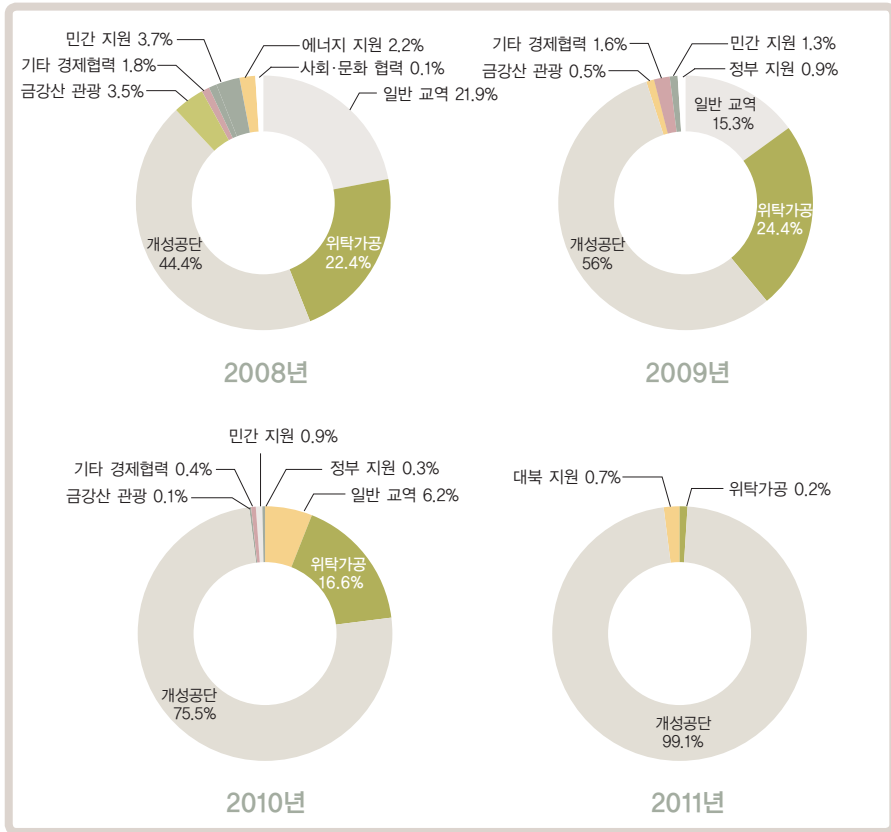
천안함·연평도 사건이 발생한 2010년 상업적 거래는 18억 8,926만 달러로 2009년의 16억 4,211만 달러 대비 15.1% 증가하였다. 전체 교역에서의 비중도 98.8%로 다소 상승하였다. 반면 비상업적 거래는 2,298만 달러로 2009년의 3,696만 달러 대비 37.8% 감소하여 전체 교역에서 1.2%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2011년 상업적 거래는 17억 233만 달러로, 전체 교역의 99.3%를 차지하였다. 이 중 개성공단 교역액이 16억 9,763만 달러로 상업적 교역의 99.7%를 차지하였다. 한편 비상업적 거래는 1,153만 달러로 전체 교역의 0.7%를 차지하여 그 비중이 감소하였다.

2012년 9월 기준 상업적 거래는 14억 4,493만 달러로, 전체 교역의 99.6%를 차지하였다. 이 중 개성공단 교역액이 14억 4,437만 달러로 상업적 교역

의 99.9%를 차지하였다. 한편 비상업적 거래는 548만 달러로 전체 교역의 0.4%를 차지하였다.

2008~2011년도 유형별 남북교역 현황



* 2008년 이후 개성공단 사업의 비중이 커져 가는 형태, 2012년은 2011년과 형태가 거의 유사

(3) 교역구조

남북 간 교역 품목은 섬유류, 전기·전자제품, 농림수산물, 기계류 등이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섬유류 교역액은 개성공단의 정상 운영에 따라 전체 교역 중 2008년 5억 3,487만 달러(29%), 2009년 6억

8,779만 달러(41%), 2010년 8억 6,086만 달러(45%), 2011년 7억 635만 달러(41%), 2012년 9월 기준 5억 7,898만 달러(40%) 등 가장 높은 비중을 유지하였다.

아울러 전기·전자제품류 교역액도 2008년 2억 1,640만 달러(12%), 2009년 3억 3,112만 달러(20%), 2010년 4억 7,086만 달러(25%), 2011년 5억 2,811만 달러(31%), 2012년(9월 기준) 4억 6,680만 달러(32%) 등으로 섬유류와 함께 남북교역 품목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농림수산물, 기계류 등 기타 교역액은 전체 남북교역 대비 10% 이하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 이외 일반 교역과 위탁가공 교역이 사실상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남북교역 품목 구성

(단위 : 천 달러/%)

구분 연도	섬유류	전기· 전자 제품	농림 수산물	기계류	생활 용품	철강 금속 제품	화학 공업 제품	광산물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잡 제품	계
2008	534,866	216,406	286,153	216,493	74,679	227,919	75,292	145,315	40,957	2,286	1,820,366
	(29.4)	(11.9)	(15.7)	(11.9)	(4.1)	(12.5)	(4.1)	(8.0)	(2.3)	(0.1)	(100.0)
2009	687,792	331,118	237,717	121,317	92,348	63,563	59,510	58,305	26,113	1,299	1,679,082
	(40.9)	(19.7)	(14.2)	(7.3)	(5.5)	(3.8)	(3.5)	(3.5)	(1.6)	-	(100.0)
2010	860,861	470,863	129,547	129,919	113,917	66,813	77,480	33,967	27,440	1,441	1,912,248
	(45.0)	(24.6)	(6.8)	(6.8)	(5.9)	(3.5)	(4.1)	(1.8)	(1.4)	(0.1)	(100.0)
2011	706,345	528,111	33,073	122,429	124,517	37,243	92,384	31,118	36,778	1,856	1,713,854
	(41.2)	(30.8)	(1.9)	(7.2)	(7.3)	(2.2)	(5.4)	(1.8)	(2.1)	(0.1)	(100.0)
2012	578,984	466,802	28,498	102,272	109,852	28,138	73,088	26,482	34,834	1,463	1,450,414
	(39.9)	(32.2)	(2.0)	(7.1)	(7.6)	(1.9)	(5.0)	(1.8)	(2.4)	(0.1)	(100.0)

* 2012년은 9월 30일 기준

한편 남북교역 참여업체 수는 2008년 1,354개사, 2009년 1,319개사, 2010년 920개사로 소폭으로 감소하다가 2011년 407개사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2012

년 9월 기준 상업적 거래 실적이 있는 업체는 모두 313개사로 대부분 개성공단 관련 업체이다.

교역 품목 수는 2008년 859개 품목, 2009년 822개 품목, 2010년 795개 품목, 2011년 702개 품목, 2012년 9월 기준 695개 품목으로 지속 감소하였다.

연도별 남북교역 품목 수 현황

(단위 : 개)

구분 \ 연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반입	24	23	43	69	69	80	109	130	143	136	172	204	201
반출	1	3	16	25	37	87	167	167	284	379	405	527	492
계	25	26	57	92	103	158	244	258	365	449	488	578	549
구분 \ 연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계	
반입	204	186	202	381	421	450	482	486	448	363	353	811	
반출	493	530	575	712	697	803	813	771	740	676	670	1,095	
계	570	588	634	775	757	853	859	822	795	702	695	1,112	

* 품목은 반입과 반출에서 중복되는 관계로, 「계」는 항목 간 합과 일치하지 않음.

* 2012년은 9월 30일 기준

유형별 남북교역액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남북교역 유형	'04	'05	'06	'07	'08	'09	'10	'11	'12
반입	일반 교역 · 위탁가공	258	320	441	645	624	499	334	4	-
	경제협력 (개성공단 · 금강산 관광 · 기타 · 경공업협력)	-	20	77	120	308	435	710	909	788
	비상업적 거래 (정부 · 민간 지원/사회 · 문화협력/경수로사업)	-	-	1	-	-	-	-	1	-
	반입 합계	258	340	519	765	932	934	1,044	914	788
반출	일반 교역 · 위탁가공	89	100	116	146	184	167	101	-	-
	경제협력 (개성공단 · 금강산 관광 · 기타 · 경공업협력)	89	250	294	520	596	541	744	789	656
	비상업적 거래 (정부 · 민간 지원/사회 · 문화협력/경수로사업)	261	366	421	367	108	37	23	11	6
	반출 합계	439	716	831	1,033	888	745	868	800	662

* 2012년은 9월 30일 기준

2. 남북 교역체계 개선 노력

(1) 법률 및 관련 규정 개정

정부는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을 제정한 이후 남북관계 상황에 대응해 나가면서 변화하는 남북교류협력의 현실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법률과 하위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였다.

2009년에는 그동안의 남북교류협력의 발전 상황을 반영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교류협력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건전한 교류협력 질서를 확립하고자 <남북교류협력법 및 관련 하위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남북교류협력의 변화 상황을 반영하여 남북교역 대상을 소프트웨어, 동영상, 전자서적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까지 확대하고, 「교역당사자 지정제도」를 폐지하였다.

교류협력 절차 간소화를 위해 수시 방북자 중 일정한 경우 방문이 허용된 기간 내에는 별도 신고 없이 수시방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일정 경우 「북한 주민 접촉신고」 의무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존의 남북협력사업 절차 중 「협력사업자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협력사업 승인만 받도록 함으로써 중복적인 「협력사업 승인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특구 지역 내에서 미화 50만 달러 이하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액투자'로 규정하여 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건전한 교류협력 질서 확립을 위하여 협력사업자와 남북협력기금 지원단체에 대한 행정조사제도 및 벌칙·과태료 대상 조정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또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남북교류협력 관련 유관기관·단체·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법규집 및 개정 법률에 대한 해설서를 발간·배포함으로써 개정된 법규의 원활한 시행과 국민들로 하여금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09년 <남북교류협력법> 주요 개정 내용

구분	개정 목적	주요 내용
법률	남북교류협력의 발전 상황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역의 대상을 물품에서 용역 및 소프트웨어, 동영상, 전자서적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까지 확대 • 교역당사자 지정제도 폐지 • 보조금 지원자 및 법인·단체에 대한 업무위탁 근거 마련
	행정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남북 간 직접 왕래자의 방문신고 면제 근거 마련 • 북한 주민 접촉신고 면제 근거 마련 • 협력사업자 승인제도 폐지 및 협력사업 승인제도로 일원화 • 협력사업 신고제도 도입
	남북교류협력의 건전한 발전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사업자 등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행정조사권 신설 • 벌칙·과태료 대상 조정
시행령	법률 위임사항 등의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주민 접촉신고 면제 대상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승인 국제행사 참석 시 접촉, 외국 소재 법인 취직자의 업무상 접촉 등 • 협력사업 신고제 대상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공업지구 등 특구지역 내 총 투자금액 50만 달러 이하인 사업 • 업무위탁 대상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지원자, 지방자치단체 등 • 협력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조사 절차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자에 대한 보고 및 출석 요구, 조사계획서 사전 송부 등
시행규칙	개정 법령 관련 서식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명령서, 조사계획서 등

아울러 2010년에는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른 「5·24 조치」의 실효적 집행 및 관리를 위해 <반출·반입 승인대상 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 간 모든 반출·반입 물품, 거래형태, 대금결제 방법 등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게 되었다. 다만, 개성공단의 생산 및 경영활동과 관련된 물품 등은 별도 공고를 통해 포괄 승인 간주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 추진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하고, 법률이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첫째, 남북교류협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남북 간 금전 이동 시 원칙적으로 승인을 받도록 하여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금전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북한이탈주민 및 이산가족이 재북(在北) 가족에게 보내는 생계유지비, 의료비 등 인도적 성격의 소액송금의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제3국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북한에 직접 지원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도록 하여 <남북교류협력법> 밖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류협력행위를 법 체제 내로 끌어들이어 보호하고 투명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대북협력사업을 목적으로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대북투자를 법 테두리 내에서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둘째, 우리 기업의 권익 보호와 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 현재 정부는 반출·반입 승인 등 법규상 규정된 행정적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어 북한측 거래 상대방, 상품 정보, 접촉 채널 등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공신력 있는 지원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교류협력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인 「남북교류협력 지원기구」를 지정·운영함으로써 남북 간 불공정 거래구조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교역사업 등록제」를 신설하여 보다 정확하게 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적기에 양질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업체는 모두 등록을 허용하여 등록제도 자체가 남북교역의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2011년 국무회의(10.25.)를 거쳐 국회에 제출(12.28.)되었으나, 제18대 국회 임기종료로 폐기되어 제19대 국회에 다시 제출될 예정이다.

(2) 교역물자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남북 간 교역은 1989년 이후 20년간 약 100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정부의 반출·반입 승인 대상 물품도 1만여 개에 달하는 등 양적 성장과 질적 다양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남북 간 반출·반입 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특히 국회는 2008년 국정감사에서 남북 간 교역 물품 반출·반입 관리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그해 12월 13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의결하였다. 이에 감사원은 2009년 2월 감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지적하였다.

첫째, 개별승인대상 물품을 정비함으로써 반출·반입 승인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둘째, 개별승인대상 물품의 무단 반출·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셋째, 컴퓨터 등 재반입 조건부 물품에 대해서는 재반입할 때 세관에 신고하도록 하여 반출·반입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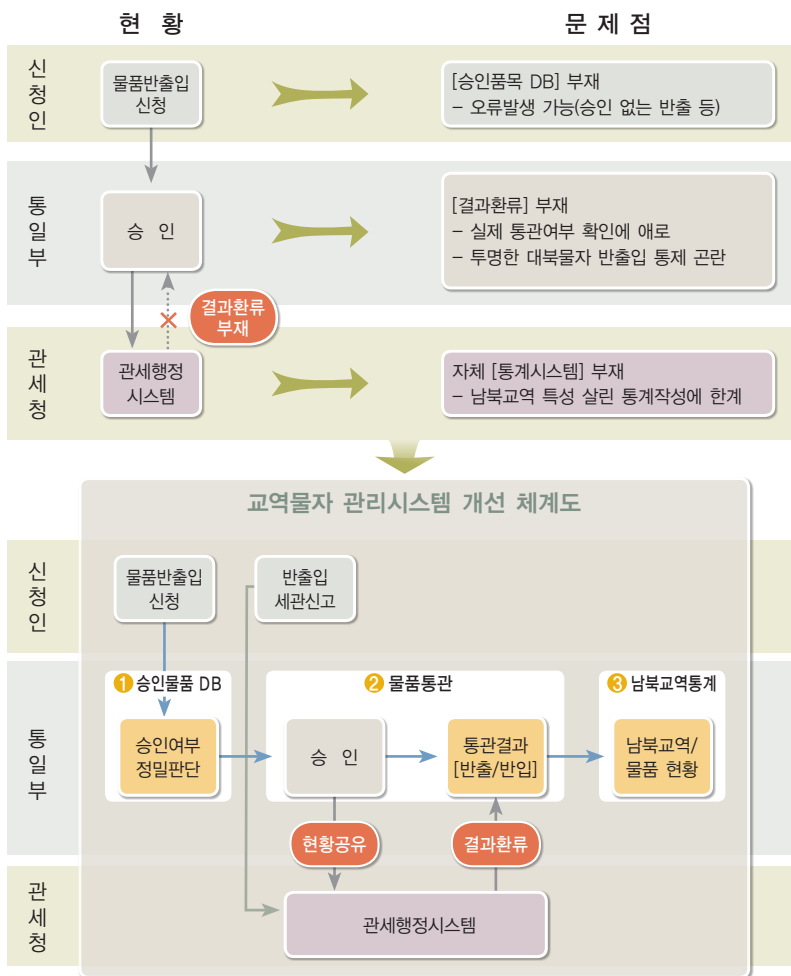
정부는 남북 간 교역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회·감사원 등의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교역물자 관리시스템 구축 및 교역물자 관리업무위탁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009년 5월 「제216차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개최, 동 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결정하였다.

「교역물자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개별승인품목 정비, 물품 반출·반입 승인 및 통관정보 연계, 교역통계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0년 2월 완료되었다. 「교역물자 관리업무」는 남북교역 관련 민원상담, 물자 반출·반입 승인신청 예비검토, 컴퓨터 등 주요 물품 반출·반입 모니터링, 남북교역업체 DB 운영 등 총 12개 분야에 대한 업무로서 2009년 9월 1일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 1년간 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 지원협회」에 위탁하여 추진하였다.

「교역물자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통일부-관세청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남북 간 반출·반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교역업체에도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S) 코드 검색, 남북교역 통계 확인, 전략물자 판정업무 등의 기능이 시스템을 통해 지원됨에 따라 남북교역 추진과정에서의 편의성이 한층 증진되었다.

교역물자 관리시스템 구축 주요 내용



- * ① 통일부장관의 반출·반입승인이 필요한 개별승인품목을 DB로 구축
- ② 통일부 반출·반입 승인정보와 관세청 통관정보를 연계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 ③ 정책개발 지원을 위해 자체 남북교역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3. 정상적 남북관계 구축을 위한 「5·24 조치」

(1) 정부의 일관된 조치 이행

정부는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5·24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우선, 남북교역 및 신규투자 불허 조치 이행을 위하여 2010년 6월 14일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남북 간 모든 물품의 이동을 승인대상으로 전환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반출·반입에 따른 통관검사를 강화하였다.

또한 북한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를 제3국산(産)으로 위조하여 위장 반입하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법무부·관세청·경찰청·해양경찰청 등 11개 부처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점검회의를 2011년 1월부터 매월 개최하였으며, 농수산물 유통시장에 대한 제3국산 위장반입 단속·점검도 수시로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5·24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5·24 조치」를 피해 우회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차단하였다.

(2) 「5·24 조치」의 효과

「5·24 조치」 이전 북한 대외교역의 1/3을 차지하던 남북교역이 중단됨으로써 북한은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5·24 조치」 이후 1년간 북한의 경화 수입은 약 2억 7,000만 달러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5·24 조치」 이전 북·중 무역 등 대외무역 적자의 보전수단이었던 남북교역이 중단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 북한이 받는 불이익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5·24 조치」로 인한 남북교역 중단의 경제적 손실을 메우기 위해 대중(對中)무역을 확대하였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북한은 「5·24 조치」 이후 중국으로부터 원유, 기계류, 식량 등을 수입하기 위하여 현금성이

높은 무연탄 등 광물자원을 집중 수출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만성적 에너지난 및 물자난을 감안할 때 이는 고육책에 불과하였다. 특히 열악한 북한 경제 여건 속에서 화력발전 및 석탄화학의 주원료인 무연탄의 과도한 대중(對中)수출은 북한 주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렇듯 「5·24 조치」는 북한에는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라는 뼈아픈 메시지였다.

(3)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 대책 강구

정부는 「5·24 조치」로 인해 우리 교역업체들이 불가피하게 겪고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였다.

첫째,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5·24 조치」 발표 직후인 2010년 5월 25일부터 기업들의 어려움에 대한 실태파악 및 안내 등을 위해 상시적 애로상담 체계인 「남북교역 애로상담센터」를 개설하여 2010년 11월 말까지 운영하였다. 「남북교역 애로상담센터」에서는 상담센터 개설 초기부터 일일 50건 이상의 상담·안내를 실시하였고, 2010년 5월 시점을 기준으로 교역 및 경험에 참여했던 모든 업체들을 대상으로 3차례 실태조사(2010.5.25.~6.2., 2010.6.18.~6.22., 2011.5.13.~5.18.)를 실시하였다.

둘째, 반출·반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다. 1, 2차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2010년 5월 24일 이전에 농수산·광산물 교역 관련 선급금을 지급했거나, 위탁가공용 원부자재를 반출했던 경우 등에 대해서는 반입·반출금지 유예조치를 실시하였다. 일반 교역의 선급금 지급분 반입금지 유예조치는 2010년 6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허용하였으며, 위탁가공 교역 관련 반입금지 유예조치는 2011년 2월 말까지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191개사 1억 2,578만 달러 상당의 일반 교역 선급금 지급분과 위탁가공 완제품이 반입되었다.

이와 함께 위탁가공업체들이 2010년 5월 24일 이전에 위탁가공 계약을

맺고, 국내에 준비해 둔 원부자재에 대해서 2010년 6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반출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위탁가공 교역과 관련된 총 72개사 4,141만 달러 상당의 원부자재가 「5·24 조치」 이후에도 추가로 반출되었다.

셋째, 두 차례에 걸쳐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을 실시하였다. 반출·반입 한시적 허용과 함께 정부는 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에 「특별 경제교류 협력자금 대출제도」를 신설하고, 연이율 2%의 저리정책자금을 대출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북교역 및 경협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차 특별 경제교류 협력자금」(2010.8.2.~2011.2.14.)의 대출을 실시하였으며, 총 184개사에게 384억 원을 긴급자금으로 융자해 주었다. 나아가 남북교역기업(2011.8.3.)과 남북경협기업(2011.10.4.)에 대한 「특별 경제교류 협력자금」의 대출기간을 일괄적으로 1년 연장하는 상환유예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정부는 「5·24 조치」의 지속에 따라 남북교역 및 경협기업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2차 특별 경제교류 협력자금」(2012.1.10.~6.8.)의 대출 지원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총 99개 기업이 185억 원의 대출 혜택을 받았으며, 이 중 1차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던 37개 기업이 새롭게 대출지원을 받게 되었다.

넷째, 교역·경협기업의 방북을 선별 허용하였다. 정부는 「5·24 조치」 이후 1주년을 계기로 교역 및 경협업체들의 상황에 대한 제3차 실태조사(2011.5.13.~18.)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2011년 6월부터 우리 교역·경협업체들의 대북 투자자산을 점검하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개성공단·금강산 방문 및 제3국 접촉을 허용하였다.

다섯째, 교역·경협기업에 「긴급운영경비」를 무상 지원하였다. 정부는 「5·24 조치」의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경영애로를 덜어주기 위하여 2012년 9월부터 교역·투자실적에 따라 기업별로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총 75억 원 규모) 「긴급운영경비」를 무상으로 지원하였다.

4. 당국 간 경제협력

계속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의한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에 따라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사업, 경공업·지하자원 개발협력 사업 등 당국 간 경제협력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그러나 남북 군 통신시설 개선사업 및 임진강 수해 방지 등을 위한 남북 간 논의와 협의는 간헐적으로 진행되었다.

(1) 남북 군 통신시설 개선사업

남북 군사당국 간 통신 협력은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계기로 2002년 9월부터 시작되었다. 남북은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 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체결에 따라 서해지구 군 통신선(2002.9.17., 전화 1회선, 팩스 1회선, 예비 1회선)과 동해지구 군 통신선(2003.12.5., 전화 1회선, 팩스 1회선, 예비 1회선)을 가설하였다.

가설 이후 남북 간 통행을 위해 활용되어 오던 군 통신선이 노후화됨에 따라 2008년 5월 서해지구의 통신채널이 단절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북한은 2008년 5월 우리 측에 군 통신 자재·장비 지원을 요청하였다. 한편 그동안 남북 간 통신 장애로 인해 개성공단 등에 출입하는 우리 국민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정부는 2008년 5월 「제204차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서 「남북 군사당국 간 통신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하고 2008년 5월 일부 자재·장비를 북한측에 제공하였다. 이후 2차분 자재·장비를 구매하였으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등 남북관계 악화로 인해 추가 자재 제공을 보류하였다.

2009년 10월 북한의 거듭된 요청과 개성공단 등 북한 지역에 출입하는 우리 국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하여 군 통신선로 개선공사를 재개하였다. 따라서 10월 28일부터 11월 19일까지 5차례에 걸쳐 북한에 광통신 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재·장비를 전달하고 남북이 각기 자기 측 구간 공사를 진행하였다.



남북 간 광케이블 연결



남북 간 광케이블 시험통화

공사 완료 후 2009년 12월 22일 군사 분계선상에서 광케이블을 연결함으로써 남북 군사당국 간 광케이블 통신망이 구축되었다. 이후 12월 24일과 25일 이틀간 시험통화를 거쳐 12월 26일부터 군 통신망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남북 간 신속하고 안정적인 통행정보 교환이 가능해졌다.

이후 남북 군 통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우리 군사당국과 상시적 업무협의 채널을 가동하고 있으며, 우리 측 통신장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KT,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등 유관기관과도 유기적 업무협조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2)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1990년대 후반 대규모 홍수로 임진강 하류 경기북부 지역에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면서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임진강은 전체 유역의 2/3에 해당하는 상류가 북한 지역에 위치한 남북 공유하천으로서 우리 측 하류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북한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인해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에 특별한 진전이

없는 가운데 2009년 9월 6일 북한측의 임진강 상류 댐 방류로 우리 국민 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대북 통지문과 통일부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사태 발생 원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유사사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북한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정부는 유사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남북 간 공유하천 공동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대북협의 방안을 모색하였고, 2009년 10월 14일 개성 「남북교류협력협약사무소」에서 남북 당국 간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실무회담」을 개최하였다. 우리 측은 기초발언을 통하여 북한측의 책임 있는 당국의 공식 사과와 조의 표명을 요구하였으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또한 「남북 공유하천 공동이용 제도화를 위한 3원칙」으로서 첫째, 합리적이고 공평한 이용의 원칙, 둘째, 상호 협력의 원칙, 셋째, 신뢰의 원칙을 제시하고, 유사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통보 체계구축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임진강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심심한 조의를 표명하였으며,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방류할 수밖에 없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북한측은 향후 임진강 댐 방류 시 사전에 우리 측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북한측은 우리 측에 임진강 댐 방류를 두 차례(2010.7.18., 7.22.) 사전 통보한 바 있다.

한편, 향후 정부는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실무회담」 결과를 토대로 북한측과 홍수예보 체계구축 문제와 함께 공유하천 피해예방 및 공동이용 제도화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제2절 개성공단사업

1. 개성공단사업 의의

개성공단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을 결합하여 남북이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경제협력사업이다. 우리의 경우 개성공단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고비용 구조를 탈피할 활로를 개척할 수 있고, 북한의 경우 경제난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북한의 군사적 요충지였던 개성 지역은 개성공단사업으로 인해 명실공히 공단으로 탈바꿈하여,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명박 정부 5년간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만큼은 유지되어 왔다. 북한도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인한 우리 정부의 「5·24 조치」 발표 때도 개성공단사업의 중단을 고려하겠다는 언급은 있었지만 실제로 개성공단사업 자체의 중단은 없었다. 즉, 남북 모두 개성공단사업의 축소와 통제 강화는 있었지만 중단은 없었다. 그만큼 개성공단사업은 남북 모두에게 남북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지속되어야 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2. 입주기업과 생산 현황

(1) 입주기업

2003년 6월 30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개성공단사업은 1단계 330만㎡ 개

발에 들어갔다. 2004년 6월 시범단지 15개 입주기업이 선정되고 2004년 12월 첫 생산품이 출시된 이후 2007년에는 1단계 2차 분양 및 1단계 1차 기반 시설이 준공됨으로써 본격적인 운영단계에 진입하였다.

2004년 6월 말 시범단지에 15개사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 18개사가 입주한 이래, 2012년 9월 기준으로 개성공단에는 123개사가 입주하여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 입주기업의 업종분포는 섬유 72개사, 기계·금속 23개사, 전기·전자 13개사, 화학 9개사, 종이·목재 3개사, 식품 2개사, 비금속 광물 1개사 순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수 추이

(단위 : 개사)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업체수	18	30	65	93	117	121	123	123

*2012년은 9월 30일 기준

개성공단 입주기업 생산업종 분포

(단위 : 개사)

구 분	섬유	기계·금속	전기·전자	화학	종이·목재	식품	기타	계
업체수	72	23	13	9	3	2	1	123

*2012년은 9월 30일 기준

(2) 생산 현황

개성공단의 누적 생산액은 2007년 1월 말 1억 달러를 넘어선 이래 2008년 11월 5억 달러, 2010년 9월에는 10억 달러, 2011년에는 15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2012년 9월 기준 누적 생산액은 18억 6,117만 달러이다. 2007년까지 누적 생산액이 2억 7,342만 달러인 것을 감안할 때, 누적 생산액은 이명박 정부 들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개성공단 연도별 누적 생산액

(단위 : 만 달러)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누적 생산액	1,491	8,864	27,342	52,484	78,131	110,463	150,648	186,117

* 2012년은 9월 30일 기준

2012년 9월까지 업종별 생산액은 섬유업종이 10억 223만 달러로 가장 많다. 화학업종은 1억 6,294만 달러, 기계·금속은 3억 549만 달러, 전기·전자업종은 3억 6,837만 달러, 식품은 1,250만 달러, 종이·목재는 586만 달러, 기타는 378만 달러이다.

또한 연간 생산액의 경우 2011년에 약 4억 달러였는데, 2007년도에 1억 8,000만 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에서 연간 생산액도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개성공단 업종별 생산액

(단위 : 천 달러)

구분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섬유	6,780	27,793	85,543	132,179	152,050	179,235	215,676	202,971	1,002,227
화학	1,768	10,900	18,262	21,785	26,179	32,092	28,636	23,317	162,939
기계·금속	5,250	20,853	41,947	49,250	37,312	48,637	52,617	49,621	305,487
전기·전자	1,108	14,191	39,027	47,162	37,584	59,147	97,221	72,931	368,371
식품	-	-	-	976	2,003	2,668	4,187	2,669	12,503
종이·목재	-	-	-	70	1,313	1,469	1,570	1,437	5,859
기타	-	-	-	-	34	75	1,941	1,731	3,781
계	14,906	73,737	184,779	251,422	256,475	323,323	401,848	354,677	1,861,167

*2012년은 9월 30일 기준

(3) 북한 근로자 현황

북한 근로자 수는 입주기업의 증가와 함께 증가세를 이어갔다. 2009년부터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2012년 1월 말을 기준으로 고용된 북한 근로자의 수는 5만 명을 넘었다. 이는 2004년 10월 북한 근로자 55명이 처음 고용된 이후 7년 4개월 만에 5만 명 고용을 기록한 것으로, 개성공단이 국내 중소기업에 버금가는 인력규모를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2012년 9월 기준으로 북한 근로자 5만 3,181명이 근무하고 있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수 추이

(단위 : 명)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인원수	17,621	11,189	22,538	38,931	42,561	46,284	49,866	53,181

* 2012년은 9월 30일 기준

3. 개성공단의 안정적 관리

(1) 개성공단을 둘러싼 공단 운영 환경 악화와 정부의 대응

개성공단은 북한의 일방적인 대남 강경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2008년 들어 북한이 육로통행 차단 조치인 소위 「12·1 조치」를 취함으로써 개성공단 운영 환경은 더욱 악화되었다. 북한은 군사분계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하여 상시 체류인원을 88명으로 축소하고, 출입횟수를 1일 6회로 줄이고 1일 출입인원 및 차량을 대폭 제한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입주기업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부자재 및 상품 수송차량의 우선통행을 보장하도록 개성공단 출입경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와 입주기업이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2008년 11월에는 누적 생산액 5억 달러를 달성하기도 하였다.

2009년에도 북한은 개성공단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북한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키리졸브 한·미 군사훈련을 이유로 훈련기간 중 3회(3.9., 3.13.~15., 3.20.)에 걸쳐 개성공단 육로통행을 차단하였다. 이에 따라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원부자재가 공급되지 못하여 생산 활동에 지장이 있었다. 2009년 3월 말에는 북한 체제 비난 등을 이유로 우리 측 근로자 1명이 억류되었다. 이에 따라 공단 내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관리 문제점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2009년 5월 북한은 남북 간에 합의되었던 개성공단에 관한 모든 계약과 법규에 대해 무효화 선언을 하였다. 이에 정부는 대북성명과 통일부장관 명의의 서한을 통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근로자 억류사건에 관하여도 유관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섰다. 또한 2009년 6월과 7월에 3차례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개최하여 억류 근로자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였다. 한편 북한의 개성공단 관련 계약 및 법규의 무효화 선언(2009.5.15.)에 대해서도 철회를 촉구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 간 합의와 계약, 법규와 제도의 준수, 건전한 경제 원리에 따른 발전 추구,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국제 경쟁력 있는 공단 발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하였다.

2009년 개성공단 실무회담 결과

구분	주요 논의 사항
제1차 실무회담 (2009.6.11.)	△장기간 억류 중인 근로자 문제 △출입·체류 제한 조치 철회
제2차 실무회담 (2009.6.19.)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3대 원칙 △ 장기 억류 중인 근로자 문제 △2008년 「12·1 출입·체류 제한 조치」 철회 요구 △3통 문제 해결 △「출입·체류 공동 위원회」 구성·가동 등을 제의
제3차 실무회담 (2009.7.2.)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3대 원칙 △장기간 억류 중인 근로자 문제 △2008년 「12·1 출입·체류 제한 조치」 철회 요구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 해결 및 회담 운영 방식 변경 등 제의

키리졸브 한·미 군사훈련을 구실로 시행했던 개성공단 통행 차단 조치는 2009년 3월 21일부터 해제되었다. 개성공단 실무회담 및 유관국과의 협조 등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 힘입어 장기 억류된 우리 근로자는 2009년 8월 13일 석방되었고, 8월 20일에는 이른바 「12·1 조치」도 철회되었다.

이후 2010년 2월 1일에 열린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제4차 실무회담」에서 3통 문제 개선을 협의하였으며, 구체적인 논의는 분야별 실무접촉에서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의 논의는 중단되었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 사건을 일으키자, 정부는 「5·24 조치」를 발표하여 모든 남북경협을 중단하기로 하였으나 개성공단은 특수성을 감안하여 계속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개성공단에 대한 신규투자를 금지하고 우리 국민의 신변보호를 위해 체류인원을 평소 수준의 50~60%로 축소하였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관련,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우리 국민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출경 차단 조치를 취하였다. 이후 남북관계의 긴장이 점차 완화되자 점진적으로 출경조치를 유연하게 적용하였다. 「5·24 조치」 직후 500여 명이던 체류인원을 점차 확대해 나갔다.

2012년 북한은 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4.13.)하여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야기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비상연락체계 가동 등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위해 만전의 조치를 취하였다.

개성공단사업 추진 경과

일자	추진 경과
2000.8.22.	현대-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간 총 6,612만㎡ 개발합의서 체결
2002.11.20.	개성공업지구법 제정
2002.12.27.	통일부, 현대·토지개발공사 협력사업자 승인
2003.4.~2006.11.	개성공업지구 개발규정 등 16개 하위규정 제정
2003.6.30.	개성공단 1단계 건설 착공식 개최
2003.8.20.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 등 4개 경험합의서 발효
2004.1.29.	개성공단·금강산 출입 및 체류 합의서 체결
2004.6.14.	시범단지 입주계약 체결(15개 기업)
2004.12.15.	개성공단 첫 제품 생산
2005.8.1.	한국토지공사, 본단지 1차 16만 9천㎡ 분양 공고
2005.12.28.	KT, 개성공단 통신공급 개시
2007.5.26.	한국전력공사, 10만kW 남북 송전선 연결
2007.4.30.	한국토지공사, 본단지 2차 175만㎡ 분양 공고
2007.5.25.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08.11.30.	누적 생산액 5억 달러 달성
2008.12.1.	북한, 군사분계선 육로통행 제한 조치
2008.12.13.	통일전망대 개성공단 제품 전용 상설전시관 개관
2008.12.23.	제1차 임대형 아파트형 공장 완공
2009.3.	공동브랜드 「Peaceworks」 출원
2009.3.9.13.~15., 20.	북한, 육로통행 차단 조치
2009.3.30.	우리 측 근로자 억류
2009.6.~7.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제1~3차 실무회담
2009.8.13.	우리 측 억류 근로자 석방
2009.8.20.	「12·1 조치」 철회
2009.8.	교역보험제도 도입
2009.12.	종합지원센터 완공
2010.2.1.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제4차 실무회담
2010.5.24.	「5·24 조치」 발표
2010.9.1.	개성공단 탁아소 개원
2010.9.4.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10.11.24.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잠정 출경 차단 조치 시행
2010.12.20.	연평도 해상사격 훈련 당일 잠정 출경 차단 조치 시행
2011.4.4.	개성공단 체류인원 점진적 확대 조정 조치
2011.9.30.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 개성공단 방문
2011.10.	건축 중단 기업 7개사 건축 재개 허용
2012.2.10.	국회 대표단 개성공단 방문
2012.2.15.	개성공단 활성화 조치 발표

(2) 개성공단의 유지·발전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조치

① 3통 문제 개선 등 개성공단 발전 여건 조성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3통 문제 해결 등 개성공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정부는 2009년 9월 「차량 자동 심사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고 11월 「남북출입사무소」에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전자출입체계(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이하 'RFID') 리더기 교체를 통해 우리 측에서 개선 가능한 통행·통관 절차를 먼저 간소화하였다. 이에 따라 전자운행증 인식률이 99% 이상으로 높아졌고, 인식 속도도 2초 이내로 단축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개성공단의 발전방향에 대한 남북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9년 12월 「남북 해외공단 공동시찰」(2009.12.12.~22.)을 추진하였다. 남북 해외공동 시찰단은 중국 칭다오, 쑤저우, 선전 공단과 베트남 옌퐁공단을 시찰하면서 해외공단의 개발 및 관리운영 체계, 기업지원, 통행통관 시스템 등을 둘러보았다. 또한 2010년 1월 개성 「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에서 「남북 해외공단 공동시찰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합동시찰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개성공단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후 2010년 2월 1일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제4차 실무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의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3통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였다. 이어 3월 2일 「개성공단 3통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에서 3통 문제 개선 이행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하였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는 분야별 실무접촉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러나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의 논의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2012년 9월 기준 평산시 개성공단 통행은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 1일 21회 이루어지고 있으며, 1,300회선의 유선통신회선이 운영되고 있다.

②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유연화 조치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 체류 인원 축소조정, 신규투자 금지에 따라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에 일부 차질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입주기업들은 기업 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북관계 상황을 설명하고 입주기업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동시에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정상적인 생산 활동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관리하고, 우리 기업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0년 6월에는 우리 기업들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남북협력기금 대출 원리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대출 원금 상환을 1년 6개월간 유예하였다. 한편 2011년 2월에는 남북협력기금 대출 중 2009년 11월에 대출해 주었던 긴급운영자금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해 주기도 하는 등 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 및 개성공단 출입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1년 10월에 「유연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첫째, 수리·교체·개량을 위한 설비 반출을 지속적으로 허용하였다. 둘째, 건축 중단 기업 7개사에 공장 신축을, 5개사에 증축을 허용하였다. 셋째, 소방서 및 응급의료시설 건립을 추진하였다. 이 외에도 출·퇴근도로 보수 등 각종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등 「5·24 조치」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

개성공단 유연화 조치 추진 현황

조치 사항	주요 현황
소방서 건립	• 소방서(34.8억 원) 2011년 11월 착공 → 2012년 12월 완공
응급의료시설 건립	• 응급의료시설(26.7억 원) 2012년 7월 착공 → 2012년 12월 완공
건축 중단 기업 공사 재개 허용	• 신축 7개사 : 2011년 10월 재개 허용, 2개사 공사 중 • 증축 5개사 : 2011년 12월 재개 허용, 2개사 공사 중
출·퇴근도로 보수	• 도로 보수(18억 원) 2011년 11월 착공, 2012년 8월 완공
버스 주차장 및 관련 시설 설치	• 주차장 부지 매입(18억 원) 2011년 12월 완료 • 검사소, 편의시설 등(5억 원) 2012년 5월 완공
출·퇴근버스 확대	• 2012년 9월 기준 274대 운영

③ 개성공단 활성화 조치

2012년 2월 1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8명으로 구성된 국회 대표단이 개성공단을 방문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정부는 2012년 2월 15일 「개성공단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첫째, 공장 가동 유지를 위한 대체건축 및 생산성 유지를 위한 필수설비 반출을 허용하였다. 둘째, 개성공단에 고립되어 생활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생산시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1단계 부지에 주재원들의 건전한 여가를 위한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 설치를 추진하였다. 또한 우리 측 근로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어학강좌 및 문화교양강좌를 개설·운영 중에 있다. 셋째, 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에서의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넷째, 기업의 금융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관계당국과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력 공급 확대에 관한 북한측과의 실무회담 추진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개성공단 활성화 조치 추진 현황

조치 사항	주요 현황
설비 반출 및 대체건축	• 개별 기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허용
우리 측 근로자 생활여건 개선	• 체력단련장 개설·운영(50명 수용) • 외국어·문화교양강좌 운영(중국어, 원예·조경 강좌)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노력	•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 실무협의 진행 - 한·EU, 한·중 FTA 대표단으로 참여
기업 금융 애로 해소	• 기업경영에 대한 실태조사 완료 • 관계부처 협의 중
당국 간 실무회담 추진	•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여 회담 개최 가능성 모색

4.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우리 중소기업이라는 점과 공단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공단 수준에 맞춰 개성공단의 기반시설을 건설하였다. 개성공단 1단계 부지조성 공사는 2006년 6월에 완료되었으며, 2007년 10월까지 용수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폐기물 매립시설을 완공하였다. 2012년 9월 기준 용수공급 용량 3만톤/1일, 폐수종말 처리용량 1만 5,000톤/1일, 폐기물 매립용량 6만 1,000m³, 폐기물 소각용량 12톤/1일 등의 기반시설과 10만kW 용량의 전력시설을 구축하는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개성공단 내 폐수종말 처리장



개성공단 내 폐기물 소각장

특히 폐기물 소각장은 현 소각장 처리용량인 12톤/일 처리에 한계가 있어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3월 착공을 시작한 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공사가 보류되었으나, 2012년 9월 기준 설계 변경을 추진 중이다. 새로 건립될 소각장은 50톤/일 규모의 소각장 및 25톤/일 규모의 소각설비, 환경오염 방지설비를 갖추고 있다.

통신시설은 KT가 2005년 12월 303회선을 개통한 이래 2009년 12월 600회선 등 3차례에 걸쳐 총 1,300회선을 확보하였다. 지속적인 통신망 고도화를 통해 2010년 7월부터는 신규전화 개통에 걸리는 시간을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등 입주기업의 통신이용 불편 해소에 노력하였다. 향후 국내 환경과 동등한 수준의 통신 공급을 위해 북한과의 협의를 거쳐 1만 회선 규모의 통신센터 건립과 인터넷·이동전화 개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부대시설로는 2007년 「기술교육센터」가 준공되었으며, 2009년에는 「종합지원센터」가 완공되었다. 또한 2009년 12월 연건평 2,181㎡, 소방차량 8대 규모의 소방대 건립을 착수하여 2012년 12월 완공되었다.



개성공단 내 소방대

2010년 9월에는 북한 여성근로자를 위한 「개성공단 탁아소」를 개원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응급의료시설」도 건립 중에 있다. 2007년 8월 착공하여 2009년 12월 준공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는 지상 15층, 지

하 1층, 연면적 3만 784㎡ 규모로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업무시설, 은행 등의 편의시설, 공단 홍보관 및 제품전시·판매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개성공단 기술교육센터

5. 법·제도 및 사업지원체계

(1) 법과 제도

개성공단에는 남북 간 합의서, 남한 법규, 북한 법규가 함께 적용되고 있다. 남북한이 협력해 나가는 개성공업지구의 운영을 위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2004.1.29.)되었으며,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2000.12.16.)와 기타 남북 간 합의서가 개성공단에 적용되고 있다.

우리 법규로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7.5.)되었다. 이 법률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운영 지원을 비롯해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투자나 출입·체류하는 우리 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모든 지원제도의 혜택을 개성공단 현지기업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동 법률 외에도 개성공단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이 적용되고 있다.

북한 법규는 <개성공업지구법>(2002.11.)을 기본법으로 하여 <개성공업지구 개발규정> 등 16개의 하위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성공업지구법>은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에 공업지구 법규의 시행세칙 작성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시행세칙의 제정은 남북이 협력하는 개성공업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남북이 협의하여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는 <개성공업지구법>의 위임에 따라 2012년 9월 기준으로 <개성공업지구 건축 준칙> 등 51개의 준칙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측의 법규와 국제적 기준을 바탕으로 개성공단 운영을 제도화해 나간다면,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 필수적인 준법정신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개성공업지구에 적용되는 남북 간 합의서

구분	남북 간 합의서
남북경협 4대 합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2000.12.16.)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2000.12.16.) •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2000.12.16.) •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2000.12.16.)
개성공업지구 관련 합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2002.12.8.) •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2002.12.8.) •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2002.12.8.)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2004.1.29.)
기타 관련 합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2003.7.31.) • 남북 상사중재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2003.10.12.) •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2002.12.6.) •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2004.4.13.) •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2007.5.11.)

(2) 사업지원체계

개성공단사업은 남한의 「남북협력지구지원단」과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지원·관리되고 있다.

2004년 10월 공단관리와 입주기업 생산 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위원회」가 개성공단 내에 설립되었으며, 5부 1팀(관리총괄부, 기업지원부, 공단관리부, 출입사업부, 기술교육부, 법질서팀)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또한 남한에서는 2007년 12월 「관리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도·감독 및 민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이하 ‘지원재단’)이 설립되었다. 「관리위원회」는 북한법인이지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원재단」의 이사장과 상근이사가 겸임하고, 직원은 「지원재단」에서 파견하고 있다.



6. 기업 투자 지원

(1) 금융 지원

정부는 개성공단 개발 초기의 열악한 사업 환경을 고려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남북협력기금을 대출받아 초기 시설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07년 12월까지 시범단지 입주기업에 약 478억 원, 본단지 1차 입주기업에 약 282억 원이 대출되었다. 이 제도는 2007년 12월부터 기

술보증, 신용보증제도로 대출방식이 변경되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007년부터 2012년 9월까지 개성공단에 진출한 중소기업 44개사에 대하여 290억 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2008년 하반기 이후 개성공단에 입주한 후발 진출기업에 60억 원 한도 내에서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11개 업체에 약 35억 원을 대출해 줌으로써 입주기업의 경영애로를 덜어주고 생산 활동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2008년 북한이 취한 육로통행 차단 조치(「12·1 조치」)에 따라 발생한 우리 기업의 경영애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 대출 원리금 상환을 2009년 1월과 11월에 각각 6개월, 2010년 11월에 12개월로 연장하였다.

한편 북한에 의한 투자재산 몰수·박탈 등에 따른 사업 중단 조치 등의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가동기업을 포함한 개성공단 진출기업이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액의 90%까지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경험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005년 7월부터 운용되기 시작한 이 제도는 북한에 의한 통행 차단 조치 등으로 개성공단의 경영여건이 악화된 2008년 말 이후 가입업체가 늘어 2012년 9월 기준으로 미착공 기업을 포함한 144개의 개성공단 업체가 가입하였으며, 보험금액은 5,006억 원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입주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9년 7월 기업당 약정한도를 5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 지급요건을 사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였다. 이와 같이 2009년에 시행한 경험보험 보장한도 확대, 지급요건 완화,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등은 통행 차단(2009.3.)으로 인한 입주기업 생산 활동의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2009년 8월에는 북한에 의한 개성공단 통행 차단 등으로 주문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역보험제도」(원부자재 반출보험, 납품이행 보증보험)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입주기업이 원부자재 거래 중단과 납품 중단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투자와 제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금융 지원 내역

(단위 : 개/억 원)

구분	경협보험	신·기보특례보증 ¹	중진공자금 ²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업 수(개)	144	26	44	28	11
금액(억 원)	5,006	419	290	760	35

* 2012년 9월 30일 기준

(2) 판로 지원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 생산품의 국내외적 판로 개척을 위하여 FTA 체결 시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 OPZ)으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였다. 2007년 4월 2일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의 FTA가 타결되고, 2012년 3월 15일 발효되었다. 2010년 10월 6일에는 EU와의 FTA가 체결되어, 2011년 7월 1일에 잠정 발효되었다. 한·미, 한·EU FTA 모두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여부와 관련해서는 발효 1년 후에 설치될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 일정 기준하에 개성공단을 포함한 북한의 특정지역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동 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음과 동시에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홍보와 판매, 시장 개척을 위하여 입주기업의 전시회 및 판매전 참가를 지원하였다. 2009년에는 「개성공단 및 남북교역상품전」, 「Buy Korea 2009 Autumn」 전시회에 입주기업의 참가를 지원하였다. 2010년에는 5월에 열린 「공동브랜드 활용 제품전시 상

1 신용보증·기술보증 특례보증 : 담보 능력이 취약한 입주기업이 원활히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 기관을 통하여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2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자금 사용 가능

담회」 및 10월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제9차 한상대회」에, 2011년 3월에는 「중소기업 판로지원 종합대전」에 입주기업의 참가를 지원하였다. 그리고 2009년에서 2011년까지 3차례에 걸쳐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성공단제품 전시판매전」 등을 개최하는 등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판로확대 및 개성공단 이미지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개성공단제품 전시판매전(2009)

(3) 보건의료 지원

개성공단 내 의료시설로는 「개성협력병원」이 있다. 동 병원은 2007년 4월 봉사단체인 「그린닥터스」의 의료시설과 북한의 종합진료소를 하나의 건물에 통합하여 개원하였다. 개성협력병원에서는 남북한 진료소를 구분하여 우리 측 의료진 3명과 북한측 의료진 18명이 각각 자기 측 근로자를 진료하고 있다.



개성협력병원

2009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가 유행하였다. 이에 정부는 개성공단 내에서 신종플루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종플루 예방조치를 강화하였다.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하고 개성공단으로 출경하는 근로자의 발열 상태를 검사하였다. 또한 정부는 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예방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였다.

2008년부터 2012년 9월까지 협력병원에서 진료 받은 남북한 근로자는 총 26만 428명으로 산부인과 38.8%, 외과 28.0%, 내과 27.7% 순이었다. 그리고 정부는 개성공단 내 우리 측 근로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단 내에 2012년 말까지 응급의료시설 건립을 완공하고, 2013년 1월경 의료시설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개성협력병원 진료 실적

(단위 : 명)

연도	구분	남한	북한	전체
2005		5,362	807	6,169
2006		5,834	1,398	7,232
2007		7,647	35,766	43,413
2008		7,751	61,973	69,724
2009		5,803	72,205	78,008
2010		4,115	40,275	44,390
2011		4,689	36,090	40,779
2012		3,089	24,438	27,527

* 2012년은 9월 30일 기준

(4) 근로조건 개선

북한 근로자의 보수는 기본급, 성과급 등 각종 수당, 사회보험료 등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리위원회」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합의로 월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전년도 최저임금의 5% 이상을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기본급 기준 월 최저임금은 50달러에서 시작하여 2007년 8월 52달러, 2008년 8월 55달러, 2009년 8월 57달러, 2010년 8월 60달러로 각각 인상되었으며, 2011년 8월부터 63달러가 적용되었고 2012년 8월부터 67달러가 적용되고 있다. 2012년 9월 기준 월평균 임금은 기본급 67달러에 각종 수당과 사회보험료를 합하여 평균 약 139달러³가 지급되고 있다.



작업 중인 북한 근로자

「관리위원회」는 북한 근로자의 출·퇴근을 위해 2012년 9월 기준 274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공장 내 샤워시설, 공단 내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다양한 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입주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7년 11월 개성공단에 지하 1층 지상 3층, 대지 7,000평, 연면적 3,378평 규모의

3 소수점 이하 절사

「기술교육센터」를 건립하였다. 이 센터 내에는 22개의 실습실과 11개 강의실, 대강당 등의 교육시설과 구내식당, 양호실, 자료실, 전시실, 미용실 등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기술교육센터」는 1일 최대 약 700여 명, 연간 교육과정상 4,000여 명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다. 또한 「기술교육센터」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우리 측 근로자의 자기개발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개성공단 내 북한 여성근로자를 위한 탁아소 건립이 2006년부터 「기술교육센터」 건립과 동시에 추진되었다. 이 탁아소는 남북 간 협의과정을 거쳐 2009년 10월 착공하여 12월에 완공되었다. 이후 2010년 9월 개원하여 1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북한 여성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탁아소 운영은 북한측이 맡고 있으며, 전기 및 가스 등의 비용은 공단 내 입주기업이 부담하고 있다.



개성공단 출·퇴근 버스 운영



개성공단 내 탁아소

제3절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1.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의의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분단의 장기화로 이질화된 남북 주민의 가치관, 생활양식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교류 과정에서 상호신뢰를 증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통일 후 예상되는 남북 간 문화·심리적 갈등을 예방하고 남북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한다. 사회·문화 분야 남북왕래 인원 통계를 살펴보면 2008년 방북 2,557명, 방남 172명으로 활발한 인적 교류가 이루어졌으나, 2009년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하여 사회·문화 교류협력 역시 감소세를 보였다. 분야별로 보면 교육·학술 분야와 종교 분야의 인적 교류가 두드러진다.

사회·문화 분야 남북왕래 인원

(단위 : 명)

구분	분야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방북	학술	663	112	95	44	-	914
	문화·예술	46	-	-	3	2	51
	체육	271	23	3	-	-	297
	종교	597	103	77	133	5	915
	언론·출판	308	-	7	2	2	319
	시민사회	631	12	22	15	-	680
	지방자치단체	41	6	-	-	-	47
	기타	-	11	-	-	-	11
방북 소계		2,557	267	204	197	9	3,234
방남		172	63	-	1	-	236

* 2012년은 9월 30일 기준

2009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2010년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2011년 상반기까지 사회·문화 분야 교류는 실질적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기존 사회·문화 교류 단체 및 개인에 대해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한 최소한의 간접 접촉만 허용하였다.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은 2011년 하반기 우리 정부의 유연화 조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재개되었다. 정부는 천안함 폭침에 따른 제재 조치인 「5·24 조치」의 기초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종교·예술·학술 등 비정치적·비군사적 순수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을 승인하였다.

2. 학술 교류

우리 측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북한의 문화보존지도국은 민족 문화재를 보존하고 남북학술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2007년 1차 발굴조사에 이어 2008년에는 11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남북 전문가 등 총 60여 명이 참가하여 만월대 서부 건축군 중 3,000㎡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경령전 동쪽에서 13여 개의 건물 위치를 확인하고, 유물 3,600여 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9년에는 출토 유물·유적 보존·관리 사업을 통해 이미 발굴된 유물을 실측하고 보존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2010년에는 서부 건축군 중 3,000㎡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건덕전을 중심으로 한 건물의 위치를 확인하고, 명문기와를 비롯한 다양한 유물 4,000여 점을 발굴하였다. 2011년에는 우리 정부의 유연화 조치에 따라 여름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발굴터 복구·보존

사업을 실시하였다. 남북은 11월 14일부터 22일까지 만월대 발굴 부지에 대한 안전조사를 실시하고, 11월 24일부터 12월 20일까지 수해 피해지역에 대한 복토 및 배수로 정비, 축대 보강 등의 작업을 실시하였다.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사업

우리 측 국립문화재연구소, 북한의 조선중앙역사박물관 등의 전문가들이 발굴조사에 공동으로 참여하였고, 남한 인력이 북한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문화재 보존·발굴 기술을 전파하는 등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는 남북 학술교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은 2005년부터 남·북·해외에서 쓰이는 겨레말을 집대성하여, 통일 어문규범의 토대를 마련하고 남북 언어의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겨레말 큰사전 편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이후부터 2009년까지 「남북공동 편찬회의」(20회)를 통해 남북의 학자들이 《표준국어 대사전》과 《조선말 대사전》에 실린 올림말⁴을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하여 《겨레말 큰사전》에 실을 올림말을 선정하였다. 또한 남·북 및 해외지역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4 사전 따위의 표제 항목에 올려서 알기 쉽게 풀이해 놓은 말

통해 17만여 개의 새 어휘를 발굴하였다. 2009년부터는 35만여 개의 올림말을 남과 북이 분담 집필하여 교차검토 후 「남북공동 집필회의」에서 합의하기로 하고, 「남북공동 집필회의」(4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우리 정부의 「5·24 조치」로 남북공동회의가 개최되지 못하면서 남북은 각각 자체적으로 새 어휘 조사 및 사전 집필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2014년 발간을 목표로 남북공동회의 개최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겨레말 큰사전》 어휘 집필 실례

표준국어 대사전

나비 [명]

나비목의 곤충 가운데 낮에 활동하는 무리를 통틀어 이르는 말. 몸은 가늘고...

[삽화/사진]

나방 [명]

나비목 나방아목의 곤충을 통틀어 이르는 말. 나비와 비슷하나 몸이 더 통통하고...

[삽화/사진]

조선말 대사전

나비 [명]

① <나비과에 속하는 곤충들>을 통털어 이르는 말. 몸은 둥글며...

② 누에에서 까나온 성충.

※ 나방 → 없음

겨레말 큰사전

나비 [명]

① 나비아목에 속하는 곤충을 통털어 이르는 말. ...

② <나방>을 북에서 이르는 말.

[붙임] 북에서는 <나비>와 <나방>을 가르지 않고 <나비>라고만 한다. 몸이 가늘고 주로 낮에 활동하는 것은 나비라 하고, 몸이 통통하고 주로 밤에 활동하는 것은

나방이라 한다. 나비는 날개를 등 뒤로 곧추세우고 쉬며, 나방은 날개를 편 채 쉰다. 또한 나비는 고치를 만들지 않고, 나방은 고치를 만든다.

[삽화/사진]

나방 [명]

나방아목의 곤충을 통털어 이르는 말. 나비와 비슷하나 ... [같은 말] 나방이.

[삽화/사진]

3. 종교 교류

종교 분야 교류는 주로 남북이 공동으로 복원한 북한 종교시설 중심의 공동행사 개최나 종교인의 방북 실무협의 위주로 진행되었다.

2008년에는 평양 장충성당에서 남북 천주교 신부 및 신자 등 200여 명이 공동으로 「평화통일 기원 미사」를 진행하는 등 대규모 방북 종교행사가 추진되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도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공동으로 2008년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2008 평화통일 남북교회 기도회」를 평양 봉수교회에서 개최하였다. 불교계에서도 종단별로 접촉과 교류가 이어져, 조계종·천태종·진각종에서 각각 여러 차례 방북을 통해 공동법회를 개최하고 남북 불교 교류 방안을 협의하였다.

2009년과 2010년의 종교 교류는 대규모 행사보다는 실무 차원의 사업협의 방식 위주로 진행되었고, 실무협의도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업 추진보다는 기존 사업의 내실화 또는 향후 교류사업 추진방향 등에 관한 의견교환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5·24 조치」로 중단되었던 종교 교류는 2011년 하반기 유연화 조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재개되었다. 정부는 종단별 형평성과 대표성 등을 고려하면서 순수 종교 교류 차원의 방북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수장단의 방북 등 12건(132명)의 방북이 성사되었다. 또한 정부가 2012년 3월과 9월 중국 베이징·선양에서 이루어진 남북 종교인 사이의 접촉도 허용함에 따라 20개 단체가 실무협의를 진행하였다.

4. 체육 교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08년과 2009년에 국제대회 참가를 위한 북한 선수단의 방남 및 친선경기를 위한 남한 선수들의 방북이 몇 차례 있었다.

2008년에는 제주에서 개최되는 「2008 아시아시니어레슬링선수권대회」(3.16.~24.)와 「2008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4.24.~28.) 참가를 위해 북한 선수단이 제주도를 방문하였다. 또한 「2010 남아공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경기」(2008.6.22.)와 「2010 남아공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 예선전」(2009.4.1)을 위해 북한 축구 대표팀이 두 차례 서울을 방문, 국민들의 큰 관심 속에서 남북전이 치러졌다.

우리 선수들의 방북 사례도 일부 있었다. 2008년 6월 「2008 남북 태권도 교류행사」를 위해 (사)국제태권도연맹(ITF) 우리 측 대표단 60명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의 태권도 시범공연을 관람하고, 남한 사범이 태권도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류행사를 가졌다. 또한 우리 측 「남북체육교류협회」와 북한 「4·25 체육단」이 개최한 「남북 유소년 축구대회」를 위해 2008년 6월과 10월 우리 측 유소년 축구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친선경기를 가졌다. 「남북 유소년 축구대회」는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상호방문 경기가 어려워지자, 2009년에는 중국 쿤밍에서 개최되었다.

2011년 11월에는 국제탁구연맹(ITTF)과 국제스포츠 평화교류기구인 ‘Peace and Sport’가 공동 주최한 「Peace and Sport Cup」 국제 친선 탁구경기대회

에 남북이 동시 출전하여 같은 조에 편성되기도 하였다. 1991년 「제41회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이후 탁구 종목에서 두 번째로 남북 단일팀을 이룬 이 대회에서 남자 조(유승민-김혁봉)는 우승을, 여자 조(김경아-김혜성)는 준우승을 차지했다.



‘Peace and Sport Cup’ 남북 단일팀 우승

5. 문화·예술 교류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는 경색된 남북관계 상황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2008년 2월 남북한 문인이 공동으로 만든 최초의 문학잡지 《통일문학》 창간호가 평양에서 5,000부 발간되어 국내에 2,000부가 반입되었다. 그러나 2008년 7월 제2호 발간 이후 2012년 9월 현재까지 발간이 중단된 상황이다.

2008년 2월 동평양 대극장에서 「뉴욕 필하모닉」 평양공연이 개최되었다. 또한 「뉴욕 필하모닉」은 동 방문 기간에 평양 모란봉 극장에서 「조선국립 교향악단」과 실내악 협연을 펼쳤다. 문화방송(MBC)은 동 공연의 중계 장

비를 지원하였다. 또한 10월에도 평양에서 「제27차 윤이상 음악회」가 개최되어 남북의 음악가가 함께 협연하기도 하였다.

2009년에는 한국미술협회 여성위원회가 「남북 KOREA 여성·오늘展」이라는 주제로 남북 여성화가의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전시회는 2009년 10월과 11월에 국회의원 회관 등에서 열렸다. 동 행사에는 「평양 만수대창작사」 등에서 활동하는 북한 작가 18명의 작품을 포함, 140여 명의 남북 여성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2011년에는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이 9월 평양을 방문, 북한 「조선예술교류협회」 관계자와 「남북합동 교향악단」의 서울-평양 교환 연주 및 북한 음악가 발굴·육성 사업에 관해 논의하였다.

정명훈 감독은 2012년 2월에도 평양을 방문하여 「은하수 관현악단」과 리허설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12년 3월 프랑스 파리에서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과 북한의 「은하수 관현악단」의 합동공연을 지휘하였다.

6. 남북공동행사 및 부문 간 교류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2001년부터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 및 8·15를 계기로 남북을 오가며 민간 차원의 공동행사를 개최하였다.

2008년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해외 측이 참석한 가운데 「6·15 공동선언 발표 8돌 기념 민족통일대회」가 개최되었다. 또한 「6·15 공동선언실천 남북위원회」 간 부문별 교류도 활발하게 전개되어, 「6·15 남북위원회」 산하 9개 부문 중 노동·청년학생·농민·교육·학술·여성·언론 등 7개 부문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2008년 7월 북한군에 의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을 시작으로 2차 핵실험 등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남북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2009년부터는 공동행사와 산하 부문 간 행사를 남북이 각각 개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2009년에는 「6·15 공동행사를 위한 남북 실무접촉」과 「6·15 남북공동위원장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남·북·해외 측 사이의 의견 불일치로 「6·15 공동행사」를 각자 개최하였다. 이에 따라 「6·15 남측위원회」는 6월 14일 장충체육관에서 자체 행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에도 「6·15 공동행사를 위한 실무접촉」과 「6·15 공동위원장 회의」, 6·15 산하 부문 간 접촉은 이루어졌다. 「6·15 남측위원회」는 2010년 3월 평양에서 「6·15 공동위원장 회의」를 개최하였고, 3월 중국 선양 및 5월 개성 실무접촉에서는 「6·15 10주년 기념행사」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조치」 이후로 「6·15 남·북측위원회」 본부 및 부문 간 교류가 전면 중단되면서 「6·15 남측위원회」는 「6·15 공동선언 발표 10주년 기념 평화통일 민족대회」와 「10·4 선언 3주년 기념식」을 단독으로 개최하였다.

2011년에도 「6·15 남측위원회」는 「6·15 11주년 기념 평화통일 한마당 ‘손맞잡고 6·15’」와 「6·15 공동선언 발표 11주년 기념 평화통일 민족대회」, 「10·4 선언 4주년 기념 평화통일축전」을 단독으로 개최하고 공동호소문을 발표하였다.

2012년 「6·15 12주년 기념행사」도 「6·15 남측위원회」 단독으로 6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하였다.

7.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지방자치단체의 대북교류는 1999년 제주도의 감귤지원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고, 자체 남북협력기금도 조성하여 남북교류 사업에 활용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2008년에는 서울시의 평양 조선중앙연구소 의료장비 지원, 인천시의 평양 치과병원 리모델링 및 의료장비 지원, 경기도의 개풍 양묘장 조성 및 말라리아 남북공동 방역사업, 강원도의 안변 연어 사료공장 지원 및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 등이 진행되었다.

2009년 이후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였다. 다만 정부는 경색된 남북관계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라리아 공동방역 등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교류를 승인하였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대북교류 10주년인 2009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산학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하여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 10년》이란 책을 발간하였다. 이 책자에서는 지난 10년간 지방자치단체의 대북교류를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전망하였다.

한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남북교류 사업의 정보공유 및 중복방지, 중앙과 지방 간의 효율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 매년 1~2회 지방자치단체의 대북교류 담당자를 초청하여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제4절 남북관광협력

금강산 관광은 1998년 10월 현대아산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이하 ‘아·태’)가 합의를 체결하고, 1998년 11월 금강호가 동해항을 출항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후 2003년 9월 금강산 육로관광이 실시되고 2007년 6월 내금강 관광까지 이루어지면서 관광이 활성화되어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될 때까지 관광객 수가 193만 명에 이르렀다.

한편 개성 관광은 2005년에 현대아산과 「아·태」가 시범관광에 합의하여 3차례에 걸쳐 시범관광이 실시되었다. 2007년 11월 현대아산과 「아·태」 간에 「남북관광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2007년 12월부터 본격적인 관광이 시작되었고, 2008년 11월 관광이 중단될 때까지 관광객 수는 11만여 명에 달하였다.

2008년 7월 11일 우리 측 여성 관광객이 금강산 관광 도중 북한 군인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여성 관광객을 조준 사격하여 사망하게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비인도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사고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면서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에 정부는 동 사건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사항인 만큼, 금강산 관광을 잠정 중단 조치하였다. 북한에 대해서는 동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신변안전보장 강화’, ‘재발방지대책 마련’이라는 3대 조건의 해결을 요구하였으며, 정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진상규명 노력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3대 조건 해결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2009년 8월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의 평양 방문 시 김정일 위원장의 특별조치에 따라 관광의 편의와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는 언급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무조건적인 관광재개만을 요구하였다.

2010년 2월 「금강산·개성 관광 관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개최됨에 따라 정부는 관광재개를 위해서는 3대 조건이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사건의 진상을 밝혔고, 재발방지 및 신변안전보장이 김정일 위원장의 특별조치에 따라 확고히 담보된 만큼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였다. 이에 따라 회담은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이후 북한은 관광 중단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며 우리 측 재산에 대해 위법·부당한 조치를 취하였다. 2010년 3월 4일 북한은 아·태 대변인 담화를 통해 개성·금강산 관광재개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우리 측 당국이 관광을 계속 막을 경우 관광 관련 합의와 계약을 파기하고 우리 측 부동산을 동결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북한은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측 자산에 대해 부동산 조사를 실시하였고, 4월 13일 우리 정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자산(소방서, 이산가족면회소, 온천장, 문화회관, 온정각 면세점)을 동결하였으며, 「이산가족면회소」 우리 측 관리인원의 24시간 내 출국을 요구하였다. 이에 4월 14일 「이산가족면회소」 우리 측 인원이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이미 동결된 우리 정부 및 관광공사 자산을 몰수하고, 나머지 우리 측 기업 자산은 동결 조치를 실시하였다. 4월 30일에는 자산의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 관리인원 16명(이 중 2명은 중국동포)을 제외하고 모든 우리 측 인원의 추방을 통보해 와 16명을 제외한 우리 측 인원 전원이 금강산지구에서 철수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 통일전선부 앞 통지문(2010.3.15.), 2차례 정부입장 발표(3.18., 4.8.), 통일부 대변인 성명 발표(3.31., 4.23.) 등을 통해 북한의 조치가 남북 사업자 간 계약 및 당국 간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북한 당국을 향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관광문제는 반드시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위법·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2011년 4월 8일 북한은 아·태 대변인 담화를 통해 현대아산의 독점사업 권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였으며, 5월 31일에는 기존의 <금강산 관광지구법>을 폐지하고 <금강산 국제관광 특구법>(이하 '특구법')을 채택하였다. <특구법>은 현대아산의 독점권을 박탈하고, 금강산지구에 대한 관리기관 구성 시 우리 측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으며, 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적 책임을 부과(<금강산 관광지구법>은 위반 사항이 엄중한 경우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기업의 재산을 침해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신변안전보호를 더욱 약화시킨 것이다.

또한 북한은 2011년 6월 17일 금강산 국제관광 특구지도국(이하 '특구지도국') 대변인 통고를 통해 <특구법>에 따라 금강산지구 내 모든 재산을 정리한다면서 금강산지구에 부동산을 소유한 모든 우리 측 당사자들이 재산 처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6월 30일까지 금강산에 들어올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투자기업 대표와 공동으로 「민관합동 협의단」을 구성하여 6월 29일 금강산을 방문하였으나, 북한은 재산정리 일정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며 우리 측의 입장을 표명할 시간조차 주지 않아 협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당일 북한은 현대아산 앞 통지문을 통해 모든 우리 측 기업들이 7월 13일까지 재산정리안(<특구법>에 따른 국제관광 참여 또는 자산 임대·양도·매각)을 가지고 올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재산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처분을 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민관합동 협의단」은 7월 13일 다시 금강산을 방문하였다. 북한은 <특구법>에 따라 재산정리를 할 것이며 현대아산의 독점권 취소와 <특구법>은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측은 <특구법>을 거부하며 북한의 재산권 침해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우리 측과의 추가 협의를 제의하며 7월 29일까지 연락이 없다면 일방적으로 재산처리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월 25일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 당면문제 해결 협의를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북한에 제의하였으나, 북한은 재산정리만

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2011년 8월 22일 북한은 「특구지도국」 대변인 담화와 통일부 및 우리 측 기업들 앞 통지문을 통해 금강산지구 내 우리 측 재산에 대한 법적처분을 단행한다고 밝히면서, 21일 0시부터 물자·재산의 우리 측으로의 반출을 중지하며 우리 측 관계자는 모든 재산을 북한측에 넘기고 72시간 안에 나가야 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우리 측은 통일부 대변인 성명 및 현대아산 입장 발표를 통해 우리 기업의 재산권 불포기 입장을 밝히고 북한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였다. 또한 금강산지구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고려하여 이들의 조속한 철수를 준비하였고, 다음날인 8월 23일 우리 측 인원 전원(중국동포 2명 포함 16명)이 철수하였다.

통일부 대변인 성명 주요 내용(2011.8.22.)

- 북한이 우리 기업들의 재산과 인원에 대하여 일방적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정부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원상회복을 요구함.
 -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북한측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임.
- 북한이 일방적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적, 외교적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임.

이후 북한은 중국 등 외국여행사를 통해 금강산이 포함된 북한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등 금강산지구의 우리 측 시설을 이용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금강산 국제관광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불법적 조치에 대해 정부는 2011년 8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강산 관광사업 대책반」을 구성하여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였다.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한 관광문제 해결 및 일방적 조치의 중단·철회를 촉구하였으며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북한의 불법적 국제관광에 대한 참여 및 투자 자제를 요청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였다. 우리 정부는

8월 30일 내·외신 기자 브리핑을 통해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하였고, 9월 5일에는 금강산지구 우리 측 투자기업들의 모임인 「금강산지구 기업협의회」에서 입장을 발표하였으며, 9월 6일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대북 항의 전통문을 전달하였다. 또한 10월 세계관광기구 경주 총회에 참석차 방한한 중국·일본 관계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였다. 2012년 4월에도 주중대사관을 통해 중국여행사의 금강산 관광 참여 자제를 요청하고, 한중수교 20주년 행사차 방한한 중국 문화부 차관에게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6월과 11월에는 「금강산 관광사업 대책반」 차원에서 중국 정부 및 여행사에 금강산 국제관광의 불법성을 설명하고, 참여 자제를 요청하는 등 관련국과의 외교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예기치 않은 사고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강산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안타까운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투자기업들의 손실을 다소나마 보전하기 위하여 2차례에 걸쳐 남북협력기금을 대출하였다. 1차로 2009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26개 기업에 66억 5,000만 원을 대출하였으며, 2차로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5개 기업에 47억 9,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또한,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40개 기업에 긴급운영경비 4억 2,500만 원을 무상으로 지원하였다.

북한의 불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화를 통해 금강산 관광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관광재개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우리 측 재산을 침해한 조치를 중단하고 원상회복하는 한편 신변안전보장 등 3대 조건을 해결해야 하며, 남북관계에 있어서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제5절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1.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개소 및 운영 경과

남북은 경제협력을 발전시키고 거래방식을 직접거래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하여 2005년 7월 12일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 28일 개성공단 내에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이하 ‘협의사무소’)를 개설하였다(2008.2.29. 대통령령 제20721호,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개칭).

「협의사무소」는 개성공단 내에 위치한 정부기관으로서, 남북 당국이 한 건물에 근무하면서 상시 접촉을 통해 남북 간의 경제거래 및 투자의 소개와 자문, 연락, 편의 보장, 교역·투자 관련 자료 제공, 사업 협의, 교역상담회·설명회 개최, 상품전시회 참가 등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을 현장에서 지원하고 촉진하는 업무를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협의사무소」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기능이 정지되기도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 2008년 3월 24일 북한측의 일방적인 조치에 따라 3월 27일 우리 측 인원 11명이 추방되었고, 같은 해 11월 24일 북한측의 일방적인 사무소 폐쇄 통보로 2008년 12월 1일부터 2009년 9월 6일까지 사무소 기능이 일시 정지되었다.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5·24 조치」를 빌미로 북한은 2010년 5월 26일 「협의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우리 측 인원 전원을 추방하였다. 이후 「협의사무소」는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2. 민간 교류협력사업 추진지원

2008년 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위탁가공 협의 270회, 협력사업 협의 92회, 일반교역 협의 84회, 지원사업 협의 31회 등 「협회사무소」를 통해 477회의 남북 민간기업 간 사업협회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우리 측 1,607명, 북한측 1,821명 등 총 3,428명의 인원이 「협회사무소」를 방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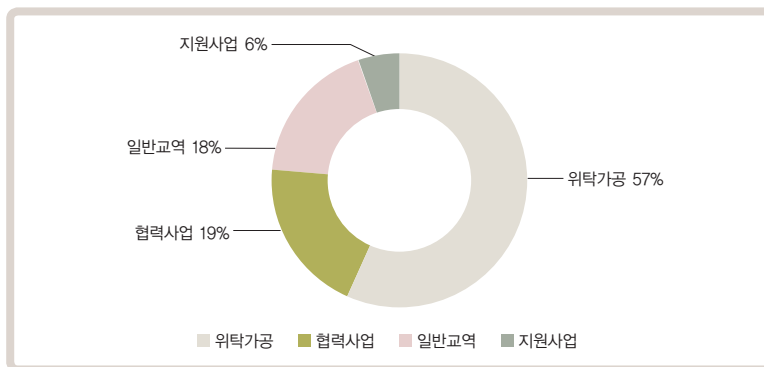
또한 남북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춘·하북 위탁가공 상담회가 「협회사무소」에서 2009년 1회(2009.11.10.~12.15.), 2010년 1회(2010.1.25.~2.12.) 등 2회 개최되었다. 당시 우리 측 65개 업체 관계자 171명과 북한측 업체 관계자 231명이 참가하여 2010년 춘·하북 약 1,297만 장(약 2,429만 달러 규모)의 물량에 대한 협회가 이루어졌다.

남북 간 사업협의 및 참석인원 현황

(단위 : 건/명)

구분 연도	사업형태별 사업협의 건수(건)				계	참석인원(명)		
	위탁가공	협력사업	일반교역	지원사업		남한	북한	계
2008	156	64	46	19	285	1,012	1,040	2,052
2009	75	13	23	7	118	339	461	800
2010	39	15	15	5	74	256	320	576
합 계	270	92	84	31	477	1,607	1,821	3,428

2008~2010년 사업형태별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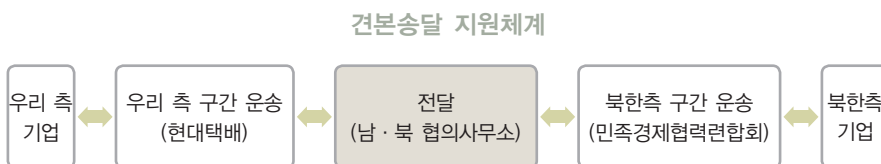




남북기업 간 사업협의(2009.12.15., 협의사무소)

또한 남북기업 간 직접통신이 곤란하고 북한의 현지공장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 경협업체 간 사업제안, 작업지시, 작업진도 파악, 출하제품 선적확인 등 다양한 협의문건을 「협의사무소」를 통해 교환함으로써 남북 민간경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였다. 2008년 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남북한은 총 1만 7,289건(남→북 : 8,637건, 북→남 : 8,652건)의 문건을 교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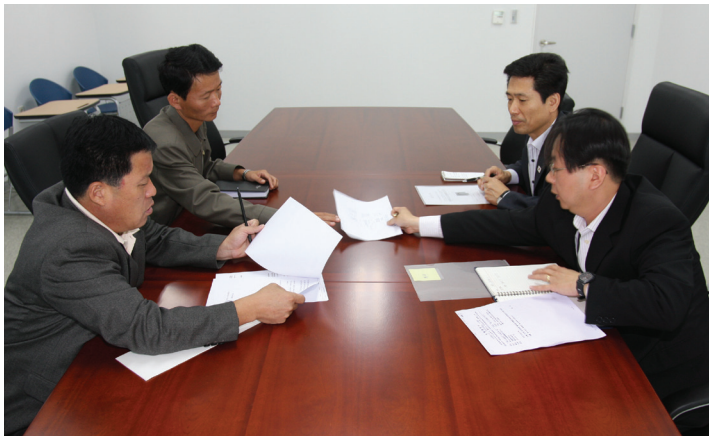
이와 함께 「남북사무소 간 견본송달 지원에 관한 합의서」 체결(2006.5.4.)을 통하여 남북 간 경협 추진과정에서 상시적으로 송달이 필요한 견본품을 택배시스템을 활용하여 「협의사무소」를 통해 교환·전달하는 견본송달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견본품 전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등 남북 민간경협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하였다. 2008년 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928건의 견본품이 「협의사무소」를 통해 교환·송달되었다.



대북 민간경협 지원 실적

(단위 : 건)

연도	구분	문건증개	건본송달
2008		11,630	686
2009		2,147	97
2010		3,512	145
합 계		17,289	928



문건 전달을 위한 남북연락관 접촉(2009.9.23., 협의사무소)

3. 남북경협 기업과의 소통 강화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인해 「협의사무소」의 기능이 정지(2008.12.1.~2009.9.6., 2010.5.26.~2012.9. 현재)된 상황에서도 정부는 경협기업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였다. 대북 경협기업을 대상으로 남북관계 상황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의견 수렴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52회, 80개 업체대표 참가)하였다. 이와 함께 대북 경협사업에 관심 있는 지방기업을 대상으로 경협사업 추진절차 안내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

여 남북 경협사업에 대한 이해 제고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남북 민간경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와 대북 경협사업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4. 남북회담 개최 지원

「협의사무소」는 대북 경협기업들을 위한 지원 기능뿐만 아니라 북한 지역에 설치된 유일한 우리 정부기관으로서 남북 간 회담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기능도 담당하였다. 2009년 6월 11일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제 1차 실무회담」을 시작으로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2009.10.14.), 「남북적십자실무접촉」(2009.10.16. 및 2010.9.17., 9.24., 10.1.), 「해외공단 남북 공동시찰 평가회의」(2010.1.19.~21.) 등 총 15회의 남북회담이 「협의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2009.10.14., 협의사무소)

제6절 남북 출입통행 및 운송

1. 남북출입사무소

「남북출입사무소」는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통한 출입통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3년 11월 20일 개소하였다. 「남북출입사무소」는 남북 간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 합의(2000.7.31.)와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합의(2002.4.5.)에 따라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서해지역 및 동해지역의 남북 간 육로통행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남북출입사무소」는 남북 간 육로의 최북단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등 북한 내 남북협력지구 출입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개성, 평양 등 서부 지역 출입 장소로 경기도 파주에 「경의선 도로 및 철도 출입사무소」를, 금강산 등 동부지역 출입 장소로 강원도 고성에 「동해선 도로 및 철도 출입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때는 지정된 ‘출입 장소’를 통하도록 되어 있으며 출입을 위해 통행하는 인원과 차량은 출입심사를 받아야 한다. 「남북출입사무소」에는 남북 출입통행을 심사하기 위해 통일부를 비롯하여 법무부·보건복지부·농림수산식품부·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청·문화재청 등의 기관이 합동으로 근무하면서 협업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남북출입사무소



경의선 출입사무소



동해선 출입사무소

「남북출입사무소」는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는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유사시 공동대응 등 협업체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년 6월 8일 총리 훈령으로 <남북출입사무소 운영규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출입사무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관계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 1명을 위원으로 하는 「남북출입사무소 운영협의회」를 매월 1회 개최하고 있다. 「남북출입사무소」는 2012년 9월까지 총 41회에 걸쳐 개최된 「남북출입사무소 운영협의회」를 통해 2개 이상의 관계기관이 관련된 남북 출입사무와 남북 출입업무 현안에 대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였다.

2. 남북 출입통행 절차

남북 간 출입통행은 출입국이 아닌 출입경 개념을 도입하여 출국 대신 출경으로, 입국 대신 입경으로, 사무소 명칭도 「출입국사무소」 대신 「출입사무소」로 명명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05. 12.29.) 제3조에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명시하고 있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절차나 방법도 국외에 출국할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출국할 경우에는 공항에서 여권을 소지하여 출국심사를 하지만,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일부로부터 방북승인을 받고 여권 대신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북한방문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다만 출입심사, 통관, 검역 등의 절차는 출입국의 경우와 동일하다.

출입국과 출입경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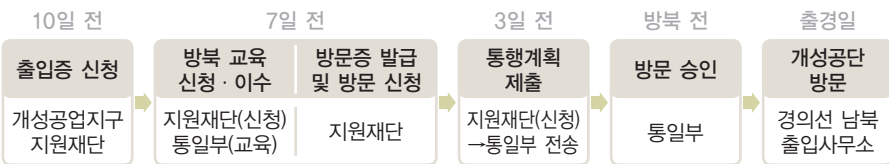
구분	출입국	출입경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간의 왕래, 거래(국경 개념) • 여권 소지, 비자 발급 • 출입국사무소 관할(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 내부 왕래, 거래(특수 관계, 비국경 개념) • 북한방문증명서 소지, 출입증(체류증) 발급 • 남북출입사무소 관할(통일부)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심사, 통관절차, 보건검역 	

우리 국민이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일부에 북한 방문을 신청하여 방북 승인을 받고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개성공단 방문 시에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서 운영하는 OK시스템(Online 출입신청시스템)에 방북 시 필요한 증명서인 출입증이나 체류증을 신청하고, 통행계획을 작성하여 출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출입 신청 후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시스템」(www.tongtong.go.kr)에서 방북 승인을 확인하고, 출경 당일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북한방문증명서」를 제시하고 출경심사를 받아 출경한다. 북한에서는 출입증 또는 체류증을 제시하여 출입심사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방북 승인을 신청할 때 방북 안내교육과 출입증이나 체류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차량을 이용하여 방북하려면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후 통행계획 제출 전에 「차량운행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개성공단의 경우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자동차운행 신청 시 「전자운행증」(RFID카드)이 발급되어 출입경 시 전자식 자동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출입경 차량 전면 「전자운행증」(RFID카드)을 부착하면 차량심사대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다.

북한 개성공단 출입 신청 개요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시스템」(통통시스템) : www.tongtong.go.kr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출입신청시스템(OK시스템) : oks.kidmac.com

3. 출입시설 현황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이후, 북한 지역을 출입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를 위해 출입시설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남북 간 인원, 차량, 물자의 왕래에 수반되는 통행심사, 통관절차, 검역검사 등 출경 및 입경 전반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 체계를 구축하였다.

「경의선 출입사무소」의 철도 및 도로출입시설(도라산역 포함)과 「동해선 출입사무소」의 철도 및 도로출입시설(제진역 포함)은 2006년에 준공되었으며, 경의선의 「도라산 물류센터」는 2007년 12월에, 「동해선 물류센터」는 2010년 9월에 준공되었다. 현재 「경의선 출입사무소」와 「동해선 출입사무소」를 포함한 「남북 출입사무소」의 총 시설규모는 부지면적이 67만 5,988㎡이며, 건물은 51동에 8만 6,425㎡이다.

경기도 파주에 소재하는 「경의선 출입사무소」는 차량 및 인원의 출입통행을 위한 도로출입시설, 남북 열차운행을 위한 철도출입시설을 관리하고자 건설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남북 간 이동하는 물자의 신속한 통관 및 검역과 북한의 부족한 물류인프라를 보완하고자 「도라산 물류센터」를 건설하였는데, 이 세 곳 시설의 규모는 부지면적이 총 44만 2,015㎡이고, 건물은 39동에 5만 3,623㎡이다.

강원도 고성에 소재한 「동해선 출입사무소」는 도로출입시설, 철도출입시설 및 물류센터를 관리하며, 부지면적은 총 23만 3,973㎡, 건물은 12동에 3만 2,802㎡이다.

출입시설 현황

구 분		건물 연면적	부지면적/ 동 수
경의선 출입사무소 (경기도 파주)	도로출입시설	13동 18,310㎡	442,015㎡ (총 39개 동)
	철도출입시설	1동 15,825㎡	
	물류센터	25동 19,488㎡	
동해선 출입사무소 (강원도 고성)	도로출입시설	3동 14,055㎡	233,973㎡ (총 12개 동)
	철도출입시설	1동 6,706㎡	
	물류센터	8동 12,041㎡	



경의선 도로출입시설



경의선 철도출입시설(도라산역)



동해선 도로출입시설



동해선 철도출입시설(제진역)

4. 출입통행 현황

(1) 육로 출입통행 현황

남북 간 출입통행이 공식 집계된 2003년 이래 2012년 9월까지 출경 기준으로 총 258만 6,214명의 인원과 총 65만 6,510대의 차량이 육로로 출입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2012년 9월까지의 출경 기준으로 총 93만 9,080명의 인원과 총 40만 8,531대의 차량이 육로로 출입하였다. 이 기간 동안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일방적인 개성공단 출입제한 조치, 2차 핵실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인하여 출입통행이 대폭 감소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등 북한 지역에 출입·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안전한 출입통행이 되도록 관리하였다.

경의선 육로의 출입통행은 이명박 정부 5년간 약 11만 명에서 12만 명 정도의 출경 인원과 약 7만 대에서 8만 대 정도의 출경 차량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개성공단 우리 측 근로자의 출·퇴근 인원과 원자재 및 제품 운송차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는 개성공단에 출입하거나 체류하는 근로자와 운송차량에 대한 안전하고 신속한 출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입제도 개선 및 출입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여 왔다. 2012년 6월 27일에는 경의선을 통해 출경한 인원이 100만 명에 도달함으로써 100만 번째 출경자⁵와 함께 기념행사를 거행하기도 하였다.

동해선 육로의 출입통행과 관련하여 북한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이후 관광 중단에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며 우리 측 재산에 대해 위협적인 부당조치를 취하였다.

5 강미화(개성공단 입주기업 삼덕통상 과장)

자산 동결에 이어 자산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 관리인원 16명(이 중 2명은 중국동포)을 제외하고 우리 측 인원 전원의 추방 통보에 따라 금강산지구에서 철수함으로써 2012년도 이후에는 정기적인 출경 인원과 출경 차량은 전무한 상태이며, 부정기적인 출입경만 이루어지고 있다.⁶

연도별 경의선 및 동해선 육로 출경 인원·차량

(단위 : 명/대)

연도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계
경의선 육로	인원 (명)	3,643	24,164	66,772	84,100	144,971	263,258	115,026	126,107	115,249	88,285	1,031,575
	차량 (대)	1,249	15,314	38,868	47,352	71,857	91,309	72,929	83,308	81,414	64,563	568,163
동해선 육로	인원 (명)	39,395	296,924	335,713	266,541	384,911	223,972	3,682	3,051	436	14	1,554,639
	차량 (대)	3,143	15,585	19,852	14,724	20,035	12,456	1,323	1,027	198	4	88,347
출경 인원 합계		43,038	321,088	402,485	350,641	529,882	487,230	118,708	129,158	115,685	88,299	2,586,214
출경 차량 합계		4,392	30,899	58,720	62,076	91,892	103,765	74,252	84,335	81,612	64,567	656,510

* 2012년은 9월 30일 기준



경의선 출경 100만 명 달성 기념식

6 제3장 제4절 「남북관광협력」 내용 참조

남북 간 출입통행은 북한과의 합의를 통해 시간대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의선 출입사무소」의 평일 출경은 8시 30분에 시작하여 16시 30분까지 11회, 그리고 입경은 10시 정각에 시작하여 17시 정각까지 10회로, 하루에 총 21회에 걸쳐 출입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토요일에는 8시 30분에서 14시 30분 사이에 출경 7회와 입경 5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요일과 북한의 공휴일에는 출입경이 없다.

남북 출입통행은 2008년 12월 1일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지역 출입제한 조치로 인해 큰 지장이 초래되었다. 그해 키리졸브 한·미 군사훈련 기간 중에는 북한이 남북 간 군 통신선을 차단하여 출입통행이 일시 중단되기도 하였다. 2009년 5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1874호가 결의됨에 따라 「남북 출입사무소」는 전략물자, 사치품 등 대북 반출금지 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였다.

한편 「경의선 출입사무소」는 남북 실무회담을 위한 시설도 갖추고 있어 2011년 3월 29일에 「백두산 화산 관련 남북 전문가회의」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또한 「남북 출입사무소」는 ‘민간인 통제선’ 안쪽에 위치하여 통일안보 현장체험교육의 장소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2010년에는 3,834명이 방문하였고, 2011년에는 6,062명이 방문하였다.

(2) 남북화물열차 운행

2005년 12월 말 경의선 구간(문산~개성, 27.3km)과 동해선 구간(제진~금강산, 25.5km)의 남북 간 연결철도 궤도 부설공사가 완료되어 열차 운행을 위한 기본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2007년 4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합의에 따라 2007년 5월 17일 남북열차 시험운행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 12월 11일부터 경의선 우리 측 도라산역과 북한측 판문역 간에 운행되던 남북화물열차는 주 5회 정기적으로 운행하였다.

총 12량(기관차 1, 화차 10, 차장차 1)의 차량을 편성해 운행하였으나,

2008년 2월 1일부터 남북 간 합의에 따라 화물이 있는 경우에만 화차를 운행하고, 화물이 없는 경우에는 기관차와 차장차만 운행하였다. 그러나 남북화물열차는 북한측의 일방적인 육로통행 제한 조치(2008.12.1.)에 따라 2008년 12월 이후 운행이 중단되었다.

2007년 12월에서 2008년 11월까지 화물열차 운행기간 중 총 222회에 걸쳐 31량 318톤의 화물이 운송되었다. 이 중 우리 측에서 북한측으로 반출된 컨테이너는 24량 235톤이고, 북한측에서 우리 측으로 반입된 컨테이너는 7량 75톤으로 주로 개성공단 관련 반출·반입 물자가 수송되었다.

(3) 해상운송

남북 간 해상운송은 2005년 8월에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와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 따라 우리의 인천·군산·여수·부산·울산·포항·속초 등 7개 항과 북한의 남포·해주·고성·원산·홍남·청진·나진 등 7개 항 간에 해상항로가 개설되어 남한과 북한의 선박이 운항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2005년 8월부터 남과 북의 해사당국은 전화 1회선과 팩스 1회선의 유선통신망을 연결하여 남북 간 선박운항 허가, 선박의 운항정보 제공 등을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선박운항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조치」로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이 금지되고, 북한도 우리 선박의 북한 해역 운항을 금지시켰다.

남북 간 선박운항은 2008년 이후 2012년 9월까지 편도 기준으로 총 1만 1,772회이며, 「5·24 조치」에 따른 남북교역 중단 등으로 2010년 5월 이후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남북교역 중단에 따른 우리 교역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허용한 북한 농림수산물 및 의류 임가공 제품 잔량과 대북 지원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운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3국적 선박이 우리 항구를 단순 경유하여 남북 간을 운항하였다.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이후 2010년 5월까지 북한 선박은 우리 측 해역

을 총 2,165회 운항하였으며, 이 중 남한과 북한 간 운항은 1,477회, 우리 측 해역을 통과해서 북한에서 북한으로 운항한 경우는(예: 서해 남포↔동해 청진) 688회였다.

남북 간 선박운항 현황

(단위 : 회)

연도	1994~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운항 횟수 (편도)	13,131	4,497	8,401	11,891	7,435	2,577	1,432	142	186

* 2012년은 9월 30일 기준

(4) 항공운송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서해를 우회하는 서울-평양 간 직항로가 개설된 이래 남북 간 항공기운항은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였다. 남북 간 항공기운항은 2008년 이후 2012년 4월까지 편도 기준으로 총 77회 이루어졌다. 정부의 2010년 「5·24 조치」 이후에는 2011년 4월에 아시아축구연맹(AFC) 회장 일행과 카터 전 미국대통령을 포함한 엘더스 그룹(The Elder's Group)이 북한 평양을 경유하여 남한을 방문하면서, 제3국적 항공기가 남북한 사이를 2회 운항하였다.

남북 간 항공기운항 현황

(단위 : 회)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운항 횟수 (편도)	43	19	67	112	28	208	88	153	64	11	-	2	-

* 2012년은 9월 30일 기준

제7절 남북협력기금 관리·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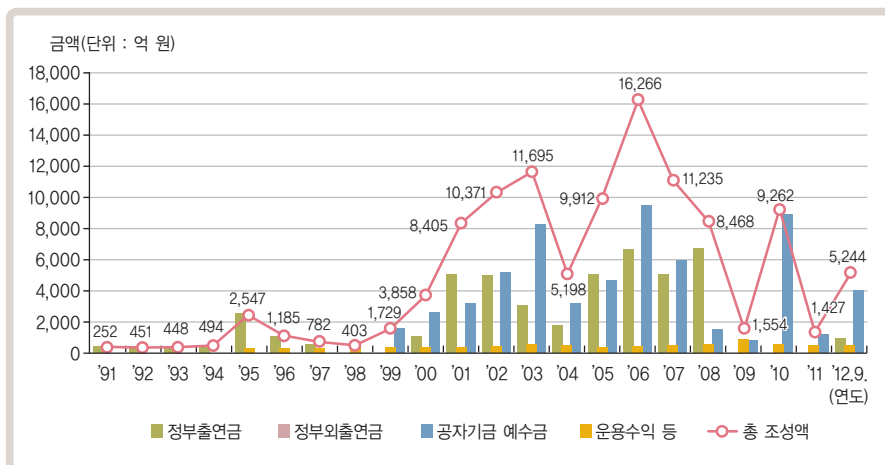
1. 남북협력기금 조성 및 운영

(1) 남북협력기금 수입

남북협력기금은 1990년 8월 1일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을 근거로 남북 교류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1년 3월 20일 최초로 정부출연이 이루어짐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에 정부출연으로 250억 원이 조성된 이래 2012년 9월까지 정부출연금 4조 4,812억 원, 민간출연금 25억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5조 9,452억 원, 운용수익금 6,233억 원, 기타 수입금 665억 원 등 총 11조 1,187억 원이 조성되었다.

남북협력기금 조성



2008년 남북협력기금 수입계획은 총 1조 3,887억 원으로, 2008년 말 기준 1조 4,381억 원이 수납되었다. 정부출연금은 6,500억 원이 출연되었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은 계획금액 3,796억 원 중 1,475억 원을 예수하였다. 여유자금 회수는 3,175억 원(통화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2,972억 원, 비통화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203억 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5,717억 원(통화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5,081억 원, 비통화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636억 원)이 수납되었다. 자체수입은 416억 원을 계획하였고, 689억 원이 수납되었다.

2009년 수입계획은 총 1조 5,086억 원으로, 2009년 말 기준 1조 2,241억 원이 수납되었다. 정부출연금은 3,500억 원을 계획하였으나, 2009년부터 정부출연금 배정 방식이 수시배정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2009년 남북협력기금의 집행실적이 낮음에 따라 당초 계획되었던 정부출연금 3,500억 원은 배정되지 않았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은 2,580억 원 중 810억 원을 예수하였다. 여유자금 회수는 8,550억 원(통화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8,275억 원, 비통화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275억 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1조 537억 원(통화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9,079억 원, 비통화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1,458억 원)이 수납되었다. 그 외 자체수입으로는 456억 원을 계획하였고, 894억 원이 수납되었다.

2010년 수입계획은 총 2조 2,279억 원으로, 2010년 말 기준 1조 9,533억 원이 수납되었다. 정부출연금은 3,500억 원을 계획하였으나, 남북협력기금의 집행실적이 낮음에 따라 당초 계획되었던 정부출연금 3,500억 원은 배정되지 않았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은 9,630억 원으로 계획하였고, 이 중 8,750억 원을 예수하였다. 여유자금 회수는 8,531억 원(통화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8,441억 원, 비통화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90억 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1조 42억 원(통화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7,833억 원, 비통화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2,209억 원)이 수납되었다. 자체수입은 618억 원을 계획하였고, 741억 원이 수납되었다.

2011년 수입계획은 총 1조 3,768억 원으로, 2011년 말 기준 1조 950억 원이 수납되었다. 2011년에는 남북협력기금의 집행실적이 낮아 당초 계획된 정부출연금 3,500억 원은 배정되지 않았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은 1,111억 원으로 계획하였고, 이 중 1,044억 원이 수납되었다. 여유자금 회수는 8,448억 원(통화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5,914억 원, 비통화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2,534억 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9,336억 원(통화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5,030억 원, 비통화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4,306억 원)이 수납되었다. 그 외 자체수입으로는 709억 원을 계획하였고, 570억 원이 수납되었다.

2012년 수입계획은 총 1조 6,138억 원으로, 2012년 9월까지 1조 4,751억 원이 수납되었다. 경수로 관련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을 위하여 최초로 정부출연금 848억 원이 출연되었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을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4,000억 원을 예수하였다. 여유자금 회수는 9,410억 원(통화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4,865억 원, 비통화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4,545억 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외 자체수입으로는 493억 원이 수납되었다.

남북협력기금 수입

(단위 : 억 원)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정부출연금	6,500	-	-	-	848
공자기금 예수금	1,475	810	8,750	1,044	4,000
여유자금 회수	5,717	10,537	10,042	9,336	9,410
자체수입	689	894	741	570	493
합계	14,381	12,241	19,533	10,950	14,751

* 2012년은 9월 30일 기준

(2) 남북협력기금 지출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기금의 용도)에 따라 남북 간 인적 왕래, 문화·학술·체육 등 사회·문화 교류, 경제협력 촉진 등에 지원하는 한편, 그 밖에 민족공동체 회복 및 남북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도 지원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출입제한 조치, 2차 핵실험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인하여 남북교류협력이 대폭 감소하였다. 이어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인 「5·24 조치」로 인하여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간 교역 및 경협사업이 중단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특별 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 및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등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술·종교·문화 등 비정치적인 교류는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면서 허용하였다.

2008년 남북협력기금 지출계획은 사업비 1조 1,045억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 상환 1,657억 원, 여유자금 운용 1,165억 원, 기금운영비 20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2008년 말 기준 사업비는 1조 1,045억 원 중 2,312억 원이 집행(사업비 대비 집행률 21%)되었다. 이와 같이 남북협력기금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2008.7.11.)에 주요 원인이 있었다.

사업별 집행 현황을 보면 인적 왕래와 관련하여 북한 현지 체험학습 등 3건에 대하여 27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2008년 「겨레말 큰사전 남북공동 편찬사업」 32억 원, 「개성 만월대 등 남북 공동발굴 조사사업」 4억 원 등을 포함하여 8건 38억 원이 지원되었다.

이산가족 교류와 관련하여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 건설사업」 180억 원, 「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사업」 1억 원 등 4건 182억 원이 집행되었고, 인도

적 지원과 관련하여 국제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234억 원,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152억 원 등 79건 597억 원이 집행되었다. 「남북경제협력 기반조성사업」 지원에는 대북 에너지 설비·자재 지원 438억 원 등 18건 784억 원이 집행되었다.

한편 교역·경협자금 대출은 19건 108억 원(교역자금 대출 14건 78억 원, 경협자금 대출 5건 30억 원)이 이루어졌으며, 「개성공단지원사업」에서는 종합지원센터 건립 201억 원, 아파트형 공장 건설 171억 원 등 8건 576억 원이 집행되어 개성공단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의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지원하였다.

2009년 지출계획은 사업비 1조 1,182억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 상환 1,283억 원, 여유자금 운용 2,575억 원, 기금관리비 46억 원이 편성되었다. 2009년 말 기준 사업비는 1조 1,182억 원 중 1,000억 원이 집행(사업비 대비 집행률 8.9%)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북한의 2차 핵실험(2009.5.25.)에 주요 원인이 있었다.

사업별 집행 현황을 보면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겨레말 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29억 원, 「개성 만월대 등 남북공동 발굴조사사업」 1억 원 등을 포함하여 2건 30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이산가족 교류와 관련해서는 추석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13억 원, 「이산가족면회소」 유지·관리 경비 7억 원 등 5건 21억 원이 집행되었다.

인도적 지원과 관련하여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215억 원,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78억 원 등 41건 294억 원이 집행되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의 북한 영유아 사업 등을 통해 지원한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 취약계층의 인도적 지원은 지속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남북경제협력 기반조성사업」 지원에는 동해선 남북출입시설 공용야드 건설 178억 원 등 9건 202억 원이 집행되었다. 한편 교역·경협자금 대출은 18건 154억 원(교역자금 대출 17건 84억 원, 경협자금 대출 1건 70억 원)이

집행되었다. 그리고 「개성공단지원사업」에서는 「종합지원센터 건립」 200억 원 등 6건 299억 원이 집행되었다. 특히 2008년 북한의 개성공단 출입·체류 제한 조치인 「12·1 조치」 등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입주기업들에 대한 경영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08년 하반기 이후 진출한 기업 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개사에 대하여 총 60억 원 한도 내에서 긴급운영자금을 대출하기로 하였으며, 기존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유예를 결정하였다.

2010년 지출계획은 사업비 1조 1,189억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 상환 9,671억 원, 여유자금 운용 1,385억 원, 기금운영비 34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2010년 말 기준 사업비는 1조 1,189억 원 중 863억 원이 집행(사업비 대비 집행을 7.7%)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2010.3.26.) 및 연평도 포격 도발(2010.11.23.)에 주요 원인이 있었다.

사업별 집행 현황을 보면 「사회·문화 교류지원사업」으로는 「겨레말 큰사전 남북공동 편찬사업」 19억 원, 「개성 만월대 등 남북공동 발굴조사사업」 2억 원 등 2건 21억 원이 집행되었다. 인도적 문제 해결 지원은 2010년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15억 원, 「이산가족면회소」 유지·관리 경비 4억 원, 북한 신종플루 치료제 등 당국 차원의 대북지원 171억 원,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 21억 원 등 18건 212억 원이 집행되었다.

「남북경제협력 기반조성사업」 지원에는 무상지원 11건 81억 원, 교역·경협자금 대출 98건 416억 원 등 총 497억 원이 집행되었다. 2010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하여 「3대 공동체 구상」과 「통일세 및 통일재원 공론화」를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준비에 대한 여론과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었고,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을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통해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정부의 「5·24 조치」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남북교역 및 경협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

별 경제교류 협력자금 대출제도」를 신설하여 대출을 시행하고, 기존 남북 협력기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실시하였다.

「개성공단지원사업」에는 개성공단 기반조성 3건 96억 원, 개성공단 운영 대출 1건 37억 원 등 총 133억 원이 집행되었다.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등 엄중한 남북관계 상황 속에서도 개성공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생산 활동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등을 시행함으로써 개성공단의 생산 활동 유지 및 기업의 경영애로 경감을 위해 노력하였다.

2011년 지출계획은 사업비 1조 153억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 상환 1,271억 원, 여유자금 운용 2,288억 원, 기금관리비 56억 원이 편성되었다. 2011년 말 기준 사업비는 1조 153억 원 중 427억 원이 집행(사업비 대비 집행률 4.2%)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우리 정부의 「5·24 조치」에 주요 원인이 있었다.

사업별 집행 현황을 보면 「사회·문화 교류지원사업」으로는 「겨레말 큰 사전 남북공동 편찬사업」 23억 원, 「개성 만월대 등 남북공동 발굴조사사업」 2억 원 등 2건 26억 원이 집행되었다. 종교인평화회의(KCRP) 방북 지원 등 학술·종교·문화 등 비정치적인 교류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였다.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5·24 조치」 이후 중단되었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사업도 재개하였다.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대북 수해피해에 36억 원을 지원하였다.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의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백신 및 의약품 제공과 영양 개선 사업에 65억 원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총 5건 103억 원을 지원하였다. 이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남북경제협력 기반조성사업」은 무상지원 12건 104억 원, 교역·경협자금 대출 57건 75억 원 등 총 179억 원이 집행되었다. 북한의 일련의 도발에 대한 사과 등 태도 변화가 없어 우리 정부는 「5·24 조치」의 효력을 계속 유

지시켰다. 「5·24 조치」로 인해 남북교역 및 경협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2차 특별 경제교류 협력자금」 대출 지원을 결정하고, 기존 남북협력기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도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실시하였다.

「개성공단지원사업」은 개성공단 기반조성 2건 64억 원, 개성공단 운영대출 2건 55억 원 등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총 119억 원의 기금을 집행하였다.

2012년 지출계획은 사업비 1조 60억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 상환 5,321억 원, 여유자금 운용 701억 원, 기금관리비 56억 원이 편성되었다. 2012년 9월 기준으로 사업비는 1조 60억 원 중 450억 원이 집행(사업비 대비 집행률 4.5%)되었다.

「사회·문화 교류지원사업」은 「겨레말 큰사전 남북공동 편찬사업」 17억 원, 인도적 지원은 이산가족 교류지원 2건 1억 원과 대북 수해피해 지원 4,800만 원 등 총 3건 2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남북경제협력 기반조성사업」은 남북청소년 교류센터 건립 지원 60억 원,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지원 18억 원 등 무상지원 8건 110억 원과 교역·경협자금 대출 99건 183억 원 등 총 293억 원이 집행되었다. 또한 「개성공단지원사업」은 개성공단 기반조성 4건 102억 원, 개성공단 운영대출 2건 36억 원 등 총 138억 원이 집행되었다.

한편 만기가 도래하는 경수로 관련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의 상환을 위하여 신규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예수함에 따라 이자 부담분만큼 원금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12년 9월 기준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을 위해 정부출연금 848억 원이 출연되었으며, 원금 4,000억 원을 포함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 4,881억 원이 집행되었다.

남북협력기금 지출

(단위 : 억 원)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사업비	사회·문화 교류	65	30	21	26	17
	인도적 문제 해결	779	315	212	103	2
	남북경제협력	892	356	497	179	293
	개성공단	576	299	133	119	138
	소 계	2,312	1,000	863	427	450
공자기금 원리금 상환		1,512	1,159	9,305	1,086	4,881
여유자금 운용		10,537	10,042	9,336	9,410	9,406
기금운영비		20	39	29	27	14
합계		14,381	12,240	19,533	10,950	14,751

* 2012년은 9월 30일 기준

2.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 강화

이명박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하고 이를 위해 기금 운용체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우선 남북협력기금 집행 심의·의결기구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정비하여 전문성 확보와 함께 기금 집행 심의가 더욱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완하였다.

기금 심의 과정에 있어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을 종전의 4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그간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가 정부 부처 간의 협의체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토의에 한계가 있었

다는 지적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사전 협의기구로서 통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대통령실·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국방부·지식경제부 및 해당 안건 관련 부처의 국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를 새롭게 개편(2008.5.15.)하여 사전 심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2007년에 구성된 통일부 내 자체 심의기구인 「기금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기금수탁 관리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내에 「기금관리 심사반」을 설치하여 기금에 대한 심사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제도도 정비하였다. 2008년에는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2008.10.10.) 및 시행규칙(2008.12.2.)을 개정하여 기금 지원 용도를 세분화하고 민간단체의 부적절한 기금 집행에 대한 기금환수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의결범위를 확대하였다.

2009년에는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2009.5.28.)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및 기금을 사용한 자는 기금 사용 계획 및 기금 사용 결과를 각각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기금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2010년에는 <남북협력기금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2010.9.27.)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남북관계 경색 등 기업경영 외적인 문제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명문화하고, 기금수탁 관리자의 보고의무를 명시함으로써 남북협력기금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남북협력기금 운용 관리규정>, <남북 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이산가족 교류 경비지원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과 지침의 개정을 통하여 남북협력기금 지원 기준을 보완하고, 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한편 2008년 11월에는 1991년 남북협력기금이 설치된 이후 그간의 남북

협력기금의 조성 및 집행 실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남북협력기금 백서>를 발간·배포하였다.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기금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안 및 일정규모 이상의 기금지원에 대하여는 사업 집행 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금지원 결정 및 사용내역을 통일부(www.unikorea.go.kr)와 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M I N I S T R Y O F U N I F I C A T I O N

제 4 장

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

제1절 남북 이산가족

제2절 국군포로·납북자

제3절 대북 인도적 지원

제4절 북한인권

제4장 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

이명박 정부는 이산가족, 국군포로·납북자 등 분단 이재민 문제 및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과 북한인권 문제 등을 포함한 인도적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남북 주민 간 분단 고통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를 남북관계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남북관계가 전반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이산가족 문제 해결도 진전을 이루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차례의 「남북적십자회담」과 4차례의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을 개최하여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였고, 이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금강산에서 2차례 진행하였다. 국내적으로는 2011년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진행하였고, 2012년에는 ‘남북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적 책무에서 대북정책의 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국내 전후납북자에 대한 지원과 전시납북자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활동 등은 꾸준히 전개되었다. 전후납북자에 대한 지원은 피해위로금 등 명목으로 425명에게 145억원을 지원 완료(2011년 9월 말)하였고, 전시납북자도 743명을 인정하였다.

대북지원 문제는 동포애와 인도주의 차원에서 조건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당국 차원에서는 긴급 수해물자, 신종플루 치료제 등을, 민간 차원에서 밀가루, 의약품, 생필품 등 인도적 물품을 북한에 지원하였다.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권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제1절 남북 이산가족

1. 정부 차원의 노력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2009년과 2010년에 2차례 개최되었다. 2009년 개최되었던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남북적십자회담」 합의(2009.8.26.~28., 금강산)에 따라 추석을 계기(9.26.~10.1.)로 금강산에서 이루어졌다. 우리 측 97가족(126명)이 북한측 가족 228명을, 북한측 98가족(106명)이 우리 측 가족 428명을 상봉하여 남북 총 888명이 상봉하였다. 2010년 추석맞이 이산가족 상봉행사(10.30.~11.5.)는 세 차례의 「남북적십자실무접촉」에서의 합의(2010.10.1.)에 따라 우리 측 94가족(137명)이 북한측 가족 203명을, 북한측 97가족(110명)이 우리 측 가족 436명을 상봉하여 남북 총 886명이 상봉하였다.

정부 차원의 상봉 현황(2000~2011년)

구분	남한	북한	계
대면상봉(18회)	1,874가족(11,800명)	1,890가족(6,186명)	3,764가족(17,986명)
화상상봉(7회)	279가족(2,257명)	278가족(1,491명)	557가족(3,748명)
계	2,153가족(14,057명)	2,168가족(7,677명)	4,321가족(21,734명)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2009, 금강산)

이명박 정부는 이산가족들의 고통화가 심화(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중 70세 이상이 전체의 79.3% 차지)됨에 따라 이전 정부 때 이루어져 왔던 일회성 상봉행사로써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였다.

2009년 및 2010년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전면적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상봉정례화, 상시상봉, 고령 이산가족의 고향방문 및 자유방문 실현 보장을 북한에 강하게 촉구하였다. 그 결과 남과 북은 2010년 11월 25일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도적 문제 협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하여 회담 자체가 무산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우리 측은 2012년 2월 14일에 이어 8월 8일 이산가족 상봉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은 8월 9일 이산가족 문제와 무관한 금강산 관광 재개 등과 연계하여 우리 측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였다.

한편 남북 이산가족이 원할 때면 언제든지 상봉할 수 있는 장소인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는 착공된 지 2년 11개월 만인 2008년 7월 12일에 완공되어 준공검사를 마쳤다. 금강산 관광 특구지역 내에 위치한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는 연면적 19,835㎡로 지하 1층·지상 12층의 면회소 건물과 면회사무소 2동으로 구성되었다. 면회소동의 경우 2인실과 가족실 등 총 206개의 객실이 있어 최대 1,0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이산가족 간 상시적인 만남을 위한 물리적 공간은 확보되었으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면회소 개소 및 운영 등 관련 계획이 잠정 보류되었고, 북한이 우리 측에 금강산 관광재개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를 몰수 조치(2010.4.27.)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2009년과 2010년 이산가족 상봉행사 시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의 1층 연회장에서 단체 상봉 및 우리 측 주최 환영만찬 등 일부 행사가 진행되었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측에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

2. 민간 차원 교류지원

정부는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확대 노력과 병행하여 제3국을 통한 민간 차원의 생사확인, 상봉 등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보완·강화하여 왔다. 이산가족들의 교류 경비 부담을 덜어주고,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시행된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지원금을 2009년에 이어 2012년에도 인상하여 생사확인 200만 원, 상봉 500만 원, 교류 지속(서신교환 등)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교류 주선 단체에 대해서는 신뢰성 제고를 통하여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2년 2월 민간 차원 이산가족 교류 주선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남북이산가족협회」에 대해 연간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민간 차원의 교류는 이명박 정부 이후 생사확인 107건, 서신교환 330건, 상봉 71건이 성사되었으나, 교류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이산가족의 고령화 및 사망자 증가에 따른 수요 감소, 북한 당국의 통제 강화 등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건수

(단위 : 건)

연도 구분	199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계
생사 확인	2,725	388	209	276	69	74	50	35	16	3	4	3,849
서신 교환	7,651	961	776	843	449	413	228	61	15	21	5	11,423
상봉	994	283	188	95	54	55	36	23	7	4	2	1,741

* 2012년은 9월 30일 기준

3. 국내에서의 노력

정부는 당국 및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와는 별도로 국내에 거주하는 고령 이산가족들을 초청하여 정부의 이산가족 정책을 설명하고,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는 행사를 실시하였다. 2008년 광복절을 계기로 전국 8개 지역에서 총 666명의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이산가족 위로행사」를 실시한 이후 매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2010년 상반기에는 속초·여수·경주 등 지방 소도시 중심으로 지역별 100여 명씩 총 300여 명의 고령 이산가족을 초청하여 1박 2일간 이산가족 초청행사를 개최하였고, 2010년 9월에는 추석을 계기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251명을 「KBS 가요무대」에 초청하였다. 2011년에는 지역별로 100명 내외의 이산가족을 6차례 초청하여 정책 설명 및 위로행사를 진행하였다. 2012년 상반기에는 지역별로 100여 명 내외의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북한지역 전통요리대회」와 「이산가족 교류 설명회」 등 초청행사를 4차례 실시하였으며, 9월 5일에는 이북도민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도 실시하였다. 또한 정부는 추석과 연말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외계층 고령 이산가족을 직접 방문하여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고 위로해 왔다.



이산가족 위로방문(2012.1.)

아울러, 정부는 법률 제정 등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9년 3월 이산가족 문제에 관한 최초의 법률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바,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국가의 책무, 이산가족 실태조사 및 정보통합 관리체계 구축, 이산가족 교류를 위한 대북지원, 민간 차원 이산가족 교류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적 기반 정비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조항	주요 내용
제4조	국가는 남북회담을 통하여 이산가족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제5조	3년마다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 진행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
제6조	이산가족 실태조사 및 정보통합 관리체계 구축
제9조	상봉행사의 정례화와 상봉 규모의 확대, 면회소 운영, 긴급 가사방문 등을 위해 북한 당국과의 협의 의무
제10조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생사확인, 소재파악 등에 필요한 물자 또는 경비를 북한에 지원
제11조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제12조	이산가족 교류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제13조	권한의 일부를 대한적십자사 등 이산가족 관련 단체에 위탁

동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정부는 2011년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남북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한 12만 8,000여 명 중 생존자 전원(2011.3. 기준 8만 1,800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동 조사는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에 제출한 ‘이산가족 찾기 신청서’의 기재사항 변

경 여부 확인과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향후 남북 간 전면적 생사확인 및 상봉정례화에 대비하여 기본자료를 현행화하고, 이산가족 정책수립에 기초가 될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는 「남북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홈페이지 개설(1999.6.) 이후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한 생존자 전원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전수 조사라는 데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실태조사 결과, 대상자 8만 1,800명 중 6만 6,611명(81.4%)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부는 2012년 6월에는 「남북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진행경과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남북관계와 관계없이 국내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이산가족 영상 편지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8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영상 편지 제작을 위한 수요조사를 통해 1만 6,800여 명의 희망자를 파악하였고,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우선, 2012년 12월부터 800여 명에 대한 영상 편지를 제작하고, 2013년에는 5,000여 명, 나머지는 2014년에 제작하여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등에 보관하고, 향후 남북적십자 간 합의를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등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는 「남북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에 대한 현행화 작업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2009년 10월부터 두 달 동안 「남북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신청자 8만 2,371명을 대상으로 안내서한을 발송하여 연락처 등을 현행화하였으며, 2011년 실시한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도 반영하였다. 2012년 9월 기준으로 「남북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등록자 12만 8,763명 중 5만 2,744명이 사망하였고, 생존자는 7만 6,019명이다.

남북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등록자 중 생존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90세 이상	89~80세	79~70세	69~60세	59세 이하	계
인원수(명)	5,715	29,455	25,134	9,372	6,343	76,019
신청비율(%)	7.5	38.8	33.1	12.3	8.3	100

* 2012년 9월 30일 기준

제2절 국군포로·납북자

1.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경과

6·25 전쟁 이후 유엔군과 공산군은 1953년 4월부터 1954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전쟁포로를 상호 교환하였다. 당시 유엔군 측은 국군 실종자의 수를 8만 2,000여 명으로 추정하였으나, 공산군 측으로부터 최종 인도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였다. 실종된 국군의 상당수는 송환되지 못한 채 북한에 강제 억류된 것으로 추정된다. 1994년 10월 조창호 소위가 북한을 탈출하여 귀환한 이후 2012년 9월 기준 총 80명의 국군포로가 탈북·귀환하였고, 국방부는 귀환한 국군포로와 북한이탈주민의 진술을 바탕으로 현재 약 500여 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납북자는 6·25 전쟁 중(1950.6.25.~1953.7.27.) 납북자(전시납북자)와 그 후 납북자(전후납북자)로 분류된다. 전시납북자 규모는 조사시기와 주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1952년과 1953년에 발간된 대한민국 통계연감 등을 고려하면 8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에 의한 피랍자, 즉 전후납북자는 총 3,835명이며, 86.5%인 3,318명이 귀환하였다. 귀환자 중 3,310명을 북한이 송환하였으며, 8명은 장기간 북한에 억류 중 자진 탈북·귀환하였다.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는 납북사건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현재 북한에 억류된 납북자를 517명으로 추정하였다.

전후납북자 현황(추정)

(단위 : 명)

구분	어선원	대한항공 (KAL)납치	군·경	기타		계
				국내	해외	
피랍자	3,729	50	30	6	20	3,835
귀환자	송환	3,263	-	-	8	3,310
	탈북·귀환	8	-	-	-	8
미귀환자	458	11	30	6	12	517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협의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국군포로의 경우 이미 정전협정에 따른 포로교환으로 종료된 문제이고, 납북자는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며 협의 자체를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이산가족의 범주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일부 인원이 상봉행사를 통해 생사를 확인하고 만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거리가 먼 것으로 충분한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 인식하고 대북정책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였으며, 이산가족 범주 내의 접근이 아닌 송환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 같은 입장에 따라 2009년 8월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이에 대한 논의를 회피함에 따라 진전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남북적십자회담」 합의(2009.8.26.~28., 금강산)에 따라 2009년 9월 금강산에서 개최된 「2009년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과거와 같이 국군포로 10명, 납북자 12명의 생사확인을 의뢰하여 생존이 확인된 국군포로 1명과 납북자 2명이 우리 측 가족과 상봉하기도 하였다.

상봉행사 이후 2009년 10월 개성에서 열린 「남북적십자실무접촉」에서도

정부는 북한에 대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는 2010년 10월 열린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태도 전환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2010년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해 우리 정부가 요청한 국군포로 10명, 납북자 16명의 생사확인 의뢰에 대해 국군포로 1명의 사망을 확인해 주었을 뿐이다.

국군포로·납북자 상봉 현황(2000~2012년)

(단위 : 명)

구분	생사확인 의뢰수	생존확인	사망확인	확인불가·기타	상봉	상봉 가족수
전후납북자	120	17	22	81	16	18가족(81명)
국군포로	126	19	14	93	17	26가족(119명)
합 계	246	36	36	174	33	44가족(200명)

* 2012년은 9월 30일 기준

2.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

2007년 4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후납북자법’)이 제정되어 같은 해 10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1953.7.27.) 이후 발생한 납북자와 가족을 지원·보상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납북자가족에 대한 피해위로금과 탈북귀환 납북자에 대한 정착금, 국가공권력으로 인한 사망과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한 보상금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2007년 11월에 국무총리 소속의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

하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남북피해자 해당 여부, 피해위로금, 보상금 등의 지급 및 귀환납북자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납북자 문제 실태조사, 납북자가족의 권리침해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9인의 위원(대학교수, 법조인, 남북관계 전문가와 당연직 위원인 정부 고위공무원, 남북피해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위원회 심의사항을 사전에 분야별로 검토하도록 하기 위하여 「남북피해 조사 및 심사 분과위원회」와 「남북피해 산정 분과위원회」를 두었다.

「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남북피해자 신청 마감일(2010.10.27.)까지 납북자가족 피해위로금 428건, 귀환납북자 정착금 8건, 남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의 보상금 12건 등 총 448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다. 「심의위원회」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총 40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425건 145억 1,000만 원의 지급결정을 심의·의결하였다. 납북자가족 피해위로금으로 416가족에게 129억 1,400만 원(평균 3,100여만 원), 귀환납북자 정착금으로 8명에게 15억 2,800만 원(평균 1억 9,100만 원), 남북과 관련 국가공권력에 의한 사망·상이자 보상금으로 1명에게 6,800만 원이 지급되었다.

남북피해자 신청서 접수 현황

(단위 : 건)

피해위로금						정착금 주거지원금	보상금	합계
여부	KAL기	군·경	기타		소계			
			국내	해외				
377	11	20	8	12	428	8	12	448

*2010년 10월 27일 기준

남북피해자 피해위로금 등 지급결정 현황

(단위 : 건/천 원)

구분	신청(건)	지급결정(건)	지급액(천 원)
피해위로금	428	416	12,914,573
정착금·주거지원금	8	8	1,528,320
보상금	12	1	67,604
합계	448	425	14,510,497

*2011년 9월 30일 기준

또한 남북피해자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연말연시 또는 명절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생활이 어려운 남북자가족을 직접 방문하여 가족들의 아픔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로하였으며 생필품과 소정의 격려금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강원도 거주 남북자가족을 대상으로 사단법인 「사랑 담은 사람들」과 함께 동해시 동인병원에서 현지 의료지원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남북피해 가족 이동민원 현장



남북피해 지역 의료지원

정부는 2011년 4월 28일 <전후남북자법>을 개정하여 남북피해자의 친목도모와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단체에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1년 12월 26일 <남북자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을 제정하여, 범정부적인 남북자 대책기구로서 「남북자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남북자 대책위원회」는 통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국무총리실·국가정보원·경찰청 관계 공무원 및 대한적십자사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어, 납북자 문제 관련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현안 업무의 처리방향과 해결방안 등을 심의한다. 「납북자 대책위원회」는 2012년 9월 기준 2회 개최(2012.1.20., 6.1.)되었으며, 납북자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3. 6·25 전쟁 중 납북자

6·25 전쟁 중 북한은 부역동원, 의용군 총원 등을 위해 우리 민간인을 대규모로 납치하였다. 6·25 전쟁 납북자 수는 6·25 전쟁 초기인 1950년부터 1963년까지 6차례에 걸쳐 정부가 작성한 피랍치자 명부를 통해 추정되고 있으나, 작성 시기 및 작성 주체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발간 6·25 전쟁 중 납북자 명부에 의한 전시납북 피해규모

명부명	작성주체	시기	인원	존재여부
서울특별시 피해자 명부	공보처 통계국	1950년	2,438명	보존
6·25사변 피랍치자 명부	공보처 통계국	1952년	82,959명	보존
6·25사변 피랍치자	내무부 치안국	1952년	(126,325명)	유실
6·25사변 피랍치자 명부	공보처 통계국	1953년	(84,532명)	유실
6·25동란으로 인한 피랍치자 명부	내무부 치안국	1954년	17,940명	보존
실형사민 명부	국방부	1963년	11,700명	1권 보존
				2권 유실

6·25 전쟁 납북자 진상규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정부의 납북자 문제 해결 의지와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납북자 명예회복 법률’)의 입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0년 3월 26일 제정된 이 법률은 전시납북사건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 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유해송환 포함), 서신교환, 가족상봉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자국민 보호 의무를 재확인하고 있다.

납북자 관련 대통령 말씀 중

- 국군포로와 이산가족 문제, 납북자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군 포로와 이산가족 1세대는 이제 70~8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분들이 헤어졌던 가족들과 자유롭게 왕래하고,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는 열성을 다하겠습니다. (2008.6.6. 현충일 추념사)
-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을 성사시키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도 인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08.6.25. 참전용사 위로연)
- 국군포로와 이산가족 문제, 납북자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이분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남북한 모두의 윤리적 책무입니다. (2008.7.11. 18대 국회 개원연설)
- 북한 역시 국군포로나 이산가족, 납북자 문제 등에 대해 인도적 대응을 해야 정상적인 남북관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2008.10.8. 재향군인회 회장단 오찬)

정부는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납북자 명예회복 법률> 시행령을 제정(2010.9.27.)하였다. 2010년 9월 27일 법률 시행과 함께 사무국이 설치되고 같은 해 12월 13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통일부장관 등 정부위원 5명과 전문가 6명, 6·25 납북자가족 대표 3명 등 15명으로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납북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로써 정부 차원의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다. 「납북자 명예회복 위원회」는 정부, 전문가, 가족대표

등 9명의 소위원회(위원장 : 통일부차관)를 두고 있다. 이와 함께 각 시·도 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시·도 실무 「납북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구성되고, 2011년 1월 3일부터 전국 시·군·구 및 재외공관에 납북피해 신고 접수처가 설치되었다.

2012년 9월 기준 2,332건의 납북피해 신고가 접수되었다. 2011년 8월 2일 「납북자 명예회복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음으로 6·25 전쟁 민간인 55명이 납북자로 결정되었다. 이후 2012년 9월 말까지 743명이 6·25 전쟁 납북자로 인정되었다.

납북피해신고 접수 및 납북자 결정 현황

(단위 : 건/명)

연도	구분	피해신고 접수(건)	납북자 결정(명)
2011		1,034	272
2012		1,298	471
계		2,332	743

*2012년은 9월 30일 기준

정부는 전쟁 납북자가족들과 아픔을 함께하고, 오랜 시간의 경과로 전후 세대로부터 점점 잊혀 가는 6·25 전쟁 납북 피해를 널리 알림으로써 6·25 전쟁 납북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왔다. 또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신문, 방송, 인터넷 등 각종 언론매체와 버스, 지하철, 시장, 공원 등 다중 이용시설을 활용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납북자 명예회복 위원회」는 출범일인 2010년 12월 13일부터 4년간(최대 6년) 활동하며, 활동을 마친 후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률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제3절 대북 인도적 지원

1. 대북 인도적 지원의 경과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체제 및 자연재난 등을 이유로 최악의 식량난을 겪게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5년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식량 지원 등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동포애와 인도주의 차원에서 대북지원을 조건 없이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과 남북관계상황, 우리 정부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북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예산의 집행과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효율성 및 관리를 강화하고, 대북지원의 분배투명성 향상 등을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였다.

2009년 2월에는 남북협력기금 집행절차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하여 관계부처·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금지원 심사평가단」을 확대 구성하였고,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한 구매업무 서비스 지원 및 공개경쟁 활성화 추진 등 기금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9월에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인도적 협력사업에 대한 근거를 강화하였다.

올바른 남북관계를 정립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잇따른 강경조치와 지속적인 무력도발을 감행하였다.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등에 따른 「5·24 조치」 하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1995년부터 시작된 대북지원은 2012년 9월 기준 정부 차원에서 2조 3,482억 원(식량차관 포함), 민간 차원에서 8,662억 원 등 총 3조 2,114억 원을 지원하였다. 이 중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차원에서 긴급 수해물자, 신종플루 치료제, 보건의료 등 986억 원, 민간 차원에서는 자체재원을 통해 밀가루, 의약품, 생필품 등 1,454억 원 등 총 2,440억 원 규모의 인도적 물품을 북한에 지원하였다.

대북지원 현황

(단위 : 억 원)

연도 구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합계
정부 차원 (차관 포함)	1,854	24	240	154	339	2,035	975	2,650	2,607	2,672	3,147	2,273	3,488	438	294	204	65	23	23,482
민간 차원	2	12	182	275	223	387	782	576	766	1,558	779	709	909	725	377	200	131	69	8,662
총액	1,856	36	422	429	562	2,422	1,757	3,226	3,373	4,230	3,926	2,982	4,397	1,163	671	404	196	92	32,144

* 2012년은 9월 30일 기준

2. 당국 차원의 지원

이명박 정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한다는 방침에 따라 2008년 5월과 6월 두 차례 옥수수 5만 톤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북한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수용의사를 보이지 않았고, 결국 대북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지속적인 무력도발로 인하여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쌀·비료 지원 등 당국 차원의 대규모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9년 12월 초부터 일부 대북지원 민간단체를 통해 북한 내 신종플루 발생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긴급 지원을 추진하였다. 북한은 12월 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의주·평양에 확진 환자 발생을 보도하였고, 정부는 북한 내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히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2009년 12월 18일 112억 7,200만 원 규모의 타미플루 40만 명분, 리렌자 10만 명분과 2010년 2월 23일 손소독제 20만 리터를 각각 북한에 전달하였다.



신종플루 치료제 지원(2009.12.18.)



치료제 사용방법 설명(2009.12.18., 개성)

2010년 7월 북한에 내린 폭우로 신의주 및 황해도 지역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8월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대북 통지문을 통해 수해피해 지원을 제의하였다. 9월 4일 북한이 구호물자 수용의사를 밝힘에 따라 정부는 쌀 5,000톤, 컵라면 300만 개, 시멘트 1만 톤 등 86억 2,000만 원 규모의 수해지원 물자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2010년 9월 29일 남북협력기금 지원 의결을 거쳐, 10월 25일부터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인천항을 출발하여 중국 단둥항을 거쳐 북한의 신의주 지역에 지원물자를 전달하였다.

정부는 신의주 수해지원에 긴급구호성 지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투명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히 그동안 전용 논란이 있어 왔던 쌀의 경우 5kg 단위 소포장 방식을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포장지에 ‘대한민국 기증’, ‘대한적십자사’ 등 제공자를 표시하였다. 또한

신의주 지역에 직접 전달하여 인도·인수증을 접수하고 인도 후 북한에 분배역서 통보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로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시멘트 6,000여 톤은 전달되지 않았고, 긴급 수해복구 지원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으로 72억 원이 집행되었다.



신의주 수해피해 지원(2010.10.)

2011년 7월 정부는 북한 황해도 지역 등에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자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대북 통지문을 통해 50억 원 규모의 긴급구호 물품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표명했다. 그러나 북한의 수용의사가 없어 성사되지 못하였다.

2012년 9월에도 정부는 북한에 수해지원 의사를 전달하고,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밀가루 1만 톤, 라면 300만 개, 의약품 등 우선 지원 품목을 제시하였으나, 북한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정부 차원의 지원

① 식량 지원(무상지원+차관)

연도 구분	1995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10	계
지원 실적	국내쌀 15만 톤	외국산쌀 30만 톤 中 옥수수 20만 톤	국내쌀 40만 톤	국내쌀 40만 톤	국내쌀 10만 톤 외국산쌀 30만 톤	국내쌀 40만 톤 외국산쌀 10만 톤	국내쌀 10만 톤	국내쌀 15만 톤 외국산쌀 25만 톤	국내쌀 5천 톤	쌀(국내외) 265.5만 톤 中 옥수수 20만 톤
(억 원)	(1,854)	(1,057)	(1,510)	(1,510)	(1,359)	(1,787)	(394)	(1,505)	(40억 원)	(11,016억 원)
형태	무상	차관방식	차관방식	차관방식	차관방식	차관방식	무상	차관방식	무상	

② 긴급구호 지원

연도	구분	내역	지원액
2001		내의 150만 벌 지원	353만 달러(46억 원)
2004		용천재해(의약품, 구호세트)	74만 달러(9억 원)
2005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원	123만 달러(12억 원)
		수해복구(응급구호세트)	19만 달러(2억 원)
2006		수해복구(쌀, 자재장비 등)	8,003만 달러(800억 원)
2007		구제역(26억 원), 산림병해충(18억 원), 성홍열(4억 원)	505만 달러(48억 원)
		수해복구	4,452만 달러(423억 원)
2010		신종플루 지원	967만 달러(112억 원)
		수해복구	634만 달러(72억 원)
합계			15,130만 달러(1,524억 원)

*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2008.7.11.), 북한 핵실험(2009.5.25.), 천안함 폭침(2010.3.26.) 및 연평도 포격(2010.11.23.), 장거리 미사일 발사(2012.4.13.) 등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정부 차원 대북지원 감소

3.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은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고 대북지원의 활성화와 남북한 이질화를 해소함으로써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해 왔다. 이러한 지원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도 불구하고 민간 차원의 교류 방식의 하나로서 꾸준히 추진되었다.

정부는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매칭형태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00년부터 농업환경 개선, 보건의료 체계 복구,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중 일정요건을 갖춘 대북사업에 대해 사업의 성격·규모·분야·중요도·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또한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전 개별사업, 합동사업, 정책사업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던 사업유형을 2009년부터 개별사업과 정책사업으로 이원화하여 지원절차·사업내용 등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지난 정부에서는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총 61개 사업 810억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민간단체를 통해 지원해 왔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총 58개 사업에 179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북한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2차 핵실험,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무력도발로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로 인하여 우리 국민 신변안전의 최우선적 고려 등으로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렵게 되었고 남북협력기금 지원도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 개별사업

개별사업은 1개 단체 또는 여러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단년도 사업을 뜻한다. 정부는 2000년부터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에는 총 39개 사업에 111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다. 농업환경 분야에서는 옥수수 심기 협력사업, 사료공장 원료공급, 농업기술교육, 식량증산 농업개발사업, 친환경 순환농법, 아궁이 개량 및 주택난방 사업 등에 25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병원 현대화 사업, 의료장비 및 기자재 공급, 결핵퇴치 및 의약품 공급 등에 30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개선사업(국수, 빵, 콩우유, 영양식 등)과 어린이 교육용 기자재 등에 37억 5,900만 원을 지원하였다. 중장기적인 개발지원 분야에서도 농촌시범마을 조성

종합검진·검사센터 개설사업 등에 18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다.

2009년에는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취약계층의 열악한 생활을 고려하여 순수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지속한다는 원칙으로 보건의료 분야(개성병원·평양어린이병원 의약품·결핵병원 등 지원), 사회복지 분야(장애인 어린이 종합복지원·영양개선·영양제 원료 등 지원) 등 15개 사업에 34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다.



민간단체 물자지원 분배현장

(2) 정책사업

정책사업은 정부가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을 선정하여 전액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에 도입하여 4개 사업에 33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다. 2008년에 북한의 의료인력교육 사업(국외·현지 교육, 의료기기 수리 등), 제약공장 의약품 생산 협력사업(원료의약품 지원, 기술교육 등), 산림녹화 시범사업(양묘장 조성, 종자보관 관리시설, 산림병충해 방제, 시범조림 등), 결핵관리사업(결핵예방원 시설개 보수, 결핵 진단장비 등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해 43억 3,500만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결핵관리사업은 북한의 접근 불허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으며, 3개 사업에만 29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다.

2009년에는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로 인하여 기금지원이 지연되다가 12월 28일 산림녹화사업(산림병충해, 조림사업 묘목 지원), 어린이 영양사업(영양식, 생활용품, 기초의약품 등), 기초의약품 생산 및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Guanoxine Monophosphate, GMP) 교육사업 등 3개 사업에 60억 5,500만 원의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산림녹화사업으로 4억 2,100만 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하는 등 2년간 4개 정책사업으로 총 33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다. 이후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해 정책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사업 현황(2008~2009년)

(단위 : 백만 원)

구분 연도	사업유형	단체명	지원사업	지원액
2008	개별사업	경남통일농업협력회	공생산, 가공식품 지원	559
		국제옥수수재단	옥수수심기 협력사업	231
		굿네이버스인터내셔널	농축산 개발을 통한 어린이 영양식 지원사업	84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사료공장, 가축 항생제 대체제 지원사업	110
		남북함께살기운동	학교, 주택 개보수	206
		북고성군농업협력단	채소농장 지원사업	22
		새천년생명운동	아궁이 개량사업	141
		서비스포피스	주택 난방 지원사업	95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농업기술 지원사업	280
		월드비전	식량증산 농업개발사업	558
		통일연합종교포럼	주택 개보수 지원	38
		통일준비네트워크	친환경 순환농법 지원	224

구분 연도	사업유형	단체명	지원사업	지원액
2008		한국대학생선교회	염소목장 지원사업	39
		굿네이버스인터내셔널	어린이 건강 및 질병퇴치	74
		그린닥터스	개성협력병원 운영 지원	48
		나눔인터내셔널	질병퇴치, 아동성장 개선사업	308
		남북어린이어깨동무	어린이 보건의로 및 영양개선 사업	560
		샘복지재단	왕진가방, 의약품 지원	115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병원 현대화 사업	560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의약품 지원, 병원현대화 사업	210
		유진벨	결핵퇴치 및 병원 지원사업	560
		장미회	보건의로 지원사업	308
		한국건강관리협회	어린이보건 지원	64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락량섬김 인민병원 건립 및 운영 지원	210
		남북나눔	어린이 영양식 공급 및 성장발육사업	420
		남북나눔공동체	영유아 이유식 생산 지원	121
		등대복지회	취약계층 종합지원사업	560
		민족사랑나눔	어린이급식, 복지지원	247
		어린이재단	어린이 영양개선 및 건강증진 사업	560
		연탄나눔운동	난방 취사용 연탄 지원	285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어린이 급식지원사업	217
		원불교	어린이 급식 및 유아용품 지원사업	123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 기자재 지원사업	59
		천주교서울대교구	콩기름, 어린이영양제 원료 지원사업	305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어린이 교육용 제지 지원	157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함경북도 지역자립을 위한 복지 지원사업	145	

구분 연도	사업유형	단체명	지원사업	지원액	
2008		한국제이티에스	취약계층, 농업, 의료 지원	560	
		소 계	37개 사업	9,363	
	합동사업 (개별사업)	남북나눔	농민주택 신축, 유아원·탁아소·보건소 물품 지원	1,413	
		나눔인터내셔널	종합검진·검사센터 공사자재 및 의료장비 지원, 의료기술 전수	395	
		소 계	2개 사업	1,808	
	정책사업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의료인력 교육 지원	68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제약공장 의약품 생산 협력사업	1,000	
		겨레의 숲	양묘장 조성, 종자보관관리시설, 산림병충해, 시범조림	1,250	
		소 계	3개 사업	2,935	
	연도 계			42개 사업	14,106
	2009	개별사업	남북나눔	북한 어린이 영양식 공급 및 성장발육 지원	426
			등대복지회	북한 장애인 어린이 종합복지 지원	630
			민족사랑나눔	영양개선 및 복지 지원, 보건의료 지원	168
우리민족서로돕기			취약계층 식량 및 보건 의료 지원	540	
유진벨			결핵 퇴치 및 결핵병원 지원	254	
원불교			취약계층 지원	101	
천주교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어린이 영양제 생산 원료 지원	189	
한국건강관리협회			어린이 보건지원사업	62	
한국제이티에스			취약계층 식량 및 보건 의료 지원	171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평양어린이병원 의약품 및 의료용품 지원	101	
그린닥터스			개성 협력병원을 통한 대북의료 지원	66	
남북어린이어깨동무			북한 어린이 보건의료 및 영양개선	281	
나눔인터내셔널			북한 주민 질병퇴치	75	
어린이재단			북한 어린이 건강 증진	204	

구분 연도	사업유형	단체명	지원사업	지원액
2009		장미회	북한 주민 간질치료 지원	134
		소 계	15개 사업	3,402
	정책사업	겨레의 숲	산림병해충 방제, 조림사업 모둠 지원 등	421
		소 계	1개 사업	421
연도 계			16개 사업	3,823
총 계			58개 사업	17,929

*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2008.7.11.), 북한 핵실험(2009.5.25.), 천안함 폭침(2010.3.26.) 및 연평도 포격(2010.11.23.), 장거리 미사일 발사(2012.4.13.) 등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정부 차원 대북지원 감소

한편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초기 긴급구호, 일회성 물품지원에서 북한 주민들의 자립·자활 능력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농업개발·생활환경 개선 등 개발지원성 사업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등으로 인하여 대북지원 환경은 다소 위축되었으나,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끊이지 않고 지속되었다. 지원품목도 병원·제약공장 시설 기자재, 의료기기, 농업용 기자재,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그러나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조치」로 대북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류되었다. 그러나 「5·24 조치」 내에서도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은 사업목적, 수혜대상, 분배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자 반출을 허용해 왔다. 북한의 수해에 따른 당국 차원의 긴급 구호물자 지원을 진행하는 도중에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도 일시 중단되었다.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은 지속한다.’라는 우리 정부 방침에 따라, 전용 우려가 적고 투명성 확보가 가능한 물자를 중심으로 2011년 3월 말부터 재개하였다. 물자 반출 및 방북도 단계적으로 확대

해 나갔다.

「5·24 조치」 이후 민간 차원에서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의약품, 의료장비, 백신 등 총 218건 288억 원 규모(2012년 9월 기준)의 인도적 물자를 지원하였다. 2008년부터 2012년 9월까지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액은 총 1,454억 원이다.

4.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2008년 말라리아 방역사업과 영유아 지원사업으로 북한에 1,147만 달러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였다. 2009년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4.5.)에도 불구하고 말라리아 확산을 방지하고, 남북 접경지역 주민들의 보건증진을 위하여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모기장 6만 장, 치료제 10만 명분, 예방약 180만 명분 등 1,409만 달러의 구호물자를 전달하였다.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을 통하여 영유아 영양개선과 백신 등 지원으로 2008년 408만 달러, 2009년 398만 달러 등 2년간 806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2010년에는 천안함 폭침 등 잇따른 북한의 무력도발에 따른 남북관계 상황 악화와 「5·24 조치」 유지로 국제기구를 통한 신규 지원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은 지속한다는 방침에 따라 2011년 12월 5일 분배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백신 및 기초의약품 지원사업과 영양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으로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을 통해 565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또한 정부는 빈곤과 기아로 고통 받고 있는 아동들의 감염성 질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국내에

설립된 국제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IVI)를 통하여 2008년 의료장비 및 진단 시약, 2009년 의료인력 교육지원 등으로 2년간 49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또한 2012년 북한 어린이 백신지원 및 백신능력 강화 사업으로 21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이렇게 2008년부터 2012년 9월까지 국제기구(WHO, UNICEF, IVI)를 통해서 4,195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내역

❖ 세계보건기구(WHO) : 말라리아·영유아·긴급의료 지원

구분 연도	내역	지원액
1997	의료기자재 등	70만 달러(6.3억 원)
2001	말라리아 방역	46만 달러(6억 원)
2002	말라리아 방역	59만 달러(8억 원)
2003	말라리아 방역	66만 달러(8억 원)
2004	말라리아 방역, 용천 구호세트	87만 달러(10억 원)
2005	말라리아 방역	81만 달러(9억 원)
2006	말라리아 방역(100만 달러), 영유아 지원(1,067만 달러)	1,167만 달러(116억 원)
2007	말라리아 방역(138만 달러), 영유아 지원(938만 달러), 홍역 지원(105만 달러)	1,181만 달러(111.8억 원)
2008	말라리아 방역(120만 달러), 영유아 지원(1,027만 달러)	1,147만 달러(148억 원)
2009	말라리아 방역(107만 달러), 영유아 지원(1,311만 달러)	1,418만 달러(166.5억 원)
계		5,322만 달러(589.6억 원)

❖ 국제연합아동기구(UNICEF) : 취약계층·영유아 지원

구분 연도	내역	지원액
1996	분유 203톤	100만 달러(8억 원)
1997	경구재수화염(ORS)공장, 분유 781톤	394만 달러(35.4억 원)

구분 연도	내역	지원액
2003	취약계층 지원	50만 달러(6억 원)
2004	취약계층 지원	100만 달러(12억 원)
2005	취약계층 지원	100만 달러(10억 원)
2006	영유아 지원(백신, 영양)	230만 달러(23억 원)
2007	영유아 지원(백신, 영양)	315만 달러(29억 원)
2008	영유아 지원(백신, 영양)	408만 달러(47억 원)
2009	영유아 지원(백신, 보건, 영양)	398만 달러(36.6억 원)
2011	영유아 지원(백신, 보건, 영양)	565만 달러(65.3억 원)
계		2,660만 달러(337.6억 원)

❖ 기타 국제기구 : 기상자재, 농업 등

구분 연도	국제기구	내역	지원액
1996	세계기상기구(WMO)	기상장비	5만 달러(0.4억 원)
1997	유엔개발계획(UNDP)	수해복구 장비	120만 달러(11억 원)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영농자재	30만 달러(3억 원)
2007	국제백신연구소(IVI)	백신, 의료교육	50만 달러(4.6억 원)
2008	국제백신연구소(IVI)	의료장비 및 시약 지원	49만 달러(7억 원)
2012	국제백신연구소(IVI)	백신, 의료교육	210만 달러(23억 원)
계			464만 달러(49억 원)

*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2008.7.11.), 북한 핵실험(2009.5.25.), 천안함 폭침(2010.3.26.) 및 연평도 포격(2010.11.23.), 장거리 미사일 발사(2012.4.13.) 등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정부 차원 대북지원 감소

제4절 북한인권

1. 북한인권의 경과

국제사회와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 당국에 인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2011년 5월에 북한인권 실태에 대해 결사·표현·이동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되고, 자의적 구금 및 고문·강제노동·각종 부당한 대우로 인한 수감자들의 사망과 처형이 이루어지는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미국 국무부의 「2010 국가별 인권보고서」(2011.4.8.)에 따르면 북한에서 정보 흐름, 적법 절차, 언론·표현의 자유 등 인권적 가치가 유린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2011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는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3등급 국가로 재지정(2011.6.27.)하였고, 미국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북한을 40년 연속 ‘최악 중 최악’의 인권탄압국으로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재차 분류(2012.6.27.)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 인권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확한 실태파악과 더불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엔 등 국제사회 및 국내외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중국의 강제송환에 대해서는 민족의 문제를 떠나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로 보고 국제 및 시민사회와 함께 대응하고 있다. 유엔이 1951년 제네바에서 채택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제33조에 따르면 ‘난

민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984년 제39회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1987년 발효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제3조에는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로 추방·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미국 의회 산하 중국위원회는 2012년 3월 1일 북한이탈주민들의 강제 송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긴급청문회를 연 이후 미국 의회(상·하원)가 미국 행정부에게 중국의 북한이탈주민들의 강제 북한 송환에 대해 제동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의결(8.6. 상원)하였으며, 8월 16일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였다.

국내에서는 국회의원과 함께 연예인, 기독교 단체, 인권단체 등 시민단체들이 전국 각 도시에서 북한이탈주민 강제 송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2. 국제사회와의 협력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유감 표명 및 북한 당국에 대해 개선조치 촉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매년 채택하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에 걸쳐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2006년 「유엔 인권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유엔 인권이사회」도 2008년부터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2012년 3월 「제19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최초로 무투표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여 북한 인권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인권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 「제63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시 처음으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여 찬성입장을 표명하였다. 이후 2009년 3월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 11월 「제64차 유엔 총회」, 2010년 3월 「제13차 유엔 인권이사회」, 11월 「제65차 유엔 총회」, 2011년 3월 「제16차 유엔 인권이사회」, 11월 「제66차 유엔 총회」, 2012년 3월 「제19차 유엔 인권이사회」 등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 정부는 총 8번에 걸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였다.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 결과 및 우리 정부입장

구분	유엔 인권이사회				
연도	2008(7차)	2009(10차)	2010(13차)	2011(16차)	2012(19차)
표결 결과 (찬:반:기권)	22:7:18	26:6:15	28:5:13	30:3:11	무투표
우리 입장	찬성	공동제안찬성	공동제안 찬성	공동제안 찬성	공동제안 찬성

구분	유엔 총회						
연도	2005(60차)	2006(61차)	2007(62차)	2008(63차)	2009(64차)	2010(65차)	2011(66차)
표결 결과 (찬:반:기권)	84:22:62	91:21:60	97:23:60	95:24:62	97:19:65	103:18:60	112:16:55
우리 입장	기권	찬성	기권	공동제안 찬성	공동제안 찬성	공동제안 찬성	공동제안 찬성

2010년 11월 「제65차 유엔 총회」는 북한의 공개처형, 정치 및 종교적 이유로 인한 사형, 표현의 자유 제한, 망명 신청자 및 난민 박해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규모 확대 및 정례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011년 3월 「제1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의 중대하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접근 지원 보장과 적절한 모니터링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2011년 11월 「제66차 유엔 총회」는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중단된 점을 우려하며, 북한이탈주민 강제 송환과 관련하여 인권보호를 강력히 촉구하고,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성폭력 및 이에 대한 처벌이 없는 것을 우려하는 등 전년에 비하여 강화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2012년 3월 「제1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이 국가정책에 의해 악화되고 있으며, 유엔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이에 협조하고 있지 않다.”라고 유감을 표명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3. 시민사회와의 협력

정부는 (사)북한인권정보센터와 협력하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북한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는 (사)북한인권정보센터가 1996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북한인권백서》(국·영문)에 반영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민간단체가 개최하는 북한인권 관련 학술행사와 자료발간, 이들 단체나 전문가가 국제회의를 개최하거나 참가하는 활동을 지원하였다.

2012년 9월 기준 통일부 등록 북한인권 관련 단체는 23개로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활동영역도 인권 교육 활동과 전시회, 공연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국민적 관심

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4. 북한인권법 동향

2009년 국회에서는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2008년에 발의된 4건의 의원발의 법안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2008년 7월 4일에 황우여 의원 등 23명이 <북한인권법안>, 7월 21일에 황진하 의원 등 25명이 <북한인권증진법안>, 11월 11일에는 홍일표 의원 등 10명이 <북한인권 재단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12월 26일에는 윤상현 의원 등 20명이 <북한인권법안>을 제의하였다. <북한인권법안>(황우여 안)과 <북한인권증진법안>(황진하 안)은 2008년 11월 17일에, 그리고 <북한인권 재단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홍일표 안)과 <북한인권법안>(윤상현 안)은 2009년 2월 19일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되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안> 제정을 지원하고 정부의 의견을 통일하기 위하여 각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2008년 7월부터 9월까지 <북한인권법안> 제정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간담회를 주최하였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였다.

2009년 2월 23일에 개최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윤상현 의원안을 중심으로 토론하였으며 법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4월 14일에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주관의 공청회가 개최되어 활발하게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7월 7일에 개최된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4건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통합하여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2010년 2월 11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동 조정안을 상임위원회 대안으로 의결

하였으며, 4월 19일 법제 사법위원회에 상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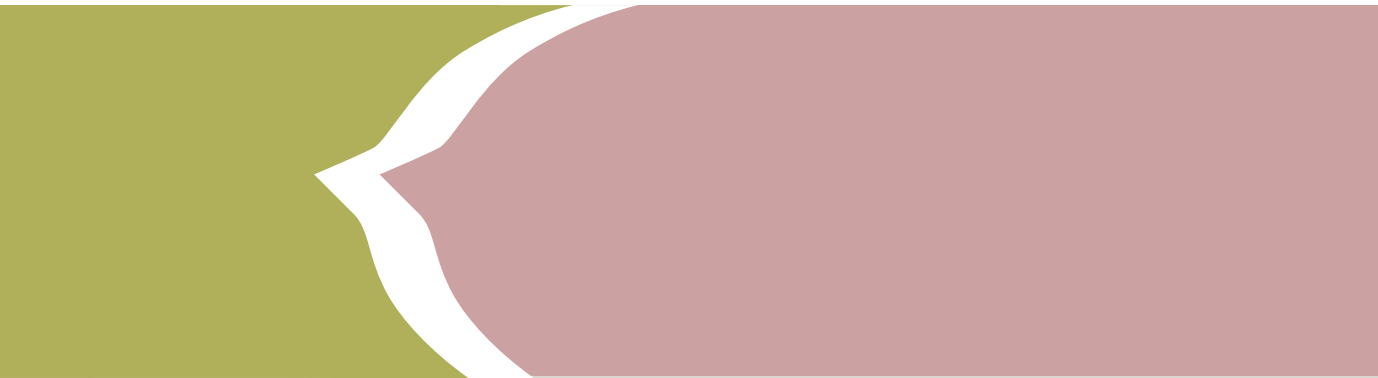
그 이후 법무부에 「북한인권 기록보존 담당기구」를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정된 안을 2011년 6월 28일 법제 사법위원회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다. 동 법안은 ‘북한인권 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계획 수립·시행’,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증진활동에 협의·협력하기 위한 ‘북한인권 대외직명 대사’ 설치,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원칙’, ‘북한인권 실태조사 및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위한 「북한인권 재단」 설치, 북한인권 침해사례 조사, 자료 수집·기록·보존을 위한 「북한인권 기록보존 담당기구」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2011년 6월 14일 김동철 의원 등 15명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증진과 인도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민생인권법안>을 발의하여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하였다. 동 법안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이전보다 강조한 것으로서, 북한 주민 인권증진과 인도적 지원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한 인도주의 자문위원회 설치,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에 관한 사항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보호 및 생활 지원 등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보존·발간 등을 담당하기 위한 인도주의 정보센터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1년 10월 14일 여야 원내대표는 여야 간의 입장 차이를 해소하고 <북한인권법안> 및 <북한민생인권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안처리 6인 소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동 법안들은 18대 국회 임기만으로 폐기되었다.

19대 국회 출범 직후인 2012년 6월 1일 윤상현 의원 등 11명이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하였고, 6월 15일 황진하 의원 등 20명이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하였다. 두 법안은 ‘북한인권 자문위원회’ 설치, ‘북한인권 기본계획’ 수립, ‘북한인권 대외직명 대사’ 신설, ‘북한인권 재단’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18대 국회에서 심의하던 대안과 거의 같으나, 윤상현 의원안은 「북한인권 재단」 내에 「북한인권 기록보존소」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하

고, 황진하 의원안은 법무부에 「북한인권 기록보존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약간의 차이가 있다.



M I N I S T R Y O F U N I F I C A T I O N

제 5 장

남북대화

제1절 정치·군사 분야

제2절 경제 분야

제3절 사회·문화 및 인도 분야

제4절 판문점 남북연락 업무

제5장 남북대화

이명박 정부는 남북 간 모든 현안을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를 추진하였다. 언제, 어디서, 어떠한 수준에서든 만나서 문제를 대화로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을 토대로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제의하였다. 이명박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북대화를 제의하였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강경조치를 지속하면서 남북관계를 악화시켰다. 특히 2010년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라는 대남 무력도발을 감행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한편 북한은 대남도발과 위협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근본적인 태도 변화 없이 과거 방식의 남북관계만을 고집하였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현안을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을 토대로 남북대화의 여건을 만들어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남북대화 개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총 16차례의 남북회담이 개최되었다. 특히 2011년 2월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군사회담을 열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부인하고, 연평도 포격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는 등 기존 주장만을 되풀이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이후 북한은 2012년에 두 차례에 걸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4.13., 12.12.)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악의적인 비난과 위협을 계속하는 등 남북대화의 여건을 악화시켰다.

제1절 정치·군사 분야

1. 북한 조문단 방문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비방·중상을 지속하면서 대남 강경조치와 도발을 지속하였다. 특히 2008년 12월 육로통행 제한 조치(「12·1 조치」) 이후 2009년 들어서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1.17.) 등을 통해 ‘전면대결태세’에 진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그리고 육로통행 중단(3.9.~3.20.까지 세 차례),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강경도발을 연이어 감행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2009년 하반기부터 기존의 강경태도에서 한발 물러서, 전술적 측면에서의 유화조치를 전개하였다. 북한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國葬)에 「특사조의방문단」(이하 ‘북한 조문단’)을 보내면서 일방적으로 단절시켰던 관문점 적십자 연락채널을 복원하고 육로통행 제한 조치를 정상화(8.21.)하였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과 관련 북한 조문단은 2009년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였다. 북한 조문단은 김기남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단장으로 김양건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부장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었다.

북한 조문단 명단

성명	직위	비고
김기남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단장
김양건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부장	
원동연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실장	
맹경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이 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김은주	국방위원회 기술일꾼	

< 북한 조문단 주요 일정 >

- 2009.8.21. : 서울 도착 → 빈소 조문(국회) → 국회의장 면담 → 김대중 평화센터 방문(이희호 여사 면담)
- 2009.8.22. : 민주당 대표 면담 → 통일부장관 면담
- 2009.8.23. : 이명박 대통령 예방 → 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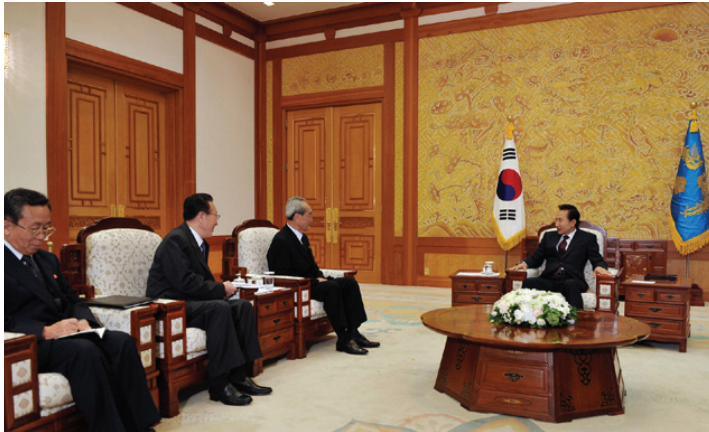
2009년 8월 21일 서울에 도착한 북한 조문단은 먼저 국회에 마련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빈소를 조문하였다. 빈소 조문을 마친 조문단은 국회의장과 면담을 가졌다. 국회의장은 조문에 대해 사의를 전하는 한편 남북 상생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기남 비서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에 애도의 뜻을 전하였다. 이어 북한 조문단은 「김대중 평화센터」를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 명의로 된 서한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망인 이희호 여사에게 전달하였다.

8월 22일에는 당시 현인택 통일부장관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간의 면담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남북 고위당국자 간 접촉이 있던 이 자리에서 양측은 남북관계 상호관심사에 대하여 폭넓은 논의를 하였다.

8월 23일에는 북한 조문단이 청와대를 예방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조문단을 접견하였다. 이 자리에는 북한의 김기남 노동당비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원동연 아태실장이 참석하였고, 우리 측에서는 통일부장관,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등이 배석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대북원칙을 설명하면서 이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남과 북이 어떤 문제든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 나간다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명박 대통령 예방을 마친 북한 조문단은 8월 23일 오후 북한으로 귀환하였다.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을 책임지는 통일부장관과 국정의 최고책임자

인 대통령이 북한 조문단에게 직접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새로운 남북관계에 대한 의지를 전달한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북한 조문단 접견(2009.8.23.)

2. 남북군사실무회담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군사 분야 남북대화는 총 3차례 개최되었다. 정부는 남북군사실무회담을 통해 북한의 강경조치와 무력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원칙을 분명하게 전달하였다. 2008년 7월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북한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였다.

(1) 제37차 남북군사실무회담

북한은 2008년 9월 25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남북군사 당국 사이의 합

의 이행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시급히 논의하기 위해 남북군사실무회담을 9월 30일에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내부일정을 감안하여 남북군사실무회담을 2008년 10월 2일에 개최할 것을 수정 제의하였고, 북한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제37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이 10월 2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우리 측에서는 이상철 수석대표(국방부 대령) 외 2명, 북한측에서는 박림수 단장(북한군 대좌) 외 2명이 참석하였다.

북한측은 기본발언을 통해 우리 민간단체에 의한 대북 전단살포가 남북 간 합의위반이라면서, 이에 대해 사과와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전단살포 행위가 계속될 경우 개성공단사업과 개성 관광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군사분계선을 통한 우리 측 인원의 통행과 개성 및 금강산지구 내 우리 측 인원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협박하였다.

우리 측은 기초발언에서 남북관계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첫째,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하여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며 비방을 하는 것은 '상호 비방·중상을 하지 않기로 한 남북 간 합의'에 어긋나는 것이며, 상대방에 대한 신의를 훼손하는 유감스러운 일임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였다. 둘째,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협의·해결하자는 입장에서, 남북 간 현안을 풀기 위한 모든 수준의 대화가 전면적으로 재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셋째, 북한 군인의 총격으로 금강산 관광객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남북 당국 간 협의를 통하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신변안전보장 대책 등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넷째, 개성 관광객과 개성공단 사업자들이 남북관리구역 출입·통행에 있어 불편과 애로를 겪고 있음을 설명하고, 북한측이 적극적인 조치를 통하여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우리 측은 북한측이 주장하는 전단살포 문제와 관련하여,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합의한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

활동 중지'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음을 재확인한 후, 다만 우리 사회체제의 특성상 비무장지대 밖에서의 민간단체의 행위를 완전히 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측이 전단살포 문제를 개성공단사업 및 개성·금강산 관광 등과 연계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였다.

북한측은 우리 측이 제기한 '대통령 비난 중지 문제'와 '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발생원인과 책임이 오히려 우리 측에 있다고 역지 주장하였다. 남북관리구역 통행불편해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측이 먼저 해야 할 바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쌍방은 회담에서 제기된 제반 사안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교환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 없이 회담을 종료하였다.

(2) 제38차 남북군사실무회담

2010년 「제38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6개월여 만인 9월 30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우리 측에서는 문상균 수석대표(국방부 대령) 외 2명, 북한측에서는 이선권 단장(북한군 대좌) 외 2명이 참가하였다.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우리 측은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천안함 폭침 사건의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오히려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파견하여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통지문(2010.9.15.)을 통해 '군사적 합의 이행과 관련한 현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군사실무회담을 9월 24일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우리 측은 남북군사실무회담을 통해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추궁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는 입장에 2010년 9월 30일에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할 것을 수정 제의하였고, 이를 북한이 수용함에

따라 「제38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이 9월 30일 개최되었다.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우리 측은 먼저 천안함 폭침 사건이 객관적·과학적인 조사를 통하여 북한측의 소행임이 명확하게 규명되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인 및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우리 측 해역에 대한 북한측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적 도발 행위, 우리 당국에 대한 비방·증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북한측은 우리 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살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우리 해군함정들이 자신들의 해상경비계선을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북 전단살포 및 해상경비계선 침범에 대해 우리 측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남북관계의 전도가 좌우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 측이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해 북한측은 우리 측의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국방위원회 검열단 파견을 수용하라’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였다. 또한 북한측은 우리 측이 대북 심리전 및 전단살포 문제를 중단할 수 있으면서도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우리 측은 북한측이 제기하는 전단살포 문제는 그동안 북한측에 충분히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음을 설명하였고, 우리 함정들의 북한측 해상경비계선 침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함정들이 우리 해역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우리 측은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하게 촉구하였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국방위 검열단」을 수용하라는 억지 주장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회담이 종료되었다.

(3) 제39차 남북군사실무회담

북한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하고도 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오히려 우리 측에 책임을 전가하였다. 그러나 2011

년에 들어서자 북한은 국면전환을 위하여 남북대화를 연이어 제의해 왔다. 2011년 1월 5일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을 통하여 우리 당국을 포함한 정당·단체들과의 대화와 협상을 제의하고, 1월 8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하여 남북 당국 간 대화를 무조건 조속히 개최하자고 주장하면서 「적십자회담」, 「금강산관광재개회담」, 「개성공업지구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정부는 북한의 대화공세에 대해 2011년 1월 10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 측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선 북한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우리 국민의 희생을 초래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제지원과 원조를 위한 회담만을 제의하고 있는 바,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위장 평화공세이자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상투적 전술의 일환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남북 간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이를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제의하였다. 북한이 제안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려면, 위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남북 당국 간 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2011년 1월 20일 인민무력부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북남고위급군사회담」과 이를 위한 예비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우리 측은 남북고위급군사회담 의제와 예비회담 일정을 수정 제의하고, 남북 간 협의를 거쳐 「제39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을 2월 8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초 회담은 2월 8일 하루만 갖기로 하였으나, 협의가 길어짐에 따라 2월 9일까지 진행되었다. 우리 측에서는 문상균 수석대표(국방부 대령) 외 2명, 북한측에서는 이선권 단장(북한군 대좌) 외 2명이 참가하였다.

우리 측은 「남북고위급군사회담」 의제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하여'를 제기하였으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북한측의 책임 있는 조치와 추가도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만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북한측은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쌍방 군부 사이의 상호 도발로 간주될 수 있는 군사적 행동을 중지할 데 대하여'를 의제로 제기하면서,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만을 다루고자 하는 것은 남북고위급군사회담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강변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남북고위급군사회담에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문제에 대하여 책임 있는 결과가 도출되면, 북한측이 제기한 문제를 포함한 상호 관심 사안을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석대표 수준과 관련하여 우리 측은 '국방부장관과 인민무력부장 혹은 합참의장과 총참모장'으로 제기하였고, 북한측은 차관급인 '인민무력부 부부장 혹은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으로 제기하였다.

우리 측은 「남북고위급군사회담」 의제와 수석대표 수준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북한측이 제기하는 의제도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에 대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면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회담 2일차 오후 회의에서 우리 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고 비난하면서, 갑자기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북한측 입장을 밝히고 회담장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하였다. 북한측은 천안함 폭침 사건은 철저하게 자신들과 무관한 사건이라고 강변하면서 '미국의 조종하에 남측의 대북대결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특대형 모략극'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연평도 포격은 우리 측이 '연평도를 도발의 근원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였다.

우리 측은 「남북고위급군사회담」에서 북한측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밝히겠다는 내용이 명백히 드러났다'는 점을 지적하고, '동쪽의 머리 위에 포탄을 발사해 민간인이 사망하고 막대한 재산피해를 발생케 해놓고 도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하였다.

쌍방은 「남북고위급군사회담」 개최를 위해 이틀 동안 실무회담을 진행하였으나, 북한측이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억지 주장을 하면서 회담장에서 철수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남북고위급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은 북한의 전방위적인 대화 공세에 대해, 우리 정부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개최될 수 있었으며, 우리 측은 회담 전(全)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강조하였다.



제39차 남북군사실무회담(2011.2.8.~2.9.)

제2절 경제 분야

이명박 정부 들어서 경제 분야 남북대화는 개성공단, 금강산·개성 관광,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실무회담 등 총 7차례가 개최되었다.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4차례의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통하여 ‘규범확립’, ‘경제원리 추구’, ‘신변안전 보장’ 등 「개성공단 발전 3원칙」 제시와 억류된 근로자의 조속한 석방을 추진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였다. 정부는 금강산·개성 관광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통해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신변안전보장’ 등 「관광재개 3대 조건」을 일관되게 요구하였다.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을 통해서도 임진강 사고에 대한 북한의 유감 및 조의 표명을 관철시켰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는 경제 분야에서도 분야별 원칙에 입각한 남북 대화를 추진하여 정상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1.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1) 4·21 접촉

북한의 당국 간 접촉 제의를 우리 측이 수용함에 따라 2009년 4월 21일 개성 「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성공단 관련 당국 간 접촉이 진행되었다. 우리 측에서는 김영탁 수석대표(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 단장) 외 2명, 북한측에서는 박철수 단장(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외 2명이 참가하였다.

이에 앞서 북한은 2009년 3월 30일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우리 측 근로자를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중이라는 통지문을 우리 측에 전달하였다. 이에 우리 측은 관련 조사내용과 경과에 대해 상세히 밝힐 것과 우리 측 근로자에 대한 접견권 등의 보장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북한은 계속 불응으로 일관하였다.

근로자 억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09년 4월 16일 북한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명의로 개성공단사업과 관련한 중대 문제를 통지할 것이라면서, 우리 측 당국과의 접촉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보내왔다. 우리 측은 북한의 접촉 제의 절차와 형식이 부적절함에도 우리 측 근로자 억류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를 수용하였다.

우리 측은 북한이 2009년 3월 30일부터 우리 측 근로자를 억류하고 있는 것은 남북 간의 합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신병인도를 요구하였다. 또한 2009년 1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남북합의 무효화 선언’ 등 남북 간에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는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북한이 2008년 12월 1일부터 일방적으로 취하고 있는 출입·체류 제한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우리 국가원수에 대한 중상·비방 등 대남 비난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북한측은 개성공단에서 우리 측에게 부여했던 모든 제도적 특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하면서 토지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토지임대료 유예기간도 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기존 계약 재검토를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며, 우리 측에게 이 협상에 성실히 응해 나올 것을 주장하였다.

「4·21 접촉」에서는 의제에 대한 실질적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남북 간 주요 현안에 대해서 우리 측의 기본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였고, 개성공단사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북한의 의지를 확인하였다.

(2)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제1차 실무회담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제1차 실무회담」이 2009년 6월 11일 개성 「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에서 진행되었다. 우리 측에서는 김영탁 수석대표(통일부 상근회담대표) 외 2명, 북한측에서는 박철수 단장(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외 4명이 참가하였다.

우리 측은 억류 근로자 문제, 출입·체류 제한조치 철회 문제,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제반 현안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특히 장기간 억류 중인 근로자 문제는 개성공단의 본질적인 사안인 만큼 억류 근로자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면서, 억류 근로자의 소재 및 건강상태 확인과 우리 측 대표단과의 접견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한편 북한측이 주장한 개성공단 법규 및 기존 계약 등에 대한 재검토 문제는 계약 당사자와 이에 영향을 받는 개발사업자 및 입주기업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북한측은 억류 근로자 문제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면서 토지임대료, 근로자 임금 등에 대한 문제부터 협의해 나갈 것을 주장하였다. 토지임대료는 개성공단 1단계 부지 330만㎡에 대하여 5억 달러로 조정하고, 근로자 임금은 월 300달러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근로자 숙소와 탁아소, 근로자 출·퇴근을 위한 진입도로 건설 등을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며, 노동환경 개선과 용수시설의 안정적 관리운영 대책도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우리 측은 억류 근로자에 대한 접견 및 신변안전 여부 등의 확인을 거듭해서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북한측은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할 뿐 우리 측의 요구에 계속 불응하였다. 또한 우리 측의 출입·체류 제한조치 철회 요구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사업을 위하여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새로 입주한 기업들의 출입·체류 인원을 이미 가동하고 있는 기업들의 수준에서 추가로 보장해 줄 용의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북한측이

추가로 제기한 근로자 숙소 건설 등에 대해서 우리 측은 억류 근로자 석방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대응하였다.

남북은 이견을 보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2009년 6월 19일에 차기 회담을 개최하여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3)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제2차 실무회담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제2차 실무회담」이 2009년 6월 19일 개성 「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에서 진행되었다. 우리 측에서는 김영탁 수석대표(통일부 상근회담대표) 외 2명, 북한측에서는 박철수 단장(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외 4명이 참가하였다.

우리 측은 장기간 억류되어 있는 근로자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에 개성공단의 안정적 유지·발전을 위한 당면 현안을 협의·해결한다는 '실질적 접근'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 측은 최우선 과제로 억류 근로자의 조속한 석방 및 우리 대표단과의 접견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억류 근로자 가족이 근로자에게 보내는 안부서신과 북한 당국의 접견을 요구하는 서신 등 두 건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 측은 그동안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립한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3대 원칙」(이하 '3대 원칙')을 북한측에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개성공단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3대 원칙

1. 규범 확립 원칙 : 남북 간 합의와 계약, 법규와 제도를 철저히 준수
2. 경제 원리 추구 원칙 : 정치·군사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경제 원리에 따라 발전을 추구
3. 미래지향적 발전 원칙 : 국제 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킨다는 미래지향적 관점과 의지 지향

특히 남북 간 합의와 계약, 법규와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는 규범 확립 원칙에 따라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토지임대료 등의 재협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개성공단 현안과 관련해서 우리 측은 구체적으로 출입·체류 제한조치의 철회,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의 해결, 「남북출입체류공동위원회」의 구성·가동 등을 제의하였다. 한편 탁아소 건설 등 북한측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출입·체류 제한조치 철회 등과 함께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아울러 중국·베트남 등의 해외공단을 남북이 공동으로 시찰하자고 제의하였다. 이는 성공적으로 개발·운영되고 있는 해외공단을 남북이 공동 시찰함으로써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남북 간 이견을 줄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북한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후 토지임대료를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억류 중인 우리 측 근로자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조사 중에 있으며, 동 합의서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만을 반복하였다. 우리 측의 서신전달 요구에 대해서는 접수를 거부하면서도 “별일 없다고 가족에게 전해 달라.”라고 답변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측은 입주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차원에서 육로통행 및 출입·체류 제한조치를 철회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북한측은 토지임대료 등 기존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기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우리 측 제기사안에 대하여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남북은 차기회담을 2009년 7월 2일 개성 「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4)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제3차 실무회담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제3차 실무회담」이 2009년 7월 2일 개성 「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에서 진행되었다. 우리 측에서는 김영탁 수석대표(통일부 상근회담대표) 외 2명, 북한측에서는 박철수 단장(중앙특구개발

지도총국 부총국장) 외 4명이 참가하였다.

우리 측은 먼저 억류 중인 우리 측 근로자의 소재와 건강상태를 즉시 알려줄 것과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개성공단발전을 위한 3대 원칙」을 재강조하고, 「3대 원칙」하에 개성공단 관련 현안을 협의해 나가자고 제의하였다. 우리 측은 지난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제기한 출입·체류 제한조치의 철회, 3통 문제의 개선, 출입·체류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문제를 협의·해결하자고 다시 한 번 제의하였다. 또한 우리 측은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을 7월 20일부터 진행할 것을 구체적 일정과 함께 제의하였고, 인도적 견지에서 탁아소 건설 문제를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면서 우리 측에 대한 비방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우리 측은 보다 효과적으로 개성공단 문제들을 협의·해결해 나가기 위해, 개성공단 전반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실무 본회담」과 당면 현안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실무 소회담」으로 나누어 회담을 운영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북한측은 억류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으면서, 개성공단 현안과 관련해서는 토지임대료 5억 달러 문제를 우선 협의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우리 측은 북한측에 토지임대료 인상 요구는 근거가 없는 무리한 주장으로 즉각 철회할 것과 개성공단 관련 실질 현안 협의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결국 남북은 상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차기 회담 일정에 대한 합의 없이 회담을 종료하였다.

(5)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 평가회의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 평가회의」가 2010년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개성 「남북교류협력협약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우리 측에서는 김영탁 수석대표(통일부 상근회담대표) 외 7명, 북한측에서는 박철수 단장(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외 9명이 참가하였다.

남북은 2009년 12월 12일부터 22일까지 공동으로 실시했던 중국·베트남 공단의 시찰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개성공단의 발전방향과 공동 해결과제

를 도출하는 문제 등에 관해 토의하였다.

우리 측은 평가회의를 통해 개성공단 현안에 대하여 상호 이견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또한 차기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3통 문제와 숙소 문제를 의제로 하여 2010년 2월 1일에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차기 실무회담에서 3통 문제와 숙소 문제 이외에 개성공단 북한측 근로자의 임금인상 문제가 반드시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 평가회의(2010.1.19.)

남북 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차기 실무회담 개최 문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듯 보였으나, 북한측은 우리 측 대표단이 서울로 출발하기 직전에 2010년 2월 1일 개성공단 실무회담 개최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 이로써 남북은 차기회담을 2월 1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평가회의를 종료하였다.

(6)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제4차 실무회담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제4차 실무회담」이 2010년 2월 1일 개성 「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에서 진행되었다. 우리 측에서는 김영탁 수석대표(통

일부 상근회담대표) 외 2명, 북한측에서는 박철수 단장(중앙특구개발지도 총국 부총국장) 외 4명이 참가하였다.

우리 측은 지난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 평가회의」에서 합의한 데에 따라 3통 문제와 근로자 숙소 건설 문제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하고 북한측의 호응을 촉구하였다.

3통 문제 중 ‘통행’의 경우 전자출입체계(RFID) 도입을 기반으로 현재의 ‘지정시간대 통행’을 ‘일 단위 통행’으로 전환함으로써 남북 간 통행을 보다 간소하고 편리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통관’의 경우에는 현재의 ‘전수조사’ 방식을 ‘선별검사’ 방식으로 전환하고, ‘통신’의 경우에는 광케이블을 활용하여 우선 인터넷망부터 빠른 시일 내에 개통하자고 제의하였다. 개성공단 북한측 근로자 숙소는 우선 소규모로 건립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와 함께 개성공단 관련 북한측 근로자의 수급실태도 조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우리 측의 제의에 대하여 북한측도 3통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3통 문제는 기본적으로 군부의 소관사항이므로, 남북군사실무회담을 열어 3통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개성 실무회담에서는 임금·숙소 등 여타 현안을 협의하자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한편 우리 측은 기초발언을 통해 최근 북한이 서해 포사격을 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데 대하여 이는 남북관계 발전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우리 측이 개성공단과 무관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반발하면서 서해 포사격은 정당한 군사연습이라고 강변하였다.

쌍방은 향후 남북군사실무회담을 열어 3통 문제를 협의한 후, 숙소와 임금 문제 등은 당국 간 실무회담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인 남북군사실무회담 일자와 장소 등은 추후 우리 측에서 통보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제4차 실무회담(2010.2.1.)

(7) 개성공단 3통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실무접촉

「개성공단 3통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실무접촉」이 2010년 3월 2일 개성 「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에서 진행되었다. 우리 측에서는 이강우 수석대표(통일부 관리총괄과장) 외 2명, 북한측에서는 이선권 단장(조선인민군 대좌) 외 4명이 참가하였다.

남북은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제4차 실무회담」 합의에 따라 3통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군사실무회담의 개최 일정과 장소 문제에 대해 남북 군사 당국 간 채널을 통해 협의하였다. 협의과정에서 우리 측은 그간 남북 군사실무회담 관례에 따라 판문점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고, 북한측은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고집하면서도 회담장소는 토의 의제에 맞게 개성 「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할 것을 주장하였다. 최종적으로 우리 측은 3통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입장에 장소는 북한측의 주장을 수용하여 「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하되, 대표단은 3통 문제를 실질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해당 담당관으로 구성하였다. 우리 측은 개성공단 담당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여하고, 북한측은 남북군사실무회담 대표단이 참여하는 형태로 실무접촉이 개최되었다.

남북은 전체회의와 분야별 실무접촉(통행·통관 및 통신 분야)을 진행하고 3통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을 위한 기본입장을 교환하였다.



개성공단 3통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실무접촉(2010.3.2.)

우리 측은 3통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방향과 회담의 운영방식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하고, 북한측의 호응을 촉구하였다. 회담운영 방식과 관련 효율적인 회담운영을 위해 3통 문제를 ‘통행·통관 분야’ 실무접촉과 ‘통신 분야’ 실무접촉으로 분리하여 진행할 것을 제의하였다.

통행 문제의 경우 ‘전자출입체계(RFID)’를 도입하여 상시통행을 할 수 있도록 2010년 3월에 전자출입체계를 설치, 5월부터 전자출입체계와 ‘일 단위 통행’의 본격 시행을 제의하였다. 통관 문제의 경우 신속한 통관을 위해 ‘선별검사’ 방식을 도입하고, 선별검사 비율은 50% 수준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통신 문제의 경우 자유로운 통신보장을 위해 인터넷과 이동전화 서비스가 개성공단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실무접촉을 분야별로 운영하는 방식에는 동의하면서도, 3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측이 먼저 대북 적대 및 대결조장 행위를 중단하고 「6·15 및 10·4 선언」, 「3통과 관련된 기존 합의사항」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개성공단과 함께 동해지구에서의 3통 문제 해결을 위한 설비 및 자재·장비 명세서를 새롭게 제시하면서, 이를 우선적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남북은 향후 분야별 실무접촉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실무적인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며, 실무접촉 일자는 추후 확정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강경도발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 심화로 개성공단 관련 남북 간 실무접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실무회담

「임진강 수해 방지 관련 남북실무회담」이 2009년 10월 14일 개성 「남북 교류협력협회사무소」에서 진행되었다. 우리 측에서는 김남식 수석대표(통일부 교류협력국장) 외 2명, 북한측에서는 이영호 단장(민족경제협력연합회 실장) 외 2명이 참가하였다.

2009년 9월 6일 새벽 북한이 임진강 지역 댐에서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을 무단 방류함으로써 우리 국민 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우리 측은 즉시 대북 통지문을 보내 사고원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류계획을 사전에 우리 측에 통보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북한측은 9월 7일 대남 통지문을 통해 임진강 상류에 있는 “언제(堰堤)의 수위가 높아져 긴급하게 방류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는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북한측의 이러한 답변내용은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었고 심각한 인명 피해에 대한 언급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2009년 9월 8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하여 북한 당

국의 충분한 설명과 책임 있는 사과를 재차 촉구하였다.

북한 당국의 반응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측은 2009년 10월 12일 「임진강 수해 방지 관련 남북실무회담」을 10월 14일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북한측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실무회담이 개최되었다.

우리 측은 ‘임진강 사고’에 대하여 책임 있는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임진강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 공유하천에서의 피해예방과 공동이용 제도화를 위한 3원칙」을 제시하였다.

남북 공유하천에서의 피해예방과 공동이용 제도화를 위한 3원칙

1. 합리적이고 공평한 이용의 원칙 : 남북 공유하천을 공동이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용
2. 상호협력의 원칙 : 공유하천 이용과정에서 남북이 서로 협의하고 협력
3. 신뢰의 원칙 : 공유하천 이용에 있어서 남북 간 합의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

나아가 우리 측은 이러한 원칙으로 유사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통보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남북 공유하천에서의 방류 시 댐 명칭, 방류량, 방류 이유 등을 명시한 통보양식을 전달하면서 사전에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북한측이 이를 받아들여 향후 방류 시 우리 측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북한측은 기본발언에서 “임진강 사고로 남측에서 뜻하지 않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조의를 표명하였다. 갑작스러운 방류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서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긴급히 방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하였다.

쌍방은 차기회담을 통해 홍수예보 체계와 공유하천 공동이용 등의 제도화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구체적 일정은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협의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강경도발로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 간 실무접촉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3. 금강산·개성 관광 관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금강산·개성 관광 관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2010년 2월 8일 개성 「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에서 진행되었다. 우리 측에서는 김남식 수석대표(통일부 교류협력국장) 외 2명, 북한측에서는 강용철 단장(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외 2명이 참가하였다.

우리 측은 이번 회담에서 금강산·개성 관광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3대 조건 즉,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신변안전 보장 강화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금강산·개성 관광 관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2010.2.8.)

한편 우리 측 대표단은 기초발언을 하기에 앞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고(故) 박왕자 씨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실시하고 유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금강산 관광객이 사망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한다.”라고 하면서도,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은 본인의 불찰에 의해 빚어진 불상사라고 하는 등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또한 우리 측이 제기한 3대 조건에 대해서도 사건 발생 직후에 ‘사건의 진상’에 대하여 해명한 바 있으며, ‘재발방지’ 및 ‘신변안전’ 문제 역시 최고 수뇌부에 의해 확고히 담보된 만큼 이미 해결된 문제라며 종전의 자신들의 입장만을 반복하였다.

또한 북한측은 「실무접촉 합의서안」을 우리 측에 제시하면서 개성 관광은 2010년 3월 1일부터, 금강산 관광은 4월 1일부터 재개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3대 조건은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관광할 수 있는 기본조건이므로 이것이 충족되지 않는 한 관광재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이 기존의 입장만 반복할 뿐 구체적 호응이 없었기 때문에 남북은 차기 회담 일정을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협의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제3절 사회·문화 및 인도 분야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적십자 회담·실무접촉 6차례, 백두산 화산 관련 전문가 회의(민간 분야) 2차례 등 총 8차례에 걸쳐 인도 및 사회·문화 분야 회담이 개최되었다.

정부는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들을 분단의 최대 피해자로 인식하고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2009년 두 차례, 2010년 네 차례의 남북적십자 회담·실무접촉을 통해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포함한 이산가족 문제의 실질적 해결의 중요성을 북한측에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한 북한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였다. 그 결과 어려운 남북관계 속에서도 두 차례(2009.9., 2010.10.)에 걸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백두산 화산의 폭발 가능성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높아지던 시점에 백두산 화산과 관련한 「남북 전문가회의」를 2차례(2011.3.29., 2011.4.12.) 진행함으로써 이 분야에 있어 남북 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1. 남북적십자회담 및 실무접촉

(1) 2009년 남북적십자회담

2009년 8월 17일 우리 측 현대그룹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사이에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가 인도적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적극 수

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 측은 2009년 8월 20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의하였고, 북한측이 이에 호응함에 따라 1년 9개월 만에 「남북적십자회담」이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 우리 측에서는 김영철 수석대표(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외 2명, 북한측에서는 최성익 단장(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외 2명이 각각 참가하였다.

우리 측은 「남북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3원칙」을 제시하고, 그 같은 3원칙의 토대 위에서 이산가족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우리 측은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의 규모 및 일정을 제시하고 2010년 설을 계기로 한 상봉행사도 진행할 것을 제의하는 한편, 이산가족 상봉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자고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번 적십자회담에서는 추석 계기 상봉행사의 세부 일정에 대해서만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남북적십자회담(2009.8.26.~28.)

남북은 추석을 계기로 한 상봉행사에 대해서는 큰 이견 없이 합의하였으나, 기타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수준에서 합의를 이루고 2개 항으로 된 합의를 채택하였다.

2009년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 요지

1. 남과 북은 9.26.~10.1.간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
 - 상봉규모 각각 100명씩, 생사확인 의뢰(9.1.), 회보서 교환(9.15.), 최종명단 교환(9.17.)
 - 단체상봉은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 개별상봉은 금강산호텔 등 기존시설 활용
 - 선발대 사업은 상봉 5일 전부터 진행
2. 남과 북은 이산가족 등 적십자 인도주의 문제를 남북관계 발전의 견지에서 계속 협의

(2) 2009년 남북적십자실무접촉

금강산에서 진행된 이산가족 상봉행사 후 남북은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을 2009년 10월 16일 「남북교류협력협약사무소」에서 진행하였다. 우리 측에서는 김의도 수석대표(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외 2명, 북한측에서는 박용일 단장(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외 2명이 각각 참가하였다

우리 측은 「남북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3원칙」을 재강조하면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입장을 전달하였다. 2009년 내에 이산가족 추가 상봉을 실시하고, 2010년 설 명절 때에도 상봉행사를 추진할 것을 제의하였다. 아울러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 정상운영 문제를 다시 한 번 촉구하

고, 「금강산면회소사무소」 남북대표 상주문제와 면회소를 통한 상시상봉 문제에 대한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에 앞서 우리 측의 인도적 지원 제공을 요청하였다.

우리 측의 이산가족 추가상봉·이산가족면회소 정상운영 등의 우선 추진 요구 입장과 북한측의 인도적 지원 문제 우선 해결 입장이 서로 맞섬에 따라 양측은 동 문제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하고 합의 없이 실무접촉을 종료하였다.

(3) 2010년 남북적십자실무접촉

2009년 10월 16일 남북적십자실무접촉 이후, 대청해전(2009.11.10.)과 천안함 폭침(2010.3.26.)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긴장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는 정치·군사적 문제와 결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였다.

북한은 2010년 9월 10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보내는 통지문을 통하여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금강산에서 진행하자며 동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을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정부는 2010년 9월 17일 개성에서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을 갖자고 수정 제의하였다. 북한이 이에 동의함에 따라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이 2010년 9월 17일과 9월 24일 그리고 10월 1일, 세 차례에 걸쳐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에서 북한측은 이산가족 상봉정례화를 빌미로 금강산 관광재개를 연계하여 협의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우리 측은 금강산 관광 문제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분리되어야 하며, 금강산 관광 문제 관련 남북 간 접촉은 당국에 별도로 제기해야 할 사항임을 지적하였다.

「남북적십자실무접촉」에서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양측은 상봉일정과 생사확인 의뢰 등 사전 준비절차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루었다. 그러나 상봉규모와 장소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상봉규모와 관련하여 우리 측은 ‘기존보다 확대된 규모’로 실시하자고 하였으나, 북한측은 ‘전례대로 100명 규모’로 하자고 주장하였다.

상봉장소와 관련하여 우리 측은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를 제의하였다. 반면 북한측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금강산지구 내에서 진행하되,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 사용은 자신들의 권한 밖의 사항이므로 해당기관과 별도로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우리 측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2011년부터 매월 남북 각 100가족 규모의 상봉을 정례화하고,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도 반드시 협의·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상봉정례화는 남북관계가 풀리고 나서 좀 더 큰 회담에서 협의할 사안이라고 주장하였다.

쌍방은 이번 실무접촉에서 합의되지 못한 사안들을 2010년 9월 24일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남북적십자실무접촉(2010.10.1.)

2010년 9월 24일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린 「남북적십자실무접촉」에서도 지난 접촉 시 이견을 보였던 상봉장소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우리 측은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에서 상봉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북한측은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 등 금강산지구 내 모든 시설이 몰수·동결된 만큼 면회소 이용을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재개 문

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측은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는 금강산 관광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로서 본연의 목적에 맞게 면회소에서 상봉행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으나, 북한측은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우리 측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제기하자, 북한측은 2010년 10월 중순에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고 ‘이산가족 상봉 정상화 등 인도주의 사업 활성화’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하였다. 쌍방은 이산가족 상봉장소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차기 접촉을 10월 1일 개최하기로 하고, 실무접촉을 종료하였다.

2010년 10월 1일에 열린 실무접촉에서 남북은 전체회의 3회와 장소 문제 협의를 위한 접촉 2회 등을 거쳤다. 우리 측에서는 김의도 수석대표(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외 1명, 북한측에서는 박용일 단장(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외 1명이 각각 참가하였다. 북한은 9월 24일과 10월 1일 실무접촉 시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 관련 협의를 요구하며 강용철(아태평화위 참사)과 이경진(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과장)을 대표로 추가하였다. 우리 측은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야 하며, 다른 사안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북한측에 재차 강조하였다.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와 관련한 우리 측의 원칙적 입장을 확인한 북한측은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를 비롯한 금강산 관광지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별도 접촉의 필요성을 재차 지적하면서도, 이번에 한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에서 실시하는 데 동의하였다.

이러한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남북은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과 차기 적십자회담 개최 내용을 담은 「남북적십자실무접촉 합의서」를 채택하고 접촉을 마쳤다.

2010년 남북적십자실무접촉 합의서 요지

1. 이산가족 상봉행사 : 10.30.~11.5.간 금강산에서 진행
 - 상봉규모 : 남과 북 각각 100명
 - 상봉일정 : 10.30.~11.1. 북한측 방문단의 재남가족 상봉
11.3.~5. 우리 측 방문단의 재북가족 상봉
 - 사전절차 : 생사확인의회서(10.5.), 회보서(10.18.), 최종명단(10.20.) 교환
 - 상봉장소 :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 금강산호텔
 - 선 발 대 : 상봉시작 5일 전 현지 파견
2. 차기회담 : 10.26.~27. 개성에서 진행

(4) 2010년 남북적십자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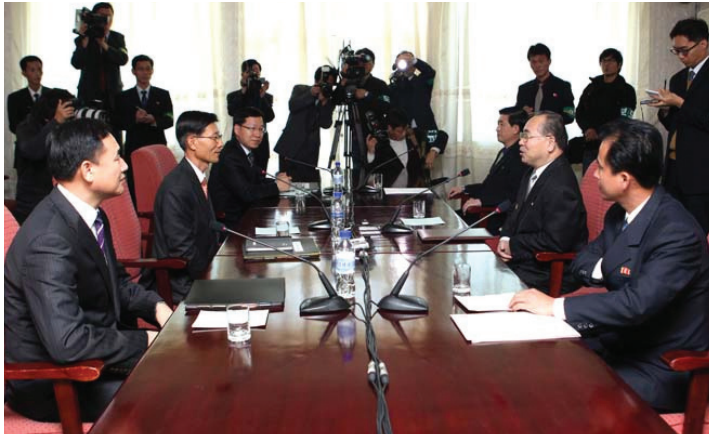
2010년 10월 1일 개최된 「남북적십자실무접촉」에서의 합의에 따라 2010년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이 진행되었다. 우리 측에서는 김용현 수석대표(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외 2명, 북한측에서는 최성익 단장(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외 2명이 각각 참가하였다.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우리 측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북한측의 호응을 촉구하였다.

우선 2011년 3월부터 매월 남북 각 100가족씩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적으로 실시하자고 제의하였다. 또한 이미 상봉한 가족들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이산가족들이 원하는 시기·장소에서 상시적으로 상봉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의하였다. 상봉과 함께 2010년 12월부터는 남북 각 5,000명씩 이산가족들의 생사와 주소를 확인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2011년 1월부터는 남북 각 1,000명씩의 이산가족들이 편지

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서신교환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80세 이상 고령의 이산가족들에게 고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2011년 4월부터 고향방문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도 제의하였다. 국군 포로·납북자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들의 전면적인 생사확인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함께 인도주의적 협력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우리 측에 쌀 50만 톤과 비료 30만 톤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정례화를 위해서는 상봉장소 문제가 결정적으로 풀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금강산 관광재개와 관련된 실무회담이 조속히 개최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남북적십자회담(2010.10.26.~27.)

북한측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우리 측은 대규모 지원은 적십자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당국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금강산 관광 문제는 이산가족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상봉정례화와 직접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남북은 상호 제기한 사안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차기 「남북적십자회담」을 2010년 11월 25일 개최하여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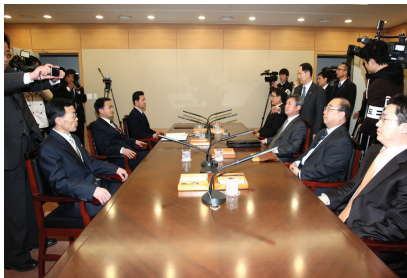
이후 남북은 판문점 연락관 협의 등을 통해 상봉장소 협의를 위한 접촉을 문산의 「경의선도로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남북적십자회담」을 이틀 앞둔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함에 따라 정부는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할 수 없음을 북한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남북적십자회담」이 무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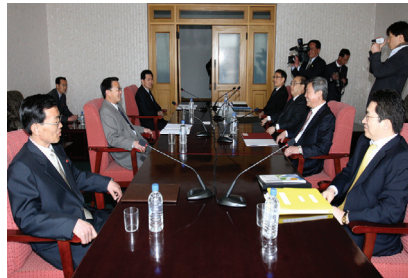
2. 백두산 화산 관련 남북 전문가회의

민간 차원의 「백두산 화산 관련 남북 전문가회의」가 2011년 3월 29일 문산 「경의선도로 남북출입사무소」와 2011년 4월 12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두 차례 개최되었다. 우리 측에서는 유인창 수석대표(경북대 지질학과 교수) 외 3명, 북한측에서는 윤영근 단장(화산연구소 부소장) 외 2명이 각각 참가하였다.

북한은 2011년 3월 17일 통지문을 보내 백두산 화산과 관련한 협의를 제의하였다. 우리 정부는 백두산 화산 활동에 대한 남북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여, 우선 「백두산 화산 관련 남북 전문가회의」를 3월 29일 우리 측 지역인 문산에서 가질 것을 제의하였고, 이를 북한이 수용함에 따라 회의가 성사되었다.



제1차 백두산 화산 관련 남북 전문가회의
(2011.3.29.)



제2차 백두산 화산 관련 남북 전문가회의
(2011.4.12.)

회의에서 우리 측은 백두산 화산활동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중점을 두고 공동연구에 앞서 '선행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백두산 화산활동 실태파악을 위한 자료교환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교환을 바탕으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 방식 등을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측은 백두산 화산활동에 대한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전문가 간 학술토론회를 먼저 진행하고, 현지에 나가 공동으로 조사하는 방식의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동 회의에서 남북은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차기회의 날짜와 장소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2011년 3월 29일 회의결과에 따라 우리 측은 4월 6일 「제2차 백두산 화산 관련 남북 전문가회의」를 4월 12일 개성에서 개최하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북한에 발송하였고, 이를 북한이 수용함에 따라 제2차 회의가 4월 12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우리 측은 백두산 화산의 실태파악에 중점을 두고 북한측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예년에 비해 최근 백두산에 지진현상 등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학술토론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만을 반복하였다.

쌍방은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5월 초 평양 또는 편리한 장소에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 후 6월 중순 백두산 현지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남북은 합의서에서 백두산 화산분출에 대한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남북학술토론회」를 5월 초 평양 또는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며, 백두산 화산에 대한 현지답사를 6월 중순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날짜와 실무절차는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합의서에 따라 우리 측은 2011년 4월 28일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를 위한 남북학술토론회」를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서울 또는 평양에서 개최하자는 통지문을 북한에 발송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아무런 답신을 보내오지 않음에 따라 「남북학술토론회」 및 백두산 현지답사는 무산되고 말았다.

제4절 판문점 남북연락 업무

이명박 정부 들어 2012년 9월까지 판문점 남북연락 업무는 두 차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였다. 판문점 남북연락 채널의 운용과 활성화 여부는 남북관계 상황과 진전의 척도 역할을 하였다. 남북 간 회담이 활발하고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 공동행사가 원활히 진행될수록 직통전화 통화와 연락관 접촉이 빈번하였지만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접어들면 이러한 통화와 접촉의 기회는 감소하였고, 최악의 경우에는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 채널 운용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2008년 11월 12일 북한이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명의로 “판문점 북남직통전화 통로를 단절한다.”라고 발표하면서 첫 번째 중단이 이루어졌다. 이는 「제63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을 우리 정부가 공동제안한 것에 대한 북한의 반발에 따른 것이었다. 첫 번째 남북직통전화 중단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때 북한 조문단의 서울방문(2009.8.21.~23.)과 「남북적십자회담」(2009.8.26.~28.) 추진을 계기로 2009년 8월 25일 재개통될 때까지 약 9개월간 지속되었다. 두 번째 중단 역시 북한의 일방적 통보로 발생하였다. 2010년 3월 26일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감행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5월 24일 「대북제재 조치」(「5·24 조치」)를 발표하였고, 북한은 이에 대한 반발로 5월 26일 남북직통전화 운용을 중단하였다.

2011년에 접어들면서 북한은 「5·24 조치」 이후 국제적 제재가 지속되자 국면전환을 위해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남북대결 해소를 촉구하는 한편, 1월 8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적십자 채널 재개통을 제의해 왔다. 이어 1월 10일에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통해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명의로 통지문을 보내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직통

전화를 열고 연락업무를 재개할 것'을 제의해 왔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제의를 수용함에 따라 1월 12일부터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간 연락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 이로써 2010년 5월 26일부터 중단되었던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간 연락채널이 8개월여 만에 복원되었다.

2008년부터 2012년 9월까지 이루어진 판문점 남북연락 업무는 직통전화 1,951회, 전화통지문 수·발신 178건, 연락관 접촉 36회로서 연도별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남북연락 업무 통계

(단위 : 회/건)

연도	구분	남북직통전화(회)	전통문(수·발신)(건)	연락관 접촉(회)
2008		503	16	-
2009		266	24	14
2010		218	22	6
2011		596	107	14
2012		368	9	2
계		1,951	178	36

* 2012년은 9월 30일 기준



판문점 남북연락관 접촉



M I N I S T R Y O F U N I F I C A T I O N

제 6 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1절 사회적응교육

제2절 정착지원 체계 및 현황

제6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이명박 정부는 인도주의와 인권, 선진화와 복지, 실질적 통일준비의 관점에서 북한 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은 1998년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2012년 9월까지 1만 1,927명이 입국하여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 주민은 총 2만 4,191명이다.

입국인원의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2002년을 기점으로 여성이 남성을 추월하여 2008년에는 그해 전체 입국인원 중 78%를 초과하였다. 이후 점차 남성의 입국이 증가하여 2011년에는 여성 입국자의 비율이 전체 입국자의 70%로 낮아졌다. 연령별로 입국 인원을 분류하면 20~40대 인원이 전체 입국인원 중 약 75% 수준이다.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

(단위 : 명/%)

연도 구분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합계
남	831	565	511	472	624	423	512	571	608	671	589	797	303	7,477
여	116	479	632	810	1,272	959	1,510	1,977	2,196	2,258	1,813	1,909	783	16,714
합계	947	1,044	1,143	1,282	1,896	1,382	2,022	2,548	2,804	2,929	2,402	2,706	1,086	24,191
여성 비율(%)	12	46	55	63	67	69	75	78	78	77	75	70	72	69

* 2012년은 9월 30일 기준

한편 1999년 7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를 개원한 이래 12년 만인 2011년 7월에는 강원도 화천군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이하 '제2하나원')를 착공하여 2012년 12월 5일에 개원하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이 꾸준히

준히 증가하는 데 대비하고, 이미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수교육 수요를 감안하여 이들의 성공적 정착을 돕는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다.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을 현장성 강화 및 체험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지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착지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2001년 이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참여하는 민·관 유관기관 협의체인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결성이 활성화되어 2012년 9월 기준 69개 지역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한편 2010년 3월 26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착지원법')을 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수료 후 실제로 생활하게 되는 거주지에서 지역적응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적응센터」를 전국 30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북한이탈주민에게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 제도를 마련하여 심리안정 및 각종 정착 관련 정보 안내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0년 9월 27일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을 설립하여 민간 차원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더욱 활성화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착지원 체계와 인프라를 확충함과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을 통해 스스로 자립·자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우리의 교육 시스템에 적응하여 잘 성장하고, 궁극적으로는 미래의 통일을 앞당길 인재로 거듭나도록 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추진하였다.

제1절 사회적응교육

1.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 개편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적응교육을 받는다. 사회적응교육은 ‘정서안정과 문화적 이질감 해소’ 및 ‘사회·경제적 자립 동기부여’를 교육목표로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우리 사회 이해 증진 △진로지도·직업훈련 △초기 정착지원 제도 안내 과정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또한 정규 프로그램 외에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강이 가능한 「자율 참여형 보충 프로그램」을 통하여 맞춤형 선택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 12월 「하나원」 본원을 증축해 수용능력을 동시 600명, 연간 2,400명 규모로 확대하고 사회적응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였다. 또한 그동안 각계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표준교육과정」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내부 검토를 거쳐 2009년 3월부터 운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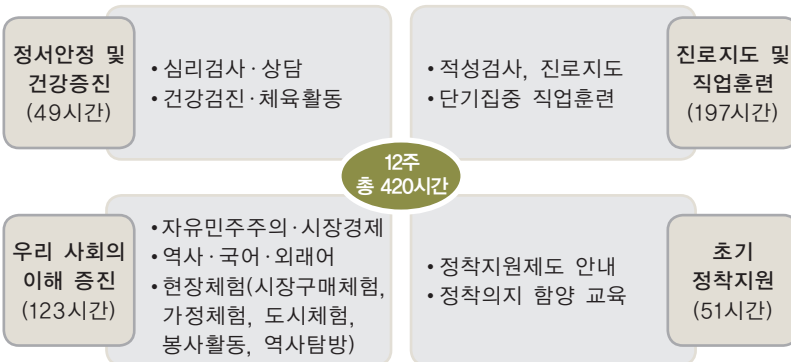
개편된 교육과정에는 교육생의 열악한 심신 상태를 감안하여 심리안정 및 건강증진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현장 체험교육 등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또한 정보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하고, 여성의 증가 상황을 감안해 성별 특화 교육도 강화하였다. 아울러 교육생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과목을 정규시간 외에 「자율 참여형 보충 프로그램」으로 편성해 맞춤형 선택학습을 지원하였다. 「자율 참여형 보충 프로그램」은 교육생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학습할 수 있도록 각종 자격증반, 취업설명회, 국어, 영어, 역사 등의 수업을 개설하였다.

2011년 4월 제10차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 개편은 내·외부 강사 평가 및 교육 프로그램 자체평가, 전문가·수료 교육생·북한이탈주민 고용주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현행 교육기간 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실시하였다. 제10차 개편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자유민주적 법질서 의식 함양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실용적 내용 보강 △자율·자립·자활에 필요한 정착의지의 함양에 역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국가 정체성 및 역사관 확립을 위한 역사교육을 확대·개편하였다.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남북한 언어 차이 및 외래어 교육」, 「실생활 경제교육 및 법률상담」, 「남한 직장문화 교육」 등을 확대하였다. 또한 정착의지를 함양하기 위하여 자립·자활 노력이 중요함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실생활 소재의 「정착사례」 과목을 확대하였다.

2012년 4월 제11차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 개편에서는 제10차 교육 프로그램 개편 내용을 보완하여 △직업 적응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신설 및 교육 내용 강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립의지 고취를 위한 교육 확대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참여형 교육을 반영하였다.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정규 프로그램

교육목표 : 정서안정, 문화적 이질감 해소 및 사회·경제적 자립 동기부여



❖ 자율 참여형 보충 프로그램 : 운전면허, 컴퓨터, 회계기초, 간병인 과정 등(257시간)

2.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1) 진로상담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직업능력이 부족하고,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편이다.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자기 주도적 진로 의사결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반영한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업교육에 적용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그동안 운영해 온 「진로희망찾기 I·II(28시간)」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확대하였다. 「진로희망찾기 I·II」는 직업활동을 하는 데에 필요한 진로 의사결정 능력과 취업기술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는 직업교육으로 25명 내외의 소집단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진로희망찾기 I」은 자기이해, 직업세계의 이해 등을 기반으로 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선호하는 희망직업과 직업교육에 대하여 일차적인 탐색을 한다. 「진로희망찾기 II」는 외부 전문훈련기관에서 기초직업 적응훈련을 받은 후에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수료 후 구직활동에 필요한 이력서 작성, 면접 요령, 구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하나원」은 보다 효과적인 직업교육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용 취업지원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용 직업카드」, 「취업지원 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진로상담에 활용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북한이탈 청소년이 「하나원」을 수료한 후 학교에서 학업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 프로그램」, 「학습기술향상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2011년에는 취업기술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이력서 작성, 채용 면접요령 연습, 취업의 걸림돌 극복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기존의 「진로희망찾기」 프로그램을 개선하였다.

2012년에는 북한이탈주민의 근로의욕 고취 향상에 중점을 두고 인생 전반의 진로설계를 위한 인생설계, 대인관계, 취업의 걸림돌 극복을 주요 내

용으로 하는 「취업희망찾기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수준별 진로지도서를 위해 북한 거주 당시 전문직에 종사하였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전문직 진로지도 프로그램」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층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일과 후에는 「이력서 클리닉 및 개별상담 프로그램」도 진행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빠르고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진로상담 실적

(단위 : 명)

구분	진로상담	개별 이력서 클리닉	수준별 맞춤교육
상담실적	2010년	2,926	-
	2011년	1,804	-
	2012년	690	118

* 2012년은 9월 30일 기준

* 개별 이력서 클리닉은 2011.5.부터, 수준별 맞춤교육은 2012.5.부터 운영

(2) 단기집중 직업훈련

「하나원」은 2006년부터 2010년 4월까지 노동부와 기초직업 적응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직업교육을 전문직업 훈련기관인 한국폴리텍여자대학에 위탁·시행함으로써 직업교육의 내실화 및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기초직업 적응훈련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취업하기에 적합한 여러 직종을 체험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하나원」을 퇴소한 후 즉시 취업하기 위해서는 해당 생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직업교육을 또다시 수료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하나원」은 기초직업 적응훈련을 「단기집중 직업훈련」으로 바꾸었다. 「단기집중 직업훈련」은 교육생이 한 가지 직종을 단기간이나 집중적으로 훈련받는 것이다. 단기집중 훈련을 실시할 직종을 선정하기에 앞서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이 가능한 직종, 노동부와 중소기업의 인력수요 동향, 인근 직업훈련기관 시설 등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

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기초직업 적응훈련 과정을 전면 개편하였다. 2010년 5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이 가능한 직종, 중소기업의 수요, 북한이탈주민의 선호 직종 등을 분석하여 선정된 직종 중 한 가지 직종에 대해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방식인 「단기집중 직업훈련」 과정을 시작하였다. 「하나원」 본원의 여성 교육생 훈련 직종으로 「기초 전자조립」, 「품질관리 기초」, 「봉제」, 「피부미용」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본원의 남성 교육생 대상으로는 「중장비(지게차)」, 「자동차 정비」 과정을 운영하였다.

2011년에는 취업연계효과 등을 고려하여 이전 방식의 단기집중 직업훈련을 개선하였다. 2011년 3월 본원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하나원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인정받아 한경대학교(안성 소재)에 요양보호사 과정을 위탁·운영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원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은 전체 교육시간 240시간 중 74시간을 인정받으며, 수료 후 거주지에서 잔여시간 166시간을 이수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본원의 여성 교육생들을 위해서는 「기초 전자조립」, 「품질관리 기초」, 「봉제」, 「요양보호사」 과정을 운영하였다. 본원의 남성 교육생들을 위해 「중장비(지게차)」, 「자동차정비」, 「용접」 등 3가지 직종 훈련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훈련기관도 기존의 두원공과대학교에서 한경대학교, 대우직업능력개발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등으로 확대하였다.



단기집중 직업훈련

2012년에는 본원의 여성 교육생들을 위하여 실수요와 취업을 연계할 수 있는 「한식조리」 과정을 추가로 개설하여 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본원의 남성 교육생들을 위하여 「자동차정비」 등 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단기집중 직업훈련 실적

(단위 : 명)

구분	과정명	수료 인원		
		2010년	2011년	2012년
여성	기초 전자조립	231	517	240
	품질관리 기초	223	330	59
	봉제	254	211	190
	피부미용	221	30	-
	요양보호사	-	263	169
	한식조리	-	-	140
남성	중장비	125	182	101
	자동차정비	133	186	107
	용접	-	178	89
계		1,187	1,897	1,095

* 2012년은 9월 30일 기준

(3) 중소기업과 만남의 장

「하나원」은 중소기업청과 협력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2010년 1월부터 매월 1회씩 「중소기업과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행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중소기업체 인사담당자에게 이력서를 제출하고 채용 면접을 보게 되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취업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진로선택에 대한 의사결정을 현장에서 직접 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된다. 아울러 이 행사와 함께 중소기업 현장탐방을 실시하여, 남한의 직장문화와 중소기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중소기업과 만남의 장」에는 2012년 9월 기준 총 4,568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하였으며 기업체 채용 면접에 합격하여 중소기업체로부터 「북한이탈주민 채용안내장(중소기업청 발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은 총 1,430명이다. 채용안내장을 받아 해당 업체에 취업한 북한이탈주민은 총 282명으로 19.7%의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중소기업과 만남의 장

(4)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2008년부터 「하나원」은 지역사회의 기업과 연계하여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에서 직업교육을 수료한 후 취업과 직업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다.

첫째, 「맞춤형 직업훈련 취업연계 프로그램」은 직업 전문학교에서 특정 기업이 요구하는 직종의 전문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에 해당 기업에 취업하는 방식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통일부, 고용노동부, 직업훈련기관, 기업이 4자 협력체제를 이루고 있다. 통일부는 교육생 모집 및 행정지원, 고용노동

부는 예산지원 및 훈련기관 관리·감독, 직업훈련기관은 전문직업훈련, 기업은 채용의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직장 내 교육훈련(on-the-job training, 이하 ‘OJT’)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을 단기근로자로 고용하여 OJT를 실시한 후 정규직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일정 자격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이 대기업에 채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3. 하나둘학교 개교 및 운영

「하나원」 내 「하나둘학교」에서는 「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 중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연령 및 학력을 고려한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나둘학교」는 영아반 1개, 유치반 1개, 초등반 2개(저학년·고학년반), 청소년반 3개 등으로 분반하여 운영하고 있다.

(1) 유치·초등교육

유치반 아동들은 「하나원」 인근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일반 유치원생들과 함께 종일반에서 한글 및 수셈 등과 같은 기초교육과 유치원 아동에 맞는 여러 가지 특성화 교육을 받고 있다. 병설유치원 수업이 끝난 후에는 「하나둘학교」에서 동화읽기, 쌓기놀이, 역할놀이 등 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놀이와 한글과 수셈에 대한 보충 학습 등의 방과 후 교육을 실시한다.

연도별 유치반 인원 현황

(단위 : 명)

연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합계
교육 인원	-	6	12	14	18	24	14	19	36	23	36	37	43	36	318

* 2012년은 9월 30일 기준

초등반 아동들은 초등학교에서 1교시부터 4교시까지의 일반 학급에서 남한 학생들과 함께 교과적응 교육을 받고, 5교시부터 8교시까지의 북한이탈주민 학생으로 구성된 특별학급에서 통합교과를 중심으로 학교생활 적응교육, 사회·문화 적응교육, 언어 적응교육 등의 교육을 받고 있다. 초등학교 하교 이후에는 「하나둘학교」에서 기본 교과목 보충수업과 예체능 수업 등의 방과 후 교육을 받는다.

연도별 초등반 인원 현황

(단위 : 명)

연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합계
교육 인원	3	34	38	68	74	139	74	97	88	80	113	82	144	93	1,127

* 2012년은 9월 30일 기준

유치·초등반 아동들에 대한 방과 후 교육은 2008년 6월부터 무지개청소년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명의 방과 후 교사를 지원받아 매일 2시간씩 진행하였다. 2010년 1월부터는 「하나원」에서 자체적으로 방과 후 교사(초등반 2명, 유치반 1명)를 채용하여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2년 4월부터 토요일에는 (사)북한인권시민연합과 험멜 FC 소속 자원봉사자들의 협조로 각각 기초교과목 보충수업과 축구교실 등의 주말 프로그램을 격주로 실시하고 있다.



하나동학교 초등반

(2) 청소년 교육

2009년에는 북한이탈 청소년이 일반학교에서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 청소년의 「하나원」 내 초기 적응교육 지원체계를 개선하였다. 2009년 1월부터 청소년의 초기 적응교육 강화를 위하여 「하나원」 자체 청소년반 전일제 교육을 추진하였다. 2009년 7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한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하나원」에 교사 인력 파견이 결정됨에 따라 2009년 9월 1일 경기도교육청 소속 현직교사 2명이 「하나원」에 파견되었다. 또한 무지개청소년센터로부터 5명의 강사를 지원받았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쳐 2009년 9월 30일 제133기 입소 청소년부터 「하나동학교」에서 청소년반 전일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후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일반학교 적응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선학교 교사 비중을 점차 늘려 2012년 9월 기준 교육과학기술부 파견교사 6명과 무지개청소년센터 파견강사 2명, 한국교육개발원 파견 심리상담강사 1명 그리고 자체 강사 2명 등 총 11명의 교사·강사가 청소년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연도별 청소년반 인원 현황

(단위 : 명)

연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합계
교육 인원	2	7	65	132	97	160	111	169	232	267	220	193	198	85	1,938

* 2012년은 9월 30일 기준

2010년 3월 26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착지원법') 개정을 통해 북한이탈 청소년의 일반학교 진학 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였다. 「하나원」은 예비학교운영규정 제정, 자체 교재 발간 등 일련의 준비과정 끝에 2011년 10월 20일 「하나둘학교」를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로 전환하여 공식 개교하게 되었다.

「하나둘학교」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정서적 안정을 통한 자신감과 자존감 회복, 기초학력증진 및 학력보충을 교육목표로 하여 이들이 우리 사회 및 학교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거주지 시도교육청 산하 「학력심의위원회」에서 북한에서의 학력을 인정받아야만 비로소 중·고교에 편입할 수 있었으나, 2011년 3월부터는 「하나원」을 수료하기 이전에 일괄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학력심의를 받아 북한 거주 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하나원」 수료 후 정규학교 편입학이 보다 용이해졌다.

청소년반 정규 프로그램은 12주 총 399시간으로 편성되는데, 「기초학력증진 및 학력결손 보충」이 212시간(53.1%), 「우리 사회 및 학교의 이해」가 74시간(18.6%),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이 70시간(17.5%), 「진학·진로 탐색 및 설계」가 43시간(10.8%)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외에 1일 2시간씩 정보화교육, 음악활동, 영화감상 등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에는 (사)북한인권시민연합 소속 자원봉사자들의 협조를 받아 기초교과목 보충수업과 예체능활동 등의 주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하나돌학교 청소년반

(3) 영아보육

「하나원」은 임신부 및 영아 관리를 위해 2003년부터 자격이 있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였으며, 2011년 9월부터는 보육전문가를 정규직원으로 채용하여 북한이탈 영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보육의 질을 더욱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영아 동반 교육생 증가에 따라 2009년 2월에는 영아전용 화장실 및 이유식 제공을 위한 조리시설, 수면방 설치 등 보육환경도 대폭 개선하였다. 한편 영아반 및 유치반 보호자는 입소 직후부터 보육교사와 외부전문가로부터 양육방법 및 육아정보 등의 부모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연도별 영아 인원 현황

(단위 : 명)

연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합계
교육인원	2	4	8	18	8	18	17	28	22	32	36	86	62	36	377

* 2012년은 9월 30일 기준

4. 입국 초기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1) 하나의원 운영

「하나원」에서는 교육생의 질병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하나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1999년 「하나원」 개원 당시에는 간호 인력이 1명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교육생 증가에 따라 의료 인력을 꾸준히 확보하여 2004년 5월에는 기존의 건강관리실을 하나의원으로 변경·확대함으로써 교육생의 다양한 의료수요에 부응하게 되었다.

2008년 5월에는 「하나원」에 입소하는 교육생 대다수가 탈북과정에서 심리적 불안, 우울증, 대인기피증, 심리적 외상장애 등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정신과 공중보건 의사 1명을 추가로 지원받아 교육생의 정신적 문제 해결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2009년 4월에는 「하나원」 입소 여성 교육생의 산부인과 진료를 위하여 산부인과 공중보건 의사 1명을 지원받아 산부인과 진료를 시작하였다. 2012년도 이후에는 공중보건 의사 대신 의료협약을 체결한 병원(안성의료원, 서울의료원)에서 주 1~2회 「하나원」을 방문하여 산부인과 진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2년에는 소아청소년과 공중보건 의사 1명이 추가로 배치되어 「하나원」 입소 영유아 및 청소년에 대한 건강관리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하나의원은 본원과 분원의 이원화 운영으로 분원에 치과, 정신과 의사가 부족하였으나, 「현대차 정몽구 재단」에서 지원하는 기부금을 활용하여 유급의료진 3명(치과 1, 정신과 1, 치위생사 1)을 채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하나의원은 내과, 치과, 한방과, 산부인과, 정신과, 소아청소년과 등 6개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공중보건 의사 7명, 간호사 9명, 약사 1명, 유급의료진 3명 등 총 20명의 의료진이 연간 약 5만 건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하나의원 진료 체계



2011년도부터는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중점사업의 하나로 B형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B형간염 보균자 비율이 내국인보다 4~5배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하나의원」 교육 기간 중 B형간염 예방접종 대상자 전원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하나의원」은 지역 의료지원 기관·단체 및 병원과의 의료협약을 통해 의료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진료비 부담 경감과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의 체계적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2009년 11월에는 「전국 지방의료원 연합회」와 「진료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입원비, 수술비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10년에는 「현대의료재단 인애가한방병원(9.30.)」,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11.29.)」과 의료협약을 체결하였고, 2011년에도 「관동대학교의과대학 명지병원(4.28.)」, 「부산대학교병원(5.24.)」, 「전북대학교병원(7.13.)」, 「인천적십자병원(11.10.)」 등과 의료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의료지원을 위한 거점병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2012년도에는 「강원대학교병원(5.30.)」, 「춘천인성병원(9.20.)」과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제2하나의원」 입소 교육생 의료지원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



순천인성병원과 의료지원 협약 체결

(2) 심리상담 및 정서안정

북한이탈주민은 탈북에서부터 국내에 입국하기까지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위기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① 심리상담 프로그램

「하나원」 심리상담실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하여 전문적인 심리검사와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심리교육, 정서안정 프로그램 등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하나원」 교육생들의 전반적인 심리상태를 입소 초기부터 수료할 때까지 검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입소부터 퇴소까지 12주 동안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규 프로그램에서 심리교육이 이루어지고, 심리검사, 개인상담, 집단상담이 운영된다.

성인 심리검사의 경우 심리적 개입이 필요한 교육생을 조기 선별하기 위한 심리검사를 개발하였다. 2009년에 전남대학교 산학협력처와 「북한이탈주민용 간이심리상태검사(BPSI-NKR)」를, 2012년 동신대학교 산학협력처와 「탈북 청소년용 심리검사 도구」를 공동개발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심리

검사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거나 개인 심리상담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극복 프로그램을 실시할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하나원」은 2005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여 북한이탈주민 심리상담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08년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2009년에는 「하나원」이 한국임상심리학회로부터 임상심리 전문가 필수 수련기관으로 승인을 받았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게 적합한 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화된 심리상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하나원」에서 임상심리 전문가 레지던트가 2010년 1명, 2011년 1명이 수련을 받았고, 2012년에는 2명이 수련을 받고 있다.

② 정서안정 프로그램

정규 프로그램에서는 사회적응에 반드시 필요한 심리안정 교육을 12주에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내용으로는 교육생의 자존감 향상, 정체성 확립, 마음의 현상에 대한 이해,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의미, 자신의 성격특성에 대한 이해 등이 있다.

또한 정규 프로그램 시간 외에 심리검사, 개인상담, 집단상담 및 추가적 심리개입을 하고 있다. 심리검사의 경우 입소 초기 전체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사 외에도 지능검사, 기억력검사, 인지기능 및 사회적응능력 검사 등을 실시하여 심층적인 진단 및 치료를 하고 있다.

또한 교육생이 자발적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함」을 설치하여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사를 통하여 유의한 점수가 나온 교육생의 경우에는 주 1회 개인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정신과적 증상이 나타나는 특이교육생은 정신과 의사와 협력하여 상담 및 심리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연도별 개인 심리상담 및 검사 현황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개인 심리상담	261	247	678	646	896
개인 심리검사	19	17	36	19	62

* 2012년은 9월 30일 기준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변화를 살펴보면, 성인반의 경우 2008년 4월에 부부상담, 자녀교육, 신체화 증상 완화, 대인불안 감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등을 위한 소그룹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새롭게 운영되었다. 2009년에는 역할연습 프로그램이 「마음가꾸기」로 신설되어 역할연기 기법을 활용하여 상황대처 능력과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키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2010년 12월부터는 「한겨레심리상담센터」의 협조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적 상담기법과 기술을 활용한 심층적인 집단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 4월에는 기존의 「역할연습 프로그램」을 「집단상담」으로 개편하여, 「대인관계」, 「의사소통 기술훈련」, 「긍정적 자아상」, 「미래상 확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2년 4월 교육 프로그램 개편에는 「바른 인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추가로 개설되어 내부전문가에 의해 참여식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청소년반은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하루에 모든 것을 끝내던 전일 프로그램에서 2010년에는 입소 3주차부터 매주 2시간씩 10주차까지 진행하는 회기별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였다. 이와 같은 주기적인 세션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적 문제를 완화하고,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12년에는 「감정조절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북한이탈 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로반도 2010년에는 집단상담을 주 1회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2년에는 인지재활 프로그램과 음악, 미술치료 등을 도입하여 치매예방과 노인기의 바람직한 심리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5. 「제2하나원」 건립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의 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증대 및 맞춤형 교육, 북한이탈주민의 보수·심화교육 활용 목적으로 「제2하나원」을 건립하여 2012년 12월 5일 개원식을 개최하였다.



제2하나원 개원식

「제2하나원」의 규모는 대지면적 7만 7,402㎡, 건축 연면적 1만 5,104㎡로서 지하 1층, 지상 4층의 생활관 및 교육관, 안내동, 경비동, 직원 관사 등의 건물 10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5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323억 원이 소요되었다.

「제2하나원」은 기존 본원의 남성 교육생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을 지속하는 업무 외에도, 하나원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확대, 맞춤형 직업전환 교육과 정착지원 업무 관계자 직무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제2절 정착지원 체계 및 현황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 수료 후 정착금, 지역적응교육, 취업·교육·의료지원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거주지에 전입하면 지역적응센터, 정착도우미, 거주지·취업·신변 보호담당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지역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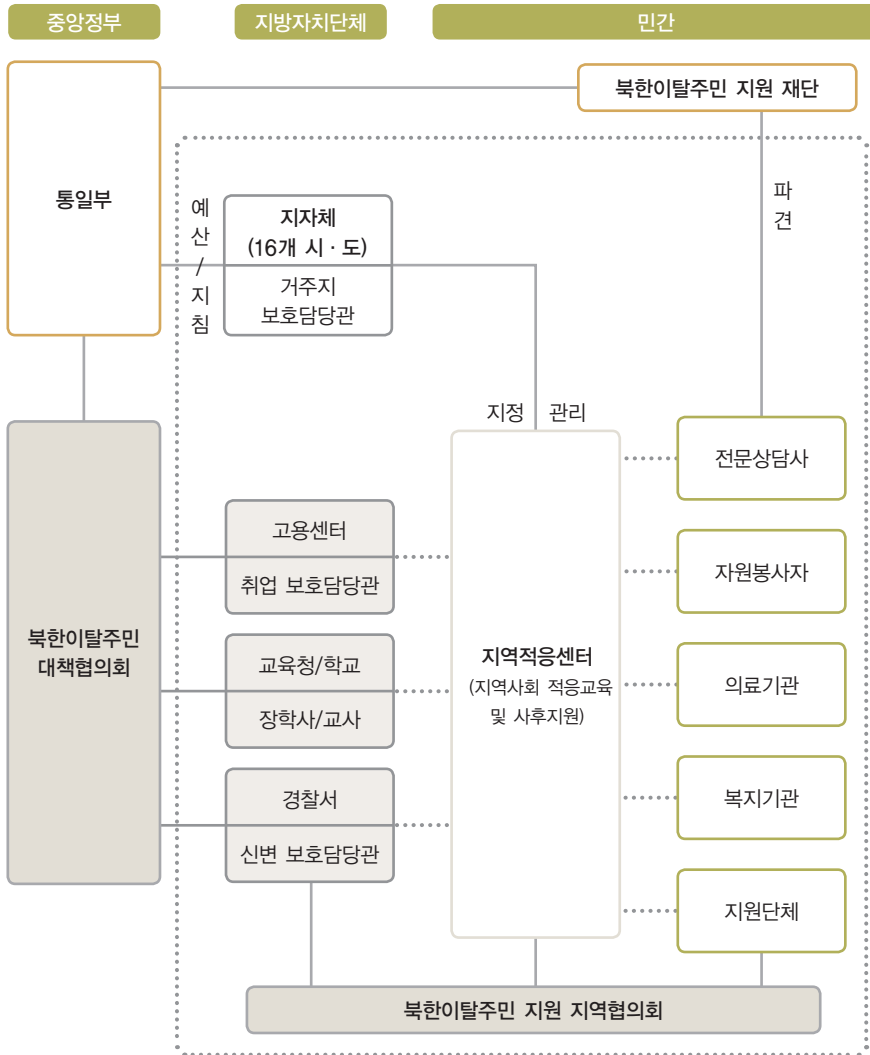
1. 초기 정착지원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이 자립·자활 의지를 갖고 우리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초기 정착지원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우선 북한이탈주민에게 「하나원」 교육기간 중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하도록 돕는다. 또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주거지를 정해주고 세대별로 임대주택을 알선하고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이들이 「하나원」을 수료할 때에는 초기 정착에 필요한 기본금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분할금을 지원한다. 2005년에는 장려금 제도를 신설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일정한 직업훈련을 이수하거나, 자격증 취득, 일정 기간 이상 한 직장에서 근무했을 경우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한 급여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학업을 계속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착도우미」 제도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을 돕고 있으며, 전국 16개 시·도에 총 30개소의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를 지정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역사회 적응교육 및 사후지원을 하고 있다.

정착지원 체계



(1) 가족관계 등록 창설

가족관계 등록은 과거의 호적부가 2008년 1월 1일자로 변경되어 시행되는 제도로서, 개인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부모 및 자녀의 인적사항, 배우자와의 혼인 관련 사항 등을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 이탈주민이 <국적법>에 의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원」 수수료 전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가족관계 등록 창설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진다. 우선 「하나원」 안에서 교육생과의 면담 내용 및 관련 자료, 통일부 보호결정자료 등을 근거로 「가족관계 등록 창설 허가신청서」를 작성한 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한다. 가정법원에서는 통일부에서 보내 온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해 허가결정을 하고, 허가결정서를 발급하여 「하나원」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보낸다. 마지막으로 「하나원」 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작성함으로써 가족관계 등록 창설 절차가 마무리된다.

북한이탈주민은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개인의 법적 신분 확립과 관련된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하나원」은 2007년 6월부터 전국 시·도별로 주민등록 기준지 20여 개를 지정하여 교육생이 수수료 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2010년 3월 <정착지원법>을 개정하여 과거에 「하나원」 주소지를 주민등록 기준지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1회에 한하여 정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신원사항이 노출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1년을 주기로 20여 개의 임시 주민등록 기준지를 변경하고 있다.

(2) 정착금 지원

「정착금 지원제도」는 <정착지원법> 제21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여건 및 생계유지능력 등을 고려하여 월 최저임금액 20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기본금·가산금·장려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정착금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다. 정부는 2005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금을 축소하고 장려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왔다.

기본금은 세대를 단위로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하나원」 수료 직후 초기 지급금을 지급하고 거주지 전입 후 1년간 분기별로 나누어 분할 지급금을 지급한다. 1인 세대의 경우 기본금은 총 6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초기 지급금은 300만 원, 분할 지급금은 300만 원이다. 기본금은 2007년 600만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2013년부터는 사회 편입 초기 생활안정을 위해 700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본금 지급기준

(단위 : 만 원)

세대원수	기본금		주거지원금	합계
	초기 지급금	분할 지급금		
1인	300	300	1,300	1,900
2인	400	700	1,700	2,800
3인	500	1,000	1,700	3,200
4인	600	1,300	1,700	3,600
5인	700	1,600	2,000	4,300
6인	800	1,900	2,000	4,700
7인 이상	900	2,200	2,000	5,100

기본금 지급 현황

(단위 : 명/백만 원)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인원(명)	3,005	2,321	2,435	2,417	1,242	11,420
기본금 (백만 원)	30,068	18,918	13,932	13,815	9,927	86,660

* 2012년은 9월 30일 기준

가산금은 취약계층을 특별히 보호하는 차원에서 연령(보호여부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 장애, 장기치료, 한 부모가정 아동보호를 위하여 지급한다. 동일인에게 중복의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 하나의 사유만을 인정하고, 동일세대에 대한 가산금 총 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액의 50배 이내이고, 기본금 지급 종료 후 남은 거주지 보호기간 동안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가산금 지급기준

구분	기준	금액
연령 가산금	만 60세 이상	720만 원
장애 가산금	장애등급별	1,540만 원(1급), 1,080만 원(2~3급), 360만 원(4~5급)
장기치료 가산금	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	개월×80만 원
한 부모가정 아동보호 가산금	만 13세 미만 아동이 있는 한 부모가정	360만 원

가산금 지급 현황

(단위 : 만 원)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가산금	장애	34,107	54,212	66,350	49,911	27,188
	연령	29,965	75,236	84,178	84,903	56,535
	한 부모가정 아동보호	15,963	39,124	48,518	58,709	46,409
	장기치료	560	720	4,280	4,000	4,560
계	80,595	169,292	203,326	197,523	134,692	

* 2012년은 9월 30일 기준

(3) 주거지원

「하나원」 수료 후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이 택한 거주지에 주택을 알선받아 입주하게 된다. 통일부는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SH공사 등과 협조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원활하게 주택을 알선 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를 결정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 먼저 입국한 가족의 거주지를 고려하지만 지역별로 알선 가능한 주택의 상황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방식을 병행한다. 2008년 이후 북한이탈주민에게 알선하여 공급한 주택의 수는 아래 표와 같다.

주택 알선 현황

(단위 : 세대)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세대 수	2,182	1,681	1,837	1,815	946	8,461

* 2012년은 9월 30일 기준

한편 북한이탈주민은 주택 임대 to 필요한 보증금을 지원받는데, 세대를 단위로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책정된 주거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하고 남은 잔액은 거주지 보호기간 종료 후 지급한다. 다만, 거주지 보호기간 이내라도 통일부지침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등 지급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

주거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 명/백만 원)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인원(명)	3,005	2,321	2,435	2,417	1,242	11,420
주거지원금 (백만 원)	20,267	19,526	24,069	26,997	19,817	110,676

* 2012년은 9월 30일 기준

북한이탈주민은 취업과 교육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수도권에 약 65% 정도의 인원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전국 각지의 지역주민과 화합하고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도록 지방거주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9년에는 지방거주 장려금을 상향하여 광역시 및 그 외의 지역으로 첫 거주지를 택하여 전입한 지 2년이 지난 후 주거지원금의 10~20% 상당액을 지급하고 있다.

지방거주 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 : 명/백만 원)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인원(명)	1,981	2,964	1,126	369	568	7,008
지급액 (백만 원)	1,499	4,908	1,673	805	1,166	10,051

* 2012년은 9월 30일 기준

(4) 취업지원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하여 직업훈련을 받거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취업장려금은 2005년 장려금 제도가 신설될 당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07년에 450만 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2009년에는 550만 원으로 더욱 증액하여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안주하지 않고 정상적인 취업을 통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였다.

2009년에는 장려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직업훈련장려금 지급요건을 6개월에서 500시간으로 조정하였고, 취업장려금 지급요건을 1년 이상 근무자에서 6개월 이상 근무자로 완화하여 시급히 목돈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수료한 후 직업훈련기관에서 소정의 직업훈련을 꾸준히 받아 자격증을 취

특하여 취업에 성공한 후 고용을 유지한다면 최고 2,440만 원까지 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장려금 지급기준

(단위 : 만 원)

구분	기준	금액	
직업훈련장려금	500시간 이하	미지급	
	500시간	120	
	500~1,220시간	120~240 (120시간당 20)	
*직업훈련 추가장려금	1년 과정, 우선선정직종	200	
자격취득장려금	1회 한(限)	200	
취업장려금	1년차	* 6개월 이상 1년 이하 신청 시 250 지급	550
	2년차		600
	3년차		650
총액 2,440			

장려금 수혜 인원과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취업장려금 수혜자는 2011년에는 2008년 대비 약 13배로 증가하였다.

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 : 명/만 원)

연도	구분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우선선정직종	취업장려금	총액
2008		62,940 (506명)	69,040 (345명)	18,800 (94명)	89,100 (196명)	239,880 (1,141명)
2009		88,400 (681명)	104,000 (520명)	21,800 (109명)	296,900 (646명)	511,100 (1,956명)
2010		150,000 (985명)	171,200 (856명)	65,000 (325명)	668,600 (1,325명)	1,054,800 (3,491명)
2011		118,100 (726명)	163,800 (819명)	70,400 (352명)	1,181,300 (2,406명)	1,533,600 (4,303명)
2012		151,900 (850명)	219,000 (1,095명)	91,400 (457명)	1,270,190 (2,547명)	1,732,490 (4,949명)

* 2012년은 9월 30일 기준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급여의 1/2을 1년차에는 월 50만 원 한도, 2~3년차에는 월 70만 원 한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고 있다. 2008년 이후 고용지원금 수혜 업체 수와 인원 및 지급액이 크게 늘고 있다. 한편 고용지원금을 부정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 2009년에는 고용지원금 부정수급에 공모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법>을 개정하였고, 통일부, 고용노동부, 관할 경찰서가 합동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 개/명/만 원)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업체수(개)	888	1,151	1,419	1,717	2,442	7,617
인원(명)	1,111	1,489	1,963	2,565	3,360	10,488
지급액(만 원)	349,457	634,900	973,300	1,313,209	963,822	4,234,688

* 2012년은 9월 30일 기준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단속 현황

(단위 : 만 원/%)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지급액(만 원)	888개 업체 349,457	1,151개 업체 634,900	1,419개 업체 973,300	1,717개 업체 1,313,209	2,442개 업체 963,822
부정수급액 (만 원)	4개 업체 5,975	2개 업체 5,000	9개 업체 4,574	17개 업체 6,539	2개 업체 7,178
부정수급률(%)	1.7	0.8	0.5	0.5	0.7

* 2012년은 9월 30일 기준

(5) 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의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기숙사 사용료 등을 면제 받는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대학에 진학하면 국·공립 대학의 경우 학비를 전액 면제하며, 사립대학은 정부가 학비의 50%를 해당 학교에 보조하여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그동안에는 대학에 최초 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5년의 기간 내에서 8학기 동안 교육지원을 하였으나 2010년 9월부터 6년의 범위 내 8학기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간을 확대하여 학업을 보충하거나 어학연수 등 재학 중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각각 만점의 70% 미만인 경우 교육비 보조를 하지 않도록 하여 학습에 대한 동기유발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사립대학 교육지원 현황

(단위 : 개/명/백만 원)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대학수(개)	120	136	156	157	171
지급 인원(명)	537	708	952	1,334	1,300
지급액(백만 원)	1,530	1,930	2,352	3,158	1,764

* 2012년은 9월 30일 기준



M I N I S T R Y O F U N I F I C A T I O N

제 7 장

통일교육

제1절 통일교육 추진체계

제2절 통일교육 과정 운영

제3절 통일교육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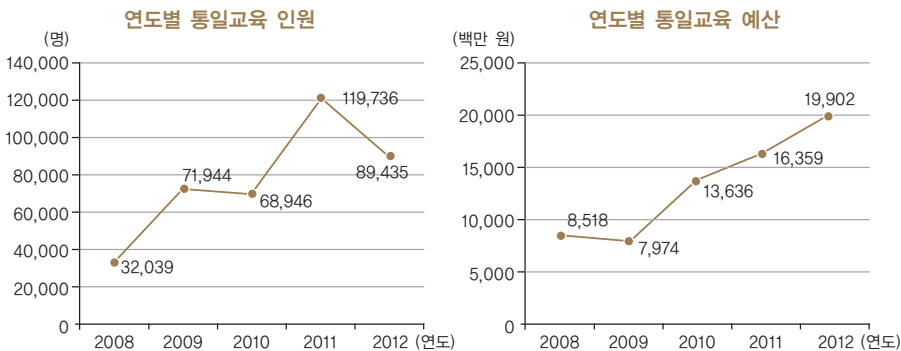
제4절 통일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제7장 통일교육

통일교육은 1999년 2월 제정된 <통일교육 지원법>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통일교육 지원법>은 제2조에서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조는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내면적·정신적으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 인식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하에 △교육내용 및 추진 체계 △학교 통일교육 △사회 통일교육 △초청교육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다. 특별히 2012년은 통일교육원 개원 40주년(1972.5.1 개원)을 맞이하여 보다 새로운 통일교육으로 발전하기 위한 계기로 삼았다.

이러한 노력으로 통일교육은 지난 5년에 걸쳐 교육인원과 예산이 대폭 증가하는 등 내·외연이 발전·확대되고, 이와 함께 국민들의 통일인식을 높이고 통일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2012년 통일교육 인원은 9월 30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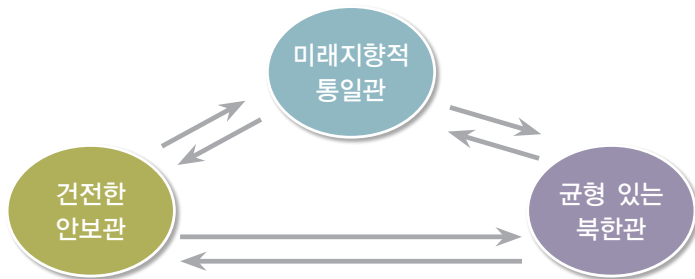
제1절 통일교육 추진체계

1. 내용체계 강화

이명박 정부는 2008년에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 있는 북한관’을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새롭게 설정하였다.

‘미래지향적 통일관’이란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단순한 분단극복의 차원을 넘어 민족공동체의 발전과 도약에 기여하는 통일이며, 이는 통일한국이 자유민주주의의 진전과 민족경제의 발전, 그리고 세계평화와 번영에도 창조적으로 기여하는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의미이다. ‘건전한 안보관’은 냉엄한 국제질서와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국가를 유지·보존하고, 한반도 평화정착 및 실질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튼튼한 안보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균형 있는 북한관’이란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과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사회 전반을 객관적·균형적으로 알리고 북한이 화해협력의 대상이자 현실적인 안보 위협의 상대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명박 정부의 통일교육 기본방향



정부는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통일교육의 추진 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정하여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등에 제시하고, 기관별 추진계획을 취합·조정하여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008년은 중점 추진과제로 △통일교육 내용의 균형성 제고 △공공부문 통일교육 강화 △학교 통일교육의 내실화 △유기적 통일교육 실시를 위한 협력 확대를 제시하였다. 2009년은 △국민적 합의기반 강화 △미래세대에 대한 통일교육 강화 △사이버 통일교육 확대 실시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2010년은 △현장 중심의 통일교육 확산 △학교 통일교육 지원 강화 △수요자 중심의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지역통일교육 인프라 구축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2011년은 중점 추진과제로 △통일안보교육 강화 △통일준비 공론화 확산 △미래세대 통일교육 다양화·활성화 △새 환경에 부응하는 콘텐츠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012년은 △통일교육 내용 체계 및 추진체계 강화 △미래세대의 통일외지 고양 △각계각층 대상 통일준비 공감대 확산 △뉴미디어 시대의 소통수단을 활용한 통일교육 실시를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특히 2012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 계획도 <<통일교육 기본계획>>에 수록하여 통일교육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2009~2012년 통일교육 기본계획

정부는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년 <<통일교육지침서>>를 발간하여 일선 통일교육 현장에 보급하였다.

《통일교육지침서》는 교육대상에 따라 일반용과 학교용으로 이원화하여 발간해 오고 있다.

일반용은 일반 국민들이 통일문제와 북한, 통일환경 및 정부의 통일노력 등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통일교육의 내용체계와 지도방향을 제시한다. 학교용은 이에 더하여 초·중·고교 학생들이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판단력을 키우고 평화와 통일을 일구어 갈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학교 통일교육의 과제, 각급 학교별 및 교육과정별 권고 사항 등도 담고 있다.

2008년 《통일교육지침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2008년 「통일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통일교육의 목표와 과제, 내용, 지도방향 등을 부분적으로 조정하여 작성하였다. 동 지침서는 특히 안보 현실에 대한 인식과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종전 10년간의 통일교육이 남북관계의 진전과 남북교류협력의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실상과 안보 측면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통일교육지침서》는 2008년 지침서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면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변화된 남북관계 및 통일환경, 통일준비의 필요성 등을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2009~2012년 통일교육지침서

특히, 2010년까지 일반용과 학교용 크게 2종으로 발간하였으나, 2011년 《통일교육지침서》는 학교 급별 안내를 위하여 학교용을 초·중·고등학교

용 3종으로 나누어 일반용과 함께 총 4종으로 발간하였다. 하지만 2012년에는 지침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다시 일반용과 학교용 2종으로 발간하면서 학교용에서 학교 급별 수준에 맞는 내용을 각각 수록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2011년부터는 발간 부수를 대폭 확대하여 전국 초·중·고등학교 등 일선 통일교육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총 10만 부를 보급하였다.

한편 정부는 통일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그동안의 통일교육을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2011년 7월 6일에는 「통일미래를 준비하는 통일교육 발전 심포지엄」, 2012년 5월 1일에는 「통일교육 발전을 모색하는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여 통일교육위원을 비롯한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통일교육 활성화와 발전방향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실시하였다. 심포지엄과 포럼에서는 참가자 간에 활발한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통일교육이 통일을 준비하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통일교육 발전 심포지엄(2011)



통일교육 발전 모색 전문가 포럼(2012)

1999년에 제정되어 통일교육의 법적 근거가 되는 <통일교육 지원법>은 2005년, 2008년, 2009년과 2011년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8년 개정안은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일교육 심의위원회」를 폐지하면서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 통일교육 기본계획 등 중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하였다.

2009년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통일교육위원 위촉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6조 제3항에 지역 내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제8조를 개정하여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통일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1년에는 2012년 7월에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8조에 나열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2011년 7월 28일에 개정,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 협력체계 구축

정부는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등 학교 교육기관과의 협조체계가 견고히 갖추어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이들과의 업무협의를 강화해 나갔다. 통일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차관급을 포함한 각급 업무협약, 시·도 부교육감 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학교 통일교육 추진방향을 협의하였다.

시·도교육청과는 매년 두 차례에 걸쳐 「통일교육 담당 장학관(사) 워크숍」을 개최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통일교육 실시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2010년 10월에는 「시·도 교육연수원장

워크숍」을 개최하여, 전국 16개 시·도 교육연수원에서 통일교육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였다. 2011년 4월에는 「전국 학생수련원장 워크숍」을 개최하여 23개 학생수련원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통일교육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 통일교육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2009년 12월에 통일교육원은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내의 통일교육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2011년 3월부터는 경기도를 시작으로 9월 광주광역시, 10월 인천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노력을 통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2011년 10월에는 <통일교육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여 각 시·도에 제공하였으며, 시·도 관계자와의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통일교육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정부는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에도 노력하였다. 통일교육원은 2011년 2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한 통일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연수원과 「통일안보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한 통일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었다. 통일교육원 교수 지원, 교육자료 제공 등 지방행정연수원과의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였다. 2011년 7월에는 전국적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학교 통일교육이 현장에서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통일교육원-지방행정연수원 업무협약 체결



통일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업무협약 체결

제2절 통일교육 과정 운영

통일교육 과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국내외에서 운영되고 있다. 오프라인 교육으로는 통일교육원에서 연중 진행하는 「초청교육」과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해외순회교육」이 있으며, 온라인 교육으로는 통일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는 「사이버교육」이 있다.

1. 초청교육

정부는 각종 사회단체 임원·회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 초·중등 교원 및 교장·교감·장학사 등 교육관계자, 미래세대인 청소년과 대학생,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통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초청교육은 △사회 통일교육 과정 △학교 통일교육 과정 △공무원 통일교육 과정 △통일미래 지도자 과정 △통일교육 전문 과정 △통일정책 최고위 과정 △방북안내교육 등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육 과정은 남북관계와 통일환경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 제공, 북한실상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최근 남북관계 상황변화에 기초한 건전한 안보의식 형성, 통일미래 비전의 제시를 통한 긍정적인 통일의식 형성에 역점을 두었다.

이 밖에 관문점, 남북출입사무소, 도라산전망대, 백령도 등과 같은 안보현장을 견학하고, 「하나원」과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시설인 한겨레중·고등학교와 여명학교 등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08~2012년 초청교육 운영 현황

(단위 : 명/회)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인원(명)	5,173	6,155	6,521	6,691	3,763	28,303
반수(회)	90	112	137	128	72	539

* 2012년은 9월 30일 기준

(1) 사회 통일교육 과정

사회 통일교육 과정은 통일교육의 중간전달자라고 할 수 있는 각 지역사회 및 직능단체의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다.

사회 통일교육 과정에는 「통일교육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족통일협의회」 등 통일교육 관련 기관·단체 회원, 「세계평화여성연합」 등 여성계 인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종교계 인사,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간부, 「재향군인회」 안보강사, 민간차원의 대북인도지원 업무 종사자 등이 대상별로 교육에 참여하였다.

사회 통일교육 과정 참가자들에게는 직능별 특색을 고려하여 「통일한국과 종교인의 역할」,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와 해결과제」, 「NGO 대북지원 사례」, 「NGO 활동의 전문성 향상」, 「남북 나눔의 삶과 실천방법」, 「통일교육 발전토론회」, 「남북경협 사례와 발전방향」 등 맞춤형 교과목을 제공하였다.

사회 통일교육 과정 교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GO 활동의 전문성 향상 • NGO 대북지원 사례 • 구 서독 정부의 동독 이탈주민 정책 • 남북경협 사례와 발전방향 • 남북 나눔의 삶과 실천방법 • 대북사업자가 본 북한 •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와 시사점 • 북한 경제구조와 개혁개방 전망 • 북한 식량난과 대북지원 • 북한여성 생활방식과 여성교류 •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관리 •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와 해결과제 •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례 • 북한이탈주민 지원 프로그램과 봉사 • 북한인권 문제와 해결과제 •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 • 영화를 통한 북한사회 이해 • 통일교육 발전토론회 • 통일한국과 종교인의 역할 • 한민족 갈등관리와 국민통합 • 한민족 역사와 통일국가 발전전략
--	---

2008~2012년 사회 통일교육 과정 운영 현황

(단위 : 명/회)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인원(명)	1,846	2,057	2,245	1,891	1,137	9,176
반수(회)	29	42	54	45	20	190

* 2012년은 9월 30일 기준

(2) 학교 통일교육 과정

학교 통일교육 과정은 대학교수, 초·중·고등학교 교장·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사, 미래의 교사인 대학생 등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학교 통일교육 참가자들은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남북관계 현황과 정부의 대북정책, 분야별 북한실상과 북한 핵 문제, 안보환경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 현장에서 직접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학교 통일교육 과정은 교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업사례와 현장체험을 위주로 하되 교사들의 통일준비 역량 강화를 위해 북한의 교육제도, 남북교육통합, 북한이탈주민 문제 등의 교과목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통일환경·북한실상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안보, 북한 핵 문제, 북한인권 등 통일환경과 북한 이해 관련 전문커리큘럼을 보강하였다. 특히 학교교원 대상으로는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분야별 북한실상과 북한 핵 문제, 안보환경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통일교육 전문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핵심전달자인 도덕·사회과 교사를 대상으로 학기 중에는 단기 과정(15시간 1학점)을, 여름방학 기간 중에는 장기 과정(60시간 4학점)을 운영하였다. 특히 장기 과정의 경우는 대북정책, 통일환경 등 기본과목 이외에 학교 통일교육 분야 2과목, 북한 이해

분야 5과목, 통일준비 분야 2과목, 세미나 6회, 사례청취 4회, 특강 4회 등 다양한 전문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된 「청소년 통일교실」은 북한이탈 청소년과 함께 통일에 대한 생각들을 발표·토론하게 함으로써 통일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게 하였다.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2009년이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임을 감안하여, 통일을 가상한 「모의국무회의」를 열어 통일을 위한 각자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성찰하도록 하였다.

학교 통일교육 과정 교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급 학교 통일교육 사례 • 경제난 이후 북한 교사의 현실 • 남북교육 교류 및 통합의 과제 • 도덕·사회 교과에서의 통일교육 • 북한의 각급 학교 교육제도 및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 학생 적응실태와 과제 • 유아를 위한 통일교육의 기법과 사례 •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각급 학교 통일 교육 기법 • 학교 통일교육의 현주소와 실천방안(세미나)
--	---

2008~2012년 학교 통일교육 과정 운영 현황

(단위 : 명/회)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인원(명)	1,452	2,513	2,992	3,128	1,752	11,837
반수(회)	25	44	52	53	30	204

* 2012년은 9월 30일 기준

(3) 공무원 통일교육 과정

공무원 통일교육 과정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4~7급 공무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자, 보안경찰, 비상계획 업무담당자, 신규임용 수습공무원(사무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4~5급 공무원 대상으로 중견간부 공무원반을, 6~7급 공무원 대상으로 중견실무 공무원반을 운영(5~10일 과정)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거주지 보호담당자, 사회복지 업무담당자 및 취업 보호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도 운영하였다.

일선 경찰서에서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보안경찰 교육,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상계획 업무담당자 및 장병정신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정훈장교 교육 등도 실시하였다.

임용 예정 신규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다. 국회사무처에서 수습 중인 입법고시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2일간 교육을 통하여 남북관계 현황과 북핵실상, 한반도 정세 등을 강의하였고, 사법연수원의 통일법학 회원들에게는 통일부 소관 법과 제도에 대하여 브리핑을 실시하였다.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수습 중인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합격자에 대해서도 1일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중앙부처와 지방행정기관 및 공기업 소속 직원으로서 남북교류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남북협상 전문가반이 개설되었다. 남북대화의 특징과 본질, 남북 간 협상 주요 의제·쟁점, 회담 운영 프로세스, 대표단 행동요령 등 회담 관련 실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다자회담 시뮬레이션 및 남북 간 모의회담을 실시하였다.

공무원 통일교육 과정 교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공무원의 선정방식과 행정원리 • 북한의 경찰제도와 실태 • 북한의 행정체제 • 성과주의 인사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세대 장병 통일교육 사례발표 • 자치단체 교류협력 사례와 과제 • 통일부 소관 법제업무 안내
---	--

2008~2012년 공무원 통일교육 과정 운영 현황

(단위 : 명/회)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인원(명)	1,761	1,585	1,145	1,405	752	6,648
반수(회)	30	26	27	23	18	124

* 2012년은 9월 30일 기준

(4) 통일미래 지도자 과정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 및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범 국가 차원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의 국·과장급 공무원과 공기업의 팀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1년 과정의 통일미래 지도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통일미래 지도자 과정은 분야별 전문 강의, 참여학습, 남북교류협력현장, 안보현장 등 현장체험 학습, 구사회주의 국가 체제전환 사례연구, 개인별 정책과제연구, 소양강의, 외국어·정보화교육 등 교육내용을 다양하게 편성·운영하였다. 교육기간 동안 교육생들은 통일문제, 북한실상 등 통일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축적하고, 교육 수료 후 현업에 복귀하여 남북관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및 절차를 배웠다. 또한 남북교류협력 종사자들의 다양한 사업 경험담을 통해 남북협력 사례를 연구하는 등 이론과 체험을 병행하여 학습하였다.

통일미래 지도자 과정 교육 프로그램

구 분	세부 내용
기본교과	통일정책, 북한 이해, 국제관계, 통일과정
참여학습	정책세미나, 현안 문제 토론회, 독서토론, 협상 시뮬레이션, 상호이해와 의사소통 훈련
현장체험	남북교류협력현장, 안보현장, 해외사례연구
정책과제연구	연구계획 수립, 개인연구, 정책과제연구 지도, 발표·평가
소양 및 자기계발	소양교과, 외국어교육, 정보화교육, 체육활동, 사회봉사활동

2008~2012년 통일미래 지도자 과정 운영 현황

(단위 : 명)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인원	35	35	36	36	38	180

* 2012년은 9월 30일 기준



통일미래 지도자 과정 수료식(2008)



통일미래 지도자 과정 입학식(2012)

(5) 통일교육 전문 과정

〈통일교육 지원법〉(2010.4.20., 개정·발효)의 취지에 따라 전문지식과 강의능력을 갖춘 훈련된 통일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개설한 통일교육 전문 과정은 2010년 3개 과정에서 52명, 2011년 3개 과정에서 84명, 2012년 3개 과정에서 71명 등 총 207명을 양성하였다.

2010년 「통일교육 전문 과정」은 청소년들에게 ‘미래지향적 통일관’을 정립시키고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을 확립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하는 「눈높이 통일교실 전문 과정」,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적실성 있는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강사 양성과정인 「사회 통일교육 강사 전문 과정」, 학교교원을 대상으로 학교에서의 ‘통일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학교교원 전문 과정」 등으로 운영하였다. 2011년에는 「학교교원 전문 과정」 대신 북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증적 북한실상을 교육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강사 전문 과정」을 새로 개설하여 2012년 5월에 진행하였다.

통일교육 전문강사 과정 양성 운영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눈높이 통일교실 (학교교원)	사회 통일교육 강사	북한이탈주민 강사	계
2010	21	31	-	52
2011	21	37	26	84
2012	21	-	50	71
계	63	68	76	207

* 2012년은 9월 30일 기준



사회 통일교육 강사



눈높이 통일교실

(6) 통일정책 최고위 과정

한반도 통일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실질적인 통일준비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게 부각되었다. 이에 정부는 우리 사회 지도층과 함께 통일 준비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 위하여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2012년에 「통일정책 최고위 과정」을 개설하였다.

2012년 3월에 시작된 제1기 과정에는 학계, 언론계, 기업, 문화체육계, 법조계, 고위공무원 등 우리 사회 각계의 지도층 39명이 참석하였다. 3월에는 류우익 통일부장관과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 4월에는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5월에는 주평(朱鋒) 중국 베이징대 교수가 특강을 실시하였다. 특히, 4월 20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철학과 통일의 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2012년 9월부터는 제2기 과정을 운영 중이며, 총 36명이 과정에 참석하고 있다. 제1기와 동일하게 통일정책, 통일외교안보 분야 특강이 진행되며, 교육생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북한정세, 한반도 통일경제 등의 주제로 세미나 과목을 신설하였다.

제1, 2기 통일정책 최고위 과정 일정

구분	1기 교육일정(2012.3.2.~5.26.)	2기 교육일정(2012.9.13.~11.15.)
제1강	통일정책과 통일준비(류우익 통일부장관)	통일정책과 통일준비(류우익 통일부장관)
제2강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가안보 전략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	「북한정세와 변화 전망」 세미나 (남성욱 민주평통 사무처장 발제 등)

구분	1기 교육일정(2012.3.2.~5.26.)	2기 교육일정(2012.9.13.~11.15.)
제3강	대북정책 목표와 한반도의 장래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한반도 통일과 한국 경제」 세미나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발제 등)
제4강	통일철학과 통일의 과제(이명박 대통령)	판문점, 출입사무소, 도라전망대 견학
제5강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관점 (주평 베이징대 교수)	대북정책 목표와 한반도의 장래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제6강	판문점, 출입사무소, 도라전망대 견학	통일이 독일에 가져온 변화와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Rolf Mafael 주한독일대사)



이명박 대통령 특강(2012.4.20.)



통일부장관 특강(2012.3.2., 9.13.)

(7) 방북안내교육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북한방문 예정자들을 위해 북한 지역 방문에 필요한 절차와 준비사항, 북한 체류 시의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방북안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방북안내교육」은 통일교육원에서 매주 2회(화·목요일) 실시하는 「정례교육」, 방북 예정자 요청 시 현지에 출장하여 실시하는 「특별교육」,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매일 출경 전 실시하는 「영상교육」 등으로 분류한다.

한편 정부는 방북 예정자들이 3~4시간 방북교육을 받기 위하여 통일교육원을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이버 방북교육 시스템 및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특히 2008년 5월에 이명박 정부의 「국민생활불편 해소 100개 과제」로 「방북교육의 사이버 방북교육으로의 전환」이 포함됨에 따라 2009년 1월부터 사이버 방북교육 과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집합 방북안내교육은 점차 감소하게 되어 2011년부터는 전체 방북 예정자가 사이버를 통해 방북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관광객의 신변안전 강화를 위하여 북한 지역 체류 시 언행 등 유의사항 중심으로 영상물을 제작·보급하였다. 아울러 《방북 유의사항 핵심내용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였으며, 사업자교육용 영상물인 《평화와 협력을 위한 방북안내》를 수정·보완하였다. 또한 대북업무 및 출입경 담당 부서와 정보를 공유하여 현안발생 시 교육 자료를 수정하였다.

2008~2012년 방북안내교육 운영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집합	24,685	1,378	190	-	-	26,253
사이버	-	5,376	4,813	4,364	4,550	19,103

* 2012년은 9월 30일 기준



사이버 방북안내교육

2. 해외 순회교육

정부는 재외동포가 조국애와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재외동포사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재외동포를 국내로 초청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2009년에는 미국 시카고·시애틀, 캐나다 밴쿠버를 방문, 현지 교포사회 지도층 인사를 초청한 가운데 세미나를 겸한 통일교육을 실시하여 남북관계 현황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켰다. 2011년에는 한반도의 통일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한국외대, 서강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재학 중인 해외유학생뿐만 아니라, 미국 초·중·고 교장단과 말레이시아 말라야 대학생 등 재외외국인도 초청하여 통일정책 설명회를 갖고 판문점 등 분단현장도 방문하였다. 2011년 하반기에는 재외동포사회를 찾아가는 교육으로 스웨덴 스톡홀름, 덴마크 코펜하겐, 독일 함부르크, 브라질 상파울루,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파라과이 아순시온 등을 방문하여 각 지역 교포들에게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을 설명하였다. 2012년에는 미국 워싱턴, 뉴욕, LA를 방문하여 통일교육위원 등 교포를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갖기도 하였다.



해외유학생 대상 통일정책 설명회(2011, 한국외국어대학교)

3. 사이버 교육

2000년부터 「사이버 통일교육센터」(www.uniedu.go.kr)로 운영되고 있던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명칭을 2008년 8월 통일교육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통일교육원」으로 변경하였다. 사이버 교육내용으로는 교원 교육, 공무원 교육, 사이버 방북교육 등이 있다.

「교원 사이버 과정」은 2003년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원격 교육연수원」으로 인가를 받은 이래 초·중·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통일교육 직무연수 과정」을 운영해 왔다. 2004년부터 30시간(2학점)의 단기 과정을, 2006년부터 60시간(4학점)의 장기 과정을 편성·운영하였다. 사이버 교육의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2009년에는 장·단기 과정 이수자들이 남북 분단 및 교류의 현장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편 장기 과정 교원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도 병행하였다. 집합교육은 통일문제와 대북정책에 대한 특강,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등으로 구성하였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2007년 9월 공무원 대상 원격 통일교육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2007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공무원 사이버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점을 인정하는 교원과는 달리, 공무원 사이버 교육은 행정안전부에 의하여 상시 학습 시간을 인정받게 된다. 공무원 사이버 과정은 「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 등 2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8~2012년 사이버 교육 운영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교원	3,042	3,477	3,004	2,296	2,099	13,918
공무원	4,656	4,482	3,507	2,585	1,808	17,038

* 2012년은 9월 30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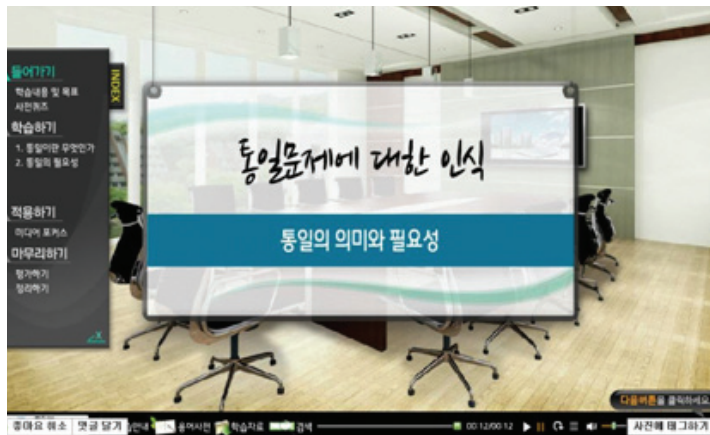


교원 사이버 과정



공무원 사이버 과정

2011년 10월에는 「열린 통일강좌」를 개설하여 그동안 수강대상이 교원, 공무원에게 제한되었던 사이버 강좌를 민원인들의 요청에 따라 일반 국민도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열린 통일강좌

제3절 통일교육 지원

정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 통일교육」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 통일교육」으로 크게 대별하여 각종 통일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1. 학교 통일교육 지원

정부는 청소년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초·중·고교 학생에게 맞춤형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통일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였다.

정부는 2008년 청소년들이 올바른 통일의식 및 통일 관련 기본소양을 함양하고 통일미래를 준비하고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청소년 통일교육 강화 T/F」를 통일교육원 내에 구성·운영하였다. 「청소년 통일교육 강화 T/F」는 각 시·도 교육청과 각급 학교의 협조를 얻어 청소년 통일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교육과 학기술부, 일선 초·중·고 및 통일교육 교사, 정책자문위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소년 통일교육 강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학교에서의 통일교육 기회 확대 노력, 통일교육 담당 교육 관계자 대상 지원 강화, 청소년 통일교육 자료 보급 및 활용 증대, 통일교육 지원제도 및 예산 확충 등 세부 대책을 마련하여,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1) 참여·체험 프로그램

정부는 2010년에 6·25 전쟁 6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평화통일대행진」을 실시하였다. 동 행사에는 국내외 청소년 총 625명이 참가하여 7월에 6·25 전쟁 전적지와 전방지역을 답사하였다. 서울을 출발하여 강원도 고성, 양구, 화천, 철원, 연천, 동두천을 거쳐 임진각까지 행진하는 동부경로와 강화, 김포를 거쳐 임진각까지 행진하는 서부경로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행사기간 동안 학생들은 「통일 골든벨」, 「평화올림 열린음악회」, 「화합의 밤」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2011년에도 7월에 국내외 청소년 328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회 「평화통일대행진」을 실시하였다. 이 행사를 통하여 청소년의 통일안보의식을 제고하고 통일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동부경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서부경로는 중학생으로 나누어 각각 전방지역 현장체험과 통일리더십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전방지역 현장체험으로는 △판문점·남북출입사무소 △군부대 병영체험·도보행진 △생태트래킹 등을 실시하였고, 통일리더십 프로그램에서는 △통일 골든벨 △팀별 통일주제 발표 등을 실시하였다. 「평화통일대행진」이 끝난 후에는 △참가 소감문 공모전 △행사 기록물 발간 △「평화통일대행진 운영진 캠프」 등 사후 행사를 개최하였고, 특히 2011년 12월에 개최된 「통일미래리더캠프」에서는 신형원 교수(가수)의 통일강의를 비롯하여 참가자 96명을 ‘통일미래리더’로 위촉하기도 하였다.



2011년 평화통일대행진

또한 「청소년 통일미래 글로벌 리더십 캠프」를 2011년 8월에 강원도 인제군 「한국DMZ 평화생명동산」에서 개최하였다. 통일문제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 100명이 참가한 가운데 「통일비전 스피치대회」, 「통일 골든벨」, 통일특강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캠프 중에 을지전망대, 제4땅굴, 펀치볼 등을 둘러보며 남북관계의 생생한 현장을 체험하였다.



청소년 통일미래 글로벌 리더십 캠프

동 체험프로그램은 2012년에 「통일한마음캠프」와 「통일미래리더캠프」로 개편하여 참가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 「통일한마음캠프」는 전국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각 시·도당 48회에 걸쳐 각 100명씩 총 4,800명이 참가하였다. 「통일미래리더캠프」는 북·중접경 지역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제1차 캠프는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6박 7일간의 일정이며 대학생 80명과 통일부 상생기자단 19명은 6월 29일은 경기도 파주에서 발대식을 갖고, 6월 30일 중국을 향해 출발하였다. 제2차 캠프는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역시 6박 7일간 대학생 99명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제3차 캠프는 8월 9일부터 15일까지 6박 7일간 중·고생 99명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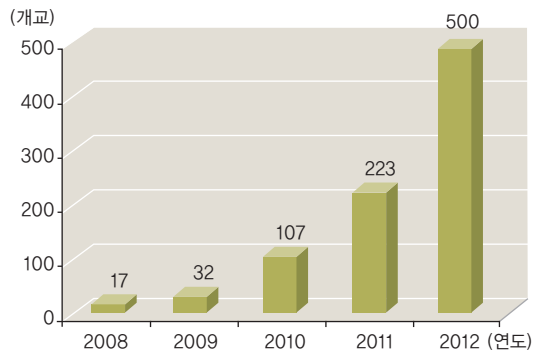
(2) 찾아가는 교육

「초·중·고 대상 특강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여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통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학교 통일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위하여 통일부 직원, 눈높이 통일교육 강사, 북한이탈주민 등이 「1일 통일교사」가 되어 학교를 직접 방문하였다.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청소년 통일교실」은 총 59회, 1만여 명,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은 총 379회, 11만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은 학교 현장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2008년 17회, 2009년 32회, 2010년 107회, 2011년 223회에 이어 2012년은 500개교를 목표로 9월 기준 40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08~2012년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 실시 현황



(3) 통일문화 페스티벌

2008년 10월에 ‘하나 되는 우리, 함께하는 미래’라는 주제로 학생 및 시민 3,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4회 통일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2005년부터 시작하여 2008년 4회를 맞은 「통일문화 페스티벌」은 초·중·고교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통일·북한 관련 문화행사와 통일교육의 접목을 통하여 통일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북한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행사기간 중 「통일퀴즈왕 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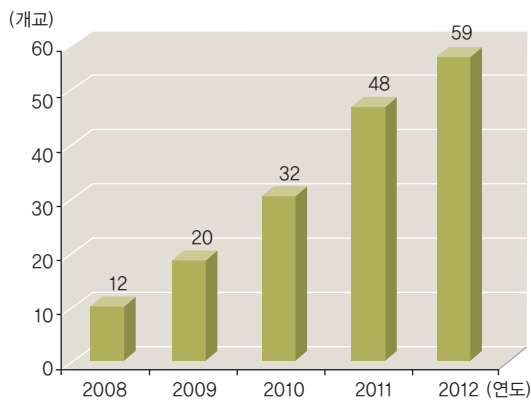
「청소년 통일 UCC」, 「상생·공영 4행시 짓기」, 「통일갤러리」, 「통일놀이마당」, 「북한음식 체험전」, 「북한영화 상영」, 「남북전래동화 구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009년에는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통일문화 페스티벌」이 열리지 못했고, 2010년부터는 「평화통일대행진」 행사의 일부로 한국방송공사(KBS)의 「열린음악회」가 개최되었고, 2011년에는 문화방송(MBC)의 「아름다운 콘서트」와 함께 문화행사를 진행하였다.

(4) 우수사례 발굴·확산

정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각종 통일교육 교재와 자료를 지원하였다. 통일교육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확산하기 위한 「통일교육 연구시범학교」 사업은 매년 확대되어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총 171개 학교를 지정하였고, 특히 2011년부터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각 시범학교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2008~2012년 통일교육 연구시범학교 지정 현황



2012년 통일교육 연구시범학교

시·도명	학교명
서울(4)	동일초, 광남초, 공릉초, 양재고
부산(2)	남천초, 감천중
대구(2)	대구진월초, 대구일중
인천(5)	인천학산초, 하점초, 인천남중, 대청중고, 연화중
광주(1)	송정서초
대전(3)	대전송강초, 대전용운중, 대성중
울산(3)	월평초, 대현중, 범서고
경기(6)	문산초, 탑동초, 두일초, 금릉중, 풍덕고, 매원고
강원(4)	상평초, 방산초, 임계중, 간동고
충북(5)	서촌초, 소태초, 장락초, 미원중, 보은정보고
충남(2)	대관초, 반포중
전북(5)	고창남초, 발산초, 이백초, 군산자양중, 이리여고
전남(3)	웅치초, 영광여중, 임자중고
경북(8)	물야초, 청하초, 양북초, 효령초, 오천초, 영창중, 현서고, 김천상고
경남(3)	수산초, 명곡여중, 김해대청고
제주(3)	우도초, 남광초, 추자중

2008년 11월에 시범학교와 일반학교를 구분하여 통일교육 교사들의 우수한 교육 사례를 발굴하고 정보공유 등을 위하여 「학교 통일교육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2009년과 2010년에 중단되었던 「학교 통일교육 우수사례 발표회」는 2011년에 「통일교육 우수사례 경진대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탄생되었다. 2011년 10월에 개최한 「통일교육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는 초·중·고 교사 66명이 참가하여 다양한 통일교육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특히, 2012년에는 초·중·고 교사 79명이 참가하였으며, 10월 29일 최종심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1년 통일교육 우수사례 경진대회

(5) 전국 학생 통일글짓기 대회

정부는 청소년 세대로 하여금 분단의 아픔을 느끼고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1996년 이래 통일부가 주최하고 시·도 교육청 및 각 지역 통일관이 주관하는 「전국 학생 통일글짓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에는 총 5,830개 학교에서 100만 149명이 참가하였으며 총 144명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2009년에는 총 5,887개교에서 111만 2,719명, 2010년에는 총 5,534개교에서 105만 7,311명, 2011년에는 총 5,106개교에서 63만 3,427명, 2012년에는 총 5,803개교에서 91만 6,082명의 학생이 참가하였다.

(6) 학교 통일교육 발전 워크숍

정부는 지역별 통일교육 담당교사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통일교육 사례·기법을 공유하며 학교 통일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학교 통일교육 발전 워크숍」을 개최해 왔다.

2008년 「학교 통일교육 발전 워크숍」은 ‘새 정부 출범과 통일교육’이라는

대주제하에 총 5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각 지역 교육청 인사 및 초·중·고 통일교육 담당교사 등 총 2,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대구·인천·대전·수원에서 개최된 워크숍에서는 각 지역의 교사 중심으로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필요시 관련 전문가와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하여 깊이 있는 토론을 유도하였다. 또한 통일교육원 교수가 남북관계 현안과 상생·공영정책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였다. 2009년에는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하에 총 5회에 걸쳐 충남·충북·경북·강원·제주에서 개최하여 총 1,547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 대상 초청연수」(8회, 505명), 학교 관리자 대상 지역 「통일강좌」(3회, 1,720명), 「통일교육 교사 대상 워크숍」(2회, 106명)을 개최하였다. 2010년에는 ‘학교 통일교육 내실화 방안’을 주제로 전북·대전·대구·광주·인천 등 5개 시·도에서 「학교 통일교육 발전 워크숍」을 개최하여 총 1,670명이 참석하였다. 2011년에는 ‘새로운 정세 환경에 부응하는 통일교육 내실화’를 주제로 울산·경남·제주·경기·전남에서 개최하여 총 1,470명이 참석하였다. 2012년에는 국민적 통일준비 확산을 위하여 ‘찾아가는 통일교육’이라는 주제로 충북(6.15.), 경북(8.17.), 강원(9.28.)에서 개최하였고, 11월에는 충남에서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7) 대학(원)생 대상 통일교육

이명박 정부는 대학(원)생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및 이해를 제고하고 건전한 통일관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대학사회 내 통일 및 북한 문제에 대한 논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1982년부터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를 개최해 오고 있다. 2008년에 전국의 대학에서 총 54명이 47편의 논문을 응모하였으며, 2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 최종 6편의 입선작을 선정·시상하였다. 2009년에는 총 81명이 67편의 논문을 응모하여 최종 7편을 선정·시상하였고, 2010년에

는 총 98명이 74편을 응모하여 11편을 시상하였다. 특히 2011년에는 통일논문 공모전 30주년을 맞이하여, 총 52편의 통일논문 공모작 중에서 최우수 1편, 우수 4편, 장려 6편을 선정하였다. 또한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해외체험연수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2012년에는 5~8월 접수 후 응모마감 결과 총 138명이 110편을 응모하였으며, 최우수 1편, 우수 4편, 장려 8편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대학(원)생 통일논문 공모 시상식(2011)

또한 정부는 「대학생 통일포럼」의 개최를 지원하여 대학생이 발표와 토론을 통해 주도적으로 통일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계기를 제공하였다. 2008년 10개 대학, 2009년 15개 대학, 2010년 18개 대학, 2011년 21개 대학에서 개최하였다. 2012년에는 총 10여 개 대학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06년부터 남북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전국의 각 대학 북한학과 학생들이 참가하는 「북한학과 합동워크숍」을 개최하여 2008년에는 4개 대학, 70여 명의 대학생들이 ‘우리 시대를 위한 새로운 통일담론의 제시’, ‘남남(南南)갈등 분석과 해결방안’, ‘소프트파워를 활용한 대북정책 방안 모색’ 등을 토론하였다.

2009년에는 ‘미래지향적 통일비전에 대한 고찰’, ‘남북한 군사협상 의제 연구’,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 등을 주제로 8개 대학의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5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정부는 「북한학과 합동워크숍」을 보다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2010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2011년부터는 「대학생 통일아카데미」로 새롭게 탈바꿈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1년에 처음으로 경남대·동국대·영남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중앙대 등 7개 대학교에서 「대학생 통일아카데미」 개설을 지원하였으며, 강좌로는 「통일환경」, 「남북관계」, 「북한실상」, 「통일미래 비전」 및 「통일준비」 등이 있다. 「대학생 통일아카데미」는 5주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2012년에는 북한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3개 대학교(고려대·동국대·명지대)를 중심으로 5월부터 진행하여 10월에 마칠 예정이다.

(8) 남북청소년 교류센터 건립

이명박 정부는 2008년 5월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의 실천사업으로 청소년체육시설 건립을 처음으로 구상하였다. 이후 많은 회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11년 비로소 「남북청소년 교류센터 건립사업」에 착수하였다. 2011년 7월 26일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서 남북협력기금 521억 원에 대한 심의·의결을 받았다. 이어서 「남북청소년 교류센터 건립 TF」를 구성·운영하였으며, 2011년 10월 24일 통일부·경기도·연천군 간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남북청소년 교류센터 건립사업」은 2012년 10월 착공하여 2014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설계, 부지매입, 인허가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 「남북청소년 교류센터」는 △DMZ 평화적 이용의 거점 공간 조성 △남북청소년 교류를 통한 남북청소년 공동 문화 형성의 발판으로 활용 △청소년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통일미래 대비 현장학습센터 등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 사회 통일교육지원

정부는 사회 통일교육을 통해 국민의 통일의지를 결집하고 통일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일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통일교육위원을 구성하고, 「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협의회」, 「통일관」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 통일교육위원

정부는 1987년 통일부 훈령으로 <통일교육 전문위원 관리규정>을 제정, 통일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강의능력을 갖춘 지역사회 인사를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하여 통일문제 및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과 지역사회 여론수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통일교육위원들의 교육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청 연찬교육」, 「통일대화의 광장(포럼 명칭)」, 「구 사회주의권 체험연수」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북정책 동영상 및 책자, 통일신문 등 각종 자료 제공, 지역협의회 주관 세미나 등 교육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연말에는 교육활동 실적이 뛰어난 통일교육위원에 대해 훈·포장 등 정부 포상 및 통일부장관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통일교육위원들의 사기를 진작하였다.

제16기 통일교육위원(2007.5.~2009.4., 임기 2년)은 중앙 및 16개 시·도 협의회별로 총 1,148명으로 구성되었다. 제16기 통일교육위원까지는 법적 근거 및 예산 지원(보조금) 없이 운영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충하고, 통일부와 지역 간 유기적 정책 소통체계 구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통일교육위원 근거 규정을 법제화하고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09년 10월에 ‘통일교육위원 위촉 및 활동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지원법>을 개정하였으며, 동 법률은 2010년 4월에 발효되었다. 이러한 법

제화 과정 중에 2010년 2월 제17기 통일교육위원(2010.2.~2012.1., 임기 2년)을 위촉하였다. 예산 또한 반영되어 통일교육위원 중앙협의회 및 16개 시·도별 지역협의회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사무실 임차 및 인건비 등 협의회별 평균 연 3,000만 원, 총 연 5억 원)을 확보하였다.

2012년 2월 1일에는 제18기 통일교육위원으로 1,063명을 위촉하였다. 특히, 제18기에는 처음으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4개국 7개의 도시(워싱턴·뉴욕·LA·북경·선양·도쿄·모스크바)에 총 73명의 해외위원을 위촉하여 해외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제17기 통일교육위원 협의회 회장단 워크숍

(2)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 지원

정부는 2004년부터 통일 관련 교육 기회, 시설 및 정보 등 통일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사회에 통일교육 프로그램 및 정보를 제공하고자 통일교육 관련 단체, 시설을 대상으로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지역통일교육센터」에 대해 전년도 교육실적, 사업·재정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 왔다. 그리고 「지역통일교육센터」가 효율적인 통일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위원 16개 지역협의회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8년에는 전국의 10개 지역을 중심으로 통일교육 역량을 갖춘 대학연구소(5개), 통일교육위원 지역협의회 등 단체(5개)를 「지역통일교육센터」운

영 주체로 지정하였다. 지정된 「지역통일교육센터」는 한 해 동안 총 217회 (정기 시민통일강좌, 통일문화 축제 등 70개 사업, 4만 6,614명 교육)의 통일 교육을 실시하였다. 2009년에는 시민강좌, 통일교육 워크숍, 지역축제와 연계된 통일문화축제, 통일경진대회, 통일현장체험, 자료 제작,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등 총 236회의 통일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 통일교육 활성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2008~2009년 지역통일교육센터 현황

권역	센터명(소재지)	운영 주체
영남(3)	부산(부산)	통일교육위원 부산협의회
	경남(진주)	통일교육위원 경남협의회
	대구·경북(대구)	경북대 평화문제연구소
충청(2)	대전(대전)	(사)대전 통일교육협의회
	충남·충북(천안)	단국대 정책과학연구소
호남(2)	광주·전남(목포)	통일교육위원 전남협의회
	전북(전주)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통일교육센터
강원(2)	강원 동부(속초)	코리아하나재단 설악수련원
	강원 서부(춘천)	한림대 국제문제연구소
제주(1)	제주(제주)	제주대 평화연구소
합 계		10개

2010~2011년 지역통일교육센터 현황

권역	센터명	운영 주체
영남(6)	부산	통일교육위원 부산협의회
	대구	통일교육위원 대구협의회
	울산	통일교육위원 울산협의회
	경북	통일교육위원 경북협의회
	경북남부	경북대 평화문제연구소
	경남	통일교육위원 경남협의회
수도권(3)	서울	통일교육위원 서울협의회
	인천	통일교육위원 인천협의회
	경기	통일교육위원 경기협의회

권역	센터명	운영 주체
충청(3)	대전	통일교육위원 대전협의회
	충북	통일교육위원 충북협의회
	충남	단국대 정책과학연구소
호남(3)	광주	통일교육위원 광주협의회
	전북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전남	통일교육위원 전남협의회
강원(2)	강원	통일교육위원 강원협의회
	강원동부	코리아하나재단 설악수련원
제주(1)	제주	통일교육위원 제주협의회
기타(1)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합계	19개	

2012년 지역통일교육센터 현황

권역	센터명	운영 주체
영남(5)	부산	통일교육위원 부산협의회
	대구	통일교육위원 대구협의회
	울산	통일교육위원 울산협의회
	경북	통일교육위원 경북협의회
	경남	통일교육위원 경남협의회
수도권(4)	서울	통일교육위원 서울협의회
	인천	통일교육위원 인천협의회
	경기북부(대진대)	통일교육위원 경기협의회
	경기남부(여성비전센터)	
충청(3)	대전	통일교육위원 대전협의회
	충북	통일교육위원 충북협의회
	충남	통일교육위원 충남협의회
호남(3)	광주	통일교육위원 광주협의회
	전북	통일교육위원 전북협의회
	전남	통일교육위원 전남협의회
강원(1)	강원	통일교육위원 강원협의회
제주(1)	제주	통일교육위원 제주협의회
합계	17개	

2010년에는 전국 19개 「지역통일교육센터」의 586회 통일교육 프로그램에 17만 8,540명이 참가하였고, 2011년에는 전국 17개 「지역통일교육센터」에 총 800회 14만 6,870명이 참가하였다. 2012년에도 전국 17개 「지역통일교육센터」가 지정되어 지역별로 통일 관련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 2012년 2월에 「지역통일교육센터」와 「통일교육위원 지역협의회」를 통합한다는 원칙에 따라 경기 지역만 2개 센터로 나누고, 나머지 15개 시·도에는 각 1개씩 총 17개 센터를 새롭게 지정하였으며, 현재 각 센터별로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2008~2011년 지역통일교육센터 활동 현황

(단위 : 회/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합계
횟수(회)	217	236	586	800	1,839
인원(명)	46,614	39,650	178,540	146,870	411,674

(3) 통일교육협의회

「통일교육협의회」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협의·조정, 상호 간 협력증진 등을 목적으로 2000년 12월에 설립된 민간 통일교육단체 협의체이다. 「통일교육협의회」는 다양한 통일교육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 통일교육단체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통일교육협의회」 본부 및 분과위원회(시민·여성·청소년)는 워크숍, 포럼 등을 개최하여 회원 상호 간 이해와 소통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정부는 「통일교육협의회」 소속단체의 통일교육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지원 및 각종 교재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08년에는 95개의 통일교육단체가 가입되어 「통일교육협의회」 본부 차원에서 통일교육 포럼, 통일교육 사례발표, 대학생 통일캠프, 통일교육 자료집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여성·시민·청년·청소년·정책개

발 등 분과위원회에서는 「여성통일 워크숍」, 「시민분과 토론회」, 「통일교육 활성화 워크숍」, 「청소년 담당자 워크숍」, 「청소년 통일 영상제」 등의 대상별 통일교육 사업도 실시하였다. 지역 「통일교육협의회」 차원에서도 지역주민 대상 「열린 시민강좌」, 「평화통일문화제」 등을 개최하였다. 2009년에는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통일교육 사업을 공모하여 43개 응모단체 중 평화문제연구소 등 33개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 강연·강좌 91회, 포럼·워크숍·토론회 22회, 경진대회 등 행사 7회, 통일기행·현장체험 18회 등 138회(1만 1,164명)의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2010년과 2011년에는 청소년 통일 의식 조사 등 통일교육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통일교육 사례집 등 통일교육에 대한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2010년에는 149회에 걸쳐 1만 3,182명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였고, 2011년에는 143회에 걸쳐 1만 5,552명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2012년 9월 기준 「통일교육협의회」에는 66개 단체들이 회원으로 참가해 활동하고 있다.

「통일교육협의회」는 그동안 내·외부로부터 제기되어 온 협의회 운영방식, 회원단체 지원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2009년 3월 「통일교육협의회」 운영 구조를 정비하는 등의 자체적인 개선 노력을 하였다. 또한 회원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확대·강화하는 등 회원단체의 통일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지원하였다.

(4) 통일관 운영 지원

「통일관」은 현재 서울·부산·광주·대전·제주 등 13개 지역에서 북한·통일 관련 자료 전시와 행사 개최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통일교육 체험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과 청소년들의 미래지향적 통일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 있다. 「통일관」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는 각종 전시물, 북한 관련 특수자료 및 영상자료 등의 전시자료를 지원하고 있다.

2008년에는 청소년층 및 실향민 등을 중심으로 약 300만 명이 「통일관」을

관람하였으며,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에 「서울통일관」을 새로 개관하여 특히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통일교육 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2009년에는 경기침체, 신종플루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층 및 실향민 등을 중심으로 약 250만 명이 「통일관」을 관람하였다. 2011년에는 「부산통일관」과 「경남통일관」을 대상으로 노후화된 전시관을 리모델링하여 「통일관」의 통일교육 효과를 증가시켰다. 또한 2012년에는 「오두산 통일전망대」 시설 개보수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통일관 운영 현황

지역	통일관	개관일	운영 주체
강원	고 성	1988.6.16.	(주)고성통일전망대
	양 구	1996.8.14.	양구군청
	철 원	1990.12.15.	철원군청
수도권	인 천	1994.12.15.	한국자유총연맹(인천지회)
	오두산	1992.9.8.	(주)동화진흥
	서 울	2008.10.29.	서서울생활과학고
충청	대 전	2001.8.11.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청 주	1993.2.23.	청주시 청주랜드 관리사업소
	충 남	2007.4.5.	한국자유총연맹(충남지회)
호남	광 주	1989.3.10.	통일교육위원 광주협의회
영남	부 산	1989.1.30.	한국자유총연맹(부산지회)
	경 남	1998.4.29.	한국자유총연맹(경남지회)
제주	제 주	1993.12.18.	한국자유총연맹(제주지회)



경남통일관 리모델링 개관식(2011)

제4절 통일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정부는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 있는 북한관’ 확립이라는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국민들이 통일문제와 북한실상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일교육 자료를 개발해 왔다.

또한 매년 통일교육 교재를 비롯하여 각종 참고자료와 영상자료 등을 발간·제작하여 각급 학교 및 사회통일 교육기관, 초청 교육생, 일반 국민들에게 배포해 왔다.

1. 교재 발간

정부는 통일 및 대북정책, 남북관계 등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의식을 제고하고 북한실상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매년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를 발간하고 있다.

2008년 판 《통일문제 이해》는 이명박 정부의 통일방안 및 대북정책, 통일환경, 남북관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대북정책이 제기된 배경과 정책비전, 추진원칙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고,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추진상황을 객관적·균형적 관점에서 재평가하였다. 《북한 이해》는 북한의 정치·외교·군사·경제·사회·문화·주민생활 등 분야별 실상을 사실적으로 해설하였으며, 당시 북한의 대내외 상황을 추가하고 사진과 도표 등 시각자료를 보완하였다.

2009년 판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는 기본적으로 2008년도 교재의 구성 체계와 내용을 유지하면서 남북관계, 북한 및 주변정세 등의

변화 동향을 반영하여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2009년에는 위의 두 교재를 처음으로 일선 중·고등학교에 보급하기도 하였다.



2009년 통일교육원 발간 기본교재

2010년 판 《통일문제 이해》는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 남북관계 현황, 분단국의 통일사례와 통일미래 비전 등에 대한 내용을 보강하였고, 「한반도 새로운 평화구상」과 「그랜드 바겐」의 내용과 의미를 새로 추가하였다. 2010년 판 《북한 이해》는 북한의 시장통제와 화폐개혁 등 계획경제 강화 동향을 보완하였으며, 북한의 정치체제의 형성, 사회통제와 인권 실태 등에 대한 내용을 새로 추가하였다. 2010년에는 《통일문제 이해》 4만 3,000부, 《북한 이해》 4만 5,000부를 발간하여, 전국 중·고등학교에 1만 8,000부를 보급하는 등 수요가 많은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대학교, 도서관, 연구기관, 통일유관기관·단체 등에 보급하였다.



2010년 통일교육원 발간 기본교재

2011년 판 《통일문제 이해》는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구체화하고,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의 도발로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정세를 반영하였으며,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을 비롯한 통일준비 노력 등 정부의 통일정책과 통일편익 및 통일한국의 미래비전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2011년 판 《북한 이해》는 협력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적대적 대상인 북한의 이중적 존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당대표자회 및 3대 권력세습 동향을 추가적으로 기술하는 한편 6·25 남침 등 북한의 대남 침투·도발 실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는 화폐개혁 및 장마당 현황, 제도와 현실의 괴리 현상 등을 반영하여 내용을 대폭 보완하였다. 2011년에는 발간부수를 각 12만 5,000부로 크게 늘려 수요가 많은 교육기관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하였다. 또한 처음으로 일선 초등학교 및 군부대에 《통일문제 이해》 및 《북한 이해》를 보급하였으며, 중·고등학교에도 보급을 대폭 확대하여 청소년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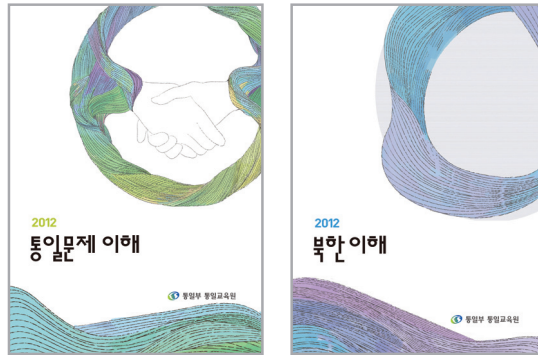


2011년 통일교육원 발간 기본교재

2012년 판 《통일문제 이해》는 대북정책의 유연성 확대, 통일준비 노력, 2012년 중점 추진과제, 변화된 주변정세 및 통일환경 등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였다. 2012년 판 《북한 이해》는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 후계체제 구

축 동향, 미국·북한대화, 대(對)중국·러시아 접근동향, 화폐개혁 실패 이후 경제 실상 등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였다.

2012년에도 각각 12만 5,000부를 발간하여 각 교육기관, 군부대 등에 보급하였다. 한편 2012년 9월 기준 통일교육 기본교재를 강의교재로 활용하는 대학이 40여 개에 이르고 있다.



2012년 통일교육원 발간 기본교재

2. IPTV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정부는 2009년에 미디어 세대인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통일교육 담당 교사, 통일교육 전문가,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 및 통신 3사, 학교 일선 현장 및 IPTV·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IPTV를 활용한 통일교육의 기본 구상을 마련하였다. 2010년에는 「맞춤형 IPTV 교육서버」에 탑재할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에 본격 착수하였다. 아울러 각 학급에 구축된 「맞춤형 IPTV 교육서버」를 활용한 학교 IPTV용 통일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에 교과보조용 영상 130편, 재량활동용 영상 42편, 특별기획 프로그램 8편 등 총 180편을 개발하였다. 2011년에는 교과보조용 영상 47편, 창의적 체험학습활동용 영상 42편, 특별기획 프로그램 15편 등 총 104편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각 학교에 보급하였다. 2011년 8월 27일에는 한국방송공사(KBS)의 개그콘서트 형식을 접목, 통일에 대하여 이야기한 「통일콘서트」를 개최하였고, 이를 특별기획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IPTV 교육용으로 활용하였다.

2010년 학교 IPTV용 특별기획 프로그램 목록

구분	주제	제목
시기별	독일통일 20주년	통일리porter, 통일독일 가다
	명절	통일 한마당
	연말	랭킹쇼! 우최통(우리가 뽑은 최고의 통일 궁금증)
이슈별	감성접근	U & I(Unification & I)
	북한도발사	시사다큐
	북한이탈 청소년	통일의 작은 실험실, 셋넷학교(휴먼 다큐)
	통일과 미래	미리 보는 통일한국, 통일경제
이벤트	다큐 버라이어티	우리가 만든 통일노래



학교 IPTV용 통일교육 콘텐츠

2011년 학교 IPTV용 특별기획 프로그램 목록

장르	제목
감성영상	U & I 1편 - 작전명 폭풍 / 2편 - 잃어버린 보물 / 3편 - 통일 상상, 그 날
	통일의 의미
공연	통일콘서트(개그콘서트 형식)
다큐	북한인권을 말하다 - '유리병 속 사람들'
	통일 BIG & BIG 공모전 제작기 '소망을 담다' - 1편 : 통일, 우리에게 답이 있다 - 2편 : 우리는 원래 하나였다 - 3편 : 통일한국, 하나 된 미래를 그리다
	통일리포터, 체제전환 국가를 가다 '체코편' / '폴란드편' / '헝가리편'
다큐+드라마	꿈을 지키다
애니메이션	통일 애니 1편 - 아기돼지 삼형제 / 2편 - 피노키오의 통일성 대모험

3. 다양한 교육자료 개발

이 외에도 정부는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통일문제와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도서, 영상,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자료들을 개발·보급하여 왔다.

2003년부터 통일문제와 관련된 쟁점이나 다양한 소재를 대상으로 심층적 해설서인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를 시리즈로 발간해 오고 있다. 2008년부터 2012년 9월까지 발간한 자료는 총 16종에 달한다. 2008년에는 《북한의 체육 실태》, 《북한의 문화재 실태》 등 2종을 발간하였다. 2009년에는 《독일통일 20년 : 현황과 교훈》, 《북한의 대남전략》 2종을 발간하였다.

또한 2010년에는 《미래를 위해 남겨 놓은 과거, DMZ》, 《미래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의 과제》 2종, 2011년에는 《통일비용보다 더 큰 통일편익》, 《통일 필요성의 재인식》, 《권력이 세습되는 북한》, 《변하는 북한, 변하지 않는 북한》,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 《문화예술에 비친 북한의 일상》 등 6종, 2012년에는 《FTA와 한반도 통일환경》, 《강성대국론의 허와 실》, 《한국과 독일, 분단과 통일 이야기》, 《북한 사람이 들려주는 북한 이야기》 등 4종을 발간하였다.



2012년 주제가 있는 통일강좌

정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청소년 친화적인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을 확대하고 중·고등학교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영상자료 개발에 힘써 왔다. 2008년에는 북한 주민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조직생활 등 하루 일과를 그린 《북한 주민들의 하루 생활》과 북한 학생의 하루 일과, 교육과정, 조직생활, 방과 후 생활 등의 내용을 담은 《북한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재외동포와 장애인 청소년 등 통일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는 계층에도 시선을 돌려, 이들 계층을 위한 맞춤형 통일교육 자료를 제작하였다. 재외동포 청소년용 교육 자료로 2007년 제작한 학교 통일교육용 애니메이션 「가자미의 눈물」을 영어판과 일본어판의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하였다. 또한 장애인용 교육자료로 「혜미의 행복통일한국」 자막·수화 삽입본을 제작하였다. 2009년에는 북한이탈 청소년과 대한민국 청소년이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담은 「혜미와 북한에서 온 친구」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였다. 또한 영상자료를 장애인용으로 활

용하기 위해 자막과 수화를 넣어 전국 장애인학교 및 장애인시설 등에 보급하였다. 2010년에는 6·25 전쟁 60주년 기념 「평화통일대행진」 행사 전반을 소재로 미래 통일세대 주역인 청소년들이 6·25 전쟁의 교훈과 의미를 깨닫고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영상을 구성한 「평화통일대행진 5박 6일간의 기록」 및 「DMZ에서 바라본 분단과 통일」을 제작하여 평화통일대행진 국내의 참가자 전원과 교사들에게 배포하였다. 2011년에는 올바른 대북관 정립 및 북한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와주는 영상자료들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그 영상자료들의 내용은 「북한의 시장과 주민생활」과 주제 강좌 시리즈 「변하는 북한, 변하지 않는 북한»,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 「문화예술에 비친 북한의 일상」 등이다. 2012년에는 초·중·고 학생별 수준에 맞춰 일반 영상자료 8종, 애니메이션 5종 등 총 13종의 학교통일교육용 영상자료를 제작하였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영상자료도 「권력이 세습되는 북한», 「통일, 미래를 위한 약속」 등 2종을 제작하였다.



2011년 영상자료

이명박 정부는 2008년에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설명자료를 제작·보급하여 「상생·공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상생·공영정책의 비전, 추진원칙, 중점 추진과제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표준강의안(PPT)을 일반 성인, 해외동포, 청소년 대상으로 각각 제작하여 대국민 홍보 및 교육활동에 활용하도록 지원하였

으며,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영상교육자료(DVD)를 제작하여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사회통일교육기관 등에 보급하였다.

한편 2008년에는 참고자료로 통일정책·남북관계·북한실상 관련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된 《자주 묻는 통일 이야기 50》을 발간하였다. 이 자료는 2007년에 처음으로 발간되었으며,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에 따라 2008년에 개정판을 발간하면서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기조에 따라 내용을 전반적으로 개편하였다. 2009년에는 2008년 발간자료 중에서 각종 통계 수치를 2008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현행화하여 재발간(1만 3,000부)하였다.

또한 북한을 방문하는 국민들에 대한 안내교육 자료인 《북한방문 길라잡이》는 2008년에 2차에 걸쳐 개정·발간되었다. 《북한방문 길라잡이》 1차 개정판은 방북준비 및 방북 시 유의사항 중심으로 요약본을 제작·발간하였다. 2차 개정판은 수록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자료를 현행화하고 기존 내용을 체계화·구체화하였으며, 북한 지역별 체류활동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2008년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이후 우리 국민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관광객용 방북교육 영상 자료를 별도로 제작하였다. 《북한 관광을 위한 방북안내》는 과거에 문제가 된 사례를 곁들여 방북 시 유의사항을 구체적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수록하였다.

2011년에는 통일교육 기본교재 및 통일·북한 관련 도서 등에서 자주 사용되는 남북관계의 주요 용어를 사전 형식으로 정리한 《남북관계 지식사전》을 발간하였다. 《남북관계 지식사전》은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남북 회담 및 합의서, 남북 간 사건 및 이슈, 북한의 대남전략 및 도발 등의 용어들을 선정하여 그 유래와 배경, 주요 내용과 의미,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해설하여 통일문제 및 남북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 사이버 교육자료

정부는 2004년 1월부터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 「청소년 통일배움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초·중·고 대상 「통일교실」 및 초등학생 대상 「한마음학교」 등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09년과 2011년에는 청소년 통일교육 강화 차원에서 「통일교실」 및 「한마음학교」 콘텐츠 내용을 전면 개편하였다. 또한 초·중·고 수준별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통일교육 효과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정부는 통일교육원 인터넷 잡지인 웹진 《유니진》을 2005년 1월부터 매월 발행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등재되는 웹진은 교장·교감·교사 등 정책고객 4만 1,000여 명에게 인터넷 주소 등을 이용하여 발송하고 있다. 웹진은 2010년 하반기에 교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남북관계 주요 이슈」(전문가 칼럼), 「우리 학교 통일교육」(교육 사례), 「멀티미디어 자료실」(동영상), 「독자 이벤트」(제언 공모 및 퀴즈) 등의 코너를 신설하였다.

정부는 통일교육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이버 이벤트를 개최하였다. 2008년에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통일 및 북한 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유발을 통해 미래지향적 통일의지를 함양하고자 「사이버 통일교육용 게임」을 개발하였다. 2009년 5월에는 통일 관련 퀴즈문제를 읽고 4가지 예문 중에서 정답에 활을 쏘아 맞히는 「사이버 통일교육용 양궁게임」을 개발·운영하였다. 11월에는 통일 애니메이션인 「혜미의 행복통일한국」과 「한마음학교」를 보고 게시판에 느낀 점을 쓰는 「통일 애니메이션 보고 감상평 쓰기」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행사에는 전국 초·중·고 학생 총 9,069명이 참가하였다. 2010년 하반기에는 「Unizine 통일카툰 퀴즈」, 「어린이·청소년 통일다큐 감상문 공모전」, 2011년에는 「통일교육 영상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과 「열린 통일 강좌 개설 기념 사이버 이벤트」에 많은 네티즌들이 참여하였다. 2012년 5월에는 통일교육용 게임 「Fly Fly 통일호」를 개발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를 실시하였다.

한편 정부는 언제, 어디서나 통일교육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2011년 9월부터 전자책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 사용자를 위하여 통일교육원 홈페이지(www.uniedu.go.kr) 내 전자책 전문 사이트(「E-Book 서고」)를 개설하고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 등 2종의 교재 및 「주제가 있는 통일강좌」 시리즈에 대한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1년 말 통일 관련 각종 정보와 자료를 검색하여 포털기능을 하는 「통일 사이버 라이브러리」(lib.uniedu.go.kr)를 구축하였다. 「통일 사이버 라이브러리」(일명 ‘유니브러리’)는 통일부와 유관기관 웹사이트에서 보유」 제공하고 있는 통일교육 자료, 정책자료, 북한 관련 자료, 멀티미디어 등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일교육원은 뉴미디어 시대에 발맞추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하여 통일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국민과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기 위해 2012년 1월에 트위터(www.twitter.com/uniedusns), 2월에 페이스북(www.facebook.com/uniedusns)을 개설하였다.

2008~2012년 통일교육원 발간자료

구 분	자료명	발간연도	비 고	
기본 교재	통일문제 이해	2008~2012		
	북한 이해	"		
도서 자료	참고 자료	북한방문 길라잡이	2008	1차 개정판
		북한방문 길라잡이	"	2차 개정판
		자주 묻는 통일 이야기 50	"	
		북한의 체육 실태	"	주제강좌 21호
		북한의 문화재 실태	"	주제강좌 22호
		통일교육소식 7호	"	
		대북정책 자료집	2009	
		자주 묻는 통일 이야기 50	"	
		북한의 대남 전략	"	주제강좌 23호
		독일 통일 20년, 현황과 교훈	"	주제강좌 24호
		미래를 위해 남겨 놓은 과거, DMZ	2010	주제강좌 25호
		미래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의 구현	"	주제강좌 26호
		통일비용보다 더 큰 통일편익	2011	주제강좌 27호
		통일 필요성의 재인식	"	주제강좌 28호
		권력이 세습되는 북한	"	주제강좌 29호
		변하는 북한, 변하지 않는 북한	"	주제강좌 30호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	"	주제강좌 31호
		문화예술에 비친 북한의 일상	"	주제강좌 32호
		남북관계 지식사전	"	사전형 자료
		FTA와 한반도 통일환경	2012	주제강좌 33호
강성대국론의 허와 실	"	주제강좌 34호		
한국과 독일, 분단과 통일 이야기	"	주제강좌 35호		
북한 사람이 들려주는 북한 이야기	"	주제강좌 36호		
영상 자료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2008		
	북한 관광을 위한 방북안내	"		

구 분	자료명	발간연도	비 고
	북한 주민들의 하루 생활	"	
	북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	
	가자미의 눈물(A Flatfish's Tears)	"	해외용
	가자미의 눈물(カレイの涙)	"	"
	헤미의 행복통일한국	"	청소년·청각 장애인용
	헤미와 북한에서 온 친구	2009	"
	DMZ에서 바라본 분단과 통일	2010	
	평화통일대행진 5박 6일의 기록	"	
	북한의 시장과 주민생활	2011	
	변하는 북한, 변하지 않는 북한	"	
	북한여성의 일상을 만나다	"	
	문화예술에 비친 북한, 북한 사람들	"	
	권력이 세습되는 북한	2012	
	통일, 미래를 위한 약속	"	
	통일 탐험대	"	초등학생용
	미술사와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	"
	세 친구의 1박 2일	"	중학생용
	통일, 꼭 해야 되나요?	"	"
	원코리아	"	"
	통일창업 위대한 벤처	"	고등학생용
	우리의 선택은 통일입니다	"	"
	분단에서 통일로	"	"
	훈이와 건이의 통일여행	"	초등학생용
	우리는 친구	"	"
	통일로 가는 기차	"	중학생용
	국경을 넘어 희망을 찾아	"	"
	헤미의 통일캠퍼스	"	고등학생용
PPT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추진방향	2008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	일반·해외·청소년용
사이버	'사이버 통일교육'으로의 초대	2008	
	웹진(Unizine)	2008~2012	



M I N I S T R Y O F U N I F I C A T I O N

부 록

- I. 남북관계 주요 일지
- II. 남북관계 주요 통계
- III. 남북협력기금 관련 통계

I. 남북관계 주요 일지

❖ 2008년 남북관계 주요 일지

날짜	추진내용
2.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 - 7,000만이 잘 살고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서라면 남북정상이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음을 표명
2.26.~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욕 필하모닉 평양 공연(동평양대극장)
3.16.~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 아시아시니어레슬링선수권대회(제주 개최) 참석차 북한선수단 15명 방남
3.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산 승용차 관광 실시
3.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개성공단 우리 측 인원 철수 요구
3.25.~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측 단독 「안중근의사유해발굴조사단」 파견(중국 여순)
3.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방향 제시 • 2010 남아공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남북축구 경기(상하이)
3.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남북교류협력협약사무소 우리 측 인원 추방 • 통일부 대변인, '유감 표명, 남북 간 합의사항에 배치 지적, 경험사무소 정상화' 촉구
3.27.~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자회담 10·3 합의(2007년)에 따른 경제·에너지협력 WG(Working Group) 남북실무접촉(판문점)
3.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장성급군사회담 단장 명의 대남통지문 - "모든 북남대화과 접촉을 중단", "남한측 당국자들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전면 차단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
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노동신문, 북한 매체로는 최초로 대통령 실명 거론 비난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장성급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 명의 대북통지문(3.29. 대남통지문에 대한 답신) - 유감 표명, 긴장 조성 행위 중단 촉구
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우리 측 열차운행사무소 직원 출입제한 조치 - 우리 측 열차운행사무소 직원 탑승 없이 화물열차 운행
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금강산 공사 현장 우리 측 조달청 직원 추방

날짜	추진내용
4.10.~11.	• 6자회담 10·3 합의에 따른 제3차 남·북·중 3자 협의 2단계 회의 (중국 베이징)
4.17.	• 이명박 대통령, 서울과 평양에 남북상설대화기구 설치 제의(워싱턴 포스트 회견)
4.22.	• 6자회담 후속조치인 북핵 신고·검증 방안 실무 조율 관련 미 국무부 한국과장 등 5명 방북
4.24.~28.	•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제주 개최) 참석차 북한선수단 17명 방남
4.27.~28.	• 6자회담 10·3 합의에 따른 대북 에너지 설비·자재 2차분(경량 레일 5,000톤 및 강판용 2,689톤) 대북 수송
4.29.	• 통일부장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남북협의 제안 - 6·15 및 10·4 선언을 포함하여 과거 남북 간 합의사항에 대한 실천 가능한 이행방안 검토를 위해 남북 간 협의 제안
5.8.~10.	• 6자회담 합의에 따른 북핵 신고 문제 실무협의 관련 미 국무부 한국과장 등 5명 육로 이용 방북
5.12.	• 통일부, 옥수수 5만 톤 대북지원 제안(북한 무응답)
5.13.	•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200여 명 개성 나무심기행사 참석
5.13.~20.	• 중앙일보 기획취재단 18명 「제11차 평양 봄철 국제상품전시회」 참석
5.23.~6.15.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 공동행사」 관련 남북실무 협의차 방북(개성)
5.29.~30.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화 위원장 등 19명 「남북교육자대표자회의」 참석(금강산)
5.30.~6.15.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학술본부 이서행 상임공동위원장 등 5명, 「2008년 협력사업」 협의차 방북(개성)
6.5.	• 6자회담 관련 경제·에너지협력 WG 수석대표회의 대비 남북 사전 준비접촉(판문점)
6.6.	• 이명박 대통령, 제53회 현충일 추념사 - 남북 간 진지한 대화가 필요함을 강조
6.10.	• 6자회담 관련 경제·에너지협력 WG, 북한을 제외한 5개국 회의 개최 (서울)

날짜	추진내용
6.10.~11.	•미 국무부 한국과장 일행, 북핵 신고·불능화 관련 협의차 육로 방북
6.11.	•6자회담 관련 경제·에너지협력 WG 남북수석대표회의(판문점)
6.14.~26.	•남북체육교류협회 30명, 유소년축구팀 상호교환경기(평양)
6.15.~16.	•6·15 공동선언 발표 8돌 기념 민족통일대회(금강산)
6.19.~23.	•2010 남아공월드컵 아시아 예선 남북경기 참가 북한선수단 방남(서울)
6.25.	•6자회담 10·3 합의에 따른 대북 에너지 설비·자재 2차(6월분, 철강류 2,534톤) 제공(인천항 → 남포항)
6.26.	•북한,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중국 외교부에 제출 •미국,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절차 개시(테러지원국 해제 의회 통보 등)
6.26.~28.	•북핵 신고·불능화 관련 협의차 미 국무부 한국과장 방북
6.27.	•북한 영변 5MW 원자로냉각탑 폭발
6.30.	•통일부 대변인, 옥수수 대북지원(5만 톤)을 공개 제안
7.9.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김숙(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계관(외무성 부상) 회동(중국 베이징)
7.10.~12.	•6자 수석대표(김숙, 김계관, 크리스토퍼 힐, 우다웨이, 사이키 아키다카, 알렉세이 브로다브킨) 회담(베이징)
7.11.	•이명박 대통령, 국회 개원 시정연설 - 남북대화 제의 및 6·15, 10·4 선언 이행 관련 북한과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언급 •금강산 관광객(박왕자), 금강산에서 북한 초병의 총격으로 사망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 '유감 표명, 진상 규명 촉구 및 향후 대책 발표'
7.12.	•금강산 관광 잠정 중단 •진상 규명 촉구 및 금강산 관광 잠정중단 내용의 대북통지문 전달(북한 접수 거부)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중국 대변인 담화 - 관광객 피격에 대해 유감 표명, 우리 측 현장 조사 요구 일축 및 사고 책임이 우리 측에 있다면서 재발방지 대책 요구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완료

날짜	추진내용
7.12.~15.	•현대아산 윤만준 사장,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진상조사차 방북(금강산)
7.13.	•통일부 대변인, 진상조사단 수용 및 재발방지 대책 촉구
7.15.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진상조사단 현지파견 촉구 대북전문문 전달(북한 수령 거부)
7.16.	•정부합동조사단·국립과학수사연구소, 고 박왕자 부검결과 발표 •6자회담 10·3 합의에 따른 대북 에너지 설비·자재 3차(7월분, 환강 1,441톤) 제공(인천항→남포항)
7.18.	•총리실·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금강산·개성 관광사업 점검 평가단 구성
7.23.	•6자회담 출범 이후 최초로 참가국 외무장관들 회동(비공식), 6개항 합의 도출(싱가포르)
7.24.	•남북 노동자 3단체(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선직업총동맹) 실무접촉(개성)
7.25.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정부합동조사단 활동경과 브리핑
7.28.~31.	•6자회담 10·3 합의에 따른 대북 에너지 설비·자재 국제경쟁 입찰 품목 인도(단동→남포)
8.1.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정부합동조사단, 모의실험 결과 발표
8.3.	•북한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변인,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특별담화 발표 •통일부 대변인, '유감 표명, 부당성 지적, 진상조사 호응' 촉구
8.9.	•북한 동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명의 대남전문문 - 8.10.부터 금강산지구 우리 측 인원 추방 통보
8.12.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관련 정부합동조사단 및 경찰청 조사 결과 발표 •우리 측 모래운반선 동이 1호(658톤), 장전항 북동쪽 해상에서 북한어선과 충돌
8.14.	•모래운반선 동이 1호, 우리 측 귀항
8.15.	•이명박 대통령, 8·15 광복절 및 건국 60주년 경축사 - '남북 간 전면적 대화와 경제협력' 제의

날짜	추진내용
8.26.	•북한 외무성 대변인, 핵 불능화 중단 성명 발표
9.11.	•6자회담 10·3 합의에 따른 대북 에너지 설비·자재 국제입찰분 제공 관련 대북전통문 - 중유 환산 약 1만 6,000톤 상당 철강류 제공
9.22.	•북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핵시설 봉인 및 감시카메라 제거 요청(9.24. 제거 완료)
9.23.	•이명박 대통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서울 지역회의 개최사 - 6·15 및 10·4 선언을 포함, 남북 간 합의정신을 존중하며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 간 전면적 대화'가 필요함을 표명 •10·4 선언 남북공동행사 협의 관련 6·15공동선언실천 남북위원회장 접촉(개성)
9.23.-27.	•6·15공동선언실천 남북위원회 지역본부 50명, 지역교류 협의차 방북(평양)
9.30.	•MBC 관계자, 북한 명산 취재 협의(개성)
10.1.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육로 방북(판문점 통과), 김계관 외무성 부상 면담 - 북핵 검증의정서 및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 등 협의
10.2.	•제37차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평화의 집) - 우리 측 : 대남 비난 중지, 남북대화 제안,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대책 요구, 개성지구 출입·통행 해결 촉구 - 북한측 : 대남 전단 살포 지속 시 군사분계선 통행제한 등 경고
10.8.-18.	•남북체육교류협회 50여 명, 유소년 축구팀 상호교환경기 참가(평양)
10.11.	•미국,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10.14.	•북한 핵 불능화 조치 재개
10.16.	•북한 노동신문 논평원, 남북관계 전면 차단 경고
10.27.	•북한 군사실무접촉(판문점 군사분계선상)에서 대북 뼈라 살포를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과 개성 관광 등에 악영향' 경고
10.28.	•북한 남북군사회담 대표단 대변인, '뼈라 살포 등에 군 실천행동' 경고(조선중앙통신)
11.6.	•북한 군부 조사단, 개성공단 현황 점검

날짜	추진내용
1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명박 대통령, 조선일보·마이니치신문·더 타임스 인터뷰 - 북한의 핵 포기에 도움이 된다면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 표명
1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단장 명의 대남통지문 - 12.1.부터 육로통행 제한·차단 경고 •통일부 대변인, 6·15 및 10·4 선언 이행을 위한 협의용의 표명 •북한 핵 검증 관련 시료채취 합의 부인
1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 명의 대북통지문 - 개성공단사업 등 지속·유지 발전 입장 전달, 군 통신선 정상화 자재·장비 제공 협의 제의
1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성공단 기반시설 개선 및 탁아소 건설, 민간단체 대북지원 사업 등에 남북협력기금 104억 원 집행 의결
1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강산 관광 10주년 •연탄 전달 등 대북 민간지원 단체의 금강산 지역 방문 허용
1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부처회의, 대북 전단 살포 자제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결정
1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
1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단장 명의 대남통지문 - 12.1.부터 군사분계선 통행 제한, 개성 관광 중지, 남북 간 열차 운행 차단, 경협사무소 폐쇄 시행통보 •통일부 대변인, '유감 표명, 남북 합의사항에 배치됨을 지적, 조치 철회 및 남북대화' 촉구
1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명승지개발지도국, 금강산 우리 측 체류인원 50%로 제한 통보
1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동·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명의 전화통지문 - 12.1.부터 군사분계선 육로통행 시간 축소 통보 •통일부장관, 국회 「개성공단 상품 전시 및 판매전」 개막식 축사 - 북한에 금번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남북대화를 제의
1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개성공단·남북열차 운행 잠정 중지, 경협사무소 추방 등 제한 조치 강행
1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대남통지문 - 우리 측 상시 체류인원 880명으로 제한

날짜	추진내용
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남북 육로통행 제한 등 「12·1 조치」 실행 ※ 「12·1 조치」 : △군사분계선 통행 제한 △개성 관광 중단 △남북열차 운행 차단 △남북 육로통행 제한 조치(개성공단 우리 측 체류 상주인원 880명으로 제한) •통일부 대변인, '유감 표명, 남북합의 위반 지적, 철회 촉구, 당국 간 대화' 제의
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부장관, 통일연구원 주최 학술회의 축사 - "언제, 어디서, 어떤 급에서건 대화할 것"을 북한에 제의
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성공단 우리 측 관계자 436명 추방
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명박 대통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초청 다과회 - 6·15 및 10·4 선언 포함 남북 간 대화 의지 표명

❖ 2009년 남북관계 주요 일지

날짜	추진내용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명박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 남북상설대화기구 설치 등 제의
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 북·미관계 개선을 통한 비핵화 등 핵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
1.15.~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자회담 관련 북핵 실사단, 영변 핵시설 원자로 미사용 연료봉 처리 문제 협의차 방북
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그것을 짓부수기 위한 전면대결 태세에 진입하게 될 것"
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 무효화,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의 서해 해상군사경계선 관련 조항 폐기 주장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 간 핵군축회담 제의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명박 대통령, 남북관계의 원칙 강조(제8차 라디오 연설) - "남북은 서로를 존중하며 대등하게 대화하고 문제가 생긴 부분은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히 세우고 넘어가는 원칙이 지켜져야 함."

날짜	추진내용
2.13.~20.	• 6자회담 10·3 합의(2007년)에 따른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WG(의장국 러시아) 안보회의 개최(러시아 모스크바)
2.15.	• 우리 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통일부 대변인 논평 - 전단 살포 자제 촉구, 북한 화폐 무단 반입 시 법적 조치의 불가피성 지적
2.24.	•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 - 광명성 2호 발사준비 사실 발표
3.1.	• 이명박 대통령, 3·1절 기념사 - 남북 간 합의사항 존중 및 조건 없는 남북 대화 제의
3.5.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 키리졸브/독수리연습 비난, 민간 항공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위협
3.9.	•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 키리졸브/독수리연습 관련 남북 군 통신 차단 발표
3.9.~20.	• 북한, 개성공단 육로통행 차단(3.9., 3.13.~15., 3.20.)
3.20.	• 북한 동·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명의 대남전통문 - 남북 군 통신 3. 21.부터 회복
3.21.	• 북한, 미국 기자 억류 및 조사사실 발표(조선중앙통신) • 북한, 남북 군 통신 및 육로통행 전면 허용
3.29.~4.1.	• 2010 남아공월드컵 최종예선 남북한전(4.1.)을 위해 북한선수단 방남(서울)
3.30.	• 북한, 개성공단 우리 측 근로자 억류(~8.13.까지 137일)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참가는 선전포고라고 주장
4.2.	• 북한군 총참모부 중대보도 - 미사일 요격에 대한 보복타격 위협
4.5.	•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함경북도 무수단리 발사장) • 정부,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성명 발표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임을 지적
4.13.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의장성명 채택

날짜	추진내용
4.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외무성 성명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부당한 처사를 단호히 규탄 배격”, “6자회담은 더는 필요없게 됐다”, “자위적 핵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
4.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접촉(개성)
4.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 대북 제재조치 확정
4.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외무성 대변인,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 착수 발표
4.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 - 안전보장이사회 사죄가 없을 경우 핵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등 추가적 자위조치 위협
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기자회견 - 현대아산 직원은 현재 자체 조사 중임을 언급
5.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남통지문 -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가 그동안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한측에 특별적으로 적용했던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 법규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 • 통일부 대변인 논평 - 북한의 5.15. 무효화 선언(개성공단 기존 계약 무효화) 수용불가 입장 표명
5.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2차 핵실험 강행 • 북한 2차 핵실험에 대한 정부성명 발표
5.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PSI 전면참여 발표 • 북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
5.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군 판문점대표부 성명 - PSI 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한다고 위협
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한 실무접촉(6.11.) 제의
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명박 대통령, 제54회 현충일 추념사 - 대화와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입장 재확인
6.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제1차 실무회담(개성, 남북교류협력협 의사무소)

날짜	추진내용
6.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외무성 성명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를 단호히 규탄배격”,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 전량을 무기화”, “우라늄 농축작업에 착수” 등
6.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제2차 실무회담(개성, 남북교류협력협 의사무소)
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제3차 실무회담(개성, 남북교류협력협 의사무소)
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 - 우리 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개성공업지구실무접촉이 결렬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
7.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 결의 1874호 관련 제재 대상 단체·개인 및 물자 목록 선정 •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 6자회담 불참 입장 재확인 및 미·북 양자 대화 촉구
7.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측 「800연안호」 북방한계선(NLL) 월선 및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나포
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동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명의 대남전통문 - 우리 측 「800연안호」 나포 및 조사 사실 공식 확인
7.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측 동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명의 대북전통문 -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800연안호」 선박·선원(4명)의 조속한 송환 촉구
8.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빌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 방북, 김정일 위원장 면담, 미국 기자 석방
8.1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방북, 김정일 위원장 면담(8.16.) • 현대그룹-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간 공동보도문 채택,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등 합의(8.17.)
8.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공단 억류근로자 송환
8.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명박 대통령, 제64주년 광복절 경축사 - 「한반도 새로운 평화구상」 천명,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 구상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시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남북고위급회의의 설치 △경제·교육·재정·인프라·생활향상 등 대북 5대 프로젝트 추진 △남북 간 재래식 무기 감축 논의 개시 등 5개의 과제로 구성

날짜	추진내용
8.19.	•북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에 김정일 위원장 명의 조전(조선중앙통신)
8.20.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대중 평화센터측에 조문단 파견 의사 통보 •대한적십자사 총재, 남북적십자회담 개최(8.26.~28., 금강산) 제의 •판문점 적십자연락사무소 직통전화 8.21. 재개 합의 ※ 2009.11.28. 차단된 후 김대중 전 대통령 북한측 조문단 파견과 관련한 연락 목적으로 우리 측이 해사당국 간 통신을 통해 제안한 내용에 북한측이 동의 •북한, 12·1 통행제한조치 해제 통보
8.21.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관련 북한의 특사 조의방문단 서울 방문 (8.21.~23.)
8.22.	•현인택 통일부장관-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면담(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조의방문 중)
8.23.	•북한 조의방문단, 이명박 대통령 예방
8.25.	•북한 적십자회중앙위 위원장 명의 대남전통문 -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제의 수용 및 판문점 적십자 직통전화 재개 공식 통보
8.26.~28.	•남북적십자회담(금강산), 이산가족 상봉행사(9.26.~10.1.) 진행 등 합의
8.29.	•북한, 우리 측 「800연안호」 선박 및 선원(4명) 송환
9.4.	•유엔 주재 북한 상임대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 편지 발송 보도(조선중앙통신) -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 추출 플루토늄 무기화, 우라늄 농축실험 성공 진행 주장
9.6.	•북한, 임진강 상류 황강댐 무단방류로 우리 측 민간인 6명 사망
9.7.	•임진강 수해 관련 국토해양부장관 명의 대북전통문 발송 •북한 '관계기관' 명의 대남전통문 - 임진강 상류 방류 경위 등 통보
9.16.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개성공단관리위원회 간 월 임금 5% 인상 합의

날짜	추진내용
9.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명박 대통령, ‘그랜드 바젠’ 제안(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미 중 오찬 연설) -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 방안 제의
9.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성공단관리위원회-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 개성공단 내 탁아소 건립 관련 합의서 체결
9.26.~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석 계기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남 554명, 북 334명) 진행
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주민(11명), 동해상으로 어선을 이용하여 귀순
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적십자 명의 대북전통문 - 북한 주민 전원 귀순의사 표명사실을 북한측에 통보
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명의 대남전통문 - 북한 주민 전원 및 어선 송환 요구
1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10.14.) 및 적십자실무 접촉(10.16.) 대북 제의 •북한, 동해상 단거리 미사일 발사
1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실무회담 및 적십자실무접촉 개최 제의에 동의
1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개성, 남북교류협력협 의사무소)
1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적십자실무접촉 개최(개성, 남북교류협력협 의사무소)
1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측, 군 통신선로 개선공사 자재·장비 지원 용의 대북 통보
1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남북 군 통신선로 개선공사를 위한 우리 측의 자재·장비 지원 수락
1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대북전통문 - 옥수수 1만 톤 대북지원계획 통보
10.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 군 통신선로 개선공사 자재·장비 전달 개시 -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연결공사 완료(12.22.), 시험통화(12.24.~25.), 정식가동(12.26.)
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폐연료봉(8,000개) 8월 말 재처리 완료 주장(조선중앙통신)

날짜	추진내용
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EU정상 공동선언 발표 - 북한의 「9·19 공동성명」 의무 준수 및 비가역적이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조치의 조속한 이행 촉구
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 지지 표명
1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경비정이 서해 대청도 해상 북방한계선을 침범하여 우리 측 해군이 퇴각조치(대청해전) •북한군 최고사령부 보도 - 서해상 교전을 ‘무장도발사건’이라고 주장, 우리 측 사죄와 재발방지 조치 요구
1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대청해전 관련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노동신문·민주조선 논평)
1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서울) - 이명박 대통령 : “‘그랜드 바겐’에 대해 북한과 직접 대화할 기회가 없었는데, 북한 스스로 안전과 경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북한의 미래를 위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함.” - 오바마 대통령 :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문은 열려 있음. 제재 조치 완화, 국제사회 동참의 길이 열려 있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진지하게 핵문제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함.”
1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 -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
1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명박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장소 문제 관련 ‘융통성’ 표명(대통령의 대화) - “남북정상회담은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면 만날 수 있음. 장소는 굳이 서울이 아니어도 된다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음.”
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명박 대통령, 북한 내 신종플루 발생 관련 인도적 차원에서 조건 없는 치료제 지원방안 마련 지시(국무회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미국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북(12.8.~10.)
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보건성, 신의주와 평양에서 신종플루 확진환자 9명 발생사실 발표(조선중앙통신)
1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측,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신종플루 치료제 지원의사 전달 •북한 신종플루 치료제 지원 수용입장 통보

날짜	추진내용
12.11.	•태국 정부, 북한제 무기(대공미사일, 지대공미사일 발사대, 대전차 로켓 포, 탄약 등) 적재 그루지야 국적 수송기 억류(방콕 돈므앙공항)
12.12.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12.12.~22.) - 중국 칭다오(靑島)·쑤저우(蘇州)·선전(深圳)공단 및 베트남(옌퐁 공단)
12.18.	•우리 측, 신종플루 치료제(50만 명분)를 북한에 전달(개성)
12.21.	•서해상에서 소형선박에 북한 주민(7명)이 타고 표류 중인 것을 우리 측 해군이 예인 •북한 해군사령부 대변인 성명 -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북한측 수역을 평시 해상사격구역으로 선포, 동사격구역 내 모든 어선·함선의 자체 안전대책 강구 주문
12.23.	•북한 주민(7명) 송환
12.29.	•북한, 불법입국(12.24.)한 미국인 1명을 억류·조사 중 보도(조선중앙통신)

❖ 2010년 남북관계 주요 일지

날짜	추진내용
1.4.	•이명박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 북한에 대해 6자회담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 남북상시대화기구 마련, 6·25 전쟁 60주년 국군용사 유해발굴사업 추진 제의
1.11.	•북한 외무성 성명 - 정전 협정 당사국에 대해 평화협정 회담 개최 제의
1.15.	•북한 국방위 대변인 성명 - 우리 측의 '급변사태 대비 비상통치계획' 완성 관련 비난 - "청와대를 포함하여 이 계획 작성을 주도하고 뒷받침하여 온 남조선당국자들의 본거지를 송두리 채 날려보내기 위한 거족적인 보복성전이 개시"
1.19.~20.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 평가회의 개최(개성,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날짜	추진내용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성공단 제4차 실무회담 개최 - 우리 측과 북한측은 3통 문제 개선에 원칙적으로 합의, 3통 문제는 군 사실무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 임금·숙소 등 현안문제는 당국 간 실무회담 협의하기로 합의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강산·개성 관광 관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 - 우리 측은 관광재개를 위해 3대 조건 우선해결 촉구, 북한측이 호응하지 않음에 따라 회담 종료
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종플루 관련 손소독제 20만 명분을 개성 육로를 통해 북한측에 전달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명박 대통령, 3·1절 기념사 - “북한이 남한을 경제협력 대상으로만 여기지 말고 한반도 평화 등 남북 간 여러 현안을 진지한 대화로 풀어야 함. 우리가 제안한 ‘그랜드 바겐’도 논의해야 할 것임.”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성공단 3통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실무접촉 개최 - 북한측은 개성공단과 동해지구 3통 관련 설비·자재, 장비를 우선 제공 요청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 - 우리 측이 금강산·개성 관광재개를 방해할 경우 관련 계약 파기 등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위협
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부,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 대북통지문 -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관련 진상 규명 및 3대 조건 우선 해결 강조
3.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남통지문 - 3.25.부터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 실시 통보
3.25.~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 부동산 조사 실시
3.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안함 폭침 도발, 장병 46명 사망
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성명 - 금강산지구 내 우리 측 부동산 동결 및 관리인원 추방 등 선포 •통일부, 북한의 일방조치 즉각 철회 촉구 및 당국 간 대화를 통한 해결 강조
4.2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국방위 관계자 금강산 민간소유 부동산 조사

날짜	추진내용
4.2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 부동산 동결 및 몰수조치, 우리 측 관리 인원 추방 통보
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 “천안함은 북한의 소형 잠수정으로부터 발사된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로 인해 침몰”
5.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발표 - “사과 및 관련자 처벌 촉구, 앞으로 북한 도발 불용 및 적극적 억제 원칙 견지” • 통일·외교·국방 3부 장관 공동 기자회견 - 남북교역 중단 등을 천명한 「5·24 조치」 발표
5.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 “북남관계 전면폐쇄, 북남불가침합의 전면파기, 북남협력사업 전면철폐의 단호한 행동조치에 들어간다는 것을 정식 선포”
5.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군 총참모부 중대통고문 - “북남협력교류와 관련하여 우리 군대가 리행하게 되어 있는 모든 군사적 보장조치들을 전면철회”, “조선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하여 체결하였던 쌍방합의를 완전히 무효화” 등
5.2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 천안함 폭침 관련 공동발표문 채택
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명박 대통령, 제55회 현충일 추념사 - “우리에게는 못다한 꿈이 있음. 그것은 바로 아직도 빈곤과 억압 속에 고통 받는 북녘 동포와 함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누리는 통일 조국의 꿈임.”
6.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국방위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 - 천안함 사건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를 반복 실천 행동이라며 국방위 검열단 수용 재차 촉구
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군 총참모부 중대포고 - 심리전 재개에 대해 선전포고라고 주장, 심리전 수단 청산을 위한 전면적 군사적 타격행동 진입 선언, 서울 불바다까지 내다본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 주장

날짜	추진내용
6.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 대변인, 6·15 선언 10년 정부입장 발표 - 6·15 공동선언을 존중하면서 대화를 통해 이행 문제를 협의해 나간다는 정부의 입장 재확인, 천안함 사태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조치 및 핵개발 포기 결단 촉구
6.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유엔사의 장성급회담 제의(6.26.)를 거부하는 대남전통문 - 국방위 검열단 파견을 조건으로 「남북고위급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제의
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 질의 답변 - 천안호 사건 관련 검열단 파견과 이를 위한 북남고위급군사회담실무접촉 개최 재차 주장
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하는 의장성명 채택
7.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함 폭침 관련 유엔사 - 북한군 판문점 대령급 실무접촉(1차) * 이후 7차(10.27.)까지 개최
7.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국방위 대변인 성명 - 한·미 연합해상훈련 관련 핵 억제력에 기초한 보복성전 개시 위협 • 북한 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답변 - 미국이 대화를 거부한다고 비난하면서, 핵 억제력 강화 및 강력한 물리적 조치 주장
7.25.-7.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합동군사훈련 실시
7.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외교·국방장관회담 비난
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전선서부지구사령부 통고 - 우리 측의 백령도·대청도·연평도 인근 수역의 해상훈련 관련 강력한 물리적 타격으로 임할 것이라고 위협
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공단관리위원회-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 2010년도 개성공업지구 북한 근로자 월 최저임금 5% 인상 합의(총지급액 5만 7,881달러 → 6만 775달러)
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측 선박 대승호(탐승선원 한국인 4명, 중국인 3명 등 총 7명)가 북한측에 의해 나포
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서해 해안포 발사(백령도, 연평도 인근 해상)

날짜	추진내용
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측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수석대표 명의 대북전통문 - 서해 해안포 사격 관련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긴장 조성 중단 촉구
8.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명박 대통령, 8·15 경축사 - 분단상황 관리를 넘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화통일의 미래비전 제시 - 평화·경제·민족공동체 등 한반도 통일과정 제시, 통일세 등 현실적 방안 논의 제안, 한반도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와의 호혜적 파트너십 구축
8.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답변 -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 '통일세' 논의 제안을 전면적인 체제대결 선언이라고 비난
8.25.~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 평양 방문, 북한측에 억류 중이었던 고클즈(Aijalon Mahli Gomes)와 동반 귀환
8.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대북통지문 - 북한 수해 관련 긴급 구호물자 지원의사 전달
8.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대북통지문 - 비상식량 등 총 100억 원 상당의 긴급구호물자를 신의주·개성지역에 단동·경의선육로를 통해 전달 통보
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적십자회중앙위 위원장 명의 대남통지문 - 쌀, 시멘트 및 굴착기 등 복구장비 지원 요청
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승호 선원 및 선박 귀환
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적십자회중앙위 위원장 명의 대남통지문 -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을 위한 남북적십자실무접촉 제의
9.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대북통지문 - 수해지원 및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실무접촉 제의
9.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단장 명의 대남전통문 - 군사적 합의 이행 관련 현안문제 논의를 위한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 제의
9.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적십자실무접촉 개최 - 이산가족 상봉일정 및 사전준비절차에 의견 접근
9.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측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수석대표 명의 대북전통문 - 북한의 제의(9.15.)에 대해 9.30.에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자고 수정 제의

날짜	추진내용
9.24.	•남북적십자실무접촉 개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협의
9.28.	•북한 노동당 제3차 당대표자회 개최, 김정은을 신설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임명
9.29.	•북한 외무성 부상, 핵보유국 입장 강조 및 핵 억제력 포기 불가, 강화 입장 표명(유엔 총회 연설)
9.30.	•제38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판문점 평화의 집) - 우리 측 : 천안함 폭침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군사적 위협·도발행위 및 비방증상 중단 촉구 - 북한측 : 천안함 조사결과 부인,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 중단, 검열단 파견 수용 주장 반박
10.1.	•제3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 개최, 이산가족 상봉행사(10.30.~11.5.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 합의 및 남북적십자회담 개최(10.26.~10.27. 개성) 합의
10.2.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명의 대남통지문 - 금강산지구 부동산 문제,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와 관련 당국 간 실무회담(10.15. 개성) 제의
10.12.	•통일부 명의 대북통지문 - 금강산 관광문제 논의를 위한 당국 간 회담 관련 입장 추후 통보하겠다는 의사 전달
10.14.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명의 대남통지문 - 당국 간 실무회담 조속 개최 촉구
10.15.	•북한 장성급군사회담 단장 명의 대남전통문 - 대북 심리전방송과 빼라 살포행위를 중지시키지 않으면 방송수단과 빼라 살포지점들에 대해 물리적 타격을 가하겠다고 위협
10.18.	•남북항공관계 통신망 복원 *10.16. 북한 통신망 복원 통보(5.25.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에 따라 5.26. 통신망 단절)
10.20.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대북통지문 - 북한에 수해지원 물자 전달 계획 통보 * 10.25. 1항차 수해지원 물품이 인천항을 출발, 단둥에서 신의주로 전달
10.26.~10.27.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11.25. 후속회담 개최에 합의
10.30.~11.5.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1차 : 10.30.~11.2., 2차 : 11.3.~11.5.)

날짜	추진내용
1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명의 대남통지문 -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 논의를 위한 당국 간 회담(11.19. 개성) 제의
1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의 11.11. 대남전통문에 대한 대북전통문 발송 - 회담을 하려면 금강산지구 내 부동산 동결·몰수 조치부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 전달
1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명의 대남통지문 -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한 회담 촉구 및 11.25. 적십자회담에 해당 당국자들이 나와 금강산 관광 재개 관련 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의
1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 우리 측 4명 사망(해병대원 2명, 민간인 2명) 및 19명의 중·경상자 발생
1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엔사, 판문점 장성급군사회담 개최 제의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대북통지문 - 남북적십자회담(11.25. 예정) 무기 연기 통보 •통일부, 대한적십자를 통한 대북 수해지원 잠정 유보 발표
1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명박 대통령, 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 관련 대국민 담화 - “앞으로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
11.29.~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해 한·미 합동군사훈련 실시
12.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 연평도 포격도발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면서 평화협정 체결 필요성 강조
1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측,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 실시

❖ 2011년 남북관계 주요 일지

날짜	추진내용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명박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 “북한 동포들을 자유와 번영의 장정에 동참시키기 위해 노력, 북한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 발표(조선중앙통신) - 남한 당국 포함 정당·단체들과의 대화 제의

날짜	추진내용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 △당국 간 회담 무조건 조속 개최 △적십자회담, 금강산관광재개회담, 개성공업지구회담 재개(1월 말 또는 2월 말 상순), △판문점 적십자 통로 재개, 개성 경협사무소 동결 해제 등 제의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 대변인, 정부입장 발표 - “북한의 제의는 형식 등으로 볼 때 진정성 있는 대화 제의로 보기 어려우나, 구체적 상황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향후 북한 태도를 보아가면서 대응방향 검토”
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명의 대남통지문 - 남북당국회담 협의를 위한 국장급 실무접촉 제의 • 북한 적십자회중앙위 위원장 명의 대남통지문 - 남북적십자회담 개최(2.1. 문산) 제의 및 1.12.부터 판문점 적십자 통로 운영 재개 통보 • 북한 경제교류협회사무소 소장 명의 대남통지문 - 1.12.부터 북한 경제교류협회사무소 근무 재개 통보 • 통일부 대변인 논평, 북한의 대화 제의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 - “북한의 제의는 국제사회에 대한 위장평화 공세,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상투적 전술의 일환” - 남북 간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①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도발 방지 확약 ②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 및 이를 위한 남북 당국 간 만남을 제안 - “북한이 제안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려면, 위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남북 당국 간 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함.”
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명의 대남통지문 - 개성공업지구회담 개최(2.9. 개성) 제의 •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명의 대남통지문 - 금강산 관광재개 회담 개최(2.11. 개성) 제의 • 북한 경제교류협회사무소 소장 명의 대남통지문 - 우리 측 인원 미복귀에 대한 유감 표명 및 정상 운영 촉구 • 판문점 적십자 직통전화 운영 재개
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질문 답변 - 대화와 선의 조치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

날짜	추진내용
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인민무력부장 명의 대남전통문 - 모든 군사적 현안문제 논의를 위한 남북고위급군사회담 개최, 이를 위한 예비회담 개최(1월 말) 제의 • 북한의 군사회담 제의에 대한 정부입장 발표 -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을 의제로 하는 남북고위급군사회담에 나갈 것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을 위해 별도의 고위급당국회담을 제의할 예정”
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장관 명의 대북전통문 - 남북고위급군사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 회담 개최(2.11. 판문점 평화의 집) 제의 • 통일부 대변인 논평 - 핵문제에 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남북 당국 간 회동 제안 수용 촉구 •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 “△전제조건들을 내세우거나 여러 대화들의 순서를 인위적으로 정해놓으려는 주장들을 경계 △한반도 핵문제는 미국의 핵전쟁 위협과 적대시 정책으로 산생된 문제로서 그 근원을 제거할 수 있는 대화방식이 필수적”
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명의 대남전통문 - 당국 간 대화 개최 재촉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적십자회중앙위 위원장 명의 대남전통문 - 남북적십자회담의 조속한 개최 제의
2.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고위급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 - 북한측 : “천안함 사건은 철저히 우리와 무관한 사건”, “미국의 조종하에 남한측의 대북 대결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특대형 모략극”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적십자회중앙위 명의 대남전통문 -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으로 남하한 북한 주민 31명과 선박 조속 송환 요구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대북전통문(2.1. 대남전통문에 대한 답신) - 적십자회담 개최 원칙에 동의하며 구체적인 일자 및 장소는 남북고위급군사회담 이후에 쌍방이 협의하여 확정해 나갈 것을 제의
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여야 정당, 의원 접촉·협상 관련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명의 서한 접수

날짜	추진내용
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국방위 김열단 진상공개장 발표 보도(조선중앙통신) - 연평도 포격 도발 책임전가
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성명 -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적 강점과 역적패당의 반민족적인 통치체제를 전면 붕괴시키기 위한 총공세에 진입”, “서울불바다전과 같은 무자비한 대응”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명박 대통령, 3·1절 기념사 - 북한에 대해 진정한 화해와 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대북전통문 - 2.5. 서해 연평도 인근 해역으로 온 북한 주민 31명 중 복귀 희망 27명 송환 통보 • 북한 적십자회중앙위 대변인 담화 - 31명 전원을 배와 함께 송환할 것을 요구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적십자회중앙위 위원장 명의 대남전통문 - 북한 주민 31명 전원 송환 요구 및 4명 귀순 주장 관련 대면 확인 요구
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대북전통문 - 송환 희망 27명에 대한 필요조치 협조를 촉구, 귀순 의사 밝힌 4명의 자유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실무협의 입장 통보
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문점 연락관 전화통화를 통해 대북구두통지 - 27명의 조속한 신병 인수 촉구
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위원장 명의 대북서한(→북한 체신상) 전달 - GPS 주파수 혼신행위 항의 및 재발방지 촉구(북한 접수거부)
3.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지진국장 명의 대남전통문 - 백두산 화산활동 관련 연구사업 공동 추진 등을 위한 협의 진행 제의
3.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청장 명의 대북전통문 - 백두산 화산 관련 북한측 제의에 동의
3.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전선서부지구사령관 조선중앙통신 기자 답변 - 우리 측 단체의 3.25.~3.26. 백령도에서 빼라 살포 계획 관련 직접 조준격파 사격 위협
3.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선 북한 주민 27명과 선박을 서해상을 통해 송환(4명은 잔류)
3.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두산 화산 관련 남북전문가회의 개최(문산, 남북출입사무소)

날짜	추진내용
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적십자회중앙위 위원장 명의 대남전통문 - 귀순 주장 4명의 대면 확인 재차 요구
3.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국방위 대변인 담화 - 천안호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의 책임 재차 부인 • 투명성 강화 조건하에 민간 차원 취약계층 대북지원 재개
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 - 현대 측에 준 금강산 관광 독점권 조항의 효력 취소 입장 통보
4.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백두산 화산 관련 남북전문가회의(개성, 자남산여관) - 5월 초 평양(또는 편리한 장소) 학술토론회, 6월 중순 백두산 현지답사를 하기로 합의, 구체적 실무절차 추후 협의
4.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2010.11. 미국 공민 체포·조사, 재판 기소 준비 보도(조선중앙통신)
4.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적십자회중앙위 위원장 명의 대남전통문 - 귀순한 북한 주민 4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십자실무접촉 개최 제의 • 북한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단장 명의 대남전통문 - 대북 전단 관련 조준격파사격 범위를 전면격파사격으로 넓히겠다고 위협
4.26.~4.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을 단장으로 한 더 엘더스(The Elders) 그룹의 실무진 방북(평양)
4.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대북전통문 - 귀순 4명 자유의사 확인 문제와 북한 지역에 억류된 우리 국민 자유의사 확인 문제 논의를 위한 적십자실무접촉(5.4. 판문점 평화의 집) 제의 • 북한 조선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동북아역사재단에 동해 표기 관련 남북역사학자 간 공동대처 제의
4.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두산 화산 전문가회의 수석대표 명의 대북전통문 - 백두산 화산 문제 관련 학술토론회 개최(5.11.~5.13. 서울 또는 평양) 제의
4.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발표 -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지정 • 동북아역사재단 명의 대북전통문 - 5월 중순 개성에서 동해 표기 관련 남북역사학자 간 협의 제의

날짜	추진내용
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전산망 장애(4.12.) 관련 수사결과 발표 - 북한의 사이버테러로 확인 • 통일부 대변인 논평 - 북한의 사이버 테러 행위 즉각 중단 촉구
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명박 대통령, 한-독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한다면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위원장 초청 제안
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국방위 인민무력부 대변인 담화 - 농협해킹을 날조극이라고 비난
5.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 답변 -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을 반공화국 핵소동과 대결책동을 정당화해 보려는 발언이라고 비난
5.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버트 킹 미국 대북인권특사 등 북한식량평가팀 방북
5.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버트 킹 미국 대북인권특사, 석방 미국인과 함께 귀환
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국방위 대변인 성명 - 우리 측과 상대를 하지 않을 것이고, 거족적인 전면공세에 진입하며, 실제적 행동조치로 동해지구 군 통신 차단 및 금강산지구 통신연락소 폐쇄 주장
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국방위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 답변 - '남북 비공개 접촉' 폭로 • 통일부 대변인 논평 - 북한 보도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북한의 태도에 유감 표명
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채택 발표(조선중앙통신)
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 '최고 존엄' 표적사격 관련 전면적인 군사적 보복행동 진입 위협
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명박 대통령, 제56회 현충일 추념사 - "북한은 대결과 갈등의 길에서 벗어나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와야 함."
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국방위 정책국 대표 남북 비공개 녹음기록 공개 위협(조선중앙통신)

날짜	추진내용
6.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적십자회중앙위 위원장 명의 대남전통문 - 북한 주민 9명 송환 요구 •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대북전통문 - 북한 주민 9명 모두 귀순을 희망하고 있는 바,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통보 •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통고 보도(조선중앙통신) - “몰수된 재산들의 처리문제 협의를 위해 남한측 당사자들이 금강산에 들어올 것”
6.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정부 대변인 성명 - 우리 전방부대 구호 사죄와 주모자 처벌을 요구, 보복성전 위협 • 금강산 관광지구 재산권 관련 문제 협의(민관합동협의단) • 북한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 전방부대 구호 관련 군사적 보장조치를 강한 제재조치로 전환 주장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 편지(→청와대) 공개보도(조선중앙통신) - 전방부대 구호 관련 사죄와 주모자 처벌 및 구호 철거 등 요구
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사 답변 - 특구 내 우리 측 부동산 정리를 위한 협상(6.29.)이 통일부의 방해책동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비난, 7.13.까지 금강산에 들어오지 않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해당한 법적처분 강행·통지 주장
7.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합동협의단 방북(금강산), 금강산 관광사업 재산 문제 협의
7.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계기 제1차 남북비핵화회담 개최(인도네시아 발리) -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북한 이용호 외무성 부상 등
7.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보도(조선중앙통신) -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내의 모든 우리 측 부동산들과 재산들에 대한 법적처분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선포
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대북전통문 - 북한 지역 수해피해 관련 물품 지원 의사 전달
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적십자회중앙위 위원장 명의 대남전통문 - 생필품·의약품보다 식량·시멘트 등의 지원 요구

날짜	추진내용
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대북통지문 - 수해지원 물자 품목·전달경로·시기 등 통보 • 현대아산 사장 등 금강산 방북, 금강산 재산권 문제 협의
8.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선(8.11.) 북한 주민 4명, 판문점 통해 송환
8.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명박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 “△남북은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책임 있는 행동과 진정한 자세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 △어린이와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할 것”
8.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선(8.16.) 북한 주민 2명, 판문점 통해 송환
8.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아산 관계자 금강산 방북, 금강산 재산권 문제 협의
8.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담화(조선중앙통신) - 우리 측 재산들에 대한 법적 처분 단행, 우리 측 기업 물자·재산 반출 중지
8.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산 체류 우리 측 인원 14명 추방
8.28.~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라선-금강산 시범관광 실시, 8.28. 중국 연길 출발, 9.2. 북한 라진항 복귀
9.3.~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불교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등 방북 ※ 천안함 폭침(2010.3.26.) 이후 종교단체 첫 방북, 이후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등 종교·학술 단체의 방북 성사
9.1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 겸 유니세프 친선대사 방북(평양)
9.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명박 대통령, 제6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 “북한이 상생과 공영의 길을 택한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더불어 이를 기꺼이 도울 것” • 제2차 남북비핵화회담 개최(중국 베이징) -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북한 이용호 외무성 부상 등
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개성공단 방문, 개성공단 현장 시찰 및 애로 사항 청취
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체신성 대변인 담화 - 반(反)북한 TV방송 등 규탄(조선중앙통신)
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표류(9.13.) 탈북자 9명, 인천공항 통해 입국 • 북한 주민 2명 동해상으로 월선, 귀순의사 표명

날짜	추진내용
10.6.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동해 월선 북한 주민 2명 및 일본 표류자 9명 송환 요구
10.8.	•북한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단장 명의 대남통지문 - 뼈라 살포 등 비난
10.11.	•통일부 대변인, 「5·24 조치」로 공사가 중단된 기업에 대한 공사재개 허용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조치 발표
10.17.~20.	•남·북·미 3자 민간 학술회의(조지아대)
10.18.~20.	•미·북, 미군유해 발굴 회담(방콕)
10.20.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이명박 대통령 방미 및 한·미 정상회담 비난
10.24.~25.	•미·북 제네바 협의(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미국 보즈워스 대북 정책 특별대표)
11.7., 11.9.~15.	•현대아산, 금강산 현지 시설물 동파 방지작업 관련 방북(금강산)
11.8.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재개 ※ 2009년 정부가 WHO에 지원한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 예산 중 보류되었던 기초의약품·의료장비 지원과 의료시설 개보수 사업 관련 예산 700만 달러 집행 허용
11.22.	•개성공단 출퇴근 도로 보수공사 착공 •조계종 중앙신도회, 약탈 문화재 환수 실무협의 관련 방북(개성)
11.24.	•북한군 최고사령부 보도 - 연평도 도발 1주년 우리 측 군사합동훈련 관련 비난
11.30.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발표 - 저농축 우라늄 생산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
12.7.~11.	•데이비스(Davies)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하트 6자회담 특사 방한
12.15.~16.	•미·북, 영양 지원 관련 협의(중국 베이징)
12.19.	•북한 김정일 위원장 사망 보도
12.20.	•통일부장관, 김 위원장 사망과 관련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는 정부담화 발표

날짜	추진내용
12.26.	•이희호 여사, 현정은 회장 등 김정일 조문차 방북
12.30.	•북한 국방위원회 성명, 김정일 위원장 사망 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비난 - “리○○역적패당과는 영원히 상종하지 않을 것”, “우리에게서 그 어떤 변화도 바라지 말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엄숙히 선포”

❖ 2012년 남북관계 주요 일지

날짜	추진내용
1.2.	•이명박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 “우리는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 있음.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온다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함께 열어가갈 수 있을 것임.” •통일부장관 신년사 - “북한의 새 지도부는 개방과 발전을 향한 ‘좋은 선택’을 하기 바람.”
1.16.	•AP통신 평양지국 개설
1.31.	•북한, 「인천 평화컵 유소년 축구대회」(1.31.~2.3. 중국 쿤밍) 불참 통보
2.7.	•산림청장, 북한 국토보호상 앞으로 ‘고구려 고분군 산림 병충해 방제 문제’ 협의 관련 대북통지문
2.10.	•외교통상통일위원회·남북관계특별위원회 의원 개성공단 방문
2.14.	•대한적십자, 이산가족 상봉행사 협의를 위한 남북적십자실무접촉 제의
2.19.	•북한 남북장성급회담 북한측 단장 명의 대남전통문 - 서해지역 해상사격 훈련 시 보복대응 위협
2.23.~24.	•제3차 미·북 대화(중국 베이징)
2.27.	•국회, ‘북한이탈주민 강제복송 중단 촉구 결의안’ 통과 •중국 외교부 푸잉 부부장 방북(2.20.~24.)
2.29.	•미·북 간 「2·29 합의」 발표(워싱턴, 평양 동시) - △비핵화 사전조치(장거리미사일·핵실험·우라늄 농축활동 등 모라토리엄,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복귀 등) △영양식 24만 톤 지원 △미·북 관계개선 등 합의

날짜	추진내용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우리 군부대 내무반에 부착된 구호 관련 비난 - “물리적 타격을 기본으로 한 우리식 성전은 역적패당이 우리의 ‘최고준엄’을 모독한 모든 행위를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고 리○○역도와 군부 호전광들을 비롯한 주모자들을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 *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규탄 군중대회, 국방위 기자회견 등이 이어짐.
3.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 영양지원 관련 미·북 실무협의(중국 베이징)
3.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명훈, 북한 은하수관현악단-라디오프랑스필하모닉 합동공연 지휘(프랑스 파리)
3.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 - 「실용위성」 발사계획 발표
3.16.~4.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조선중앙통신-AP 뉴욕 공동사진전
3.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장거리 미사일 관련 우리 정부입장 발표 -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핵무기의 장거리 운반수단을 개발하는 중 대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미·중·일·러·EU 등 관련국 정상들과 협의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할 것”
3.19.~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종교단체 협의(중국 베이징, 선양)
3.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국방부, ‘미사일 발사계획 등으로 유해발굴작업 유보’ 발표
3.26.~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 미·중·러·일 등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지 촉구
3.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장관, 핵안보정상회의 내·외신 브리핑 - 북한의 평화와 발전을 향한 좋은 선택과 남북대화 호응 촉구
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 대변인 논평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강행 움직임에 대한 경고
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노동당 제4차 당대표자회 개최, 김정은을 ‘당 제1비서’·‘당중앙 군사위원장’으로 추대
4.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정부 규탄성명 발표(외교통상부장관)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 개최, 김정은을 국방위 제1위원장으로 추대

날짜	추진내용
4.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 채택 •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인터넷 연설 - 북한이 살 길은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통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임을 강조
4.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외무성 성명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 배격하며 2·29 조·미합의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 주장
4.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 “비록 서울 한복판이라 하여도 그것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헐뜯고 건드리는 도발원점으로 되고 있는 이상 그 모든 것을 통채로 날려보내기 위한 특별행동조치가 취해질 것”
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명박 대통령, 통일교육원 통일정책최고위과정 강연(삼청동 회담장) - “국민들이 통일을 생각해야 함.” “통일항아리를 만든 자체가 의미”
4.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 통고 - “혁명무력의 특별행동 곧 개시”,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과 우리식의 방법으로 도발근원 초토화” •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 - 대남위협·비난 즉각 중단 촉구
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 청송연합 등 북한 3개 단체 추가 제재 결정(총 11개 단체)
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식량차관 원리금 상환기일(6.7.) 통보(수출입은행 → 북한 조선 무역은행)
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외무성 대변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공동성명 배격 및 우주 개발과 핵동력공업 발전 추진 주장
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장관, 「통일항아리」 제작 행사(경북 문경)
5.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 남북협력기금 목적 확대, 통일계정 설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근거 마련 등
5.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체신성 대변인 회견 - 우리 측의 ‘북한의 전파교란’ 주장을 “새로운 모략·날조극”으로 비난

날짜	추진내용
5.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8 정상회담 공동성명 - △북한 도발 깊은 우려 △추가도발 시 상응하는 조치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의지 확인
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군 총참모부 공개통첩장 - 우리 언론사 좌표를 확정해 놓은 상태라고 위협 • 통일부 대변인, 협박행위 즉각 중단 촉구
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식량차관 상환촉구 대북통지문
6.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공개질문장 발표 - “남한측의 전직, 현직 당국자들과 국회의원들이 평양에 와서 한 모든 일과 행적, 발언들을 전부 공개할 수 있음.”
6.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발기인 총회
6.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항아리」 제작 완료
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명박 대통령, 국회개원 연설 - “통일준비의 핵심 중 하나는 통일재원 마련”, “우리의 마지막 남은 과제는 평화통일, 서둘러 준비해야 할 단계”, “북한 인권문제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
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적십자회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 탈북민 박인숙 재입북 관련 “우리 주민들에 대한 괴뢰패당의 비렬한 유인, 랍치책동과 인권유린만행의 진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라고 주장
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 노수희 범민련 부의장 체포 관련 “남조선통일애국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폭압”이라고 강변
7.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발대식 및 통일항아리 토크쇼 개최
7.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의장 성명 - “한반도 문제 관련국은 어떠한 추가 도발을 해서도 안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을 준수해야 함.”
7.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노동당 정치국회의 진행(7.16. 조선중앙통신 보도) - “리영호를 신병관계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정치국 위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기로 결정”

날짜	추진내용
7.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명박 대통령, 통일항아리에 금일봉 기부 •일본 민주당 마에하라 세이지 의원, 통일부장관 예방 및 통일준비 성금 전달 •통일부 대변인 논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남북한이 합의한 대로 식량차관 상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며, 북한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함.”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괴뢰정보기관의 지령을 받고 우리 공화국에 침투하여 동상과 대기념비를 파괴하려던 자들이 적발, 체포되었음.”
7.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김정은에게 공화국 원수 칭호 수여(7.18, ‘중대발표’로 보도)
7.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부장관, 국회의장을 예방하여 통일항아리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창희 국회의장, 통일항아리에 금일봉 기부 •통일부장관과 차관 및 고위공무원단, 통일항아리에 성금 기부
7.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특대형 테러행위 가담자라는 ‘전영철’ 국내외 기자회견(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7.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영철 사건’ 관련 “특대형 음모에 미국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진상이 드러났다.”라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핵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라고 주장
7.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핵 억제력을 먼저 내놓을 수 없게 될 것”
7.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국방위 대변인 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영철 사건’ 관련 “실제적인 초강경 대응”, “강한 물리적 대응공세” 등 대(對)미국 위협
7.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영철 사건’ 관련 “특대형 국가정치테로범죄에 대해 공식 사죄하고 책임 있는 주모자들을 엄중히 처벌”(김성민·박상학·조명철·김영환 실명 거론)
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통일계정 신설) 국무회의 통과
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 상봉행사 협의를 위한 남북적십자실무접촉 제의

날짜	추진내용
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조선적십자중앙위원회, 「5·24 조치」 해제·금강산 관광 재개를 구실로 우리 측 제의(8.8.) 사실상 거부
8.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명박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정상적 관계의 토대 위에 서야”, “원칙 있는 대북정책은 실질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에 유의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음.”
8.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등 대남단체, 「UFG 훈련」 비난 합동성명 발표
8.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적십자사, 국제적십자연맹(IFRC)을 통해 북한에 수해복구 관련 10만 달러 지원 발표
8.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대북 수해지원 협의 관련 방북(개성)
8.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8·25 경축연회」 김정은 연설 - “조국통일대업을 성취하기 위한 전면적 반공격전으로 이행할 데 대한 명령을 전군에 하달하였으며 이를 위한 작전계획을 검토하고 최종수표”
8.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해양부장관 명의 대북전통문 발송 - 2009년 남북 간 합의대로 임진강 상류 황강댐 방류 시 우리 측에 사전 통보할 것을 촉구
8.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외무성 비망록 -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핵 억제력을 현대화·확장”
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적십자사, 대북 수해지원을 위한 실무접촉 제의
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수해지원 관련 지원 품목 및 수량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지원 거부 통보
9.13.~9.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항아리 국토대장정
9.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최고인민회의(제12기 제6차) 개최 -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법령 발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2명의 보선과 예산위원회 위원장 교체
9.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식량차관 상환 촉구 대북 통지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 박근혜 후보 기자회견 관련 “새누리당의 술수에 속지 말아야 하며 제2의 유신독재 부활을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난

날짜	추진내용
9.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 - “어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이 우리 내부의 대선과 관련한 명시적 언급을 한 것은 도를 넘는 행위”라고 하여 즉각 중단 촉구
9.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 “NLL은 미군이 일방 설정한 유령선, 북방한계선 고수주장은 연평도 불바다를 재현하겠다는 대결선언”이라고 비난

II. 남북관계 주요 통계(2012.9.30. 기준)

1. 남북 인적·물적 왕래 현황

① 남북 왕래인원 현황

(단위 : 명)

연도 구분	'89~'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1~9.	계
남→북 (방북)	18,601	8,551	12,825	15,280	26,213	87,028	100,838	158,170	186,443	120,616	130,119	116,047	88,011	1,068,742
북→남 (방남)	1,343	191	1,052	1,023	321	1,313	870	1,044	332	246	132	14	-	7,881
계	19,944	8,742	13,877	16,303	26,534	88,341	101,708	159,214	186,775	120,862	130,251	116,061	88,011	1,076,623

* 금강산 등 관광인원 제외

② 금강산/개성/평양 관광객 현황

(단위 : 명)

연도 구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계
금강산 관광	해로	10,554	148,074	213,009	57,879	84,727	38,306	449	-	-	-	552,998
	육로	-	-	-	-	-	36,028	267,971	298,247	234,446	345,006	1,381,664
	합계	10,554	148,074	213,009	57,879	84,727	74,334	268,420	298,247	234,446	345,006	1,934,662
개성 관광	-	-	-	-	-	-	-	1,484	-	7,427	103,122	112,033
평양 관광	-	-	-	-	-	1,019	-	1,280	-	-	-	2,299

③ 남북 차량왕래 현황

(단위 : 회)

연도 구분	'03~'05	'06	'07	'08	'09	'10	'11	'12.1~9.	계
차량 (운행횟수)	경의선	110,334	94,506	143,450	183,085	145,802	166,181	162,848	1,135,394
	동해선	76,923	29,406	40,053	25,077	2,534	2,140	397	176,538
	합계	187,257	123,912	183,503	208,162	148,336	168,321	163,245	1,311,932

④ 남북 선박·항공기 왕래 현황

(단위 : 회(편도))

연도 구분	'94~'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9.	계
선박	3,399	2,073	1,686	1,827	2,022	2,124	4,497	8,401	11,891	7,435	2,577	1,432	142	184	49,690
항공기	-	43	19	67	112	28	208	88	153	64	11	-	2	-	795

2. 남북 교류협력 현황

① 연도별 남북교역액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구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반입	19	12	106	163	178	176	223	182	193	92	122	152	176
반출	-	1	6	11	8	18	64	70	115	130	212	273	227
계	19	13	112	174	186	194	287	252	308	222	334	425	403
연도 구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9.	계	
반입	272	289	258	340	520	765	932	934	1,044	914	788	8,850	
반출	370	435	439	715	830	1,033	888	745	868	800	662	8,920	
계	642	724	697	1,055	1,350	1,798	1,820	1,679	1,912	1,714	1,450	17,770	

② 연도별 남북교역 건수 현황

(단위 : 건)

연도 구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반입	66	79	300	510	601	708	976	1,475	1,806	1,963	3,089	3,952	4,720
반출	1	4	23	62	97	267	1,668	1,908	2,185	2,847	3,421	3,442	3,034
계	67	83	323	572	698	975	2,644	3,383	3,991	4,810	6,510	7,394	7,754

연도 구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1~9.	계
반입	5,023	6,356	5,940	9,337	16,412	25,027	31,243	37,307	39,800	33,762	26,731	257,183
반출	3,773	4,853	6,953	11,828	17,039	26,731	36,202	41,293	44,402	40,156	33,203	285,392
계	8,796	11,209	12,893	21,165	33,451	51,758	67,445	78,600	84,202	73,918	59,934	542,575

③ 연도별 남북교역 품목수 현황

(단위 : 개)

연도 구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반입	24	23	43	69	69	80	109	130	143	136	172	204	201
반출	1	3	16	25	37	87	167	167	284	379	405	527	492
계	25	26	57	92	103	158	244	258	365	449	488	578	549

연도 구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1~9.	계
반입	204	186	202	381	421	450	482	486	448	363	353	810
반출	493	530	575	712	697	803	813	771	740	676	670	1,095
계	570	588	634	775	757	853	859	822	795	702	695	1,112

* 품목은 반입과 반출에서 중복되는 관계로, 「계」는 항목 간 합과 일치하지 않음.

④ 유형별 남북 교역액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남북교역 유형	'04	'05	'06	'07	'08	'09	'10	'11	'12.1~9.
반입	일반교역 · 위탁가공	258	320	441	645	624	499	334	4	-
	경제협력 (개성공단 · 금강산관광 · 기타 · 경공업협력)	-	20	77	120	308	435	710	909	788
	비상업적 거래 (정부 · 민간 지원/사회 · 문화협력/경수로사업)	-	-	1	-	-	-	-	1	-
	반입 합계	258	340	520	765	932	934	1,044	914	788
반출	일반교역 · 위탁가공	89	100	116	146	184	167	101	-	-
	경제협력 (개성공단 · 금강산관광 · 기타 · 경공업협력)	89	250	294	520	596	541	744	789	656
	비상업적 거래 (정부 · 민간 지원/사회 · 문화협력/경수로사업)	261	366	421	367	108	37	23	11	6
	반출 합계	439	715	830	1,033	888	745	868	800	6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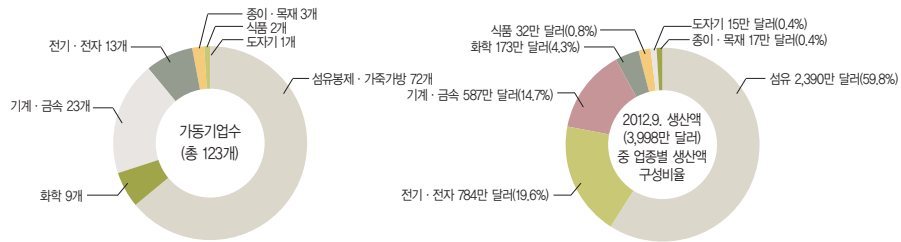
3. 개성공단사업 추진 현황

① 개성공단 가동기업수 및 생산액 현황

(단위 : 개/만 달러)

구분 \ 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가동 기업수(개)	18	30	65	93	117	121	123	123

구분 \ 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9.	계
생산액 (만 달러)	1,491	7,373	18,478	25,142	25,648	32,332	40,185	35,468	186,117
(수출액) (만 달러)	(87)	(1,983)	(3,967)	(3,584)	(2,860)	(3,667)	(3,687)	(2,739)	(22,5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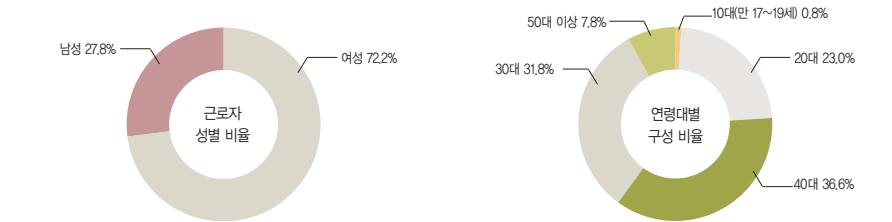


- * 생산액, 수출액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실지조사로 인해 1개월의 집계시차 발생
- * 2007.5.26. 전력(10만kW) 공급(63원/kWh)
- * 2005.12.28. 통신 개통, 현재 1,300회선 운용(공단-남한간 0.4\$/분)

② 개성공단 근로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1~9.
북한측 근로자	6,013	11,160	22,538	38,931	42,561	46,284	49,866	53,181
남한측 근로자	507	791	785	1,055	935	804	776	780
합계	6,520	11,951	23,323	39,986	43,496	47,088	50,642	53,961



- * 개성공단 입주기업 실지조사로 인해 1개월의 집계시차 발생
- * 북한측 근로자 평균임금(2012.9.) : 139.2달러(순임금 126.1달러 + 사회보험료 13.1달러)

③ 개성공단 방문 현황

(단위 : 명/대)

구분 \ 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1~9.	계
방문 인원(명)	40,874	60,999	100,092	152,637	111,830	122,997	114,435	87,927	791,791
방문 차량(대)	19,413	29,807	42,399	85,626	72,597	83,566	82,954	65,564	481,926

• 2012.9. 방문인원(10,210명) 구성비율
 △사업관계자 100%

• 외국인(바이어, 투자자, 기술자 등) 방문인원
 △'05년 49명 △'06년 399명 △'07년 460명 △'08년 130명
 △'09년 525명 △'10년 737명 △'11년 299명 △'12년 9월 264명

4. 인도적 과제 추진 현황

① 대북지원 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 연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정부 지원	당국 차원	1,854				339	944	684	832	811	949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34	62	65	81	102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24	240	154	-	-	229	243	205	262
	계	1,854	24	240	154	339	978	975	1,140	1,097	1,313
	식량차관	-	-	-	-	-	1,057	-	1,510	1,510	1,359
	계	1,854	24	240	154	339	2,035	975	2,650	2,607	2,672
민간 차원(무상)	2	12	182	275	223	387	782	576	766	1,558	
총액	1,856	36	422	429	562	2,422	1,757	3,226	3,373	4,230	

구분 \ 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1~9.	합계
정부 지원	당국 차원	1,221	2,000	1,432		-	183		11,249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120	134	216	241	77	21	-	1,153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19	139	335	197	217	-	65	2,329
	계	1,360	2,273	1,983	438	294	204	65	14,754
	식량차관	1,787	-	1,505	-	-	-	-	8,728
	계	3,147	2,273	3,488	438	294	204	65	23,482
민간 차원(무상)	779	709	909	725	377	200	131	69	8,662
총액	3,926	2,982	4,397	1,163	671	404	196	92	32,144

② 이산가족 상봉 현황

(단위 : 건/(명))

구분	연도	'85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1~9.	계
		민간차량	생사 확인	35	127	132	221	135	104	96	164	377	481	447	208	198	388	209	276	69	74	50	35	16	3	4
	서신 교환	44	193	462	948	584	571	473	772	469	637	984	579	935	961	776	843	449	413	228	61	15	21	5	11,423	
	제3국 상봉	6	11	19	12	11	17	18	61	108	195	148	165	203	280	187	94	50	54	33	21	6	4	1	1,704	
	방북 상봉											(383)	(471)	(592)	(662)	(465)	(256)	(86)	(162)	(92)	(47)	(16)	(14)	(2)	(3,248)	
	방북 상봉									1	5	4	5	5	3	1	1	4	1	3	2	1	-	1	37	
	방북 상봉									(2)	(18)	(9)	(22)	(24)	(15)	(5)	(5)	(19)	(5)	(5)	(4)	(2)		(2)	(137)	
민간차량	생사 확인	65											792	744	261	963	681	962	1,069	1,196	-	302	302	-	-	7,337
	생사 확인	(157)											(754)	(2670)	(1635)	(7091)	(5007)	(6957)	(8394)	(9121)		(2399)	(2178)		(53,070)	
	서신 교환												39	623	9	8	-	-	-	-	-	-	-	-	-	679
	서신 교환												(39)	(623)	(9)	(8)										(679)
	방납 상봉	30											201	100	-	-	-	-	-	-	-	-	-	-	-	331
	방납 상봉	(81)										(1,720)	(899)													(2,700)
	방북 상봉	35										202	100	398	598	400	397	594	388	-	195	191	-	-	3,498	
	방북 상봉	(76)										(674)	(343)	(1,724)	(2,691)	(1,926)	(1,811)	(2,683)	(1,741)		(888)	(888)			(15,443)	
	확상 상봉																199	80	278	-	-	-	-	-	557	
	확상 상봉																(1,323)	(553)	(1,872)						(3,748)	

③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9.(잠정)	합계
		남	831	565	511	472	624	423	512	571	608	671	589	797	303
여	116	479	632	810	1,272	959	1,510	1,977	2,196	2,258	1,813	1,909	783	16,714	
합계	947	1,044	1,143	1,282	1,896	1,382	2,022	2,548	2,804	2,929	2,402	2,706	1,086	24,191	
여성 비율(%)	12	46	55	63	67	69	75	78	78	77	75	70	72	69	

* 보호결정 기준 집계로 인해 집계시차 발생 ⇒ 추정치 사용

5. 남북회담 현황

① 분야별 남북회담 개최 현황

(단위 : 회)

연도 구분	'71~'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9.	계
정치	156	4	10			7	4	8	18	2	4	5	2	10	5	13				-	-	248
군사	-								4	2	9	6	5	3	4	11	2		1	1	-	48
경제	5								3	3	14	17	13	11	8	22	3	4	3	-	-	106
인도	111			3		4	1		2	1	3	7	2	4	3	3		2	4	-	-	150
사회· 문화	34										2	1	1	6	3	6	1			-	-	54
합계	306	4	10	3	-	11	5	8	27	8	32	36	23	34	23	55	6	6	8	1	-	606

* 정치(장차관급 회담 등) / 군사(장성급·군사실무회담 등) / 경제(경제협력추진위 등) / 인도·사회(적십자·체육 회담 등)

② 남북회담 합의서 채택 건수

(단위 : 건)

연도 구분	70년대	80년대	90년대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9.	계
합의서 건수	13	1	36	18	4	23	31	21	23	10	39	5	1	1	-	-	226

* 공동보도문, 발표문 등 66건 포함

6. 통일교육 실시 현황

(단위 : 명)

연도 구분	2000년 이전	'01	'02	'03	'04	'05	'06
교육인원	365,125	12,774	16,711	17,087	20,804	26,420	25,865
연도 구분	'07	'08	'09	'10	'11	'12.1~9.	계
교육인원	34,045	32,039	71,944	68,946	119,736	89,435	900,935

Ⅲ. 남북협력기금 관련 통계

1. 총괄표(구성 및 사용실적)

① 조성실적

(단위 : 백만 원)

연도	구분	정부출연금	기타출연금	공공자금관리 기금 예수금	운용수익 등	총 조성액
1991		25,000	-	-	237	25,237
1992		40,000	-	-	5,118	45,118
1993		40,000	3	-	4,778	44,781
1994		40,000	1	-	9,387	49,388
1995		240,000	119	-	14,589	254,708
1996		100,000	132	-	18,409	118,541
1997		50,000	288	-	27,874	78,162
1998		-	-	-	40,280	40,280
1999		-	3	149,831	23,013	172,847
2000		100,000	542	254,852	30,393	385,787
2001		500,000	1,079	310,000	29,406	840,485
2002		490,000	77	505,000	42,036	1,037,113
2003		300,000	1	823,000	46,515	1,169,516
2004		171,400	1	310,000	38,371	519,772
2005		500,000	33	460,000	31,178	991,211
2006		650,000	15	940,000	36,619	1,626,634
2007		500,000	75	584,591	38,859	1,123,525
2008		650,000	52	147,500	49,274	846,826
2009		-	56	81,000	74,354	155,410
2010		-	-	875,000	51,238	926,238
2011		-	2	104,400	38,276	142,678
2012.9.		84,800	2	400,000	39,599	524,401
합 계		4,481,200	2,481	5,945,174	689,803	11,118,658

② 사용실적

(단위 : 억 원)

구분	연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주민왕래지원		-	-	-	-	-	-	-	-	-	3	3	237
문화·학술·체육협력		9	-	-	-	-	-	-	0.3	-	21	1	-
이산가족		-	6	-	-	-	-	-	0.1	4	28	13	20
인도적 지원 (무상)		-	-	-	-	1,824	55	191	199	339	977	976	1,226
인도적 지원 (유상)		-	-	-	-	-	-	-	-	-	867	190	967
남북경제협력 (무상)		13	-	-	-	-	49	-	-	-	146	898	368
남북경제협력 (유상)		-	-	-	-	-	-	-	675	-	5	461	667
경수로 대출		-	-	-	-	-	-	-	-	-	3,259	3,003	3,009
공자기금 예수원리금 상환		-	-	-	-	-	-	-	-	-	190	391	2,124
-공자기금 원금 상환		-	-	-	-	-	-	-	-	-	-	-	1,498
-공자기금 이자 상환		-	-	-	-	-	-	-	-	-	190	391	626
기금관리비		3	3	3	3	2	2	2	2	2	3	5	6
합 계 ^{주)}		25	8	3	3	1,826	106	193	876	346	5,500	5,940	8,625

주) 「연도별 기금사용 현황」은 사사오입하여 억 원 단위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합계액과 현황표상의 '합계'와는 차이가 날 수 있음.

(단위 : 억 원)

구분 \ 연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9.	합 계
주민왕래지원	11	11	38	53	17	27	-	-	-	-	399
문화·학술·체육협력	7	32	75	74	69	38	30	21	26	17	420
이산가족	30	32	133	99	269	182	22	20	1	1	859
인도적 지원 (무상)	1,501	1,225	1,866	2,125	2,272	597	294	192	102	1	15,964
인도적 지원 (유상)	1,561	1,020	1,793	39	1,405	-	-	-	-	-	7,842
남북경제협력 (무상)	763	760	2,045	1,521	1,725	1,101	415	177	167	212	10,360
남북경제협력 (유상)	547	814	568	710	1,400	366	240	453	130	219	7,255
경수로 대출	3,287	870	227	89	-	-	-	-	-	-	13,744
공자기금 원리금 상환	3,250	3,895	3,658	8,713	6,337	1,512	1,159	9,306	1,086	4,881	46,502
-공자기금 원금 상환	2,549	3,100	2,820	7,730	5,330	500	100	8,200	-	4,000	35,827
-공자기금 이자 상환	701	795	838	983	1,007	1,012	1,059	1,106	1,086	881	10,675
기금관리비	8	12	16	18	19	21	39	29	27	14	238
합 계 ^{주)}	10,966	8,670	10,418	13,442	13,513	3,844	2,199	10,197	1,539	5,345	103,583

주) 「연도별 금사용 현황」은 사사오입하여 억 원 단위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합계액과 현황표상의 '합계'와는 차이가 날 수 있음.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 원)

연도	사업내용	금액	사업구분
2008	FIFA 청소년 월드컵대회 북한대표팀 사전 방한 지원	7	인적 왕래지원 (3건, 2,721)
	북한현지 체험학습	2,701	
	아시아 레슬링 선수권대회 북한대표팀 방한	13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현대화사업	142	사회·문화 협력지원 (8건, 3,847)
	우리민족서로돕기의 북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교육사업	63	
	「겨레말 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3,182	
	금강산극단 무용공연 조선무용 50년-북녘의 명무	17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남한측위원회의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49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남한측위원회의 고구려벽화무덤 남북공동보존사업	44	
	남북역사학자협의회회의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 조사사업	294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북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교육사업	56	
	금강산 이산가족연회소 건설	17,960	이산가족 교류지원 (4건, 18,240)
	이산가족 교류촉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46	
	이산가족 영상편지 시범교환 지원	129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단체들의 협력사업 지원	5	
	2007년 대북지원 민간단체 정책사업(제약공장 원료지원사업)	400	인도적 지원 (79건, 59,682)
	2007년 민간단체 합동사업	2,585	
	대북지원 민간단체 정책사업	750	
	정책사업(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의료인력 교육사업)	385	
	정책사업(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제약공장 의약품 생산협력사업)	300	
	합동사업 - 나눔인터내셔널	119	
	합동사업 - 통일부	36	
	경남통일농업협력회의 농업 협동농장 지원사업	42	
	경남통일농업협력회의 공생산 및 가공식품 지원사업	168	
	국제백신연구소의 북한 백신지원사업(2008년)	281	
	국제옥수수재단의 북한 옥수수 심기 협력사업	139	
국제옥수수재단의 옥수수심기 협력사업	101		
굿네이버스의 어린이 건강증진 및 질병퇴치 사업	44		
굿네이버스의 농축산개발을 통한 어린이 영양식 지원	50		
굿피플의 공기름공장 운영지원	73		
나눔인터내셔널의 북한 주민 질병 퇴치 및 아동성장환경 개선사업	308		
남북나눔의 영유아 이유식 생산 지원사업	389		

연 도	사 업 내 용	금 액	사 업 구 분
2008	남북나눔의 어린이 영양식 공급	212	
	남북나눔의 어린이 영양식 공급 및 성장발육 지원	420	
	남북농업발전협력 민간연대의 씨감자 원종장 지원사업	131	
	남북민간교류협의회 6·15사료공장, 가축질병 항생제 대체제 지원사업	180	
	남북어린이어깨동무의 어린이 보건의료 및 영양개선사업	560	
	남북어린이어깨동무의 어린이 종합복지사업	187	
	남북함께살기운동의 학교 및 주택 개보수 사업	206	
	농협중앙회의 협동농장, 농업개발 사업	92	
	대북 수해복구 및 긴급구호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7,348	
	대북 식량차관 제공(2007년)	4,298	
	대한결핵협회의 북한 결핵퇴치사업	34	
	대한의공협회의 의료기자재 현대화	8	
	등대복지회의 북한 취약계층 종합지원	560	
	등대복지회의 취약계층 종합지원	31	
	민족사랑나눔의 급식지원 및 보건의료 복지관 건립	178	
	민족사랑나눔의 급식지원 및 복지관 건립	44	
	북고성군농업협력단의 채소농장 지원사업	22	
	북한 산림병충해방제 지원사업	8	
	북한영유아 지원사업	510	
	북한영유아 지원사업(남포 소아병동)	1,200	
	북한영유아 지원사업(남포산원)	996	
	북한영유아 지원사업(남포시 영양개선사업)	1,000	
	북한영유아 지원사업(대안군 인민병원)	1,600	
	북한영유아 지원사업(사업관리비)	201	
	북한영유아 지원사업(어린이 영양생산시설)	2,520	
	새천년생명운동의 산림녹화를 위한 아궁이 개량사업	141	
	샘복지재단의 왕진가방, 의료지원사업	61	
	서비스포피스의 주택 난방 지원사업	67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의 병원 현대화 사업	560	
	어린이재단의 어린이 영양 개선 및 건강증진 지원	437	
	연탄나눔운동의 난방용, 취사용 연탄지원	285	
	염소목장 지원사업	32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의 어린이 급식지원	202		
우리민족서로돕기의 농업기술 지원사업	183		
우리민족서로돕기의 제약공장 지원 및 병원 현대화 사업	210		

연 도	사 업 내 용	금 액	사 업 구 분
2008	우리민족서로돕기의 기초의약품 및 제약공장	147	교류협력기반 조성사업 (18건, 110,075)
	우리민족서로돕기의 북한협동농장 지원사업	282	
	원불교의 어린이 급식 및 유아용 급식 지원	92	
	원불교의 어린이 급식 및 유아용품 지원	103	
	월드비전의 식량증산 농업개발 사업	559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교육기자재 지원사업	59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교육기자재 후속 지원	78	
	유진벨재단의 결핵퇴치 및 병원 지원사업	560	
	장미회의 대북보건의료 지원사업	185	
	제주도 농산물 대북지원 수송비 보조사업	1,959	
	천주교서울대교구의 어린이 영양제 및 콩기름 원료지원	236	
	통일부의 2008년 정책사업 운영관리비	90	
	통일부의 2008년 민간단체 개별사업 운영관리비	210	
	통일연합종교포럼의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12	
	통일준비네트워크의 친환경 순환농법 지원사업	134	
	평화문제연구소의 급식 및 구역병원 지원	20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의 어린이교육용 제지지원사업	157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어린이보건 지원사업	64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221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의 랍강섬김인민병원 건립 및 운영	205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의 함경북도지역자립을 위한 복지지원사업	93	
	한국대학생선교회의 염소목장 지원사업	178	
	UNFPA의 북한 인구센서스 추진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3,633	
	UNICEF의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2008년)	4,662	
	WHO를 통한 대북 말라리아 방역사업(2008년)	1,030	
	WHO의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2008년)	13,784	
	YMCA 그린닥터스의 개성협력병원 운영 지원	35	
	2007년도 통일농수산사업단 공동영농사업	571	
	2008년도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운영경비 지원	285	
	2008년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운영경비 지원	1,475	
2008년도 통일농수산사업단 공동영농사업	2,141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비용 지원사업	7,175		
개성공단 아파트형공장 건설을 위한 기금 지원	17,072		
개성공단 탁아소 건립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28		
개성공업지구 「종합지원센터」 설립 지원	20,095		

연도	사업내용	금액	사업구분
2008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출입시설 신축사업 지원	46	
	금강산 소방서 건설비용 재의결	1,677	
	남북관리구역 군사통신체계 개선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514	
	대북 2차 자재장비차관 지원	47	
	대북 경공업 원자재 제공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지원	2,048	
	대북 에너지 설비·자재 1차 잔여분 및 2차 제공 사업 지원	26,605	
	대북 에너지 설비·자재 1차분 및 중유보일러 제공 지원	250	
	대북 에너지 설비자재 3차분 제공사업 경비 지원	17,019	
	대북 역사건축 기자재 차관 지원	27	
	동해선 남북출입시설 공용야드 건설사업	13,000	
	교역경험 자금융자(교역)(14건)	7,834	교역자금(융자) (14건, 7,834)
	교역경험 자금융자(경협)(5건)	2,973	경협자금(융자) (5건, 2,973)
	개성공단 기술교육센터 운영경비(2008년) 남북협력기금 대출	2,218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대출 (8건, 25,832)
	개성공단 북한측 근로자 출퇴근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1,175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소요경비(2007년) 대출	89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소요경비(2008년) 대출	9,764	
	대북 2차 자재장비차관 대출	2,324	
	대북 경공업 원자재 제공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지원	9,834	
	대북 식량차관 제공(2007년)	12	
	대북 역사건축 기자재 차관 대출	416	
소 계 (139건)	231,204		
2009	「겨레말 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	2,920	사회·문화 협력지원 (2건, 3,029)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사업	109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비품경비 지원	60	이산가족 교류지원 (5건, 2,152)
	이산가족 교류협력촉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96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유지관리 경비지원(2009년)	183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유지관리 경비지원(2008년)	551	
	추석계기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남북협력기금 지원	1,262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37건)	7,826	인도적 지원 (41건, 29,367)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4건)	21,541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출입시설 신축사업 지원	46	교류협력기반 조성사업 (13건, 41,461)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 경비지원	60	
	개성공단 소방서 건립을 위한 기금 지원	148	
	대북 에너지 설비자재 3차분 제공사업 경비 지원	193	


연도	사업내용	금액	사업구분
2009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운영경비 지원	237	
	통일농수산물사업단 공동영농사업	280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비용 지원사업	344	
	남북관리구역 군사통신체계 개선 지원	468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운영경비 및 조사연구비 지원	528	
	남북간 교역물자 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620	
	개성공단 탁아소 건립 지원	833	
	동해선 남북출입시설 공용야드 건설사업	17,767	
	개성공업지구 종합지원센터 설비 지원	19,937	
	교역경협 자금융자(교역)(17건)	8,416	교역자금(융자) (17건, 8,416)
	교역경협 자금융자(경협)(1건)	7,000	경협자금(융자) (1건, 7,000)
	개성공단 북한측 근로자 출퇴근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1,152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대출 (2건, 8,596)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소요경비 대출	7,444	
	소 계 (81건)	100,021	
2010	「겨레말 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	1,889	사회·문화 협력지원 (2건, 2,120)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사업	231	
	이산가족 교류협력축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43	이산가족 교류지원 (3건, 1,987)
	추석계기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남북협력기금 지원	1,511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유지관리 경비지원(2009년)	433	
	대북지원 민간단체 정책사업	672	인도적 지원 (15건, 19,195)
	대북 수해피해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5,844	
	나눔인터내셔널의 북한 주민 질병퇴치	75	
	남북나눔의 북한 어린이 영양식 공급 및 성장발육 지원사업	155	
	남북어린이어깨동무의 북한 어린이 보건의료 및 영양개선	281	
	민족사랑나눔의 영양개선 및 복지지원, 보건의료 지원사업	79	
	북한 신종플루 발생 관련 대북물자 지원	11,272	
	어린이재단의 북한어린이 건강 증진	67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취약계층 식량 및 보건의료 지원사업	90	
	원불교의 어린이급식 및 유아용품 지원사업	34	
	유진벨재단의 결핵퇴치 및 결핵병원 지원사업	254	
	천주교서울대교구민족화해위원회의 어린이 영양제 생산원료 지원사업	189	
	한국JTS의 취약계층 식량 및 보건의료 지원사업	171	
	UNICEF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2009년)-사업관리비	1	
	WHO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2009년)-사업관리비	11	

연도	사업내용	금액	사업구분	
2010	「코리아 DMZ 협의회」 구성·운영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83	교류협력기반 조성사업 (14건, 17,676)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소요경비 지원	4,801		
	2010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운영경비 및 위탁사업비 지원	972		
	개성공단 소방서 건립을 위한 기금 지원	1,002		
	개성공업지구 「종합지원센터」 설립 지원	3,749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출입시설 신축사업 지원	46		
	남북 공동체 기반조성 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	14		
	남북 군통신체계 개선 공사용 임대장비에 대한 회계처리 지원	243		
	남북 간 교역물자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429		
	남북교역체계 개편 지원 및 관리업무 위탁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639		
	동해선 남북출입시설 공용야드 건설사업	4,200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종합전략계획 수립 및 법제화 방안 연구 지원	417		
	DMZ남북청소년교류센터 스페이스 프로그램 연구 지원	10		
	DMZ남북청소년교류센터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 지원	71		
	교역경험 자금용자(교역)(71건)	31,243		교역자금(용자) (71건, 31,243)
	교역경험 자금용자(경험)(27건)	10,326		경험자금(용자) (27건, 10,326)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소요경비 대출	3,703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대출 (1건, 3,703)
소 계 (133건)	86,250			
2011	종교인평화회의(KCRP)의 방북 지원	30	인적왕래지원 (1건, 30)	
	「겨레말 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	2,338	사회·문화 협력지원 (2건, 2,586)	
	개성 만월대 안전조사 및 복구·보존 사업 지원	248		
	이산가족 교류협력촉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35	이산가족 교류지원 (2건, 95)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유지관리경비 지원	60		
	대북 수해피해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3,635	인도적 지원 (3건, 10,174)	
	백두산 화산 남북학술토론회 남북협력기금 지원	7		
	UNICEF의 북한 영유아 지원	6,532		
	남북공동체 기반조성 사업 지원	2,938	교류협력기반 조성사업 (14건, 16,819)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운영경비 및 위탁사업비 지원	1,121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소요경비 지원	6,120		
	개성공단 투자기업 경험보험금 지급	4,377		
	남북교역체계 개편 지원 및 관리업무 위탁 지원	589		
	남북관리구역 통행체계 보강 지원	284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사업 지원	40		

연도	사업내용	금액	사업구분
2011	코리아DMZ협의회 국내외 협력기반 확충 지원	129	
	DMZ남북청소년교류센터 스페이스 프로그램 연구 지원	9	
	DMZ남북청소년교류센터 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 지원	20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	233	
	동해선 남북출입시설 공용야드 건설사업	133	
	남북교역관리업무 위탁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494	
	개성공단 소방서 건립을 위한 기금 지원	332	
	교역경협 자금융자(교역)	5,761	교역자금(융자) (54건, 5,761)
	교역경협 자금융자(경협)	1,729	경협자금(융자) (3건, 1,729)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소요경비 대출	3,617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대출 (2건, 5,489)
	개성공단 출퇴근버스 주차장 및 자동차 검사소 설치 지원	1,872	
소 계 (81건)	42,683		
2012	「겨레말 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	1,730	사회·문화 협력지원 (1건, 1,730)
	이산가족교류협력촉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45	이산가족 교류지원 (2건, 111)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교류를 위한 수요조사 지원	66	
	대북 수해피해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48	인도적 지원 (1건, 48)
	개성공단 투자기업 경험보험금 지급	21	경험기반조성(무상) (12건, 21,177)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운영경비 및 위탁사업비 지원	710	
	코리아DMZ협의회 국내외 협력기반 확충 지원	95	
	남북관리구역 통행체계 보강 지원	560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지원	1,822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 지원	6,040	
	남북교역관리업무 위탁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692	
	남북교역경협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060	
	개성공단 소방서 건립 지원	1,524	
	개성공단 응급의료시설 건립 지원	349	
	개성공단 출퇴근 도로 보수, 버스회차장 확장 지원	3,128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소요경비 지원	5,176	
	교역경협 자금융자(교역)	14,885	교역자금(융자) (94건, 14,885)
	교역경협 자금융자(경협)	3,397	경협자금(융자) (5건, 3,397)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소요경비 대출	3,223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대출 (2건, 3,646)
	개성공단 출퇴근버스 주차장 및 자동차 검사소 설치 지원	423	
소 계 (117건)	44,994		

* 2012년은 9월 30일 기준

통일미래를
준비하는 통일정책 정책자료집 - 통일



발행일 • 2013년 2월

발행처 • 통일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Tel. 02-2100-5747 Fax. 02-2100-5749

<http://www.unikorea.go.kr>

편집 · 제작 · (주)이오박스 (Tel. 02-3666-2525)
